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 3.

국 토 교 통 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 . 3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3.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203, 32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555호

목 차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5
II .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7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III . 세부 추진계획	21
전략목표 I	23
전략목표 II	112
전략목표 III	209
전략목표 IV	280
전략목표 V	316

IV. 협업과제	377
V. 환류 등 관련 계획	387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89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9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92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420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3
-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5

1. 그간의 정책성과

◆ (주거 안정)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서민 지원 강화

- (공급 기반)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23.12) 등을 통해 도심 등 우수 입지 내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

* 안전진단 통과단지 ('18~'22平) 13 → ('23) 111 / 정비구역 지정 2.8만호 → 6.2만호

- (주거 안정) 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정('23.6)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22, 중위 46%^{135만} → '23. 47%^{140만} / ** 특별법 제정 이후 10,256명 피해자 인정

-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6) 마련 등 주거 실생활 문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

-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3.9), 부동산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연착륙 견인

*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규제 폐지,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 (교통 혁신)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및 교통서비스 질 제고

- (광역교통망 확충) GTX-A 종합시험운행 착수('23.12) 등 '24년 GTX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대곡소사선('23.7) 개통 등 교통망 지속 확충

- 신도시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29개)를 선정, 맞춤형 보완대책 마련('~23.5)

- (서비스질 제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확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23.10~)** 등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광역버스 입석률 0%대 실현 등 편의 제고

* 48.7만명('22.12월) → 약 107만명('23.12월, 120%↑), 월평균 16,853원 절감

**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6,600원)에서 1.1배(3,200원)로 인하(51.5%↓)

- 코로나 이전 대비 항공 여객·운항횟수 91% 회복 등 정상화 지원

◆ (경제 활력) 지역주도 성장 지원 및 국토교통 산업 혁신

- (지역경제) 첨단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제정('23.10) 등 성장 거점 조성 지원

* 역대 정부(5~7개) 대비 약 3배 수준 → 400조 이상 투자, 21만명 고용 효과 기대

-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GB 제도 개선*('23.4 등), 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 운행 범위 확대(농어촌→신도시·심야시간대, '23.10) 등 규제 혁신

*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 첨단국가산단 등은 GB 해제 총량 가능 물량과 관계없이 허용 등

- 가덕신공항 개항 로드맵 발표('23.3), TK 신공항법 제정('23.4), SRT 동해·경전·전라선까지 확대 운행('23.9) 등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

- (산업 활력) 원팀 코리아 등 수주 기반 확보를 통해 해외 수주 확대*

* ('23년 실적) 전년 310억불 대비 7.5% 증가한 333억불 수주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및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 건설 카르텔 혁파 및 LH 혁신방안('23.12) 등으로 산업 정상화 추진

* '23.4월 이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단 1건에 불과('23.1~3월 간 109건 적발)

- 모빌리티혁신법('23.4), UAM법 제정('23.10) 등 미래 혁신 기반 마련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정책
비전

**서민과 지역경제 서포터!
미래를 선도하는 시공간 디자이너!**

방향

주거 안정 + 교통혁신 + 균형발전 + 성장동력 창출 + 국민안전

주요
정책
과제

내게 맞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선택의 자유 확대

-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
- 안전하고 품질 높은 주택 공급
-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및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교통격차 해소

- GTX 시대 본격 개막
- 신도시 등 광역교통 획기적 개선
- 생활교통 서비스 혁신 및 차별없는 공정 이동권 보장

지역 주도 성장 지원으로 초광역 경제권 구현

- 첨단산업과 일자리 거점 조성
- 노후 도심 재구조화 및 지역 생활거점 조성
-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교통망 구축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 지원

-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 국토교통산업의 첨단화 및 선진화

교통·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건설현장 안전 제고 및 부실시공 차단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4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토교통부 일반 현황

기 구	기준정원
○ 본부 : 2차관 5실 1대변인 4국 17관 88과 8팀 ○ 소속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 책임운영기관 2개(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 총 4,114명 - 본부 : 1,041명(한시정원 23명 포함) - 소속 : 3,073명(책임운영기관 462명 포함)

(1) 조직

□ 본 부



※ 한시조직(1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25.3.31)

※ 자율기구(2개) :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23.9.2∼'24.3.1), 도시정비기획준비단('24.1.1.∼'24.6.30)

※ 총액인건비제팀(본부8개) : 뉴미디어홍보팀(∼'25.9.30), 스마트도시팀(∼'25.1.31), 공정건설지원팀(∼'25.7.21), 디지털도로팀(∼'25.7.21), 공항건설팀(∼'25.6.30), 생활물류정책팀(∼'24.12.31), 주택임대차기획팀(∼'25.12.31), 항공자격팀(∼'25.12.31)

- 지방청(5개) :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청 교통안전팀(∼'24.12.31.)

※ 별도조직(9개) : 공공주택본부(∼'24.12),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25.12), 지적재조사기획단(∼'24.6), 혁신도시발전추진단(∼'25.6), 국가건축정책위원회기획단(∼'24.6),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25.6), 전세사기피해지원단(∼'25.7), TK신공항건설추진단(∼'24.12)

□ 소속기관 [87개 : 1차 15개, 2차 41개, 3차 31개]



1차 소속기관
2차 소속기관
3차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2) :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2) 인원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경력관 특정직
계	4,114	4	35	7	5	34	100	115	515	1,116	942	684	527	26	4
본 부	1,041	3	26	7	1	28	61	92	345	374	64	15	21	1	3
소속기관	2,611	1	9	-	2	5	32	19	135	577	735	596	489	10	1
책임운영기관	462	-	-	-	2	1	7	4	35	165	143	73	17	15	-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별정직	임기제	3·4~ 4급	4·5~ 5급	6~ 9급	연구직		경력관	전문 임기제
									연구관	연구사		
계	4,556	4	46	3	5	191	765	3,425	1	23	1	92
본 부	1,483	3	37	3	1	139	572	658	0	1	1	68
소속기관	2,647	1	9	0	2	43	157	2403	0	8	0	24
책임운영기관	426	0	0	0	2	9	36	364	1	14	0	0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516,199	609,439	715,976	787,449	832,120
(전년대비증가율, %)	(△6.7)	(18.1)	(17.5)	(10.0)	(5.7)
○ 총계	1,270,821	1,453,704	1,575,364	1,652,263	1,676,525
(전년대비증가율, %)	(△14.0)	(14.4)	(8.4)	(4.9)	(1.5)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3,060	3,231	3,457	3,699	3,958
(전년대비증가율, %)	(2.5)	(5.6)	(7.0)	(7.0)	(7.0)
○ 기본경비	532	508	523	539	555
(전년대비증가율, %)	(12.1)	(△4.5)	(3.0)	(3.1)	(3.0)
○ 주요사업비	512,607	609,439	715,976	787,449	832,120
(전년대비증가율, %)	(△6.8)	(18.9)	(17.5)	(10.0)	(5.7)
□ 예산					
○ (총)지출	210,982	236,583	293,747	333,126	360,156
(전년대비증가율, %)	(△10.1)	(12.1)	(24.2)	(13.4)	(8.1)
○ 총계	313,807	397,047	517,387	595,003	646,775
(전년대비증가율, %)	(△20.6)	(26.5)	(30.3)	(15.0)	(8.7)
【일반회계】					
△ (총)지출	67,203	73,298	89,528	95,443	98,056
(전년대비증가율, %)	(△5.8)	(9.1)	(22.1)	(6.6)	(2.7)
△ 총계	163,247	221,312	304,091	350,734	379,351
(전년대비증가율, %)	(△24.5)	(35.6)	(37.4)	(15.3)	(8.2)
【교통시설특별회계】					
△ (총)지출	120,650	141,434	171,569	207,854	232,526
(전년대비증가율, %)	(△8.1)	(17.2)	(21.3)	(21.1)	(11.9)
△ 총계	127,268	148,134	178,808	214,390	237,802
(전년대비증가율, %)	(△13.3)	(16.4)	(20.7)	(19.9)	(1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총)지출	157	144	381	308	342
(전년대비증가율, %)	(1.0)	(△8.3)	(164.6)	(△19.2)	(11.0)
△ 총계	157	144	381	308	342

구 분	'23	'24	'25	'26	'27
(전년대비증가율, %)	(1.0)	(△8.3)	(164.6)	(△19.2)	(11.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총)지출	149	90	1,049	1,263	1,485
(전년대비증가율, %)	(△30.6)	(△39.6)	(1,065.6)	(20.4)	(17.6)
△ 총계	312	5,840	2,888	1,312	1,533
(전년대비증가율, %)	(△16.4)	(1,771.8)	(△50.5)	(△54.6)	(16.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22,823	21,617	31,247	28,313	28,027
(전년대비증가율, %)	(△28.1)	(△5.3)	(44.5)	(△9.4)	(△1.0)
△ 총계	22,823	21,617	31,247	28,313	28,027
(전년대비증가율, %)	(△28.1)	(△5.3)	(44.5)	(△9.4)	(△1.0)
□ 기금					
○ (총)지출	305,217	372,856	422,229	454,322	471,965
(전년대비증가율, %)	(△4.2)	(22.2)	(13.2)	(7.6)	(3.9)
○ 총계	957,013	1,056,657	1,057,977	1,057,260	1,029,750
(전년대비증가율, %)	(△11.6)	(10.4)	(0.1)	(△0.1)	(△2.6)
【주택도시기금】					
△ (총)지출	304,611	372,266	421,491	453,517	471,182
(전년대비증가율, %)	(△4.2)	(22.2)	(13.2)	(7.6)	(3.9)
△ 총계	954,377	1,054,003	1,055,312	1,054,756	1,027,460
(전년대비증가율, %)	(△11.6)	(10.4)	(0.1)	(△0.5)	(△2.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총)지출	606	589	738	805	783
(전년대비증가율, %)	(1.6)	(△2.8)	(25.3)	(9.1)	(△2.7)
△ 총계	2,637	2,654	2,664	2,505	2,290
(전년대비증가율, %)	(1.2)	(0.6)	(0.4)	(△6.0)	(△8.6)

* '23년은 실적, '24년은 예산, '25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을 명기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2024년 핵심 추진과제 >

- ◆ 지역 주도 성장 지원으로 초광역 경제권 구현
- ◆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경제활력 지원
- ◆ 내게 맞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선택의 자유 확대
- ◆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교통격차 해소
- ◆ 교통·건설현장 안전 강화로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우리 부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성과관리 전략계획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24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선정한 5대 전략목표에 '24년 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11개 성과목표 제시
 - 더불어 잘사는 국토 조성 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4개 관리과제 마련
- 「주거안정·교통혁신·균형발전·성장동력 창출·국민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주요 과제 중점 추진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 조성

비전

서민과 지역경제 서포터! 미래를 선도하는 시공간 디자이너!

전략목표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III.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IV.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성과목표

1.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
2.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3.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1.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1.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2.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8	12	30	44	18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1.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국정38-1, 38-2, 116-1, 117-2, 119-5 업무3-1-2, 3-1-3, 3-2-2
	②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정28-2, 38-1 업무3-2-1, 3-3, 4-3-3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국정38-1, 38-2, 38-3, 119-6 업무3-1-4, 3-2-2
	④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국정28-3, 38-2, 38-3, 38-4, 116-2, 116-3, 86-6, 113-4 업무4-1
2.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 기반 확충	민생 국정38-1, 38-2 업무3-1-1, 3-1-3
	②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국정38-2 업무3-1-3
	③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국정39-3, 업무3-3
	④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국정39-3, 업무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		
	①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국정28-4, 39-3, 업무3-3
	②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민생 국정39-1, 39-2, 39-3 업무2-1-1, 2-1-2, 2-1-3
	③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국정39-1, 39-2, 39-3 업무3-2-1, 3-3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국정28-2 업무4-1, 4-3-1
	②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국정28-1 업무4-2-1, 4-2-2, 4-2-3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국정69-6 업무4-3-1
	④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국정28-2, 28-4 업무4-3-1, 4-3-3
	⑤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국정28-4 업무4-2-1
	⑥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정38-4 업무4-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민생 국정28-2 업무1-1-3, 4-3-2, 5-3
	②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국정28-2 업무4-3-3, 5-3
	③ 낡은 규제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28-4 업무4-3-2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국정28-4, 39-5 업무4-3-1, 4-3-2
	⑤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국정28-4, 39-5 업무4-3-3
	⑥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국정38-4 업무4-3-1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민생 국정7-1, 7-2 업무1-1-1, 1-1-2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국정7-2 업무1-1-1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국정7-2, 10-1, 10-2 업무1-1-1, 1-1-4, 1-3, 1-4-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국정7-3, 90-1 업무1-2-1, 1-3, 1-4-1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국정 10-1, 10-2 업무1-1-2, 1-2-1, 1-2-2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국정 10-3, 10-4, 10-5 업무1-2-2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국정7-3 업무1-2-3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국정7-4 업무1-2-3, 1-4-1, 1-4-1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국정7-4 업무1-4-2
Ⅳ.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		
	①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민생 국정39-1, 39-2, 39-4 업무2-1-3, 2-2-1, 2-2-2
	②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국정38-2, 39-1, 39-2, 39-4 업무2-2-1, 2-2-2, 2-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①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국정69-1, 47-6 업무5-1, 2-3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국정39-6, 86-6 업무2-3, 4-3-2, 4-3-3
	③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69-1 업무5-1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국정38-2, 69-6 업무5-2
	②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국정69-6 업무2-1-1, 5-2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국정38-4, 69-6 업무2-3-1
2.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국정69-5, 69-6 업무5-2, 5-3
	②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국정69-5, 69-6 업무5-2
	③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국정38-2, 38-4, 69-1 업무2-3, 4-3-1, 5-1, 5-2
	④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국정28-4, 39-3 업무4-3-1, 5-2



Ⅲ. 세부 추진계획

1.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23
2.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12
3.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209
4.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280
5.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316

전략목표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기 본 방 향

□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 도모

-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 연결

-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8	11	43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
1.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		㉠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지역 발굴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 4대 초광역권 육성 방안 및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 ㉡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②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마련 ㉡ 철도 지하화선도사업 선정 ㉢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조성 ㉣ 고속·간선열차 이용자 ㉤ 화물취급역 신설 건수 ㉥ 교통약자 명절 사전 예매 실적 ㉦ EMU-320 신규도입 ㉧ 해외사업 수주 건수 ㉨ 국제인증 취득교육 이수 실적(수료생 수)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 도심복합거점 조성 ㉡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新도시재생 추진 ㉢ 토지규제 전면정비
④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 미래도시 선도모델, 한국형 스마트시티 ㉡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 탄소중립도시 조성확대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추진율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하위법령 제정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 ㉡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 육성 ㉢ 수도권 체계적 개발 및 규제 합리화
	②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누적 개사) ㉡ 지역인재 채용률(%) ㉢ 복합혁신센터 준공(개소) ㉣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③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사업추진체계 마련 ㉣ 사업추진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반한 효율적인 소통 관리
	④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 민·군공항 통합건설 시행방안 마련 ㉢ 군공항 이전 SPC 구성 공공기관 협약체결 ㉣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진방안 마련
3.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		㉠ 신공항건설 공정달성률+일반공항 건설공정 달성률 ㉡ 지하고속도로진·출입부 교통체증 완화방안 마련
	①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 신공항 건설 사업추진 ㉡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 ㉢ 공항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추진
	②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 전국 GTX 구축 ㉡ 개통(부분 개통 포함) ㉢ 착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③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 미래도로 준비 및 도로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국가도로망 확충 ㉢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1) 주요내용

<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 도모 >

- ☐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 ☐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 ☐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 >

-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 ☐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 연결 >

- ☐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 ☐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 ☐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수도권 인구집중도(%)	50.00	50.20	50.39	50.37	50.69	51.22	수도권 인구집중 통계청 추계치 ('22.5)를 감안해 목표치 설정 * '28년 기준 전국 51,300백만명, 수도권 26,277백만명 추계	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1) 주요 내용

□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 ❶ 초광역권계획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대 초광역 경제·생활권* 육성 위한 지역 주도 공간육성 전략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

* 4대 초광역권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 ❷ 도심융합특구 : 지방 광역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❸ 지역활력타운 : 청년, 은퇴층 등 지방 이주수요 대응위해 다양화된 형태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일자리·의료·돌봄 등 범부처 사업을 지원

□ (철도 지하화)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후화된 구도심 재구조화

- 전국 고속·일반철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추진여건, 개발범위, 사업 효과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 (도심 복합거점) 토지 용도, 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에서 벗어나 혁신·창의적 도시공간 계획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제도 도입 및 확산 추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환승역사 등)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복합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거점으로 재설계

□ (도시재생) 실제 거주민에 도움이 되는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생활 수요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

-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제거점 조성(혁신지구)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후보지 선정 등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솔루션 해외 실증 확대,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 등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신규	100	지역 주도 공간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핵심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정책을 성과지표로 설정	④ 4대 초광역권 육성 방안 마련(40%)+ ⑤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40%)+ 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20%)	관련문서, 보도자료 등
②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지역 발굴			신규	5곳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지역을 발굴하는 것으로 후보지역 선정 건수로 설정 지난 10년 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누적)*와 동일한 수의 도전적 목표 설정 * 인천역, 고양성사, 포항해도, 경주 화백, 부산 노후공업지 등 5개곳	공간혁신구역 선 도사업 후보지 선 정	보도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균형발전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방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지방권 메가시티 육성 등 근본적인 국토 공간 재편이 요구

* (인구, '22) 수도권 50.4% vs. 지방 49.6% / (GRDP, '21) 수도권 52.8% vs. 지방 47.2%

○ (경제여건) 반도체*, 방위,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와 정부의 기업지원 필요성이 증가

* 삼성, 용인에 215만평(300조원) 규모 파운드리·첨단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착수(~'42)

○ (사회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으로 도시의 축소가 예상되며, 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환경, 안전,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가

* (합계출산율, '21~'23) 0.81 → 0.78 → 0.72 / (65세 이상, '21~'23) 16.6% → 17.5% → 18.3%

□ (갈등요인)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는 방향으로 추진되므로 수도권-지방간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높음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갈등발생 소지 및 부처협조 필요과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I -1-①)

□ 추진배경(목적)

- (국토재편) 지역 구심점이 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촘촘하게 연결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방 4대 초광역권** 조성 필요

* 도심융합특구, 투자선도지구, 새만금, 행복도시 등

** (4대 초광역권) 부울경 / 충청권 / 대구·경북 / 광주·전남

- 수도권 1극체제에 따라 수도권은 주거·교통문제 심화, 지방은 낙후된 주거환경, 낮은 의료·응급 접근성으로 삶의 질 저하

* (주거) PIR('21):수도권(10.1배)>전국(6.7배)/ (교통) 수도권 혼잡비용 34.8조(전국 대비 60.4%)

- 메가서울·베이벨리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광역계획과 GTX·철도지하화 교통 계획 발표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新공간전략에 대한 관심 확대

* "영호남 지역은 부산, 수도권·충청·강원은 서울을 축으로 발전시켜야"(VIP, '23.11.29)

-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도시의 축소가 예상되며, 지방 소멸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어 인구 유입 거점 조성이 필요

* (합계출산율, '20~'22) 0.84 → 0.81 → 0.78 / (65세 이상, '20~'22) 15.7% → 16.6% → 17.5%

-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성장전략을 지원하여 특화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일자리 등 개발을 통해 유동인구 확대 필요

-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외부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①초광역, ②정부-지자체, ③민-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육성,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이를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토종합계획) 5차 국토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가속화, 코로나19 등 상황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전략 필요

* 총인구 감소('21), 합계출산율 0.68명('24), 고령화 비율 20%('25), 인구소멸위험지역 89곳 등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4대 권역별 메가시티, 융·복합 거점, 도시 혁신(공간혁신구역, 철도지하화, 노후신도시 등)을 담은 新공간전략 필요
- 또한 GTX, xTX 도입에 따른 공간 압축과 분산효과를 분석하고, UAM·자율주행 등 新 교통수단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필요
- 체계적 국토 개발·관리 위해 국토종합계획 주요 전략에 대한 핵심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지역·부문별 계획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실시

* 초광역권 계획 반영, 공간거점지도 활용, 경쟁력 제고, 친환경성, 부문별 계획과 정합성 등

** 도시기본계획, 국가도로망·철도망계획 등에 대해 국토관리 기본이념 반영 여부 평가(국토기본법 §19의2)

- 부처 간 인사교류*의 공동 협업과제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 계획의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운영

* 부처 별 칸막이 해소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환경부 등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24.2)

- (초광역권계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대 초광역 경제·생활권* 육성 위한 지역 주도 공간육성 전략인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

* 4대 초광역권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 초광역권 거점과 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 구축 시 이를 토대로 동태적(dynamic) 계획수립 지원

* 국토모니터링(국토기본법)을 통해 도시별 거점 및 연계, 생활인프라 등 공간구조 제시

- 계획수립 주체인 지자체에서 초광역권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 표준안, 지원방안 마련 및 설명회 개최

- (도심융합특구) 일자리·주거·문화가 융합된 ‘지방판 판교’ 조성

- (선도사업) 지방 정부의 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주거·의료·교육 등 공간계획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24.12)

* 부산·대전·대구 등 기본계획 완료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착수(개소당 5억 지원)

- (기업지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교육·주택·의료 특례 마련(‘24.4)

- (연구개발)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 위한 지역 별 R&D* 추진(5곳, 총 280억)

* 例) 울산 :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수소모빌리티 운영 시스템 기술개발

부산 : 그린스마트 빌딩 메가스테이션 에너지 최적화 플랫폼 기술개발

- **(투자선도지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과 연계한 투자선도지구 대상지 선정(3곳)
 -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서비스를 제공
 -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재정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지정의제 등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혜택 제공
- **(지역활력타운)** 은퇴자·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7→10곳)
 - 8개 부처가 공동공모를 통해 주거타운 내 기반시설 및 생활 서비스를 선정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 우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 **(민관협력 상생협약)** 지역의 고유자원과 민간의 창의성·전문성 등을 결합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9곳)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민간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를 보장하여 민간의 참여유인을 제공하고 공공시설 조성 등 협력
 - *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개정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
 - 시장·공원·기존시설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모델을 구성하거나,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유치 및 우수벤처 발굴·육성
- **(해안 및 내륙권 발전거점 조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기반, 교통망, 정주여건, 관광시설 등 발전거점 조성 지원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6개의 권역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 * 동해안권, 서해안권, 남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판단하여 지원 필요지역을 재지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추진	1월	5%	방침결정(실장)
	도심융합특구 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1월	5%	메모보고(장관)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	2월	5%	방침결정(실장)
2/4분기	도심융합특구 주거·의료·교육 특례 마련 (하위법령 제정)	4월	10%	관보게재
	지역활력타운 대상지 선정	5월	10%	메모보고(장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 대상지 선정	6월	10%	메모보고(장관)
	초광역권계획 수립 위한 지자체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6월	5%	보도자료 등
3/4분기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7월	5%	방침결정(실장)
	투자선도지구 대상지 선정	7월	10%	메모보고(장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8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성장추진지역 재지정	11월	10%	고시문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협약 체결	12월	5%	메모보고(실장)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승인신청	12월	5%	내부자료(공문)
	초광역권 계획 표준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사업설명회	사업공모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의 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공모지침 설명 및 사업기획 협의	'24.1,2월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4.1월
현장방문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지자체 현장간담회	'24.3월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지 입지 확인 및 지자체 공무원·지역주민 인터뷰 차 현장방문	'24.4월
	지역개발사업 및 투자선도지구 현장방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	'24.4월
	해안내륙권발전사업 현장 점검	'24.4월, 10월
회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자자체 점검회의	'24.1월
	해안내륙권발전사업 kick-off 회의	'24.2월
	지역활력타운 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	'24.3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지방시대기획단 회의	'24.4월
	초광역권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24.6월

□ 기대효과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매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
- 지역의 개성에 맞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거나 관광, 산업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거점을 조성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고싶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지역개발(I -1-일반재정②)				
①	지역발전투자협약(5550)		-	135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302)	균특회계	-	135
초광역개발권시범사업지원				
①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5554-302)			
	▪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5554-302)	균특회계	396	270
도심융합특구				
①	도심융합특구지원(6031-319)			
	▪ 도심융합특구지원(6031-319)	균특회계	5	5
②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4147-303)			
	▪ 지역도심융합기술연구개발(4147-303)	균특회계	13	50
성장촉진지역개발				
①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 성장촉진지역개발(5549-301)	균특회계	2,224	2,0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④ 4대 초광역권 육성 방안 및 새로운 국토 공 간전략 마련 (40%)	-	-	-	100%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점 조성을 위 한 4대 초광역권계획을 최초로 수립 하는 혁신적인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20년 단위의 최상위 공간계획 수정 을 위한 국토 공간전략 방안을 연구 하고,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 위한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제도 시행에 맞춰 선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 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	① 초광역권 계획 표준안마련(30%) + ② 국토종합계획 수정위한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20%) + ③ 도심융합특구 하위법령 제정(30%) + ④ 도심융합특구 1개소 기본계획 수립(승인 신청)(20%)	보도자료, 관보게재, 관련문서(메모보고, 협약서) 등
⑥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40%)	-	-	-	100%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신규사 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생활인구 확 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관 계부처, 시·도 간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의 근거, 주체별 역할 등을 마 련하는 한편 기존사업(해안내륙권발 전사업)의 지역발전에 기여정도 등 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방문 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만족도 달성	① 투자선도지구 신규사업대상지 3곳 선정(30%) + ②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40%) + ③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만족도 90% 달성(30%)	내부자료 (메모보고, 협약서 등)
⑦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20%)	-	-	-	100%	낙후지역의 여건개선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 을 재지정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 활서비스 등이 결합된 지역활력타 운을 조성하는 신규사업 대상지를 확대 선정(기존 7곳 → 금년 10 곳)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① 지역활력타운 신규사업대상지 10곳 선정(50%) + ②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50%)	내부자료 (메모보고, 고시문 등)

②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I-1-②)

□ 추진배경(목적)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교통수단 그 이상으로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

- ◆ 철도부지 개발 활성화로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
- ◆ 국민 편의 최우선으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현
- ◆ 철도서비스 혁신과 철도산업 글로벌 위상 강화로 한국철도 세계화

<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간혁신 추진 >

- 철도 유휴부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민간은 역사개발, 레일바이크 등 다소 획일적으로 활용함에 따른 다각화 모색
 - 민간이 철도 유휴부지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철도역과 주변을 연계하여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으로 통합개발함으로써 철도 주변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철도역 중심으로 도심·비도심 등 유형별 개발모델*을 마련하고, 역세권개발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
- * (도심) 서울역세권(‘24.下 공타 신청) / (비도심) 춘천역세권(‘24.3. 공타 신청)
- ** (법령개정) 지방의회 의견 청취·지구단위계획 수립(2회→1회)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역세권법」 개정(‘23.8, 24.1)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4.7)
- 철도는 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단절 문제가 부각

-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철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철도 지하화 추진 필요

*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구조화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철도서비스 제공 >

- 철도물류는 시멘트·철강 등 기간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 및 적자누적에 따라 수송량 지속 하락중

* (철도운송 한계) 도로 대비 상하역·서류 추가비용, 제한된 수송조건(장거리·대량수송)
(철도수송량, 만톤) 4,167('05) → 3,927('10) → 2,628('20) → 2,125('23), '05년 대비 △49%

⇒ 인프라 투자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필요

- 비대면 방식의 열차표 예매 및 발급과정에서 경로·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 사항들에 대한 대·내외적으로 개선 필요성 제기

⇒ 예매가 중요한 명절 사전예매 방식 개선 및 안내 강화로 접근성 확대

- 다양한 열차 차종은 정비 및 유지관리비 증가 등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여 운용차종 단순화 등의 표준화 추진(동력집중식 → 분산식)

⇒ 기존의 고속열차보다 빠르고(최고속도 : 300km/h → 320km/h), 쾌적한 운송서비스(가감속 성능우수)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 고속열차 도입

< 철도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

- 세계 철도시장 규모가 '22년 기준 총 370조원에서 오는 '30년까지 575조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철도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적극 확대할 필요

- 국내 철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외교 강화(국제회의 개최, 발주국 네트워크 구축 등), 강소기업 육성, 국제인증 지원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간혁신 추진

① '도시의 재구조화' 철도 지하화 추진

< 사업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

- 전국 고속·일반철도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추진여건, 개발범위, 사업효과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4.3~)

* (용역명/금액/기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30억원/ '24.3~'26.3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시기('24.1 제정, '25.1 시행)에 맞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인센티브 등 하위법령* 마련(연내 제정)

* 종합계획·기본계획 세부 수립절차, 사업성 제고를 위한 철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수준(건폐율·용적률·주차장면적 등) 등 법상 위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규정 등

< 1차 선도사업 공모·선정 >

- 지자체로부터 제안('24.6~10월)받은 사업구상(안) 중에서 계획의 완결성·사업성 등이 높은 사업을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

*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종합계획('25.12월 수립) 포함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착수 가능

- 지자체에서 사업구상(안)을 충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이해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24.6)

*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

- 지하화 공법, 도심 재구조화 계획 등에 관하여 철도·도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구 운영('24.3~)

② 철도역과 주변지역 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

- 철도와 주변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개발하고, 기차,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간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
 - 서울역, 춘천역 등 교통의 결절점을 환승센터 및 주거·상업·문화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컴팩트시티로 개발
 - * 서울역개발 : 공공예타('24.上~'25.上) → 개발계획 수립('26) → 인·허가('27) → 착공('30)
 - ** 춘천역세권 : 공공예타('24.3~'24.下) → 개발계획 수립('25) → 인·허가('26) → 착공('28)
 - *** 수서역세권 : 출자회사 설립('22.2) → 개발계획 수립('24) → 인·허가('25) → 착공('26)
 -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지방의회 의견청취 2회 → 1회로 축소) 등 「역세권법」 하위법령 개정
 - * 관계기관 협의('24.2) → 입법예고('24.3) → 법제처 심사('24.5) → 차관회의('24.6) → 공포('24.7)
 - * **【구성안】 (지하화기술)** 철도공사·공단, 교통연, 철도학회 등 / **(도시개발·금융)** LH, 국토연, 국토도시학회, 리츠협회 등 / **(지역협력)** 권역별 지자체 + 시·도연구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법 및 도시 개발이익 극대화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의 장으로 활용하고, 사업 방향성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4월 협의체 출범식(국토부장관·16개 광역지자체장, 공공기관·연구기관장 등)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학회 등과 연계하여 간담회·세미나 등도 개최

③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자산의 민간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 (정보 접근성 강화) 주요 부동산 플랫폼(KB, 캠코)에 유휴부지 정보와 연결되는 배너를 삽입('24.下)하여 접근성 제고
 -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민간 관심이 높은 일부 부지는 별도로 지도 정보, 공시지가, 주변환경 분석(교통, 주거) 등 상세 정보 제공
 - 이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울산, 광명)을 연내 착공하여 유휴부지 활용의 다변화 모색
 - * (울산) 20MW 설비용량을 보유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태화강역, 한국남부발전) (광명) 친환경 생산 전기를 전기차에 공급하는 시설 조성(광명소하역, SK에너지)
- (불요자산 처리) 폐선 등 행정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민간에 적극 매각

- 특히, 산업단지 내 철도운행이 중단된 노선은 노선폐지·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민간이 공장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금년도는 울산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을 대상으로 노선폐지('24.6), 용도폐지('24.12)를 완료하여, 산단 입주업체에 매각 추진

- (점용료 분납이자 면제) 최근 경제침체로 민자역사 운영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을 우려, 점용료 분할납부 시 한시적 이자 면제

*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24.9) '24.3월 기준 분할납부 이자율은 3.8%로, 전체 27개 점용허가 사업이 분납 할 경우 年 4.8억원의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 기대

④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확대

- 철도자산의 활용도 제고 및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하여 키즈레일(철도어린이집), 섬섬옥수(중증여성장애인 취업), 돌봄센터 조성 확대 추진

- 키즈레일은 2개소(거제·정읍역) 개원 및 1개소(백양사역) 설계 착수, 장애인 자립을 위한 네일케어 사업인 섬섬옥수도 2개소 신규 조성

* 키즈레일 운영(누적) : ~'23년 4개소 → '24년 6개소 → '25년 이후 7개소
섬섬옥수 운영(누적) : ~'23년 10개소 → '24년 이후 12개소

- 아울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하여 역사 유휴부지를 활용한 돌봄센터 건립 추진('24년 지자체 수요조사·설계 → '25년 착공)

2.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철도서비스 제공

① 다자녀·서민 교통지원 확대

- (다자녀 할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 열차 이용시(최소 3명 이상) 어른 운임 할인을 확대(30→50%, '24.上)

- 또한, 다자녀가구 할인 적용을 위한 탑승인원 기준도 완화*(24.下)

* (現) 최소 3명이상(어른1 포함) 이용 → (改) 2명(어른1, 6세미만1) 이용에도 할인

- (임산부·수급자 할인) 코레일 열차 이용 임산부에 대한 운임 할인을 도입*(40%)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은 확대(30→40%, 일반열차)

* (現) KTX 특실 승급 → (改) KTX 특실 승급 또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할인(40%) 중 선택

②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 (명절 사전예매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경로·장애인)에 대한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접근성*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개선

* (개선안): 공급좌석 확대(10%→20%), 좌석할당(전화10%, 모바일10%) 예매일 확대(1일→2일)

- (디지털 안내 강화) 전담직원을 주요 철도역*에 배치하여 어르신 대상 승차권 키오스크 및 코레일톡 이용 안내 등 현장 안내 강화

* 코레일 9개역(서울, 용산, 청량리, 수원, 천안, 대전, 동대구, 대구, 부산, '24.上)

- (전용발매기) 경로·장애인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 휠체어 접근성 용이, 음성·자막 제공, 직원 호출(영상통화) 기능 포함 등

** 시험인증기관 검증(장애인 등 테스트 포함) 후 144대 설치(코레일 140대, 에스알 4대, '24.下)

- (외국 관광객 접근성 강화) 영문 등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기능을 부여하여 원하는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24.上)

③ 철도서비스 기반 개선

- (신규 고속열차 도입) 국내 현존 최고속도(320km/h)의 고속열차인 EMU-320의 대국민 네이밍 공모와 주요노선에 영업운행 투입('24.5)

④ 철도물류 효율성 개선

- (장대화물열차 운행) 기존 화물열차 대비 수송력이 향상*된 장대화물 열차 상업운행을 위해 경부선 김천역 선로 확장 등 인프라 개선

* 오봉역~부산신항 화물열차 편성당 연결량수를 33량→50량으로 늘려 수송력 50% 증강

- (화물취급역 신설) 서해선 개통에 따라 운영예정인 송산역, 안중역에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조성하여 수도권 서부 물류거점으로 활용
 - * 서해선은 향후 서해축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주변 다수의 항만 및 대규모 공단(남동·반월·시화)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 우수
- (전환교통 제도개선) 전환교통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약사업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보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화물차량 구입 재정지원)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24년)에 따른 화물기관차 3량, 화차 49량 구입비용의 절반 지원(약 200억원)

3. 철도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① K-철도 해외시장 진출 확대

- (국제철도 협정) 국제철도 운행에 필요한 국가간 표준을 정한 국제 철도화물(SMGS) 발효(국제철도협력기구)을 위해 국내 절차* 진행
 - 상반기 중 번역검수(원문 노어)를 완료, 외교부에 국내절차 개시 요청
 - * (국내절차) (OSJD 가입승인('23.6))→외교부 가입의뢰('24.上)→외교부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필요시) →OSJD 가입서 기탁('25.上)
 -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대륙철도 운송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아국기업 공장이 있는 우즈벡까지 시범운송 추진
 - * (참가국/운송기간) 한국-중국-카자흐-우즈벡(약 7,000km, 한중 해상, 중국부터 철송), 25일
 - ** (주요내용) 한국 물류사(4개사)에서 현지공장까지 자동차 부품 1,650톤 운송(컨테이너 55개)
- (네트워크 구축) 고위급 면담 및 수주지원단 파견, 철도 협력회의, OSJD 행사 등을 통해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주요국에 홍보하고,
 - 주요 발주국 종사자 대상으로 석사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연수생-국내 기업 교류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수주 인적 네트워크 구축**
 - * 해외 발주국 공무원 대상 국내 철도기술·문화 학습기회 부여 → 親한국 인력 양성
 - ** 한-체코 장관 면담 후속조치('23.4)로 한-체코 고속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 실시 등

- (수주실적 제고) 타당성조사 지원(ODA), KSP(지식공유사업), 주요국과 MOU 체결 및 워킹그룹 운영 등으로 정부 주도의 G2G 사업 적극 발굴
 -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유망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해외 수주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분기별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구성)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협회, KIND

- (국제인증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그 간 성과가 인정된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지속 추진

* (인증취득 누적건수) ('20) 6건→('23) 49건 / (중소) 건당 최대 1.5억, (중견) 건당 최대 1억원

- (역량강화 교육)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국제 인증 취득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 시행

* 정책, 이론, 자격, 실무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생 간담회·의견수렴을 통해 지속 개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 가입서 기탁 및 발효	2월	6%	공문(가입서)
	전환교통지원사업 위탁기관 공고	3월	5%	고시문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의뢰	3월	6%	관련문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3월	6%	관련문서
2/4분기	3자녀 이상 가구 고속철도 운임 할인혜택 강화	4월	6%	메모보고(차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간담회	4월	6%	메모보고(장관)
	키즈레일 2개소(거제역, 정읍역) 신규 개원	5월	6%	메모보고(차관)
	신규고속열차 EMU-320 운행 개시	5월	6%	보도자료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가이드라인 배포	6월	5%	공문
3/4분기	서울역종합개발사업 공공예타 신청	9월	6%	관련문서
	명절 사전예매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9월	6%	메모보고(차관)
	국제인증 취득 역량강화 교육 실시	9월	6%	관련문서
	한-중 철도협력회의 개최 및 화물철도 시범운송 추진	10월	6%	메모보고(차관)
4/4분기	철도지하화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1월	6%	관련문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선정	12월	6%	보도자료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할인 적용 기준 완화	12월	6%	메모보고(차관)
	임산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철도운임 할인혜택 강화	12월	6%	메모보고(차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울산 장생포선 폐선을 위한 현장방문 및 관계자 협의	'24. 3월
회의	단위선로사용료 도입을 위한 TF 회의	'24. 3월
협의체	철도지하화 관련 분과별 회의 추진	'24. 4월
회의	한-체코 고속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	'24. 7월
현장방문	수서역세권개발사업 추진현황,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	'24.10월
워크숍	국제인증 취득 정보제공 워크숍 개최	'24.11월
회의	단위선로사용료 도입을 위한 철도산업위원회 안건 상정	'24.12월

□ 기대효과

- (EMU-320 투입) 현존 최고속도 열차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간선노선을 대상으로 최소 정차 등 고속 운행패턴 구축
- (이용객 만족도 제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 및 연계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 향상
- (철도사업자 경영개선) 운임 체계 개편, 승차권 구매 접근성 강화 등 철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수요 증가로 코로나-19로 악화되었던 철도사업자의 경영실적 개선 예상
- (양육부담 완화) 철도역사 내 돌봄센터, 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여 맞벌이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대
- (일자리 창출) 철도 국유재산을 벤처 창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여 유희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공익적 가치 실현
- (해외시장 진출) 우리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성과 창출 및 수주에 특화된 철도전문가 양성 등 역량강화를 통해 해외경쟁력 강화
 - 주요 발주국 종사자 - 국내기업 인적교류 활성화, 유망사업 발주기관 협력 등 수주외교를 통해 수주 제고 및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 점용료 분할납부 시 한시적 이자 면제로 연간 4.8억원의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 기대(24.3월 기준)
 -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철도지하화)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선로 주변의 노후·저밀 개발지역을 철도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하여 도심을 재구조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3	'24
철도안전및운영(V-9-일반재정②)				
①	철도정책지원(2733)		85	72
	▪ 철도산업발전지원(304)	일반회계	59	57
	▪ 철도핵심인력양성(316)	일반회계	16	15
	▪ OSJD 장관회의(324)	일반회계	10	-
물류정책(VI-3-일반재정②)				
②	물류산업지원(4034)		43	42
	▪ 전환교통지원(302)	예특회계	43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간혁신 추진							
㉠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법 하위법령 마련(10%) (단년도)	-	-	신규	1건	▪ '25월 1월 「철도지하화통합 개발법('24.130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특례·인센 티브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예 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성과 결과물을 성과지표로 설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마련 ≥ 1건	관련 문서
㉡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10%) (다년도)	-	-	신규	2건	▪ 당초 종합계획 수립('25.12)이후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나, 사업성과 조기 실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인 '25년 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예정	선도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2건	관련 문서, 보도자료 등
㉢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조성(10%) (단년도)	-	-	신규	2건	▪ 철도자산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조성, 지자체 간의 협의와 건설 과정이 장기 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로 실제 결과물을 도출 하기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 * (누적) 23년 4개소 → '24년 6개소	공익사업(키즈레일) 신규 개원 건수 ≥ 2건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철도서비스 제공							
㉤ 고속·간선열차 이용자(15%) (다년도)	-	-	신규	160 백만명	▪ 최근 3년 간 고속·간선열차 이용자는 평균 140백만명에서 14% 증가 한 160백만명으로 20백만명이 증가한 매우 도전 적인 목표치 설정	고속열차(KTX+SRT) +간선열차(새마을, 무궁화 등) 이용자수 ≥ 160백만명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화물취급역 신설 건수(10%) (단년도)	-	-	신규	2개역	▪ 화물역 폐지가 지속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송루트 확보를 위해 인프라를 신규 구축 하고자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화물취급역 신설수 ≥ 2개역	고시문 등 관련 문서
㉦ 교통약자 명절 사전 예매 실적 (10%) (다년도)	-	-	신규	13.9 만건	▪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편의 등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급좌석 확대, 좌석할당, 예매일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도전적인 지표 로 신규반영 * '23년 명절(설,추석) 사전예매좌석(12.7만건)	교통약자 사전예매 좌석수 ≥ 13.9만건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EMU-320 신규 도입(10%) (단년도)	-	-	신규	2편성	▪ 국내 현존하는 최고속도(320km/h)로 운행되는 열차로 새로운 고속 철도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열차의 신규투입	EMU-320 ≥ 2편성	보도자료 등 관련문서
철도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 해외사업 수주 건수(15%) (다년도)	4	3	5	6	▪ 국내 철도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해외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수주 예정인 모든 건수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해외사업 수주는 체계적인 발주전략 수립,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수주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지표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해외사업 수주 건수 ≥ 6건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국제인증 취득 교육 이수 실적 (수료생 수)(10%) (다년도)	198	386	400	420	▪ 국내 철도제조업체의 국제인증 취득 활성화를 위해 교육 수료 생 목표 를 대폭 상향 조정	국제인증 교육을 받은 수료생 수 ≥ 420명	공문 등 관련 문서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I-1-③)

□ 추진배경(목적)

- (복합거점 조성지원) 구도심의 인구유출, 상권쇠퇴 등으로 인한 공동화, 슬럼화 등의 문제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 저하 요인
 - 도심 내 대규모 이전적지, 도시기반시설 등의 유희부지를 복합거점화하여 도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나, 기존 도시규제가 제약
- ⇒ 파격적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 고밀·복합 개발을 지원하여,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Compact City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민생중심 도시재생)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도시쇠퇴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14~)
 - 그간,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업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거점조성 체감도 저조* 등 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부족한 한계
 - * 만족도조사('22년) : 가장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신산업 거점 및 일자리 창출' 집계
 -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요 반영의 한계,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생활SOC를 공급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거점 조성 등 실용적 도시재생 추진
- (토지이용규제 혁신) GB 등 토지이용규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지만,
 - 경제성장 둔화, 수도권 집중 심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산업단지 조성 등)하는 데는 제약으로 작용
 -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신도시 조성은 지양하되,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의 유연성은 제고 필요
- ⇒ 경직적 토지이용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도심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규제혁파 》

- ◆ 경제정책방향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 ◆ 국정과제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실천과제3(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편)에 반영
-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① 공간혁신구역을 통한 도심 내 신성장거점 조성 지원

- 토지 용도, 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혁신·창의적 도시공간 계획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 확산 추진

* (도시혁신구역) 용도, 밀도 자유롭게 계획 가능한 한국형 White Zone
(복합용도구역)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시설 설치를 허용
(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등)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토록 입지 제한 및 밀도 완화 → 지역 노후 공공청사, 터미널 등의 복합시설 조성 활용

- (제도 완비) 지난 해 발표한 공간혁신구역이 빠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연내 국토계획법 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차질 없이 완비
- (선도사업 추진) 완비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파급력 있는 지역에 모범사례 발굴(선도사업 후보지 5개소 내외 선정)

②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설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환승역사 등)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복합될 수 있도록 설치규제를 대폭 완화(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 (근린생활시설 전폭 허용) 주민편의시설 등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면 도시계획시설 내 편의시설로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상가, 헬스장 등)

- (설치 규제 유연화) 근린생활시설 외 주민 편의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설치 허용

《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新도시재생 추진 》

-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발표 및 대통령 지시사항('24.3)
- ◆ 경제정책방향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 ◆ 국정과제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실천과제2(강소도시의 차별화된 공간조성과 낙후지역 삶의 질 개선)에 반영

① 구도심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 실제 거주민에 도움이 되는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실생활 수요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
 - 거주지의 주차·안전·주거·복지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신설 및 지자체 계획수립 시 주민수요 조사를 거치도록 개선(공모 가이드라인)
 - * 현재 계획수립 시 주민 전반의 수요조사 절차는 부족하여 전체 주민의 수요와는 괴리된 시설도 설치 가능(공동작업장, 공유주방, 텃밭 등)
 -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쇠퇴지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급 추진('24년 50개)
 - 진행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평가 및 부진 사업지 구조조정을 거쳐 예산 조정 또는 필요시설에 재투자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관리
-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경제거점 조성(혁신지구)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대도시, 거점도시의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지구 본격 추진('24. 3곳)
 - * '19~'23년간 도시재생혁신지구 총 12곳 선정(연평균 2곳)
 -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공모탈락에 대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고 지구계획 수립(HUG) 등을 지원

②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정비 지원 확대

- 달동네, 쪽방 등 취약지역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새뜰마을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내실화 추진

- * 저소득층 밀집 취약지역에는 무엇보다 집수리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지원범위의 한계로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
- 소극적 집수리 사업의 원인인 집수리 지원 단가를 건설비용 상승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자부담율을 하향하여 지원확대 추진
 - * 집수리 단가 : (기존) 도시 9백만원 → (개선) 12백만원(3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 20%(30%p↓)
- 또한, 새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자금 및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도 적극 추진

《 국민이 환영하고 지역이 도약하는 토지구제 전면 정비 》

-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발표 및 대통령 지시사항(24.2)
- ◆ 경제정책방향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① 새 시대에 맞게 넓은 토지이용규제 원점 재검토

- 오랜 기간 국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약 및 지역 유희부지 활용 저해 등을 야기했던 구시대적 토지구제를 과감하게 개선
 - * 현재 336개에 달하는 규제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법에 등록
- (엄격한 규제관리체계 마련) 개별 법률에 산재한 규제 지역·지구 지정 목적과 운영실태 등을 전수조사하여 철폐 방안 마련 및 새로운 규제지역은 원천 봉쇄* 추진(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련)
 - * (예) 지역·지구 신설 제한, 기존 지역·지구에 대한 일몰제 신설 등
- (시급한 민생규제 개선)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여년간 존속된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제한 철폐 등 시급한 규제는 즉시 해소(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완화,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허용,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설치,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입지규제 철폐 등

② 지방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GB 규제혁신

○ 소멸위기를 맞은 지방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GB)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 (해제총량)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해제기준의 합리적인 유연화** 추진(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 지역전략사업 정의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민생토론회 등 국민·전문가·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준 개정

- (해제대상)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하여 엄격한 기준 아래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GB 해제지침 개정)

*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신규 GB 대체지정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 (행위제한)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등 주민 생활과 주거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완화(GB법 시행령 개정)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워크숍 실시	1월	5%	메모보고(실장)
	도시재생사업지 장관 현장방문·점검	1월	5%	보도자료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2월	5%	보도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월	10%	법령정보센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계획 마련	2월	7%	메모보고(장관)
	GB 규제혁신 방안 발표	2월	7%	보도자료
2/4분기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4월	7%	메모보고(실장)
	GB 규제혁신을 위한 훈령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4월	5%	관련 공문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및 설명회	4월	5%	관련 공문
	범부처「토지이용규제 혁신 TF」구성	4월	7%	메모보고(차관)
3/4분기	지역성장 지원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	9월	10%	법령정보센터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지침(훈령) 제정	9월	7%	보도자료
4/4분기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및 구조조정안 마련	10월	7%	메모보고(장관)
	도시재생사업 선정 및 특위 심의	12월	7%	메모보고(장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방심	12월	6%	방심 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워크숍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워크숍	'24.1월
현장방문	토지이용규제 개선 관련 민생토론회	'24.2월
간담회(설명회)	'24년 도시재생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24.4월
간담회(설명회)	지자체 대상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설명회	'24.7월
간담회(설명회)	공공시설 공동이용 가이드라인(안)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10월
현장방문	고양 혁신지구(도시재생) 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도심복합거점 조성 및 도시재생) 경제거점 조성 확산을 통한 쇠퇴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증진
- (토지이용규제 개선) 현실과 맞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폐지·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 제약 해소 및 국토 활용도 제고
-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GB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성장·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지원(5551)	균특회계		
도시재생(I-2-일반재정⑥)			
① 도시재생(5641)	지특회계	5,624	4,295
▪ 도시재생사업(301)		5,624	4,295
도시재생(I-2-일반재정⑦)			
① 도시재생(5642)	지특회계	152	75
▪ 도시재생사업(제주)(301)		152	75
도시재생지원(II-7-일반재정①)			
① 도시재생지원(1510)	주택도시자금	154	91
▪ 도시재생사업지원(992)		154	9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도심복합거점 조성 (35%)	-	-	-	5곳	새로운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지역을 발굴하는 것으로 후보지 역 선정 건수로 설정 지난 10년 간 입지규제최소구역 으로 지정된(누적)*와 동일한 수의 도전적 목표 설정 * 인천역, 고양성사, 포항해도, 경주 화백, 부산 노후공업지 등 5개곳	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x 50%	보도자료
	-	-	신규	관련 법령 개정	도시계획시설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완료	②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x 50%	법령정보시스템
㉡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新도시재생추진 (30%)	-	-	신규	가이드 라인 개선	소극적 집수리 사업의 원인인 집 수리 지원 단가를 건설비용 상승 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자부담율 을 하향하여 지원확대 추진 * 집수리 단가 : (기존) 도시 9백만원 → (개 선) 12백만원(3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 부담 50% → (개선) 20%(30% ↓)	① 가이드라인 개정 x 30%	보도자료
	-	1	2	3	그간 1~2곳 수준의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실질적 경제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23년 실적 대비 150% 수준인 도전적인 목표 설정	②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선정 개수 x 35%	보도자료
	-	-	신규	5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물량조정 및 신규유형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공급물량 목표 설정	③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급 개수 x 35%	메모보고
㉢ 토지규제 전면정비 (35%)	-	-	신규	방안 마련	국민 재산권 행사 강화 및 국토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의 폐지·개선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므로 각 부처 이해관계 상충 등을 조정 해야 하는 고난이도 목표 설정	①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개혁방안 마련(25%)	보도자료
	-	-	신규	법령 개정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완료까지 추진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x 25%	법령정보시스템
	-	-	-	신규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하되, 수도권과의 이해관계 상충을 조정 해야 하는 고난이도 목표치 설정	③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개정 x 25%	법령정보시스템
	-	-	-	신규	환경평가 1·2등급 해제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지 역전략사업의 경우 환경적 가치 를 유지하면서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해야하는 어려 움을 반영한 목표 설정	④ GB 해제지침(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x 25%	법령정보시스템

④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I -1-④)

□ 추진배경(목적)

- (스마트도시)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추진 중('18~)

- 그간 147개 자자체에서 400여개 솔루션을 실증*하여 도시 공공 서비스·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관련 업계의 양적 성장 등 성과

* 교통편의 제고(수요응답형 버스), 주차난 해소(공유주차), 범죄·화재지역 출동시간 감소 등

- 다만, 실증된 솔루션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민간기업 주도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성과 창출 미흡 등은 한계

⇒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확산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제품 보유 기업 육성 및 해외수출 지원 등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용산공원) 용산 미군기지 반환 등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개방('23.5~)

- 다만,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대통령실 등이 위치한 용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원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비전 부족

⇒ 용산어린이정원 개방공간 확대·행사 다변화 등 내실화 및 용산시대 본격화를 위해 용산 전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발전방향 수립 필요

- (탄소중립도시)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 주거, 교통 등 분야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기반 마련중

⇒ 시범도시를 토대로 수소도시 조성이 본격 확산됨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춘 민간의 적극 참여 유도 필요

- 또한, 도시·공간계획에 활용되는 탄소공간지도를 고도화하고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 지원기술에 대한 검증·확산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미래도시 선도모델, 한국형 스마트도시 》

- ◆ **국정과제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실천과제4**(全國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마련)에 반영
-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① 미래형 스마트시티 모델구현을 위한 4차 종합계획 확정

-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해외진출·혁신 생태계 조성 등 지원을 위한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 확정
- ①지속가능한 공간모델, ②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④K-스마트도시 해외진출을 주요과제로 제시

② 지역여건을 고려한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지원

-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중소도시가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토록 지역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24년 3곳 이내)**
 - * (예) 인구감소지역고령화 도시 등 대상으로 원격의료, 노인돌봄서비스, 교육보육 지원 솔루션 등
- 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거점으로서 기업 지원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24년 1곳)**
 - * 산업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 내 스마트시티 기업의 기술개발·실증 등 지원
- 생활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검증된 솔루션***을 패키지로 **집중 보급('24년 10곳 이내)**
 - *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화재 감지, 스마트폴 등 수요와 성과가 높은 서비스를 선별
- 민·관 SPC를 세종시범도시(5-1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 내 스마트서비스* 구축과 건축물 조성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 * 데이터·플랫폼, 스마트 IoT, 스마트 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21종

③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 스마트도시 산업·기술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후보지로 선정*하여 혁신기업 육성 지원

* 지자체 설명회 및 수요조사('24.上)를 통해 후보지 4~5개소 선정(~12월)

- 다양한 기술 분야의 스마트도시 혁신기업들이 규제 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 '24년은 안전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범방재' 분야 공모

- 스마트도시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의 성능 및 효과검증 기회 제공('24년 4개 기업)

* 수요처인 지자체·공공기관(실증공간 제공)과 기업이 매칭을 통해 공모 지원

④ K-스마트시티 해외 확산을 통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 보유기업 등을 담은 카탈로그를 개발하여 해외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 우수 K-스마트도시 기술 100선을 선정하고 국영문 카탈로그 제작 및 기술 홍보 홈페이지 오픈

- 국내 개발된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확대하여 현지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기업의 현지 실적 확보 지원('24년 6건)

- 해외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 사전컨설팅 신설('24년 6건) 및 해외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지원('24년 2건)

- 해외사업 정보발굴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위한 스마트 시티 해외협력센터* 확대 운영 및 현지 로드쇼 개최('24년 8회)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 사우디(리야드), 케냐(나이로비), 폴란드(바르샤바), 필리핀(마닐라), 일본(도쿄, 신설)

- 국내 기업 해외수출 및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하여 K-스마트시티 홍보 및 도시 아젠다 논의 주도

* (일정) '24.9.3~5, 킨텍스 / (내용) 전시, 비즈니스미팅, 컨퍼런스, G2G양자협력 등

《 과거 · 현재 · 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

◆ **국정과제12**(국정운영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실천과제2**(용산시대, 제왕적 대통령 청산)에 반영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①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 운영 내실화

- (개방 확대)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어린이 교육·체험 특화시설 등을 추가 조성(5동)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
 -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용산어린이정원 내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수렴한 방문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성하고,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환경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연 10회) 및 결과 대국민 공개
 - (행사 확대) 대통령실 초청 스포츠대회, 국토부장관배 그림그리기 대회 등 파급력이 높은 대형 이벤트를 포함해 연간 48건 행사 진행
 - 미군·관계부처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지속적인 행사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2.0’ 등 신규행사 진행 추진
- * ‘18~’19년 진행 후 코로나로 중단, 미군 협의 및 투어노선·콘텐츠 보강 후 재개 예정
- (홍보 활성화) 어린이, MZ세대가 선호하는 숏폼 동영상 콘텐츠를 월 1회 이상 제작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SNS 채널 구독 및 용산어린이정원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용산어린이정원 SNS 채널 활성화
 -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원 고유의 BI 디자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출시
 - (역사성 보존) 용산기지 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활용·보존계획 수립

* 기지 내 건축물 1,017동 중 일제강점기 시대 건축물 84동 등 확인

- 기지 내 시설물 등의 역사성 기록·아카이빙 등을 위해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물 전수조사 지속
- (기지 반환) 조속한 용산공원 정식 조성을 위해 기지반환을 지속 추진하고, 반환된 부지·건물은 전문성 있는 기관(LH)에서 관리·보존

② 용산시대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용산을 정치·경제·문화·국제교류의 新 국가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산 전역을 권역·기능별로 구분·연계한 국가적 발전전략 수립
- 권역별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
-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최상위 법정계획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 》

◆ **국정과제86**(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실천과제6**(공간과 이동의 탄소중립)에 반영

◆ **2024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및 핵심정책과제**

- (수소도시 조성 확산) 수소시범도시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인프라 확충, 안전성 강화 등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
- * '19년 수소시범도시 3곳 → '23년 수소도시 6곳 → '24년 수소도시 3곳
- (민관협력 및 홍보 확대) 수소도시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민간 주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 운영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을 통해 수소도시 전시회,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대국민 개선 효과를 국내외에 홍보(연 2회)

-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협업)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소기술, 인프라 구축, 수소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수소도시 조성사업 및 안전관리 지원(도시별 1회 이상)

* 건설·교통, 안전, 도시, 건축, 에너지 등 수소도시 관련 쏘 분야

- (탄소공간지도 실증도시 선정)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지원 기술에 대한 성능검증 및 확산 모델 개발을 위해,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는 탄소중립 계획요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실증 지자체 2개소('24년) 선정

* 탄소중립지표(인구, 흡수원 총량 등) 설정, 탄소중립형 공간구조설정, 계획수립지원 (입지, 용도, 밀도), 모니터링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K-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 공모	1월	5%	보도자료
	국토부-LH간 반환부지 관리·운영 업무 위탁협약 체결	1월	5%	협약서
	탄소중립도시 민관협의체 회의	1월	5%	메모보고(실장)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2월	5%	보도자료
	용산공원 임시개방 만족도 평가 용역 진행	2월	5%	결과보고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거점형·강소형·솔루션) 공모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세종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사업시행자 지정	4월	8%	보도자료
	혁신기술 발굴·실증사업 공모	5월	5%	보도자료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K-City Network 사업 선정	6월	5%	메모보고(장관)
3/4분기	100대 우수 스마트시티 기술 선정	8월	5%	보도자료
	혁신기술 발굴·실증사업 선정	8월	5%	메모보고(장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선정	9월	5%	메모보고(장관)
	용산기지 반환부지 시설물조사 착수(6차)	9월	5%	방침문서(정책관)
	용산기지 버스투어 개시	9월	5%	보도자료
	'24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9월	7%	보도자료
4/4분기	스마트시티 현지 로드쇼 개최	10월	5%	메모보고(실장)
	용산어린이정원 어린이 스포츠대회 행사 개최	10월	5%	메모보고(실장)
	임시개방부지 환경 모니터링 결과 정리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공청회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공청회	'24.1월
의견수렴	전문기관을 통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방문객 만족도 평가 진행	'24.2월
사업설명회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지자체 설명회	'24.5월
협의회	용산 전역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 등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및 사전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국토부-서울시 협의회 개최	'24.7월
공청회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등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기관(지자체·정부부처)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진행	'24.11월

□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혁신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혁신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들의 효과적 해결, 공공·행정 효율성 증대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
-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 확대 등을 통해 도심지내 부족한 여가·문화시설, 녹지 등을 제공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
 - 용산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닌 살기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 소통 쉼터로서의 역할 정립
 - 용산 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용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획기적 계기 마련
- **(탄소중립)**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형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지원
 -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지원(I -1-일반재정①)				
	▪스마트시티기반구축(5637-304)	일반회계	53	55
	▪스마트시티확산사업(5637-308)	일반회계	1,155	788
	▪스마트시티산업육성(5637-309)	일반회계	74	74
○ 용산공원 조성사업				
	① 용산공원 조성사업(5635)	일반회계	303.78	435.42
(지특계정) 수소도시 지원				
	① 수소도시지원(5642)		57.5	302
	▪ 지방단체자본보조(지특자율계정)(330-03)	지특회계	52.5	297
	▪ 일반연구비(지특지원계정)(260-01)	지특회계	5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미래도시 선도모델, 한국형 스마트시티 (35%)	-	-	14곳	10곳	스마트도시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사업공모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 을 구분하여 '24년 10곳 선정(국회 예산심의 결과 '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가능 규모를 감안한 최대 목표치 설정) * '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50% 수준이나, 지원 지자체 수는 과감한 목표치 설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 선정 지자체수 (10곳) x 60%	보고자료 등 관련문서
	5곳	5곳	7곳	8곳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서비스의 해외 수출과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정보 발굴, 법률상담, 바이어 연결, 수주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협력센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 함을 감안하여 '24년 1곳 신규 개설	신규센터(코트라 일본도쿄무역관) 개설 완료 x 40%	보고자료 등 관련문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㉞ 과거·현재·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 공원 (35%)	-	0	10	15개동	콘텐츠공간 다양화 등을 통한 방문객 증대 및 만족도 증가를 위해 5개동 추가 리모델링	용산어린이정원 내 개방(리모델링) 건물 개수 x 30%	메모보고
	-	-	신규	기본 계획 변경 고시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용산에 대한 종합적 발전전략 제시 필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완료 x 40%	고시문 등 관련문서
	-	-	44	1,000명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및 인기 콘텐츠 업로드 등을 통해 유튜브 구독자수 20배 이상 증가 목표	용산어린이정원 유튜브 구독자 수 x 30%	현황자료 (용산어린이정원 유튜브 페이지)
㉟ 탄소중립도시 조성확대(30%)	-	-	신규	2건	수소도시 확산에 대비한 민간주도 수소도시 민·관협업체인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성 및 연 2회 이상 운 영 등 도전적 신규 목표 부여	컨퍼런스 행사 2회 x 20%	메모보고
	-	-	신규	3건	신규 수소도시 조성 (‘24년 3곳)을 위 한 지자체 협업 등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 기술 등 컨설팅 지원	신규수소도시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개도시×1회) x 20%	실시공문
	-	-	신규	사업 모델 설명회	수소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25년 신규 수소도시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지자 체설명회 개최	수소도시 사업 모델 설명회 x 20%	보도자료
	-	-	신규	실증 지자체 선정	탄소배출·흡수량 산정 데이터 모델을 고도화한 탄소공간지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지원 기술을 검증하는 실증 지자체 2개소 선정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지원 기술 실증 지자체 선정 x 40%	메모보고

(1) 주요 내용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 ① **첨단국가산단** : 반도체·모빌리티·원전·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여 지역 내 미래 첨단 산업기반 확충
- ② **기업혁신파크** :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등 규제를 개선하고, 성공모델 창출위한 선도사업지 선정
- ③ **캠퍼스혁신파크** : 대학교 캠퍼스에 도시형 산단을 조성하여 스타트업·BI(Business Incubation)·연구소·기업 등 유치를 통해 산학연 생태계를 완성

□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 ① (정주여건 개선) 보육·복지·문화 등의 정주시설 건립을 위한 복합 혁신센터 및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SOC사업 차질없이 추진
- ② (산학연 활성화) ①기업 입주자금 지원, ②산학연 클러스터 규제 개선, ③교육·창업(융합캠퍼스·공유오피스) 경쟁력 제고 등 기업유치 지원
 - 지역대학과 이전기관이 협력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구축·지원 및 실무 전문교육 등을 청년유입 확대 및 인재양성

□ (가덕도 신공항) 고난도·대규모 복합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설 전담조직 설립 및 접근교통망 건설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

* 공단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영규칙) 제정, 공단설립위원회를 거쳐 건설공단 설립·출범 추진

- (대구·경북) 중남부 물류·여객 중심공항으로서 충분한 민항기능 확보와 효율적인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신규	100	실질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거점 및 산업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핵심정책의 추진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	④신규 국가산단 신축 조성(50%)+ ⑥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 육성(40%)+ ③수도권 체계적 개발 및 규제 합리화(10%)	관련문서, 보도자료 등
②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추진율	80%	75%	80%	100%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성과 목표치 설정	①클러스터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25%) + ②어린이가족 특화시설 4개소 준공(25%) + ③복합혁신센터 1개소 준공(25%) + ④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개선 법안 발의(25%)	관련문서, 보고자료 등
③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법 하위법령 제정	-	-	공단법 제정	하위법령 제정	공단법시행에 맞춰 제때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로서, 입법예고 결과 반영,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보도자료, 방침문서 등
④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	-	신규	기본계획 수립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에 맞춰 민항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내 민항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설정	-용역 완료(50%) -재해영향평가(10%) -전략환경영향평가(20%) -계획 수립·고시(20%)	메모보고 관련 공문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등 사업은 기재·산업·환경·교육·중기·과기부 등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 등의 협력이 필수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갈등발생 소지 및 부처협조 필요과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및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

□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에 대한 정치권·지자체의 강한 요구가 있는 반면, 엑스포 유치 불발 등에 따른 조기개항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 대구·경북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론, 지역 내 비판여론이 있고, 민항시설 배치, 규모, 수요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간 이견 존재

⇒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협의기구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안) 반영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I-2-①)

□ 추진배경(목적)

- (균형발전)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방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일자리 거점 등 근본적으로 지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요구

* (수도권 인구 비중) 48.5%('07) → 49.2%('12) → 49.4%('17) → 50.4%('22)
(수도권 GRDP 비중) 49.6%('07) → 49.3%('12) → 51.3%('17) → 52.8%('21)

- (경제여건) 반도체*, 방위, 원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규 투자와 정부의 기업지원 필요성이 증가

* 삼성, 용인에 220만평(360조원) 규모 파운드리·첨단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추진

** (방위) 폴란드에 20조원 규모 수출('22.7) / (원전) 이집트 엘다바, 폴란드, 루마니아 등 수주

⇒ 첨단산업 기업이 지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여 기업-지역-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첨단국가산단) 국가산단은 국가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 ('21년 기준) 국가산단 592조원 생산, 2,091억달러 수출, 107만명 근무

- 용인 반도체, 고흥 우주발사체 등 신규 국가산단 15개소를 추진하여 400조 이상 직접 투자, 21만명 고용효과 도모
- ①역대 최대 규모의 첨단산단 조성과 이를 위한 ②적극 제도개선, ③인허가 신속 추진 위해 차관이 직접 범부처 추진지원단 운영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23)에 이어 지방 국가산단도 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예타 면제 또는 신속예타 추진
- 특히 기업 투자가 시급한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연내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승인 신청('24.上)

- **(노후산단)**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경쟁력 저하 극복을 통해 지역 내 산업 거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착공 20년 경과한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2) 471 → ('25) 526^{예상}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개량, 업종 고도화 위한 업종배치 계획 재수립 등을 추진하는 재생사업 지속 추진(신규 3개소 선정)
 -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문화·편의·지원 등 복합기능 증대를 위한 활성화구역 촉진방안* 마련 및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24.上)
 - *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방식·요건 변경, 사업 시행방식 등 제도개선 검토 등
- **(캠퍼스혁신파크)**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형 산단으로 조성하고, 각종 창업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대학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
 -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지 선정과 지원방안 마련에 그쳐 실질적 지방대 인재양성과 산학연생태계 구축 효과는 미미
 - 올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 최초로 1호 캠퍼스혁신파크를 준공 시키고 스타트업·BI(Business incubation)·연구소·기업 등 80개社 모집
- **(기업혁신파크)** 지방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주도의 산업·연구·관광·주거 등을 갖춘 복합도시 필요
 - 이에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조성, 입주에 이르는 개발 쏠 과정을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절차마련('24.上, 법 개정) 추진
 - * 통합계획·통합심의 등 절차간소화, 입지규제 최소구역, 최소면적 완화(100 → 50만㎡) 등
 - 자율적·창의적 도시계획을 위해 개발 계획기준 개선('24.下)하고, 조기성과 창출 위한 선도사업 선정(2개소 이상) 및 발전구상 마련
 - * 도시계획·금융·개발·산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지자체의 개발계획 수립 지원
- **(수도권 투자 여건 강화)** 제조업 집중을 적절히 관리하면서도,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반월특수지역을 환경·주거·산업·관광이 어울러지는 스마트 융합도시(가칭)로 도약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 2.0」 마련, 체계적 개발 추진

- 수도권정비법 제정 전 설립된 기존공장이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6만²m²만큼 증설할 수 있도록 한시적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현행)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은 기존 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6만²m²까지만 조성 가능

- 자연보전권역 내 사업에 적용 중인 연접개발 제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운영 상 혼란이 없도록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 (현행) 사업유형 및 시행주체와 무관하게 포괄적인 적용 기준으로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연접개발 세부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적용 상 혼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방안 마련	2월	5%	보도자료 등
	기업혁신파크 활성화 위한 기업·지역 지원 방안 마련	2월	5%	메모보고(실장)
	용인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3월	5%	공문, 공고자료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추진방안 마련	3월	5%	방침결정(실장)
2/4분기	수도권 기존공장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4월	5%	메모보고(실장)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4월	10%	메모보고(실장)
	용인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6월	10%	메모보고(차관) 등
3/4분기	기업혁신파크 추진위한 기업도시법 하위법령 개정	8월	5%	관보게재
	시화호 마스터플랜 수립(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9월	5%	메모보고(실장)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포함) 신청	9월	10%	메모보고(장관)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지 신규 선정	9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기업혁신파크 개발 계획기준 개선 추진	12월	5%	방침결정(실장)
	제1호 캠퍼스혁신파크 준공	12월	10%	보도자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12월	5%	방침결정(국장)
	시화호 스마트융합도시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2.0(가칭) 수립·발표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첨단국가산단) 입지규제 해소, 행정절차 이행(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등)을 위해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필요

- 산단계획 검토, 수요 확보, 입주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산업단지 신속 추진 및 전주기 지원을 위해 회의 개최, 현장 점검 등 실시

- (캠퍼스혁신파크) 제1호 캠퍼스혁신파크 준공 성과 창출을 위해 엄격한 공정 관리와 함께 기업 유치, 관계기관 현장점검 등 실시

-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사업 촉진방안 마련, 의견수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지자체 대상 간담회, 지역 별 애로사항 청취,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 발굴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설명회	용인 국가산단 관련 지자체, 주민 대상 설명회	'24.2월
회의	캠퍼스혁신파크 추진일정 점검회의	'24.2월
간담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지자체 간담회	'24.3월
회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관련 관계기관 회의	'24.3월
현장방문	캠퍼스혁신파크 공사현장 점검	'24.4월
현장방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24.6월
회의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24.6월
간담회	시화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7월
간담회	연접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24.8월
회의	캠퍼스혁신파크 추진일정 및 입주공고 계획 점검	'24.8월
현장방문	신규 국가산단 추진현황 현장점검	'24.9월
현장방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예정지 현장방문	'24.11월
현장방문	캠퍼스혁신파크 준공 전 현장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경제활성화)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기술, 국제시장 여건에 맞춰 지역 경제거점을 신속히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 (첨단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고흥 우주발사체 등 15개소를 유례 없는 속도로 신속 추진하여 400조 투자, 21만명 고용 효과 창출
 - (기업혁신파크) 춘천 바이오 데이터산업, 당진 모빌리티, 거제 케어·디지털·아트 등을 통한 지방 일자리·경제발전 효과 기대
 - * (예) 춘천 기업혁신파크 통해 4만 명 이상 고용, 6조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전망
 - (투자여건 강화) 그 간 기업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균형발전)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소멸위기 극복
 - 또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정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산업단지지원(I-3-재정①)				
① 산업단지지원(6031) ³⁾				
▪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6031-315)	균특회계	136	40	
지역개발				
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5557)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5557-301)	균특회계	-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 (50%)	-	-	신규	1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신규 국가산단 에 대해 유례없는 속도로 신속 조성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관계 중 앙행정기관 등과 이해관계를 조율 하여 규제개선과 함께 범부처 추 진지원단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 해 산단계획 승인 신청, 예타면제 또는 신속예타 추진 등 혁신적인 목표 설정 및 가시적인 성과 창출	용인 국가산단 산단 계획 승인 신청(40%) + 지방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또는 완료 3곳(30%) + 산단 신속화 등 관련 제도 개선 5건(30%)	보도자료, 관계회의체 안건, 메모보고 등 관련문서
② 기업 주도의 일 자리 거점 육성 (40%)	-	-	신규	100%	기업혁신파크 개정 및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캠퍼스혁신파크 준공을 통해 스타트업 등의 기업을 캠퍼스 내에 유치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거점과 산학연 생태계를 육성	「기업도시법」 개정(30%)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30%) + 기업혁신파크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 컨설팅 2회 이상 지원(20%) + 제1호 캠퍼스혁신파크 준공 및 입주기업 80개사 모집(20%)	보도자료, 관련문서 등
③ 수도권 체계적 개발 및 규제 합리화 (10%)	-	-	신규	100%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은 비수도권, 수도권 내 한강 하류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06.6월 도 입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 등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사항으 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 는 혁신적인 목표 설정 그간 개별 사업별 기본계획·관리계 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던 반월특수 지역에 대해, 도시기능, 인구·산업구 조,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내용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환경단체 등 기관 입장을 조율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 는 고난이도 목표 설정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40%) + 「시화호 스마트융합도시(가칭)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2.0」 마련·발표(60%)	메모보고, 관련문서 등

②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I -2-②)

□ 추진배경(목적)

-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건설('18. 준공)하고, 종전부동산 매각 등을 거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총 150개, '05.6~'19.12)을 완료
- 혁신도시 내 정주인구·입주기업* 지속 증가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성장거점 역할에는 한계
- * (정주인구, 만명) ('16) 15.0 → ('18) 19.3 → ('20) 22.4 → ('22) 23.3 → ('23) 23.6
(입주기업) ('16) 249 → ('18) 693 → ('20) 1,663 → ('22) 2,963 → ('23) 3,724
-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정주여건 개선

- (보육·문화 등) 문화·복지·창업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혁신센터 및 보육 등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건립 차질없이 추진
- * (복합혁신센터) 부산,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경북, 강원, 대구 등
- (주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입주기업 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기숙사 공급방안 마련 및 주택특별공급 자격 부여
- (교통) 충북·전남 혁신도시에서 운영중인 수요응답형 버스(실시간 이동수요에 대응하는 교통수단)를 타 혁신도시에도 도입(2곳→3곳)

②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지원) ①기업 입주자금 지원, ②산학연 클러스터 규제 개선, ③창업(혁신공유오피스) 경쟁력 제고 등 기업유치 지원
 - (입주자금)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대출이자 등 현실화·확대지원
 - (시설조성) 창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혁신도시 내 유희시설을 활용한 혁신공유오피스 지속 조성
- (규제개선) 클러스터 부지 양도가격 제한 완화(시행령 개정, 3분기)*, 시설입지기준 개선(하반기)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유치, 미분양 해소
 - *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5~10년) 소유 등의 경우 양도가격 규제 제외
- (캠퍼스 구축) 혁신융합캠퍼스에 오픈캠퍼스를 통합하여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등 실현 방안 마련

③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 제고

- (지역인재 채용) 지방대학,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재 채용·범위 비율 확대
 - 이전공공기관 내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유턴인재 포함 등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법개정 추진)
 -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 병행 추진
 - *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 참여
- (지역경제 제고) 지역물품 우선구매, 로컬푸드(구내식당 등) 활용, 편의시설 개방(주말도 개방 권고) 등 지역경제 제고 및 상생발전 도모
- (사후관리 개선) 이전 완료된 공공기관이 이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개선 등 지침 개정
 - * 수도권 잔류 시설·인원, 지방 내 타지역 이전 등 관련 규정 정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및 통보	1월	5%	공문
	클러스터 양도가격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2월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이전공공기관, 입주기업 직원 등 대상 주택특별공급	6월	15%	방침결정(차관)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관련 지방시대위 심의 요청	6월	5%	공문
3/4분기	클러스터 양도가격 제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8월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개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9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지침 개정	9월	1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혁신도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10월	5%	메모보고(1차관)
	혁신융합캠퍼스 및 오픈캠퍼스 연계방안 마련	10월	5%	메모보고(1차관)
	클러스터 시설입지기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12월	10%	메모보고(1차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24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T/F 현장간담회	'24.2월
간담회	혁신융합캠퍼스와 오픈캠퍼스 연계 방안 간담회	'24.3월
현장합동점검회의	국가보조금 집행실태 지자체 합동 점검	'24.5월
간담회	혁신공유오피스 사·도 관계자 간담회	'24.8월
현장방문	혁신융합캠퍼스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24.10월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정주인구 증가, 기업유치 확대 및 지역인재 채용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I -1-일반재정①)				
①	혁신도시(5538)	혁특회계	161 (161)	90 (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누적 개社) (35%)	2,047	2,963	3,724	4,069	'16~'23년 증가 기업수에 대한 조화평균을 적용하여 345개 증가를 목표로 설정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수 (연구소 포함)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연구소 포함)현황자료 메모보고(부단장)
㉡ 지역인재 채용률(%) (25%)	34.1	38.1	40.7	37.6	최근 3개년 중간값을 목표비율로 설정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	보도자료 또는 메모보고(부단장)
㉢ 복합혁신센터 준공(개소) (15%)	1	3	5	1	복지, 문화 등 정주시설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SOC사업 올해 준공 예정 목표치 설정	준공 개소 수	메모보고(부단장)
㉣ 지역물품 우선 구매 비율 (25%)	14.6	18.3	17.4	16.8	시도별 목표비율을 설정하는 우선구매 유관기관 협의회(지자체, 이전기관 등 참여)에 과거 3년치 평균 실적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평균보다 높게 설정	(연간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연 간 이전기관 총구매액)×100	이전기관별 우선구매 실적 (시도 공문)

③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I-2-③)

□ 추진배경(목적)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1.3월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23.12.29 기본계획 고시)
- * (기본방향) ①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②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③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23.10월 제정)에 따라 건설사업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적기 설립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국정과제 현황 >

※ 국정과제 39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지역공약 :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 민생토론회 V-메세지('24.2.13) : “목표 달성을 위해 끝까지 지켜볼 것”

- * “화살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시위를 놓고도 목표를 계속 봐야 한다. 10점에 맞을 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봐야 한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및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용역 추진 》

- (건축 설계공모)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등을 위해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 건축물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기본설계 착수 추진
- (부지조성공사 발주) 고난도·대규모 사업 국책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하고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추진
- (접근도로 건설 추진)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협의 완료 및 도로 건설 전문성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체계 마련(부산국토청 위임)
 - * 계획 변경(차로 확장 → 4차로 전용)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23.10~, KDI) 완료 필요
- (접근철도 건설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철도건설 전문성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체계 마련(국가철도공단 대행)
 - * 부산신항선 접속부 연약지반으로 인한 계획변경(교량→터널, 연장 7km ↑)에 따라 전환평 진행('23.9~) 중, 전환평 완료 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필요

- (인허가 용역 추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시굴 조사 등의 적기 추진을 통해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기반 마련
 - * (환경)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조사·예측·평가 등
 - * (교통) 사업이 교통량·흐름·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평가 등
 - * (재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영향을 예측·분석 등
 - *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유존지역에 대한 표본 및 시굴조사 등
- (국제복합물류 활성화 연구) 국제복합물류 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 부산신항과 연계한 국제복합물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업 추진

《 사업추진 전담조직 설립 및 건설·운영 시스템(BIM) 마련 》

- (건설공단) 고난도·대규모 복합공종 사업으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할 건설공단 설립* 추진
 - * '24년 상반기 내 임·직원 채용, 공단사옥 마련, 정관 등 내규 제정, 설립등기 등을 거쳐 건설공단 출범 추진 및 하위법령(영·규칙) 제정
- (BIM 적용) 안전한 스마트 공항 건설을 위하여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BIM 적용 추진
 -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에 따라 도로분야를 시작으로 BIM 의무화* 중이나, 공항 분야는 아직 미적용 (1,000억원 이상, 도로('22), 철도·건축('23), 하천·항만('24) 도입)
- BIM 적용을 위한 BIM 플랫폼 구축 및 BIM 운영관리 위탁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 (전문가 자문) 설계공모·공사발주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에 활용 및 리스크 저감
- (지자체 협의회) 정부-지자체간 갈등요인의 선제적 관리, 신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의 배후도시 건설, 연계교통망 구축 등 상생방안 모색
- (주민협의회) 원활한 공사 착수를 위한 토지·어업보상, 환경 보존 방안 등 갈등관리·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회 추진
 - * 보상업무는 부산·경남도와 위수탁협약 체결, 보상 추진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우리부·지자체·주민의 정례 보상대책위 회의 등에 참석(불가피시 화상회의)

- (건설업계 설명회)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안내를 통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도 등을 위한 건설업계 설명회 추진
- (관계기관 협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기재부조달청(발주입찰방법 등),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해수부), 군시설 이전·공역조정 협의(국방부)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2월	5%	메모보고(실장)
	접근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3월	10%	메모보고(차관)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계약	2~3월	10%	발주방침(단장) 계약서
2/4분기	BIM 구축 업무 KAC 위수탁 협약 및 계약체결	4월	10%	방침(단장) 메모보고(차관) 계약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채용(합격자 발표)	4월	10%	메모보고(차관)
	접근도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협의 완료	6월	10%	메모보고(차관)
3/4분기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7월	10%	메모보고(장관)
	접근도로 건설사업 추진체계 마련	7월	10%	방침(장관) 메모보고(장관)
	부지조성공사 현장설명회	8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접근철도 건설사업 추진체계 마련	10월	10%	방침(장관) 메모보고(장관)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 부지 및 공역 조정관련 등 관계기관(해수부, 국방부 등) 협의	11월	5%	메모보고(장관)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2월	5%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부지조성공사 건설업계 설명회(건설사, 용역사 등)	'24.2월
자문회의	BIM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외부전문가)	'24.3월
보고회	국제복합물류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공항정책과, 물류정책과, 해양수산부 등)	'24.5월
회의	지자체 협의회(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시 등)	'24.7월
회의	보상대책협의회(주민보상 대책위, 부산시 등)	'24.11월

□ 기대효과

- 사업 실행체계 구축 완료, 주요 공종발주(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공사) 등을 통해 적기 개항 추진 기반 마련
-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신공항건설((V-13-일반재정③))			
① 신공항건설(3538)	교특회계	132.5	5,462.6
		(1,366)	(7,080)
▪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단 운영(306)		2.5	2.6
▪ 가덕도신공항건설(308)		130	5,363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313)		-	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30%)	-	-	-	공단 설립	- 설립위원회 운영, 임·직원채용 및 공단사옥 확보, 정관 및 내규 제정 등 단기간(6개월)내 공단을 신설하는 도전적인 과제로서 공단 설립등기 및 출범을 목표치로 설정	건설공단 설립등기 및 출범(100%)	관련 공문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②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40%)							
②-1 부지조성공사 발주(20%)	-	-	-	완료	-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 추진을 위한 공사 발주(터키) 및 연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터키 발주 기간은 약 16개월로 단계별 업무 성과를 목표치로 설정 * 대규모(약11조원) 단일공구 터키 발주로, 유찰 등 사업 지연 가능 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무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0%) - 입찰안내서심의(20%) - 발주요청(40%)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20%)	관련 공문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②-2 건축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착수(20%)	-	-	-	완료	-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건축공사(약 1.8조원)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심의 후 당선작을 선정하고 연내 기본설계를 착수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60%) - 기본설계 착수(40%)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③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사업추진체계 마련(20%)	-	-	-	완료	- (도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기재부 협의, 도로 노선지정 절차 마무리 및 사업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사업관리 위임을 목표로 설정 - (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등 절차 및 사업관리 전문성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협의 완료 및 사업 관리 위임을 목표로 설정	- 사적 완료(30%) - 도로 노선지정(30%) - 사업관리 위임(40%) - 전환평 완료(30%) - 총사업비 협의(30%) - 사업관리 위임(40%)	메모보고 방침 문서 등
④ 사업추진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에 기반한 효율적인 소통 관리(10%)	-	-	20	24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 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건설업 계, 관계부처 등과 간담회, 협 의회, 자문회의(보상관련 주민 간담회, 건설업계 사업 설명회 등) 등을 개최함으로써 선제적 인 현안·갈등·이슈 관리 추진	- 각종 회의 24회 이상 개최 및 참석 · 자문회의 5회 · 지자체협의회 3회 · 업계 설명회 4회 · 주민설명회·협의회 · 주민면담 8회 등	메모보고 관련 공문 등

④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Ⅰ-2-④)

□ 추진배경(목적)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신공항 이전으로 종전부지(現 대구공항)의 고도제한 등 발전 제약요소를 해소하고,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여 대구경북권 지역발전* 도모
- * (대구) 기존 공항부지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조성
(경북) 항공물류,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주변 기업과 연계한 신공항 물류복합도시 조성
- 화물터미널 등 지자체 간 이해관계 협의·조정을 통한 건설방안 마련 필요
-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으로서 민항건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지원도 필요
 - 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으로서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 여건에서 사업자 구성 지원 및 민·군 통합건설방안 마련 등 현안 당면
- * 군공항(11.5조원)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현 동구의 K-2 부지(11.5조원)를 양여받아 개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정과제 및 추진 경과 >

※ 국정과제 39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 권역별 거점공항(가덕도·제주제2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민생토론회 V-메세지('24.3.4)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 것”
- “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 SPC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 경과

- '20. 8. : 이전부지 '군위 소보+의성 비안' 확정(8.28, 국방부)
- '22. 8. : 군 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대구시, 국방부훈령)
- '23. 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8.26. 시행)
- '23. 8. : 민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8.25. 국토부)
- '23. 10. : 민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3.10.17 국무회의 의결)
- '23. 11. : 국방부-대구시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 체결(11.20.)
- '23. 12. : 민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4.12월)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23.12월 ~ '24.9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기본계획) 공항시설 등 합리적인 공항건설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환평, 재해영향성검토, 총사업비 협의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 (민항터미널 입지) 특별법에 따른 민·군 통합공항으로서, 민항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등 협의를 통해 민항입지 결정
 - * 공항 접근성과 공항 내 활주로, 유도로 등 배치를 고려한 항공기 이동 효율성, 민항과 군공항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 훼손 저감 및 사후 관리방안 제시
- (접근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접근도로망인 신공항IC (신설)~신공항, 국도 28호선~신공항 등 연결도로 계획 수립·반영
- (기관간 협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기구* 및 실무협의체 운영
 - * 공동위원장 2명(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포함한 국토부, 국방부, 공군, 대구시, 경북도, LH, 공항공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관계자 의견수렴) 항공·여객·물류 등 관련 업계, 지역 경제단체, 지역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반영

《 민·군 공항 통합건설 시행방안 마련 》

- (통합건설)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으로, 활주로, 기반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민·군공항 설계·시공의 유기적 연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 설계·시공 필요
- 민·군 공항 중 통합적인 설계·시공이 필요한 범위와 재원 분담 방식, 기관간 역할 등 통합건설 시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통합건설의 제도적 근거 정비도 검토

《 차질없는 민·군 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 》

- (사업대행기관 설립)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지원
 - 군공항 이전 사업대행 SPC에 도시개발과 공항건설에 전문성을 갖춘 LH, 한국공항공사 참여방안 마련(VIP 지시사항)
 - * LH 혁신안('21) 참여제한 완화,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개정,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범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
- (사업지원)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에 따른 손실보전 등 사업성 보완 방안이 마련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양여재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사업손실 지원 관련 기준 구체화,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원 확대 등

《 경제물류공항으로서 화물터미널 설치 관련 지역 간 갈등 해소 》

- (갈등관리) 지역 간 합의 위반이라는 극심한 갈등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을 바탕으로 갈등을 관리하고 상생방안 협의·마련
 - 항공물류·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기구*를 구성하고, 장래 예상되는 화물수요를 바탕으로 효율적 설치(안) 마련
 - * 경북도 건의안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검토('24.1월~5월)
- (계획반영) 경북도·대구시·국방부 등 협의를 바탕으로 화물터미널 입지, 규모, 운영 방안 등 기본계획에 반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신공항 건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기구 구성	1월	5%	메모보고(실장)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월	5%	메모보고(실장)
	화물터미널 관련 전문가 검토기구 구성 및 검토착수	2월	5%	메모보고(실장)
	신공항 관련 TK지역 의견수렴	3월	5%	메모보고(실장)
	LH, 한국공항공사의 SPC 참여협의	3월	5%	관련공문
2/4분기	SPC 구성 관련 공공기관 간 협력 협약체결	4월	5%	보도자료
	화물터미널 관련 전문가 검토결과 보고	5월	7%	메모보고(차관)
	민항입지 및 화물터미널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구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SPC 구성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8월	5%	메모보고(차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8월	5%	메모보고(실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8월	5%	관련공문
	민·군공항 통합건설 시행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9월	8%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신공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10월	7%	메모보고(장관)
	재해영향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11월	5%	메모보고(장관)
	기본계획 수립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구 개최	11월	5%	메모보고(실장)
	총사업비 협의	12월	8%	메모보고(장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	12월	10%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관계기관 협의기구 킥오프(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KAC 등)	'24.1월
자문회의	화물터미널 관련 지자체 건의안 검토	'24.1월~5월
간담회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여객, 항공물류 관계자 등)	'24.1월~2월
현장방문	지자체 및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간담회	'24.3~10월(수시)
회의	관계기관 협의기구(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LH, KAC 등)	'24.6~12월(2~3회)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대구시, 경북도)	'24.6월

※ 대구·경북지역 신공항 관련 민간·주민단체 현황

- *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 통합신공항 추진위, 편입지주 대책위, 통합신공항 시민발전위,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대구민간공항지치기단체 연대회의(이전반대) 등
- *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 화신1리 소음공해 대책위, 산제2리 소음피해 대책위, 비안면 통합신공항 지원대책위, 봉양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 안평면 공항피해지역 협의체,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주지역대책위, 통합신공항 범도민추진위 등

□ 기대효과

-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충실한 민항건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관계기관 간 긴밀한 소통·협업,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적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신공항건설((V-13-일반재정③))			
① 신공항건설(3538)	교특회계	-	101.6
▪ 대구경북신공항건설(309)		-	10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운영(314)		-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기본계획 수립 (30%)	-	-	-	완료	민·군 통합공항이자, 대구·경북에 걸쳐 조성되는 신공항으로서 여객·물류 중심 공항으로 충분한 기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 공항 시설 배치조정,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난이도가 높은 과제로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연내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도전적 목표부여	-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50%) - 재해영향평가(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20%) - 계획 수립(20%)	메모보고 관련 공문 등
② 민·군공항 통합 건설 시행방안 마련 (20%)	-	-	-	완료	최초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업으로, 유기적 연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 기반시설 등 공동 사용시설 등에 대한 민·군 통합 설계·시공이 필요한 범위 및 재원 분담방식, 기관간 역할 등 통합 설계·시공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추진방안 마련 (80%) -통합건설 제도적 근거 마련(20%)	메모보고 관련 공문 등
③ 군공항 이전 SPC 구성 공공기관 협약체결 (30%)	-	-	-	완료	정부차원의 공기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SPC 구성 협약체결, '25년부터 본사업 추진 위해 '24년 중 SPC 설립 필요	-공공기관 간 협약 체결(70%) -공공기관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30%)	메모보고 보도자료 등
④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진방안 마련 (20%)	-	-	-	완료	경북·의성의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 건의에 대해 전문가 검토기구 운영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 예정인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경북도·대구시·국방부 등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	- 전문가 검토기구 보고서 채택(60%) -추진방안 마련(40%)	메모보고 보도자료 등

(1) 주요 내용

□ 지역공항 투자 및 공항운영 혁신을 통한 공항산업 육성기반 마련

- 공항은 지역경제의 플랫폼으로, 신공항 건설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국정과제, 지역공약, '24년도 업무계획 등에 포함
- 이에, 제주2·새만금 등 주요 신공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갈등관리 및 기존 공항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공항 인프라 확충

* (신공항 건설) 제주2, 새만금, 울릉, 흑산, 백령, 서산공항

(기존공항 개선)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청주공항 시설확충,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 공항 해외수출 지원을 통한 항공영토를 확장하고, BIM·자동화 공항 등 디지털 공항 및 공항 배후 물류단지·주변지역 개발 등 공항운영 혁신
- 이외에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제3연륙교 합의 포함)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인천공항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인천공항 물동량 확대

□ (전국 GTX 구축)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경제생활권 조성 필요

- 수도권 외곽지역과 도심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1기 GTX 사업(A·B·C노선)의 적기 개통·착공 추진

□ (고속철도망 본격 가동)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간선 고속망 구축하고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제고

- (고속철도)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및 병목지점 용량 증대를 위해 인천·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적기 개통 추진

- (일반철도) 지역균형발전 및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경강선}여주~원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은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공정관리 철저

- (미래도로 준비) 각 위탁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11개의 도로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 및 도로시설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 (도로망 확충) 방사형 순환망(6R²)과 전국 단위 격자형(10×10) 간선망 지속 확충, 민자도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지하고속도로 추진) 경인·경부·수도권1순환선 지하고속도로의 본격 추진, 접속부 진·출입시설에서의 교통 혼잡 완화방안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신공항건설 공정 달성률+일반공항 건설공정 달성률	신규	신규	신규	65	항공수요 적기 대응, 교통편의 증진 등 공항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표로, '24년도 재정성과 계획서상 목표치를 설정	신공항 건설 공정 달성률(실적집행률/계획집행률)과 일반공항 건설공정 달성률(실적 집행률/계획 집행률)의 평균치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디브레인)
② 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체증 완화 방안 마련	-	-	-	방안 수립	상시 정체 등으로 간선기능이 상실 상태임에도 주변 도시화로 수평 확장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해 도로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하고속도로를 적기 추진과 상부 여유공간 활용방안 마련, 홍보 등의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	교통체증 완화 방안 수립	메모보고(장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대, 주민 간 찬·반 대립 등 발생

- * (제주2)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청·도의회·찬반단체·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상충되어 지속적인 갈등 예상
(새만금)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점검」 관련, 지역의 조속 추진 요구 지속 제기, 반대단체의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제기('22.9~) 등

⇒ 지역 갈등 관리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시민단체 의견 수렴

□ 철도·도로 건설 사업은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선 변경 및 공사민원 등 갈등요인 상시 내재

⇒ 노선계획~사업준공까지 주민·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필요 시 주민 설명회 등 개최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I-3-①)

□ 추진배경(목적)

- 주요 거점·도서공항 등 신공항 사업의 적기 추진과 기존 공항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성장 도모
- BIM 등 기술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공항 건설 분야의 해외 新시장 개척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등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항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견인 》

1. 신공항 사업

-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24.上)하고,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24.下)
-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24.6) 결과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한 경우 입찰절차를 재개하고 실시설계 착수('24.下)
- (울릉공항) 케이슨 제작 및 거치, 가두봉 절취와 해상매립 등 부지조성공사 적극 추진(24년말 목표 공정률 54%)
- (흑산공항)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추진('24.末)
- (백령·서산공항)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기본계획(안)을 마련('24.下)하고 기본계획 고시 추진

2. 기존공항 확장 및 개선

-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여객 1억명, 화물 630만톤이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공항 런칭('24.12)

* 4단계('17~'24, 4.8조원) : 제4활주로 건설('21.6 完), 2터미널 확장('19~'24) 등

- 4단계 운영준비 T/F 구성('24.2~)을 통해 단계별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 (청주공항)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24.上) 후 여객터미널 및 주기장 확충 등 시설개선 착수
- (무안공항) 대형항공기(E급) 취항 및 중·장거리(미주·유럽) 항공노선 신설을 위한 활주로 연장사업 적극 추진('24년 목표 공정률 60%)

《 공항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항 정책·운영 혁신 》

-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 수립 연구용역 착수('24.5)
 - * 계획 수립경과: 1차('94.4)→ 2차('00.12)→ 3차('06.11)→ 4차('11.1)→ 5차('16.5)→ 6차('21.9)
- 다양한 설명변수(GDP·운임 등)를 반영하여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거점공항, 일반공항 등 맞춤형 공항정책 및 지자체 갈등관리 추진
- (해외공항 수주지원)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공항 투자 증가에 대비하고 新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 '24년 공항개발·협력이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회**도 개최(반기 1회)
 - * 카타르, 페루, 쿠웨이트, 라오스, 도미니카,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 ** (구성) 국토교통부, 공항공사(인천, 한국), 해외건설협회, KOTRA, KIND 등
- (BIM) '순 생애주기 관리 디지털화'의 기초 작업으로 「공항 분야 BIM 적용지침」 마련('24.上), 신공항 설계단계부터 BIM 적극 도입
- 플랫폼 기반 정보관리체계 실현을 위한 R&D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축('24.下)하여 공공 주도 정보관리방안 논의
- (공항수용능력) 공항별 상이한 산정방식을 국제규정 등을 참조하여 표준화, 총괄 기관 지정 등 수용능력 설정·관리체계 개선

-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훈령) 개정 및 공항수용능력(활주로)의 표준 산정식을 반영한 계산 프로그램(엑셀툴) 제작·배포
- (물류 경쟁력강화) 물류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 및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구축계획 수립(인천공항, '24.12)
 - * 인천공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력, 제2물류단지 내 18,500m² 공동 개발
- 또한, 글로벌 교역·생산 거점으로서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물류단지 활성화 등 제도개선안 마련('24.12)
- (주변지역 개발) 공항을 '거처가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문화·관광 융복합단지로 본격 조성
 - 인바운드 수요 확대를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랜드마크 개발계획을 수립('24.12)하고, 주변지역 개발 법적근거도 마련(공사법 개정, '24.上)
 - 고도제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김포공항에는 UAM 등 모빌리티 환승허브*를 구축하여 지역 성장의 마중물 마련(혁신지구 지정, '24.11)
 - * UAM 이착륙장, S-BRT, 도시철도(5·9호선, 공항철도, 김포경전철, 서해선) 등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공항 접근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재정도로 대비 2.28~2.89배→1.1배) 지속 추진
 - * (영종대교) 6,600원→3,200원('23.10.1~) / (인천대교) 5,500원→2,000원('25년말~)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마련 등 행정절차 조기 이행 및 연내 민간사업자와 협상 착수
- 인천공항 접근도로 신설(제3연륙교, 인천시 시행)에 따른 영종·인천대교의 수입손실분에 대한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 추진
 - * 제3연륙교 관련 '손실보상 기본 합의서' 체결('20.12월) → 손실보상 세부방안 합의 필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항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1월	5%	메모보고(실장)
	해외공항 개발·협력 지원(지원단 파견, 초청·방한 등)	1월	5%	메모보고(장관)
	서산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월	5%	공문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운영준비 착수 및 현장 점검	2월	5%	메모보고(장관) 및 보도자료
	인천공항 문화·관광 융복합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	5월	5%	메모보고(차관)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상 본협상 개최	5월	5%	메모보고(차관)
	흑산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	5월	5%	공문
	울릉공항 건설공사 공정회의 개최	6월	5%	공문 또는 메모보고(실장)
	해외공항 개발 추진협의회(간담회)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인천대교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	7월	5%	공문
	제주 제2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9월	5%	관보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	9월	5%	메모보고(장관)
	공항수용능력설정지침(훈령) 개정	9월	5%	법령정보시스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9월	5%	공문 또는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제주제2공항 건설공사 설계·환경영향평가 착수	12월	5%	공문
	백령공항 건설공사 기본계획(안) 마련	12월	5%	공문 또는 메모보고(실장)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 및 오픈	12월	5%	보도자료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본협상 개최	12월	5%	메모보고(장관)
	흑산공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12월	5%	공문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 수시 진행
- 공항공사·해군협·KOTRA 등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해외공항 개발 추진협의회(또는 간담회 등)를 반기별 최소 1회 개최
- 공항수용능력 산정방식 표준화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설정치침(훈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
- 인천대교 사업조건조정계획서 마련 및 적정성 검토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행료 인하 추진(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 협상 병행)
-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항공업계, 학계 및 연구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공항 건설 및 공항 운영 관련 현장 의견 적극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공항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24.1월
민생토론회	인천지역 민생토론회(인천공항 4단계, 주변지역 개발 등)	'24.3월
간담회	공항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간담회	'24.4월
간담회	공항 건설·운영 관련 항공업계 간담회	'24.9월
협상	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 협상	'24.2월~9월
협의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적정성 검토	'24.8월~12월
협의회	해외동향(정책트렌드, 공항혁신기술 등) 및 해외공항 수주사례 공유, 지원방안 논의 등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4.6월, 12월
간담회	공항 건설·운영 관련 학계·연구계 간담회	'24.11월
현장방문	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 방문	'24.12월

□ 기대효과

- (공항 인프라 확충) 신공항 사업 적기추진을 통해 장래 항공수요 대응 및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
-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인프라를 적기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 공항건설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이용자 불편도 지속되는 문제

- (해외시장 개척) 국내 공공기관(기업)의 해외공항 개발사업 진출, 국가 간 공항분야 협력 강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수주실적 증가 및 일자리 창출, 타 SOC(공항철도·진입도로) 수주 등 연계효과 기대

- (공항혁신 및 제도개선) 공간정보에 기반한 공항 디지털화 추진, 공항수용능력 산정방식 표준화를 통한 공항 수 생애주기 관리

- 공항 설계부터 운영까지 수 생애주기를 디지털화, 플랫폼 기반으로 관리하여 건설 품질 제고 및 안전 관리, 운영 효율화 등 도모
- 공항수용능력 설정·관리체계 개선으로 공항 설계 및 운영, 시설 개량 등 추진 시 효율적·합리적 계획수립과 예산절감 기대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공항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인천공항 물동량 확대

- 제3연륙교 신설에 따른 인천공항 접근성 제고 및 지역주민 상생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V-13-일반재정)			
① 일반공항 관리(3532)	교특	131	82
▪ 제주공항 시설개선(301)		70	26
▪ 공항개발조사(309)		61	56
② 신공항건설(3538)	교특	1,234	1,516
▪ 울릉도소형공항 건설(301)		855	900
▪ 흑산도소형공항 건설(302)		71	66
▪ 제주제2공항 건설(304)		173	173
▪ 새만금공항 건설(305)		135	327
▪ 백령도소형공항 건설(310)		-	40
▪ 서산공항 건설(311)		-	10
③ 일반공항 건설(3533)	교특	95	100
▪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311)		95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신공항 건설 사업추진(40%)	-	-	신규	완료	-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목표 부여	· (제주2공항, 40%) 기본계획 고시 · (제주2공항, 10%) 환경영향평가 착수 · (새만금국제공항, 30%) 실시설계 착수 · (백령공항, 20%) 기본계획(안) 마련	공문 및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②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20%)	4.0	8.9	6.7	7.8	- 해외공항 개발사업 진출 추진을 통한 사업 수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발굴, 수주지원, 수주 등 단계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최근 3년 실적 평균치(6.5)의 120% 이상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수립	·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건수×0.3+ 수주지원 활동건수×0.5+ 수주성공건수×1.0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③ 공항혁신을 위한 제도개선(20%)	-	-	신규	완료	-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항 중심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항 BIM 적용지침,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개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전적인 목표 설정	· (공항 디지털화, 30%) 공항 BIM 적용지침 마련 ·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개정고시, 30%) · (공항 물류단지 활성화, 20%) 제도개선안 마련 · (주변지역 개발, 20%) 공사법 개정 및 주변개발계획 수립	고시문 및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④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추진(20%)	-	-	-	완료	-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통행료 인하가 어려운 여건이나,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의 높은 인천대교 통행료를 재정 도로 1.1배 수준으로 인하하는 적극적·도전적 목표 설정 -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은 이해당사자가 국토부·인천시·사업시행자(영종·인천대교) 등 4개 기관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쟁점별 이견이 첨예함에 따라 과제 달성이 어려운 도전적 목표임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행정절차 및 협상 착수, 30%) · (제3연륙교 손실보상 세부합의서 체결, 70%)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②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I-3-②)

□ 추진배경(목적)

**“철도로 대한민국의 시공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2024년, 제3차 철도혁명***

* 1차 철도혁명 : 경인선 개통(1900년), 2차 철도혁명 : KTX 개통(2004년)

- ◆ GTX 최초 개통과 고속철도망의 새로운 비전으로 고속혁명 추진
- ◆ 철도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국토공간을 재구조화

- 우리나라 인구는 '20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타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서비스 수준, 신속성이 높은 철도 이용이 증가 추세

* '20년 : 51,863천명 → '21년 : 51,769천명 → '22년 51,672천명→ '23년 51,712천명

- 저성장시대 진입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관광 등을 활용한 지역발전 필요성 제기 및 철도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철도망 확충 필요

※ V주재 민생토론회('24.1) 등을 계기로 수도권 출퇴근에 혁신을 가져올 “GTX 최초 개통”에 대한 국민 기대감 고조

< 수도권 GTX 시대 본격 개막 >

-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심화되는 교통 혼잡*을 GTX 등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해 해소하고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
 - 수도권 외곽지역과 도심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1기 GTX 사업(A·B·C노선)을 적기 추진하고 수혜지역 확대 방안 마련
 - 수도권 교통난의 획기적 해소를 위해 기존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D·E·F) 사업 등 2기 GTX 본격 추진

<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한 철도망 확충 >

-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경제생활권 조성 필요

* (비수도권→수도권 순이동, 단위:천 명) '15년 △33, '16년 △1, '17년 16, '18년 60, '19년 83, '20년 88

** ('16~'20년 연평균 증가율) 수도권 3.7%, 충청권 2.9%, 호남권 2.6%, 영남권 0.3%, 강원권 3.2% 등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거점 권역을 초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여 지방 메가시티 핵심거점 연결 등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 민간의 창의성·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도입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심화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태로 권역별 광역철도 중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확보

< 전국을 더 빠르게, 간선 철도망 본격 가동 >

- 철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 수송분담률은 11.5%(통행량 기준)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 수송분담률이 88.3%로 매우 높은 상황

* 제4차 국가철도망에 계획된 철도사업이 모두 완공되어도 장래 철도 수송분담률은 14% 수준

-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간선 고속망 구축하고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한 속도경쟁력 제고

- 일반철도 고속화시 중·장거리 통행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승용차, 버스: 단거리 통행, 일반철도: 중단거리 통행, 고속철도: 장거리 통행에 주로 이용

- 철도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전국 주요 간선 고속망을 구축하여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반노선 고속화가 필수적

- 또한, 철도 노선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병목구간, 단절구간, 비전철구간 등 열차 운행 제약 요소를 대폭 개선하고,

- 국가균형발전, 광역 생활권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일반·광역 철도망도 지속적인 확충 실시

※ 지방에서는 「달빛철도특별법」 발의('23.9, 윤재옥 의원 등 261명) 등 부족한 고속·광역철도 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수도권 GTX 시대 본격 개막

① GTX 시대 개막

- 수도권 외곽지역과 도심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1기 GTX 사업(A·B·C노선)의 적기 개통·착공 추진
 - (A: 운정~동탄) '24.3월 '수서~동탄'부터 순차적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 및 영업 시운전, 이용자 현장점검 등 개통 준비상황 종합 점검
 - (B: 인천대입구~마석) '24.上 전구간 착공을 위해 ^{재정구간}매주 집행전략 회의 개최, ^{민자구간}설계·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 (C: 덕정~수원)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 초기 부터 철저한 공정관리 추진

<A노선(파주 운정~동탄)>



日 27만명 이용(완전 개통 시)

수서~동탄 75~79분 → **19분**
운정~서울역 54~70분 →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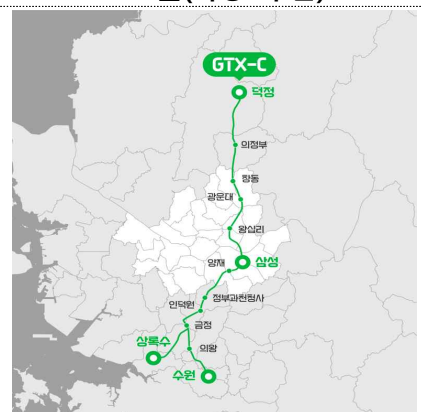
<B노선(인천대입구~마석)>



日 27만명 이용

인천~서울역 80~95분 → **30분**
마석~청량리 45~75분 → **23분**

<C노선(덕정~수원)>



日 32만명 이용

덕정~삼성역 75분 → **29분**
수원~삼성역 70~80분 → **27분**

② 2기 GTX 본격 추진

- 수혜지역을 최대한 확대하면서도, 1기 GTX 노선을 보완할 수 있는 2기 GTX 확충방안 발표
- A·B·C 연장 노선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철도망 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으로 추진

- 신속절차 추진 시(일반절차보다 3~4년 단축 가능) 임기 내 착공하여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

- A·C 연장은 비용 부담이 협의*되어, 지자체 건의 검증을 3분기까지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위·수탁협약(지자체·공단 등) 기반 마련

* A·C 연장 관련 지자체는 원인자 부담 추진에 동의('23년 말), B 연장은 가평시·춘천시와 지자체 비용 부담 협의 추진(비용 부담 곤란 시 예타 진행)



○ D·E·F 신설은 5월까지 지자체·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25년 상반기에 조기 수립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 노선 반영 예정

- 수도권(충청·강원권 포함) 5개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2기 GTX의 사업성 향상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업계 소통 진행

* (1차) 인천·경기서북부, (2차) 경기남부·충청, (3차) 경기동북부, (4차) 경기동남부·강원, (5차) 서울, (6차) 민간업계 → 5차 철도망 수립 시 검토·반영(~'24.12)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공단*, 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체 운영

* A·C노선 원인자 부담 타당성 검증을 위해 KR, 운영사업자 등과 실무협의체 운영

** GTX 사업에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재원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LH 협의 추진



* D노선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現 예타 중)와 추후 직결 운행 / ** 수요 및 경제성 변동 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

2.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위한 철도망 확충

①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 확충

- (기존 사업) 2기 신도시 호매실 지역의 서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분당선 재정사업 광교~호매실 구간을 착공('24.上)
 - 협상 중인 민자사업 대장-홍대선(부천대장~서울 홍대입구역)은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착공(24.12) 추진
 - * 신안산선(정부고시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착공까지 약 18년 걸렸으나, 대장홍대선은 민자적격성조사('21.2) 이후 4년 내 착공으로 매우 도전적이며, 최단기로 진행되는 사업
 - 신안산선(안산/시흥~광명~여의도)의 신속한 개통을 위해 매월 공정 및 현안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관리·감독 철저
- (신규 사업) 현재 8.2조원 규모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총 15조원 이상 민자철도 추진
 - * 위례미천선^{8.5조원}(23.9~), 수도권서남부선^{4.7조원}(23.12~), 신안산선(여의도~서울역)^{1.1조원}(23.9~) 등 9.3조원 + α

②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 (선도사업) 충청권 등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모범사례 마련,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칭}CTX) KDI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24.4)
 - 대구경북신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하여 예타를 신청('24.2)
- ※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50%} 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100%} 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 (추가사업)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 검토
 - 지자체와 민간이 협의하여 신규노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건의 시 5차 철도망 반영을 적극 검토

③ 전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광역철도망 확충

- (개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는 올해 말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격주단위(대면 월 1회)로 진행상황 점검
- (공사 중) 울산권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착공*('24.6), 공사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도 목표 내 개통을 위해 적극 관리
- (예타·사타 중) 균형 있는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정하여 추진 중인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적극 대응
 - * (예타 중) 부산~양산~울산·광주~나주('23.6~), 용문~홍천 광역철도('24.2~)
 - 동탄-청주공항 등 사타 중인 사업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후속절차 진행
 - * (사타 중) 동탄~청주공항('22.6~), 진영~울산(동남권순환) 광역철도('22.10~),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 충청권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광역철도('23.12~)

3. 전국을 더 빠르게, 간선 철도망 본격 가동

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 추진

- GTX 연장·신설 및 주요 간선·광역철도망 신규 사업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마련('24.末)
 - * (일정) 공청회 개최('25.上) → 관계기관 협의 → 철산위 심의 및 고시('25)
 - 고속·일반철도는 정부 주도(Top-Down)로 기획하고, 광역철도는 지자체 건의사업(Bottom-Up) 분석을 거쳐 신규사업 발굴 추진
 - * 경쟁력 있는 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고속·일반철도 노선 신설, 고속화 등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

② 준고속선 개통으로 전국 주요 거점 2시간대 이동 실현

- 철도 연결성 강화·비전철화 구간 전철화를 위한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개통('24.下)으로 준고속철 이용 수혜 지역 확대

-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개통('24.下)으로 경북(문경역) ↔ 수도권(판교역) 1시간대 이동(30분 단축)
- (중앙선) 안동~영천 개통('24.下)으로 제2의 경부축을 완성하여, 부산(부전역) ↔ 서울(청량리역) 2시간대 이동(160분 단축)
- (동해선) 삼척~포항 개통('24.下)으로 동해안 고속철도를 실현하여, 부산(부전역) ↔ 강릉(강릉역) 2시간대 이동(100분 단축)
 - * 부전~강릉 운행 시간(예타기준) : EMU-260(154분), EMU-150(232분)
- (서해선) 서해선 개통('24.下)으로 경기 화성(송산역) ↔ 충남 홍성(홍성역) 1시간 이내 이동(40분 단축)
 - * 송산~홍성 운행 시간(기본설계기준) : EMU-260(28분), EMU-150(42분)

③ '쏠쏠' 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 적기 추진

- (고속철도) 고속철 수혜지역 확대 및 병목지점 용량 증대를 위해 인천·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적기 개통 추진
 - 경부고속선 안전강화를 위한 대전 복연결선 재설계 완료('24.下),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예타 통과 적극 추진
- (일반철도) 지역균형발전 및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경강선}여주~원주,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은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공정관리 철저
 - 예타 통과*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차질 없이 추진, 예타 중** 사업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KDI와 적극 협의
 - * 문경~김천, 새만금인입철도,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 ** 삼척~강릉, 평택~부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 달빛철도(광주~대구)는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GTX-C노선 착공기념식 개최	1월	6%	보도자료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1월	6%	관련문서
	달빛철도법 제정	2월	6%	관련문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2월	6%	메모보고(장관)
	GTX-A·C 연장 상생협력 체결	2월	6%	보도자료
	GTX-B노선 착공기념식 개최	3월	6%	보도자료
	GTX-A 외신기자 팸투어 실시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조사 착수	4월	6%	보도자료
	2기 GTX 민간업계 간담회 개최	6월	6%	메모보고(차관)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착공	6월	6%	착수계 또는 공문
	대구경북신공항 예타 대상 선정	6월	6%	관련문서
3/4분기	대장-홍대선 실시협약 체결	7월	6%	보도자료
	GTX-A 연장 및 C 연장 타당성 검증 완료	9월	6%	메모보고(장관)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신청	9월	5%	공문
4/4분기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광역철도 개통	12월	6%	보도자료
	삼척-포항 철도건설사업 개통	12월	6%	보도자료
	대장-홍대선 착공	12월	6%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설명회	호남선 철도 고속화 주민설명회	'24. 1월
설명회	권역별 찾아가는 릴레이 GTX 설명회 개최	'24. 2월
간담회	지방 x-TX 확대를 위한 업계 간담회	'24. 2월
설명회	지방 x-TX 도입 관련 지자체 설명회	'24. 3월
현장방문	GTX 국민 참여 안전점검 실시	'24. 3월
설명회	2기 GTX 민간업계 간담회 개최	'24. 6월
TF	지방 광역철도 공정관리 TF 회의	'24. 7월
점검회의	GTX-A '운정-서울' 개통 준비 사항점검회의	'24.10월

□ 기대효과

- ◆ GTX 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 ◆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 ◆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1기 GTX) GTX 시대 본격 개막으로 수도권 전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 출퇴근 30분대 구현 등 이동 편의성 제고

* 1기 : A 운정~서울역 50→20분 / B 인천대입구~서울역 76→28분 / C 의정부~삼성 61→20분

- (2기 GTX) GTX의 수혜범위를 확장시켜 '출퇴근 30분 생활권' 2배 확대를 통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행복 및 삶의 질을 증진

* 2기 : D 김포~강남 75→32분 / E 청라~광운대 115→33분 / F 왕숙2~강남 80→21분

- GTX망 확충으로 충청·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1시간 내 이동 가능, 자족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기대
-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이 단일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GTX 외 광역철도망도 확충하여 수도권의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성 제고

- (지방권 x-TX 도입)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GTX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통해 1시간 생활권 조성

*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 (간선망 확대) 고속·일반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여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 간 이동 편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선도

- (지방권 광역철도망 확충) 지역 주민도 저렴한 철도서비스를 보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여 지방권 메가시티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고속철도건설(V-7-일반재정①)				
①	고속철도건설(2500-2531)	교특회계	4,423	5,182
일반철도건설(V-8-일반재정①)				
①	일반철도건설(2600-2631)	교특회계	22,229	20,751
광역철도건설지원(V-10-일반재정①, ②)				
①	광역철도건설지원(2833)	교특회계	6,719	7,247
②	광역철도건설(2800-2833)	균특회계	361	666
광역철도건설지원(V-11-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건설(2900-2933)	교특회계	2,301	-
		균특회계	20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① 전국 GTX 구축(40%) (다년도)	- 5건 10건	15건	전국 GTX 구축을 위해 전년도 실적 대비 50% 상향한 목표치를 설정. GTX, x-TX는 현재 지역 및 민자 사업자 현안, 3高(물가·환율·금리)·PF부실의 경기침체 등이 상존하여 성과 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전국 GTX 신속 추진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전국 GTX 구축을 위한 사업절차 이행건수 ≥ 15건	관련 문서, 보도자료 등	
			A노선	① '수서~동탄' 영업 시운전			
				③ '수서~동탄' 개통			
				③ 운임체계 확정			
			B노선	④ '운정~서울' 종합시험운행 추진계획 수립			
				⑤ '운정~서울' 개통			
			C노선	⑥ (재정)실시계획 승인·착공			
				⑦ (민자)실시협약 체결			
연장	⑧ (민자)실시계획 승인·착공						
	⑨ 공정관리협의회 구성						
신설	⑩ A·C 연장 상생협약(MOU) 체결						
	⑪ A·C 연장 타당성 검증용역 연내 수행						
	⑫ 권역별 릴레이 지자체 GTX 설명회 개최(5회)						
x-TX	⑬ 민간업체 간담회 개최						
	⑭ 충청권 광영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착수						
수도권·지방권 광역철도 및 간선철도 확충							
② 개통 (부분 개통 포함) (30%) (단년도)	건수 (20%)	- - 6건	8건	광역철도 1건(대구권 1단계) + 일반철도 7건(서해선,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등) * 개통 예정인 모든 사업을 합산한 수치이며, 현재 지역현안 존재, 각종 민원 등에 따라 개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개통(부분 개통포함) 건수 ≥ 8건	관련 문서, 보도자료 등
	정차 역수 (10%)	- - 28개	38개	대구권1단계(2개) + 서해선(8개) + 이천-문경(5개)+도담-영천(4개)+ 포항-삼척·동해(14개)+포승-평택(2개)+장항선복선(3개) * 작년 대비 약 40% 증가된 수치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정차역수 ≥ 38개	관련 문서, 보도자료 등
③ 착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30%) (단년도)	- - 신규	5건	(착공) 광역철도 2건(대장-홍대선, 울산권 태화강-송정) * 대장홍대선은 민자적격성조사('21.2) 이후 4년만에 착공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로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예타) 선정 3건(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용문-홍천) * 착공 및 예타선정 예정인 모든 사업을 합산한 수치이며, 현재 지역현안 존재, 재정당국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착공 및 예타선정 ≥ 5건	관련 문서, 보도자료 등	

③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I-3-③)

□ 추진배경(목적)

○ **(미래도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교통분야에도 ICT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출현

- 다양한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여 도로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는 미흡

* 부분적으로 디지털 전환 중이나, 도로 수생애주기를 관통하지 못하고 정보 생산 중복

- 다양한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춰 단순 이동을 위한 도로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도로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필요

○ **(도로망 확충)** 도로 연장은 지속 증가 중이나, 지방부 일부 지역의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교통정체*도 여전

* △ 혼잡비용 : '10년 26.9조원 → '20년 57.6조원(수도권 34.8조원, 60.4% 차지)

-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23.11)

* △ 수도권 : 고속서울-연천 등, △ 중부권 : 고속영월-삼척 등, △ 남부권 : 국도남해-여수 등

- 지방시대 메가시티 형성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권 중심 방사형 순환망(6R²)과 전국 단위 격자형(10×10) 간선망 지속 확충 필요

-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 고속도로 하부에 도심도 지하도로 건설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도로 관리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도로 전환을 통한 미래도로 준비

- **[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각 위탁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국도 11종의 도로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의 「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 (건기연) 교량, 터널, 포장, 교통량조사, 점용허가, 표지판 등 (국토안전관리원) 비탈면

- 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12월)

- **[도로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 매설식* 교통량조사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AI, 번호판 인식방식 등에 대한 검증 후 고도화방안 마련

* (건기연) 교량, 터널, 포장, 교통량조사, 점용허가, 표지판 등 (국토안전관리원) 비탈면

- 매설식, AI 영상, 번호판 인식 등 3종 장비를 동시 설치하여 성능검증을 거친 후 고도화 방안 마련(12월)

- **[미래 대비 설계기준 정비]** 자율차 안전도 분석을 통해 자율차 주행 가능 여부 분석 방법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기존 도로 및 설계·신설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량, 시설 조건 등을 분석하여 자율차 주행 가능 여부 판단

- 그간 차량 성능향상을 감안하고 장래 차량기술의 개발 촉진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고속도로(설계속도 130km/h 이상) 도입방안 [민생토론회](#)도 검토 추진(연구용역 시행)

-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국정과제} 수립]** 도로시설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한 新산업 창출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밑그림인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12월)

- 고속도로 건설의 생산성 혁신을 위하여 '고속도로 스마트 건설 협의회' 구성(6월), 체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안)도 마련(12월)

2.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으로 지방시대 메가시티 지원 등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 **[방사형 순환망^{국정과제} 구축]** 메가시티 중심에서 주변 거점과 직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방사형 순환 도로망 구축* 추진

* 고속도로 파주-양주(개통), 일반국도 보령성주우회(개통), 국지도 진산-금산(착공) 등

- **[격자망^{국정과제} 구축]**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메가시티 형성 지원을 위해 촘촘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격자망(10×10) 구축 추진

- 고속도로 4개, 국도 15개, 국지도 6개 구간 개통* 추진(12월)

* △ 고속도로 : 안성-구리, 서부내륙 등 △ 국도 : 충청내륙1-1 등 △ 국지도 : 단산-부석사 등

- **[민자도로 활성화]** 민간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절차별 가이드라인 제·개정 추진

- 특히 협상단계 가이드라인(제3자 공고 체크리스트, 협상 표준모델)을 새로 마련하여 협상기간 단축 등 사업 추진 지원(11월)

* 철도는 대부분 7~12개월 내 협상을 완료하나, 도로는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다수

- **[관광도로 지정·운영]** 도로법 개정으로 관광도로가 도입('24.10)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정절차, 운영·관리방안 등 세부 규정 마련(10월)

- 일반 도로와 차별화를 위해 관광도로 표지판 세부기준 마련(10월)

- **[도로사업 절차 개선]** 노선계획 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고, 용역 과업지시서 표준안 및 용역관리 매뉴얼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
- **[노선체계 개편]** 국도와 교통물류거점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큰 지선국도('10년 도로법 개정) 지정을 추진(12월)
 - 위임국도(2,874km) 관리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리의 적정성,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도로등급 조정 추진

3. 지하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출퇴근 교통 혁신

- **[사업 본격 추진]** 국정과제 · 민생토론회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
 - 경부·경인·수도권1순환(구리~성남) 지하 고속도로는 예타에 적극 대응하고 예타 통과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 사업 추진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전문가·국민 등 외부와 지속적 소통*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
 - * 전문가들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기적인 토론회(온·오프라인) 개최 등
- **[교통체증 완화]** 지하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접속부 진·출입시설에서의 교통혼잡 완화방안 마련
- **[기술 개발]**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폐쇄감 등)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
 - * 초장대 K-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220억, '24~'28)
 - ** (내용) 지하고속도로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대응·방지 기술 개발, 환경 개선 및 교통·운영 효율 향상 기술 개발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확보 도로관리청 순회설명회 개최	1월	5%	보도자료
	지하고속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 개최	2월	5%	메모보고(장관)
	지하고속도로 다큐멘터리 방영 추진	2월	10%	메모보고(장관)
	미래도로 정책방향 전문가 정책 세미나 개최	3월	5%	메모보고(장관) 보도자료
2/4분기	지선·지정국도 및 노선 등급조정(안) 마련	5월	5%	내부방침(국장)
	고속도로 연계구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관련 연구용역 착수	5월	5%	메모보고(차관)
	스마트도로관리통합플랫폼 구축 자문회의 개최	5월	5%	관련문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하도로 R&D 착수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관광도로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7월	10%	관련문서
	미래도로 설계기준 관련 TF 회의	8월	5%	메모보고(국장)
	일반국도 신규 설계사업(4건) 착수	9월	10%	관련문서
	고속도로 환승센터 시설 확충 방안 마련	9월	5%	관련문서
4/4분기	민자고속도로 '24년도 운영 평가 및 결과 공개	12월	5%	메모보고(차관)
	도로계획 검토절차 개선방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차관)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12월	10%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교통안전 강화 등 도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 교류 추진
- (간담회) 전문가 그룹과 도로정책 방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아카데미)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 대상 강의와 질의응답

구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24.2월
간담회	한국도로공사 업무 간담회 개최	'24.2월
간담회	미래도로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논의	'24.3월
현장방문	고속도로 건설공사 추진현황 현장점검	'24.3월
간담회	도로국 정책 관련 연구기관(교통연) 간담회	'24.3월
간담회	도로국 정책 관련 연구기관(국토연) 간담회	'24.3월
정책 아카데미	유료도로 통행료 제도의 이해	'24.4월
정책 아카데미	스마트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24.5월
정책 아카데미	민자도로의 개량운영형 사업 소개 및 쟁점	'24.6월
간담회	도로 교통량 조사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24.7월
정책 아카데미	BIM 기반 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혁신 방안	'24.8월
정책 아카데미	고속도로 건설·관리의 변천사와 미래 방향	'24.10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국토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교통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건기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도공·도교원) 토의	'24.11월

※ 이 외 도로건설사업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개최시기 미확정)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

□ 기대효과

- 다양한 모빌리티 시대가 가져올 큰 변화에 맞춰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 등 미래 지향적으로 도로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도심도 지하고속도로와 격자망·방사형 순환망의 간선도로망 적기 추진을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및 지방시대 메가시티 형성 등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고속도로건설(일반재정)				
① 고속도로건설(1532)		교특	16,388	17,432
			(16,388)	(17,432)
	■고속도로건설출자금(460)		16,388	17,432
일반국도건설(일반재정)				
② 일반국도건설(1632)		교특	14,787	15,141
			(14,787)	(15,141)
	■일반국도건설(420, 410)		14,787	15,141
민자건설(일반재정)				
③ 민자유치사업지원(1831)		교특	9,650	8,431
			(9,650)	(8,431)
	■민자도로건설지원(303)		9,650	8,4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③ 미래도로 준비 및 도로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30%)							
① 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10%)	-	-	-	방안 수립	▪ 각 위탁기관에 분산 운영 중인 11개의 도로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치로 정하였음. 이를 통해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 이행 및 체계화된 도로관리를 구현할 것으로 사료	① × 10% ② × 10% ③ × 10% = 30%	내부방침 (국장) * 위임전결 규정 실국장 전결 (세부계획 수립)
② 도로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방안 마련 (10%)	-	-	-	방안 수립	▪ 기존 매설식 장비의 잦은 파손·고장에 따른 신뢰도 저하, 유지·보수 비용 지속 발생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영상식 장비 도입 등 조사방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내부방침 (국장) * 위임전결 규정 실국장 전결 (세부계획 수립)
③ 디지털도로 추진계획 수립 (10%)	-	-	-	계획 수립	▪ 자율주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미래 도로를 준비하고 도로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동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도로분야에		내부방침 (국장) * 위임전결 규정 실국장 전결

			첨단기술 접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 업계·학계 등과 심도 있는 검토·자문 등의 과정 필요		(세부계획 수립)
⑥ 국가도로망 확충 (30%)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개통 (10%, 다년도)	18	19	20	19건	메모보고 (차관) $\begin{aligned} & \textcircled{a} \times 10\% \\ & \textcircled{b} \times 10\% \\ & \textcircled{c} \times 10\% \\ & = 30\% \end{aligned}$
②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착공 (10%, 다년도)	13	9	10	10건	
③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10%)	-	-	-	방안 마련	내부방침 (국장) * 위임전결 규정 실국장 전결 (세부계획 수립)
⑦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40%)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① 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체증 완화방안 마련 (10%)	-	-	-	방안 수립	$\begin{aligned} & \textcircled{a} \times 10\% \\ & \textcircled{b} \times 20\% \\ & \textcircled{c} \times 10\% \\ & = 40\% \end{aligned}$
② 지하고속도로 사업추진 분위기 조성 위한 홍보 추진 (20%)	-	-	-	토론회, 세미나, 국민참여행사 등 5회	
③ 지하고속도로 기술개발 R&D 신규 착수 (10%)	-	-	-	사업 착수	

기 본 방 향

□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 창출

-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 기존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2	7	12	56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해외건설 누적실적 ㉡ '25년 UAM 상용화 기반 마련 ㉢ 물류기업 고용규모(천명)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 해외건설 누적실적 ㉡ 범부처 수출지원 협력강화 ㉢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역량 강화 ㉣ 인프라협력 네트워크 확대 ㉤ 민관소통 강화
②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 UAM 상용화 지원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 모빌리티 혁신기반 공고화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 녹색건축 확대 ㉡ 건축문화 진흥 ㉢ 건축공간 혁신
④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 택배 사각지대 해소 ㉡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 도심 속 빠른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 도입 ㉣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 ㉤ 전통시장의 디지털 물류전환을 위한 공동·빠른 배송 확대 ㉥ 제3자 물류활용률 달성
⑤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 韓-日 간 정비분야 업무약정 체결 ㉡ UAM 기체 실증비행 허가 건수 ㉢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SAF 활성화 대책' 마련 ㉤ ICAO 회원국 유대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국내유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⑥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①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수립 ②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활용건수 ③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제공을 위한 보안심사건수 ④ 국가공간정보 표준 적용률 ⑤ 창업지원 기업 연 매출 성장률 ⑥ 스마트국토 엑스포 해외 비즈니스 미팅 건수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스마트건설강소기업(개수) ② 물류기업 고용규모(천명) ③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률 관리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① 건설경기활력 회복 ② 물가상승 대응 ③ 불법행위 근절 ④ 인력·자재·기계 관리
	②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①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육성 ②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건수 ③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대상 확대 ④ 입찰 공정성 강화
	③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 산업 생태계 조성	① 공정한 물류산업 구현을 위한 물류 플랫폼 관리방안 마련 ② 화물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방안 마련 ③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 ④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을 위한 규제개선 ⑤ 배달업 공제보험상품 가입률 제고 ⑥ 배달업 안전교육과정 개설 및 실효성 있는 운영 ⑦ 불법 주·박차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① 국내공항 HUB 기능 강화 ② 노선개발 및 항공회담 ③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④ 시장 건전성 강화
	⑤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② MRO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 ③ K-드론경쟁력 강화 ④ 항공 화물 물동량 확대
	⑥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① 지적측량 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 ②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대상 확대 ③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④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효율성 강화 ⑤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등록확대

(1) 주요내용

<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 창출 >

- ☐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 ☐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 ☐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 ☐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 ☐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 기존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

- ☐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 ☐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 ☐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 ☐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 ☐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4,075	4,034	4,303	4,437	4,437	4,600	최근 3개년('21~'23) 취업자수 연평균 성장률(1.54%)를 적용 하면 '28년 취업자 수는 4,791 명으로, 여기에 5개년('24~'28) 생산가능인구 감소률(0.8%)을 적용하여 4,600천명 목표치 산 정	통계청-지역별 고 용조사 자료 中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 물건설업, 육상 여 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매년 4월 발표) 발체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6.2 ('22년 발표)	6.7 ('23년 발표)	7.0 ('24년 발표)	7.3 ('25년 발표)	7.5 ('26년 발표)	7.7	2017년 이후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 성장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물류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물류활동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28년도 목표치는 도전적인 7.7으로 설정	물류활동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GDP)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 (한국교통연구원) * 매년 5월 발표

(1) 주요 내용

- (해외건설) 작년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원팀코리아를 통한 수주활동 지원 추진
- (해외도시 개발) 투자개발사업 중 사업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개발을 집중 육성할 필요
- (모빌리티)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UAM은 글로벌 산업 및 시장 선도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5년 국내 상용화 추진
- 자율주행은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완비하고,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기준마련과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추진
- (건축공간 혁신)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층간소음 등 개선
- (물류산업)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디지털 물류산업으로 전환 가속화하고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
- 수도권 등 5대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하여 국가 물류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보급·확산
- (항공제작·정비) 세계흐름에 발맞춘 친환경·항공 제작·정비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항공 리딩국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추진
- (공간정보산업) 고정밀 공간정보로 세밀한 국토기록을 위해 2D/3D 데이터 확대 및 고도화, 자율차 등 핵심산업과 융합기술 발전 로드맵 마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해외건설 누적 실적				1조불	'65년 최초 해외수주 이래, 47년만에 5천억불 달성('12), 이후 12년만(35년 단축)에 5천억불 추가 수주를 통한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불 달성을 도전적으로 추진(최근 3개년 평균 수주액 316억불 대비 13.8% 증가한 362억불 이상 수주 추진)	누적 실적(10%)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② '25년 UAM 상용화 기반 마련				수도권 실증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 수도권 실증 및 수요모델 확산 등 25년 UAM 상용화 기반 마련이라는 도전적 목표 제시	수도권실증,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 등	보도자료 등
③ 물류기업 고용 규모(천명)	714	788	817 (잠정)	835	물류산업 규제개혁을 통한 중사자 처우 개선하여 2%이상 고용규모 확대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	통계청 '24년 운수업 조사	통계청 보도자료
④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	-	신규	80점	디지털 트윈국토 행정활용모델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건설 수주가 2년 연속 증가세이나, 지정학적 이슈, 고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 인건비·자재비 급증 등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도 상존

⇒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해외건설 체질개선 등을 통하여 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우리 건설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

□ UAM·자율주행 상용화 기반마련을 위한 실증, 제도기반 마련 및 혁신 기술·서비스 도입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학·연·관 협업 체계 구축 및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적기 달성 계획

□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 설치시 화물차 통행, 교통체증, 소음 문제 등으로 기존 주민 반발 우려

⇒ 백화점·마트·문화 등 주민선호시설과 함께 물류시설이 병존하는 도시형 물류시설 모델을 확대하여 주민 친화적 물류인프라 개발

□ 자율주행, UAM 등 미래산업과 연계, 교통·방재·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에 디지털트윈이 핵심 인프라로 역할 필요

- 산업부·국토부 등 부처사업 및 지자체 사업과 융복합 될 수 있도록 협업을 적극 추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공모델 조기 발굴·확산 계획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Ⅱ-1-①)

□ 추진배경

- 경제회복 불확실성, 고금리 기조,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역내 갈등 등 상황속에서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는 2년 연속 증가세*

* ('20) 351 → ('21) 306(△13.0%) → ('22) 310(1.3%) → ('23) 333(7.5%)

- 건설분야 투자심리 회복과 함께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24년 세계건설시장은 '23년比 4.4% 성장할 전망(IHS Markit, '24.1)이나,
 - 지정학적 이슈, 고금리 기조 지속 가능성, 공사비용(인건비, 자재비) 급증 등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도 상존

⇒ 맞춤형 전략 수립 및 해외건설 체질개선 등을 통하여 해외건설 수주 확대 및 우리 건설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원팀코리아를 통한 수주 경쟁력 제고

◆ 작년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원팀코리아를 통한 수주활동 지원 추진

- (맞춤형 전략) 지역별로 발주되는 주요 프로젝트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주성과 확대 추진
 - '65년 최초 수주(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현대건설) 이래 59년만에 누적 수주 1조불 달성*을 추진, 해외건설 4대강국 진입의 기틀 마련
 - * 0 → 5천억불 달성('12)에 47년 소요, 5천억불 → 1억불 달성에 12년 소요
 - 지역별 수주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민·기업과의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
- (원팀 코리아 진출) 범부처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핵심사업별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수주역량 총결집
 - 건설·방산·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 외에도, IT·전자·모빌리티·문화 등 대표 산업 분야도 “원팀 코리아”에 참여토록 외연 지속 확장

②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확대

◆ 고부가가치 수주를 통한 해외건설 체질 개선과 함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지원기반 강화

- (투자개발) 저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도급사업 대비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24.6)
 - PIS* 1단계 투자완료 및 PIS 2단계 모태펀드 조성하고, PIS 펀드-직접투자(KIND)-수출금융(수은)을 연계한 프로젝트도 발굴
 - * PIS 1단계(1.5조) 잔여액(0.5조) 투자 확정('24.9), PIS 2단계(1.1조 '25년부터 투자) 모태펀드 조성
 - PIS 펀드 사업발굴·운용현황 점검강화, KIND 참여사업 정보공유·투자연계 등을 통해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플랫폼' 지속 운영
 - * (참여)국토부, KIND, 펀드 운영사 (내용) PIS 투자사업 발굴 및 참여사업 검토
- (도시개발) 투자개발사업 중 사업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개발을 집중 육성할 필요
 - * 세계인구는 ('20)78억명 → ('50)97억명으로 지속 증가('22 UN 세계인구 전망)
- 정부·공기업·금융기관 등이 한 팀이 되어 계획수립·사업 발굴·복합금융 등 사업 쏙단계에 걸친 지원을 강화, 해외도시개발 활성화 추진
- 전략사업(베트남·이라크·GCC·우크라이나 등)별로 사업발굴부터 준공 후 운영 단계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지원필요 사항 등을 논의
- (KIND 역할강화) 자본금(2조, 4배 상향) 확충 방안 마련 및 채권 발행(2천억)으로 재원을 확충해 KIND 직접투자 확대
 - 사업발굴 : 중점협력대상 국가를 새로 선정하여, PPP 사업발굴*을 위한 공동협의체 운영(한국 KIND - 상대국 PPP 기관)
 - * (예: 방글라) '19년부터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사업 5건 발굴(교량, 산단 용수공급 등)
 - 수주성과 : G2G 기반으로 발굴한 핵심 PPP 프로젝트*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 (예) 파라과이 경전철, 방글라데시 메그나 대교 및 BSMSN 용수공급 사업 등

- 제도개선 : 해외사업에 투자한 기업의 지분 유동화* 지원, 브라운 필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기업들은 해외사업 지분 매각이 어려워,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

- (고부가가치 인재 양성) 해외 수주환경이 단순 도급에서 고부가가치 투재개발 사업(PPP) 위주로 전환됨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PPP 특성화대를 지정하여 사업발굴·기획, 해외투자, 조달·금융, 국제 입찰 등 투자개발사업 추진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 '24년 봄학기부터 2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기마다 2개 이상 PPP 등 특성화 과목 운영

③ 인프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G2G 수주기반 확대

◆ 인프라 협력단·국제행사 등 고위급 외교 및 ODA를 통해 G2G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협력 강화로 진출기반 확대

- (글로벌 네트워킹) 해외 발주처를 방한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역량을 홍보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GICC 2024) 개최 ('24.下)

- 사우디 등 주요 협력국과 로드쇼, 포럼 등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기업과 해외 주요 발주처간 네트워킹 지원

- (고위급 수주지원)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장·차관급 파견 등 전방위적 지원

- 패키지 수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 우리기업,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원팀코리아 파견으로 수주지원 효과 극대화

- (ODA 개선) 실국·공공기관 수요 기반 도시개발 등 ODA 핵심사업 발굴 및 초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新 국토교통 분야 확대 등 추진

- 우수성과 홍보 및 후속·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ODA설명회 개최('24.上)

- (신규사업 발굴) 전년도 G2G 협력 성과로 발굴된 프로젝트 등 국가·사업별 수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수주 총력 지원 강화

- 우크라 정부와 공동으로 발굴한 우크라 재건 6대 선도 프로젝트*는 순차적으로 MP 수립 등에 착수하고, 우리기업 사업 참여방안도 마련

* 키이우 교통, 우만 스마트시티, 보리스필 공항, 부차 하수처리, 카호우카 댐, 철도(키이우~폴)(23.9)

- (인적 네트워크 확대) 중점 협력국 정책관계자를 초청, 한국형 인프라 정책·경험을 전파하는 석사과정(17개월) 신규 교육기관 지정

* '인프라 정책 석사과정(시립대, '18~'24)' 수행 신규기관을 선정(24.8) 및 프로그램 개편

-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투자 및 개발·공급 전단계에 걸친 패키지 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강화

④ 우리기업 소통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외진출 기업에 컨설팅·정보제공,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진출 걸림돌 해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기반 내실화

- (컨설팅 지원) 재정여건,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겪는 계약 분쟁·세법처리·클레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국내 대형 로펌·회계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세무 등 분야별 상담 및 통합 심층 상담(3개 분야 동시 지원) 확대

- (정보제공 확대) 전략진출국(호주·우크라 등 6개) 법령·시장환경 등 심층정보를 신규 구축해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24.7~)

* 선정기준: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중동 국가 및 중점협력국가 등

- (전문인력 육성) 우리기업의 진출 동력 확보 및 인력부족 지원을 위해 청년중심의 현장 전문가(OJT), 영-마이스터 등 지속 양성

* 현장훈련 선발 시 청년층을 우선 선발 및 마이스터고 해외실습 예산 확대(1.6→2억)

- (미수금 상담) 해외공사 완료에도 발주국의 정치불안, 재정부족, 정산이전 등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못받는 장기미수금 지속 발생*

* ('22년 기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2.7억불) 등 74건 12억불 가량

- 미수금 상담 전용창구(멘토링 센터)를 개설, 상담요원 배치 및 해외 미수금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지원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중동지역 수주지원단 파견	2월	10%	보도자료
	해외진출 기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2월	5%	메모보고(장관)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 TF 킷오프	2월	5%	메모보고(장관)
	중점협력국 초청연수 교육과정 개편	3월	5%	메모보고(차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 봄학기 개강	3월	5%	보도자료
	우리기업 수주지원을 위한 고위급 외교 면담	3월	5%	메모보고(장관)
2/4분기	해외 투자개발 활성화 토론회	4월	5%	메모보고(장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5월	5%	메모보고(국장)
	해외 투자개발(도시개발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6월	10%	메모보고(장관)
	ODA 성과홍보 및 사업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	6월	5%	메모보고(차관)
3/4분기	PIS 2단계 펀드 조성방안 수립	8월	10%	방침결정(장관)
	해외건설 현장훈련 대상자 선발 및 실시	8월	5%	메모보고(국장)
	주요 협력국과 인프라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9월	10%	메모보고(장관) 보도자료
4/4분기	전략진출국 심층정보 시스템 등재 개시	10월	5%	메모보고(차관)
	KIND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국장)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4분기)	12월	5%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관련 기업 및 정책수요자,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24.2월
토론회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관련 기업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24.4월
사업설명회	국토교통 ODA 성과 홍보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사업 설명회 개최	'24.6월
회의	우리 부 해외 주재관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주재국의 인프라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재관 회의 개최	'24.9월

□ 기대효과

- 우리기업 수주활동, 사업개발, 금융연계, 수행역량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사례 및 중장기 진출역량 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해외인프라시장개척				
	▪ 해외건설시장개척 기업활동지원	일반회계	57	56
	▪ 해외건설 전문인력양성(투자개발사업)	일반회계	2.7	2.7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일반회계	50	200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ODA)				
	▪ 인프라 ODA 사업	일반회계	305	272
	▪ 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일반회계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해외건설 누적실적(10%)					1조불	'65년 최초 해외수주 이래, 47년 만에 5천억불 달성('12), 이후 12년만(35년 단축)에 5천억불 추가 수주를 통한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불 달성을 도전적으로 추진(최근 3개년 평균 수주액 316억불 대비 13.8% 증가한 362억불 이상 수주 추진)	누적 실적(10%)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 범부처 수출지원 협력강화 (20%)	해외건설 수주지원 관련 회의	-	-	3	3회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하여 수출 유관부처(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 관련 회의를 적극 개최	개최 횟수(10%)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수출관련 V주재, 관계부처 장차관회의	-	-	11	11회	비상경제민생회의,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회의 등 수출관련 부처의 장차관급(주재), V주재 등 회의 참석 및 안건 상정을 적극 추진	개최 횟수(10%)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 고부가 가치 분야 진출역량 강화 (35%)	신규 PPP사업 직접투자	6	5	7	8건	PPP방식의 해외 수주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 결과지표인 KIND의 투자결승승인 건수를 전년보다 추가 확대	투자승인 건수 (10%)	관련 문서 (메모보고(국장님), 결과보고 등)
	정책투자 플랫폼 실시	-	3회	4회	4회	정책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PIS 펀드 설명회 개최 및 자산 운용사 및 KIND 간 투자사업 협업·검토 등을 적극 추진	실시 횟수 (10%)	관련 문서 (메모보고(국장님), 결과보고 등)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 금액	344	372	424	424 억원	시장개척사업 프로젝트지원 금액 +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금액 + ODA사업(프로젝트, 개발권설청) 지원 금액의 최근 3년 평균(380억) 보다 약 12% 증가한 23년 실적을 목표하여 도전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지원 금액 (10%)	관련 문서 (메모보고(국장님), 결과보고 등)
	PPP 전문인력 양성	-	-	-	70명	전문기관(PPP 특성화대) 교육을 통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적극 양성	PPP 특성화대 모집·교육인원 (5%)	관련 문서 (메모보고(국장님), 결과보고 등)
㉣ 인프라협력 네트워크 확대 (25%)		4	9	9회	9회	해외건설 수주지원과 인프라 협력강화를 위해 9회 이상 수주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장차관급 6회 이상)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국외 수주지원단 파견 횟수(10%)	메모보고 (장관님)
		-	-	-	15회	글로벌 인프라협력 강화를 위해 GICC 등 국제행사 내 프로젝트 설명 적극적으로 실시	프로젝트 설명회 횟수 (10%)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4	6	10회	15회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G2G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국 고위급 인사, 주한공관 대사 등과 면담 횟수를 전년대비 50% 확대 추진	실시 횟수(5%)	관련 문서 (메모보고(장관님), 결과보고 등)
㉤ 민관 소통 강화 (10%)	기업애로 해소·홍보	8	23	23	23회 이상	민간·공기업 간담회, 기업애로 T/F (면담)개최, 애로해소를 위한 서한 발송 등 적극해결 노력, 해외건설 정책방안 강연·강의를 통한 홍보추진	간담회, T/F, 면담, 서한발송, 강의·강연 횟수 (5%)	관련 문서 (메모보고(국장님), 결과보고 등)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18	43	68	70% 이상	청년층 해외건설산업 유입 촉진 을 위해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대상자중 청년 비중을 70%로 확대 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해외건설 현장훈련 청년층 선발 비율(5%)	

②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Ⅱ-1-②)

□ 추진배경(목적)

○ ‘모빌리티’는 교통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미래를 선도 할 핵심 키워드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관심이 집중

- 모빌리티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28-1)

○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여 작년 한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민간 혁신 전문 지원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 출범’,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모빌리티혁신법 제정 등

○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UAM*은 글로벌 산업 선점을 위해 각국이 치열히 경쟁중으로 시장선도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준비 필요

* Urban Air Mobility : 친환경·저소음 소형항공기*와 버티포트(활주로 無)를 활용하여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

- 올해는 UAM 최초 상용화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으로 UAM 안전성 점증을 최우선 목표로 수도권에서의 실증을 중점적으로 추진 필요

- 이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자율주행은 레벨3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계획

-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무인화를 위한 규제개선,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및 C-ITS 등 인프라 구축 확대 등

☞ 법·제도 마련 등 지난해 쌓은 초석을 토대로 기업에게는 혁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준비

< 국정과제 · 업무계획 · 민생토론회 >

① 수도권 실증 추진

- (수도권 실증) 1단계 실증을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2단계 실증 예정으로, 상용화 환경과 유사한 수도권에서 안전성 검증 추진
 - * 1단계: 전남 고흥, '23.8~, 46개社 참여(올해는 통합운용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컨소시엄 단위 실증)
 - 2단계: 수도권(2-1 아라뱃길, 2-2 한강 노선, 2-3 탄천 노선), '24.8~, 1단계 통과 컨소시엄 대상
- 실증에 필요한 버티포트 등 인프라 순차적 구축 및 UAM에 적합한 5G 주파수 대역 발굴 및 확보 추진(과기부 협의 필요)
- (규제특례)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령 적용 완화 등 UAM 맞춤형 등록·인증 등 규제특례 마련
 - *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실증구역에서는 항공4법(항공안전사업·보안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다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적용하되 국가교통위 심의를 거쳐 완화 가능

② 제도적 · 기술적 기반 마련

- (제도구축) 「도심항공교통법」 시행('24.4)에 필요한 하위법령 등 기준 마련을 통해 실증 지원 및 초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 정립
 -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의 지정·해제 기준·절차, UAM사업자 기준, 개발 절차 등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당장 필요한 행정규칙*은 법 시행에 맞춰 제정하고 이후 실증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규칙** 순차적 제정(총 10여건)
 - * 실증사업구역 지정 세부절차,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3건), ** 회랑 설계기준 등
- (기술개발) UAM 발전 계획에 맞춘 선도적인 R&D 추진을 통해 시장 확산(기술↑→요금↓) 및 산업경쟁력 향상
 - 초기상용화('25~'27) 대비 교통관리 등 기초기술('22~'25, 800억) 추진, 성장기('30~) 대비 시장 핵심기술('24~'26, 1,007억) 개발 착수

③ 지역 및 수요모델 확산

- (사업모델) UAM 확산을 위하여 '25년 수도권 최초 상용화(교통형)를 이을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추진
 - 관광·물류·공공형 등 다양한 운용모델을 개발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 컨설팅 추진
 - 안보(국방부)·치안(경찰청)·의료(복지부) 등 타 부처와 활용다변화 등 공공 마중물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MOU 추진
- (로드맵) 초기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주체 및 구성요소별* 세부일정과 지역확산 전략을 담은 '세부 이행 로드맵' 마련

* 기체, 버티포트, 종사자, 운항, 공역·교통관리 등 요소별 소요일정 총망라

④ 생태계 저변확대

- (인력양성) 미래 먹거리 유망 신산업인 UAM에 우수인력 유입·양성을 위한 현장밀착형 강의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UAM 인력양성 체계마련을 위해 3개(항공대, 국민대, 한서대) 학교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 등 UAM 개론 시범강의 개설
 - 청년층의 관심도 제고, 차세대 인재 육성 및 기술저변 확산을 위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개최
- (국제협력)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에 참여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외정부, 국제기관 및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력 추진
 - 韓-FAA(미 감항당국), Joby社 기체인증 논의, 韓-EASA(유럽 감항당국) 제도 공유 및 K-UAM 소개를 위한 ICAO AAM 심포지엄 참석

2.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

< 국정과제 · 업무계획 · 민생토론회 >

① 제도적 기반 선제 구축

- (자율차 판매기반)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자율차 출시 지원
- 레벨4 안전기준 마련 전 자율차 안전성·성능 등을 별도 인증하여 판매·운행을 허용하는 성능인증제* 도입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

* (주요 절차) 성능인증(제작사) → 판매 → 적합성승인(서비스사) → 등록

- (자동차 보안) SW기반 차량 증가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SW 업데이트 관리제도 마련

* BMW·테슬라 등 주요 제작사 차량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의 해킹시연 사례 다수

② 기업 수요에 맞춘 규제개선

- (시험·실증) 최대 5년으로 규정된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갱신 허용)을 통해 업계의 연속성 있는 연구활동 지원
- (무인화 촉진) 무인 여객·화물차 운행요건 세분화·명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업계의 무인차 시험운행 지원 및 자율차 무인화 촉진

* 현재 무인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신청 주체의 안전관리 세부요건 보완

- 아울러, 무인화가 용이한 고속도로를 시범운행지구(규제특례구역)로 지정하고 간선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 등 무인화 기술 고도화 촉진

- (사업화 지원) 성능인증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 없이 제한적 유상운송을 허용(특례)하여 스타트업 등의 사업모델 구축 지원

③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서비스 다각화) 교통서비스의 공익성 위주 사업 다변화*를 위해 신규 예산을 활용, 기업·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익서비스 도입 유도

* 현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도심지 중심 서비스가 대다수

- 교통소외지역·시간 여객서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사각지대 중심의 서비스를 발굴, 비용 우선 지원

- **(통신 인프라)** 차량간, 차량-인프라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C-ITS 통신 방식 결정(23.12)에 따라 제반여건을 종합검토하여 C-ITS 구축계획 수립
 - C-ITS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차량간 충돌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약자 대상 안전 특화서비스 개시
- **(정밀도로지도)** 3차원 지도인 정밀도로지도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구축*(~'30)하고, 도로변화를 신속히 반영·갱신하는 체계 구축 추진
 - * 고속·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는 구축완료('22), 4차로 이상 지방도 대상 구축 추진중
- **(실증도시 구축)**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단위에서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 구축*을 통해 기술검증 및 자율차 국민 체감化 추진
 - * 대상도시 선정을 완료('23.10, 경기 화성)하였으며 구축공사 착수('24.9) 추진

3. 모빌리티 혁신 본격 확산

< 국정과제 · 업무계획 >

- **(로드맵 정비)** 정부와 민간의 소통채널인 모빌리티 혁신포럼을 중심으로 民·學·研·官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혁신과제 논의
 -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자율주행, UAM 등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등을 마련해 로드맵 2.0 수립
- **(규제 혁신)** 기존 규제, 제도 미비로 출시하지 못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혁신 서비스 출시 지원
 - * (例)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서비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캠핑카 공유 서비스 등
 - 분야별 다양한 혁신 기술 발굴을 위한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 정책을 공유
- **(지역 확산)** 민간의 혁신적 서비스가 지역 내 서비스로 도입·확산 될 수 있도록 지역별 모빌리티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계획 수립
- **(데이터 개방)** 수요자 중심의 가장 편리하고 빠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실시간 데이터 개방 확대(버스→도시철도·자전거)
 - * (도시철도) 노선, 시간표만 제공 ⇨ 열차 지연 등 실시간 정보 제공 (공공자전거) 서울, 세종 등 일부지역 시범제공 ⇨ 제공 지역 확대 등

○ (국제 협력)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어젠다를 주도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포,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 개최

-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에 참여하고 국제기준과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외정부, 국제기관 및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력 추진

* (자율주행) UN ECE 자동차기준 국제기구 참석, 한·미 자동차협력회의 등 (UAM) 美FAA(감항당국), 유럽EASA(감항당국) 협업, ICAO AAM 심포지엄 참석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사이버보안·SW업데이트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1월	2%	보도자료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	2월	3%	메모보고(장관)
	레벨4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법 개정	2월	5%	보도자료
	버티포트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2월	5%	보도자료
	K-UAM 그랜드챌린지 소개 등 웹투어 추진	2월	5%	메모보고(장관)
	'24년 실증추진 방안 심의 등 UAM 팀코리아 개최	3월	5%	보도자료
	UAM 대학시범 강의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모빌리티 혁신 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4월	5%	메모보고(장관)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선정	4월	5%	보도자료
	UAM 핵심기술개발 착수	5월	5%	보도자료
	C-ITS 안전 특화서비스 개시	5월	5%	보도자료
	UAM 전용 주파수 확정	6월	5%	메모보고(장관)
3/4분기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5%	관보
	UAM 초기 상용화 대비 세부이행 로드맵 마련	8월	5%	보도자료
	K-UAM 정책홍보를 위한 ICAO AAM 심포지엄 참석	9월	5%	메모보고(차관)
	자율주행 리빙랩 구축공사 착수	9월	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10월	5%	메모보고(장관)
	캠핑카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11월	7%	관보 고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12월	8%	관보
	성능인증 차량 특례부여를 위한 자율차법 개정안 발의	12월	5%	의안정보시스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정책 수립 전, 집행과정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산업계, 연구기관, 국민 및 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 계획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1월
회의 및 현장방문	韓-FAA(美감항당국), Joby社 기체인증 회의 및 실증현장 방문	'24.2월
회의	C-ITS 구축 관련 추진협의체 자문회의(3회 이상)	'24.~3월
회의	차량 C-ITS 단말기 장착 관련 차량사(현대차 등) 회의	'24.3월
간담회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 개최	'24.3월
회의	UAM 팀코리아 본협의체 개최	'24.3월
간담회	모빌리티 지역 확산을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24.4월
설명회	자율주행 리빙랩 구축사업 관련 업계 사전 설명회	'24.4월
간담회	사이버보안·SW업데이트 하위법령 마련 업계·관계기관 간담회	'24.5월
간담회	무인·무상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 업계 간담회	'24.7월
간담회	UAM 지역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컨설팅	'24.8월~
간담회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관계기관 간담회	'24.8월
간담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관련 지자체 간담회	'24.9월
현장행사	자율주행 민·관·연 의견교류를 위한 오픈포럼	'24.10월
현장행사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개최	'24.10월
간담회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	'24.11월
현장행사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24.12월
간담회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민간 및 전문가 간담회	'24.12월

□ 기대효과

- **(모빌리티혁신)**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 시대 개막
- **(UAM)** 실증사업 및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도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민간의 초기 리스크 완화
- **(자율주행)** 자율차 관련 제도·인프라 선제적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민간의 실증·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레벨4 상용화 토대 마련
 - 자율차 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교통안전 향상,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공익 서비스 확대로 실현(교통약자·소외지역 운송 등)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자동차 및 교통정책(IV-1-일반재정)				
① 첨단미래형 자동차 활성화(4633)		일반회계	304	429
			(304)	(429)
	▪ 자율자동차상용화(319)		304	429
도로관리(V-5-일반재정)				
① 첨단도로교통체계(1736)		교특회계	98	79
	▪ 첨단도로교통체계(304)		(98)	(79)
	- C-ITS 시범사업(내역사업)		98	79
국토교통연구개발(VI-4-R&D)				
① 교통물류연구(4158)		일반회계	503	594
			(503)	(594)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308)		503	594
국토지리정보원운영(VI-2-일반재정)				
① 국토지형관리(5831)		일반회계	160	160
	▪ 국가기본도 제작(301)		(160)	(160)
	- 정밀도로제작(내역사업)		160	160
항공발전지원(V-13-일반재정)				
① 항공산업지원(3637)		교특회계	170	201
			(756)	(676)
	▪ 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333)		170	201
대중교통 육성(IV-2-일반재정)				
①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교특회계	29.5	27.4
			(1,252)	(2,172)
	▪ 모빌리티활성화지원(350)		29.5	27.4
	- 모빌리티 종합 지원체계 구축(내역사업)		2.5	6.0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지원(내역사업)		-	21.5
	-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내역사업)	'	27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 UAM 상용화 지원 (35%)	수도권 실증 착수 (15%)	-	-	신규	착수	UAM 상용화('25년)를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 환경인 도심 실증이 반드시 필요한 바, UAM 수도권 실증 착수라는 대표 지표를 설정, 이는 세계적으로 UAM 실증 경험 및 관련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체·통신 등에 대한 높은 기술 수준 확보는 물론, 기존 항공법규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버티포트·통신시설 등 인프라 적기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매우 난이도가 높고 도전적인 목표치임	수도권 실증 착수여부	보도자료 등
	제도 기반 구축 (10%)	-	-	신규	법령 등 제정 5건 이상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바, 법령 제정 5건 이상이라는 대표적·정량적 지표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인 UAM 상용화를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항공·육상교통산업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물론, 미실현된 신산업의 미래상 예측, 국제동향, 전문가의견, 실증사업 데이터 등을 모두 고려해 마련해야하는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임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 제정건수	국가법령정보 센터 등
	지역 확산 기반 마련 (10%)	-	-	신규	3개 기관 이상	실증 이후 '25년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상용화 모델 발굴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바, 초기 상용화 사업모델 발굴 및 수요기관 3곳 이상과 MOU체결이라는 대표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헬기운용사례, 사업수익성, 지역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실제 수요처인 지자체, 관계부처(예: 안보·국방부, 관광·문체부, 의료·복지부),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도전적인 목표임	MOU 체결 관계기관 수	보도자료 등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35%)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15%)	6곳 10곳 17곳		20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지정('23.11)하는 등 양적 성과를 달성한 만큼,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내실화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국민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실적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적극적 목표 설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 지구 개소	메모보고 (장관)	
		-	-	15만 km	18만 km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거리를 직전 실적('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대비 20% 상향하여 도전적인 목표 설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제도기반 마련 (10%)	-	-	신규	5대 이상	국제적으로 레벨4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최초의 안전기준(B2C) 및 성능인증 제도(B2B)를 마련하는 등 레벨4 자율차 상용화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레벨4 수준의 자율차가 실제 제작되는 것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B·C형 자율주행차) 운전석이 없는 여객운송 및 특수차량(청소차 등)	레벨4 자율차 판매를 위한 제작기준에 따른 시험차량 대수(임시운행)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인프라 구축 (10%)	-	-	신규	45km 이상	C-ITS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C-ITS 통신방식 변경('23.12, 과기부)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에 수립하였던 C-ITS 구축방안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며, 구축방안 수립 후 LTE-V2X 방식 C-ITS를 최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도전적인 목표임	C-ITS 통신인프라 구축	관련문서 등

㉔ 모빌리티 혁신기반 공고화 (30%)	규제 샌드박스 사업발굴 (15%)	- - 신규	15건 이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을 他규제샌드박스 도입 첫째 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 발굴 대비 88% 상향된 도전적 목표 설정 * 他규제샌드박스 도입 첫 해 모빌리티 분야 실증특례 건수 : 평균 8건(ICT 규제 12건, 산업융합 6건, 규제 자유특구 8건, 스마트도시 5건)	모빌리티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 건수	보고자료 및 관련문서 등
	지역확산 (15%)	- - 신규	2곳	자율주행 및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특화서비스가 지역 확산 될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자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건수	관련 자료 등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Ⅱ-1-③)

□ 추진배경

- (녹색건축 확대)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건물 부문 '18년 대비 32.8% 감축)을 위해 건물 에너지성능 제고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발표('23.4, 국무총리 주재)
- (건축문화 진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돌파에 대비하여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건축문화 조성 기틀 마련 필요
 - * '2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1,037불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3.10)
- (건축공간 혁신) 4차 산업(로봇, AI),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OSC(탈현장공법) 등 혁신기술 상용화에 대비하여 건축물 수용성 확보
 - * 스마트기술을 건축물에 더하는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23.12)
- 일상공간인 건축물 내부에서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 및 건축설비 관련 기준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

- (기본계획)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수립
 - * 제로에너지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확대, 건물 단위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정책 다각화
- (신축 건물) 공공 부문에 제로에너지건축(ZEB)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적용되는 ZEB 최소 성능요건 강화*
 - * 일부 용도·규모의 공공건축물 신축 시 ZEB인증 의무 취득등급 상향(5→4등급)
- 신축 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 취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ZEB 인증 제도 통합

- (기존 건물)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지원 및 '25년 이후 의무화 방안 마련

* 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의료시설에 대해 약 1,275억원 공사비 지원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 권고(45건) 및 녹색건축물 전환 지원(10건)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4,500여 동 대상

- 민간건축물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신규 사업모델 마련, 기업 ESG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확대* 및 상설 홍보관 개관 추진

*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상품 출시, ESG 상품 추가개발을 위한 협의체 출범 등

② 소득 수준에 걸맞는 건축문화 진흥

- (경관개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이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5~'29)' 수립

- 지자체 경관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내실화를 위해 설계공모 운영, 심사위원 pool 관리 등 설계공모 정보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확산

* '23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개선을 통해 '24년부터 설계공모 관리 서비스 도입

- (문화프로그램)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 답사, 건축가와의 대화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③ 건물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공간 혁신

- (스마트*빌딩) 로봇, UAM('25), 자율주행('27, Lv4) 등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지원*을 위해 '스마트*빌딩 지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 신규기술 적용에 따른 규제 특례, 사업비용 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 첨단기술에 대한 건축물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건축기술 개발을 위해 스마트*빌딩 기술개발 로드맵(안) 마련

- 스마트*빌딩 우수 사례 마련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3곳을 대상으로 스마트*빌딩으로 리뉴얼하는 사업기획(안) 마련

* '23년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청, 일산동구청, 인천남동소방서를 후보지로 선정

- UAM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가 도심 내 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건축물 용도 신설

- (환경개선)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차단 기준 상향* 및 표준바닥구조 개선

* 경량·중량충격음 49dB 이하,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및 미이행 시 준공 불허 등

- 건물 외부 설치* 실외기로 인한 낙하 위험 및 미관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내 실외기실 구획 관련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마련

* 실외기 설치공간 의무규정 부재로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	1월	5%	메모보고(실장)
	공공건축물 리뉴얼 최종보고(스마트*빌딩 사업기획(안) 마련)	3월	5%	메모보고(실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3월	5%	공문
2/4분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정식 오픈	6월	10%	보도자료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6월	10%	방침결정(장관)
	건축문화 현장 답사 프로그램 공고	6월	10%	보도자료
3/4분기	그린리모델링 상설홍보관 개관	8월	10%	보도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	8월	10%	보도자료
	공공건축물 ZEB 인증등급 상향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방침	9월	10%	방침결정(장관)
4/4분기	공공건축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지원	11월	10%	공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장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개정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확대

- (기본계획)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신축 건물) '25년 ZEB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예정인 신축 공공 건물의 적용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추진
- (기존 건물) '25년 예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지자체(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국가건물에너지 통합DB를 활용한 ESG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상품 추가 발굴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의체 발족

② 소득 수준에 걸맞는 건축문화 진흥

- (경관개선)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학회 등 자문 회의를 추진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설계공모) 설계공모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용 유도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사용자 교육 및 의견수렴
- (문화프로그램) 국민 인식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답사 프로그램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공간 혁신

- (스마트+빌딩) 로봇, UAM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 운영 및 타 분야와의 협력회의 개최
- (실내환경) 층간소음 표준바닥구조 개선 및 실외기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간담회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팀코리아 합동 워크숍	'24.2월
	공공건축물 ZEB인증 의무등급 상향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24.4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24.9월
	ESG 관련 금융상품 출시지원을 위한 협의체 발족	'24.10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개선(안) 관련 간담회	'24.12월
현장방문	지자체 등 공공기관 설계공모 심사 현장 방문	'24.7월
	건축문화 답사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 개최	'24.11월
회의	민·관 합동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운영	지속
	충간소음 표준바닥구조 개선, 실외기실 지침 마련 등 전문가 자문	'24.9월
세미나, 교육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	'24.4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 사업설명회	'24.5월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사용자 교육	'24.7월

□ 기대효과

- (녹색건축 확대) 건물 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한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기술 개발 유도
- (건축문화 진흥) 체계적인 경관디자인 관리 및 공정한 설계공모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건축공간 조성
- (건축공간 혁신) 첨단기술 상용화에 맞춰 건축물 내 편의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소음·미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건축환경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I -3-일반재정⑤)				
① 도시국토저탄소화(6132)	기후대응 기금		1,850.67	1,312.6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300)	1,910.52	1,275.17
		▪제로에너지건축 신산업 육성(310)	-	37.45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I -3-일반재정④)				
① 녹색건축물보급 활성화 지원(613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90.84	67.72
		▪그린리모델링 활성화(301)	90.84	67.72
건축정책(I -3-일반재정①)				
① 도시경관및건축문화품격향상(6131)	일반회계		48.2	28.2
		▪건축문화진흥(303)	48.2	28.2
국토교통정보화(VI-3-일반재정①)				
① 건축정보화(4244)	일반회계		103.42	81.31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16)	103.42	81.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녹색건축 확대 (40%)	-	신규	-	법 개정 (10%)	유사 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을 위해 인증 운영 법적 근거인 '녹색건축법령' 개정을 목표로 설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	신규	-	하위 법령 개정 (10%)	공공건축물 신축 시 의무 취득 해야 하는 ZEB인증 등급 상향을 위해 관련 기준이 규정된 '녹색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설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 법령 개정	메모보고 또는 관보
	-	신규	-	기본 계획 수립 (10%)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법정계획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관보 게재	관보 또는 보도자료 등
	97	95	98.7	97 (5%)	공공에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 실적추이를 감안하여 '24년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도록 예산집행률 97%를 목표로 설정	예산집행률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디브레인, e-나라도움 등)
	66	66.5	84	90 (5%)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과거 실적추세 보다 약 25% 높은 '24년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도록 예산집행률 90%를 목표로 설정	예산집행률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디브레인, e-나라도움 등)
㉡ 건축문화 진흥 (40%)	-	신규	-	기본 계획 수립 (10%)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관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장기 법정계획을 관보에 게재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제3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관보 게재	관보 또는 보도자료 등
	-	신규	-	76 (10%)	건축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24년 최초 실시되는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점수 76점을 목표로 설정	답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점수	메모보고
	-	신규	-	10 (10%)	'24년 최초 도입되는 서비스로, 담당인력(2명)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용하도록 10개라는 도전적 목표 설정	설계공모 관리시스템 활용 지자체수	메모보고
	-	신규	-	1,000 (10%)	'24년 최초 구축하는 전국 설계 공모 심사위원 통합 Pool로, 전체 위원수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등록하도록 1천명 이라는 도전적 목표 설정	설계공모 심사위원 등록 인원수(명)	메모보고 또는 보도자료
㉢ 건축공간 혁신 (20%)	-	신규	-	법 제정안 마련 (10%)	로봇, UAM,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를 조율하는 스마트*빌딩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는 상황이나, 스마트*빌딩 조성 지원을 위해 지원법(가칭)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설정	'스마트*빌딩 지원법(가칭) 제정안 마련	메모보고 또는 보도자료
	-	신규	-	로드맵 마련 (10%)	4차 산업혁명 및 모빌리티 혁신 기술이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건축 분야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설정	스마트*빌딩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메모보고 또는 보도자료

④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 구현(Ⅱ-1-④)

□ 추진배경

- e-커머스의 성장,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등 택배는 우리 일상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

* 1인당 연간 택배이용(박스) : 11.1('05)→ 25.0('10) → 35.7('15) → 65.1('20)→ **80.1('22)**

- 새벽·당일배송 등 '빠른배송'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배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물류 인프라 확충, 화물처리 자동화 등이 중요

- 한편, 인구 밀집도가 낮은 도서 산간지역 등의 경우, 추가 택배비가 부과되거나, 추가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등 서비스 불편이 여전

- 이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없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 할 필요

* (인천 민생토론회(3.7), V 모두말씀) 일반 택배망이 갖춰지지 못한 물류취약지역에는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하여 택배를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

- ☞ 택배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인 만큼, 빠른배송 지역은 확대하고, 택배 사각지대는 해소할 필요

- 우리 물류산업은 첨단기술 발달에 힘입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산업 성장에 근본적 한계

- 이에, 로봇·드론배송 등을 포함한 물류 新기술의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해, 물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 국가물류기지 등 노후화로 인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곳은 재정비 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필요

- ☞ 미래 물류新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노후 인프라의 재정비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해, 물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도심 속 빠른배송 서비스 확대

- (MFC 확산) 새벽·당일배송 확산을 위해 소규모 물류창고인 주문배송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설치 허용(건축법령 개정)
 -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물류창고
- 주유소, 버스 터미널과 같이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교통 시설에 주문배송시설 또는 물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스마트 물류센터) 택배의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출 이자 지원(최대 2%p)
- 올해는, 대출 취급은행 확대(現 4곳), 우수물류 신기술 가점 부여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심사수수료(3백만원/건) 감면 추진

② 도서·산간 등 택배 사각지대는 해소

- (물류취약지역 지정) 택배요금 수준, 배송기간 등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정·고시('24.6)
- 연구용역 통해 취약지역 생활물류 현황조사 및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공동배송 시범사업)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춘 우체국과 협업하여, 취약지역 택배를 일괄 위탁·배송하는 공동배송 시범사업 추진
- 민간 택배사에서 직접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물량이 부족해 배송 빈도가 낮은 지역 물량을 우체국에 일괄로 위탁하여 배송
- (택배 서비스평가 개선) 추가요금 수준, 배송여부 등 취약지역 배송품질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24년 서비스평가 실시
- (규제개선) 물량이 적은 물류취약지역 내에서는 택배사간 공동배송이 가능토록 택배기사 전속성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방안 검토

③ 미래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조기 구현

- (디지털물류 전환지원) 지역이 겪고 있는 물류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물류서비스를 실증해 지역주민 편의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 * (도시부) 생활물류 서비스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물류비 상승, (도서·산간) 배송지연
- 특히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 및 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 공동·빠른배송 서비스 실증
- (로봇배송 실증)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에서 스마트 택배함 및 이와 연계한 배송로봇 기술 실증 추진
 -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배송기술(운반 장치, 로봇 등)을 개발 추진(~'25)
- (무인배송 상용화) 드론·로봇 이용 택배사업자의 생활물류법상 등록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인배송 상용화 기반 조성
- (물류 효율화 지원) 화주기업 물류비 절감 및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제3자·공동·스마트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④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산업 발전 방안」 발표
 - 공항·항만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을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물류특구 조성 추진
 - 중국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화물을 인천공항의 환적화물로 유치하기 위해, 한·중 트럭복합운송 시범사업도 활성화 추진*
 - *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 논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 등 추진
- (물류 인프라 재정비) 전국 5대 광역 내륙 물류기지 중 민자사업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 ICD^{~26년}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마련
 - 또한, 도심 노후 물류시설을 주민 친화적인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환지대상 확대 등 지원

- 한편,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도심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80%)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 추진
 - * 천안센터 운영 개시('24.8, LH), 제주센터 착공('24.12, 제주도)
- (물류시설 제도 체계화) 화물의 집화·하역·분류 역할을 주로 하는 물류 터미널(예: Sub 터미널)의 개념 정립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또한, '14년 도입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실수요 검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해외진출 지원 강화) 국내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감소 등 지원 패키지 방안 마련*
 - * 기업·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중기부 협업)
 - * 지원프로그램(국내 6주+해외 6주) 운영 및 투자자 1:1 매칭기회 제공 (15개社 내외)
 - 한편, 물류 기술 홍보, 국내 물류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국내·외 기업,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 개최
- (친환경 물류 확산) 수소 화물차 공급·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소 화물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확대* 등 지원방안 확대
 - * 현재 경유·전기 대비 수소 연료 가격이 높아 수소 화물차 공급에 어려움 발생 중
 - 그 간 화물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위주의 보조사업을 개선, 물류센터 내 친환경 파렛트, 다회용 포장지 등으로 지원품목 확대
 - 물류업계 종사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동참 등 친환경 물류활동 필요 인식제고를 위한 '에코드라이빙 캠페인'도 추진
 - * '18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98.1백만톤) 대비 2030년 감축목표 37.8%(61백만톤 배출)
 - 한편, 수소 화물차 공급 및 확산에 대비하여, 창원 등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준공(~'24.12)

사업지	대상지	참여 기관	특 징
창원시	신항화물차 휴게소	▶ 창원산업진흥원/SK에너지 * (부지제공)부산항만공사	▶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인 신항·진해·신항 인근
성주시	성주(창원) 휴게소	▶ 한국도로공사 / 코스텍 * (부지제공) 한국도로공사	▶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로, 전체 교통량 중 버스·화물 차량이 40% 이상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	2월	10%	보도자료
	도시첨단 물류단지 취득세 감면, 환지대상 확대 지원	2월	5%	개정 전문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참석	2월	5%	선언문
	디지털 물류실증 지원사업 선정	3월	5%	보도자료
	수소 연료보조금 확대를 위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3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2/4분기	국제물류산업대전 개최	4월	5%	보도자료
	물류 취약지역 공동배송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MOU 체결	6월	10%	메모보고(차관)
	3자·공동·스마트물류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6월	5%	메모보고(차관)
3/4분기	에코드라이빙 캠페인 개최	7월	5%	보도자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천안) 개소식	8월	5%	보도자료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심사수수료 감면, 대출취급은행 확대, 취득세 감면 등)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택배서비스 평가 개선방안 마련 (물류취약지역 배송품질 평가 세부기준 등)	11월	5%	메모보고(실장)
	의왕ICD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실장)
	실수요 검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12월	5%	방침결정(실장)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제주) 착공	12월	5%	메모보고(실장)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준공	12월	5%	관련 공문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물류기업 릴레이 간담회)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사항 발굴을 위해 물류 스타트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 (물류 인프라 정비) 내륙물류기지, 주문배송시설 등 물류 인프라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 관련 기업 등 현장 의견 수렴·반영
- (국제 물류산업대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사례를 관련 기업과 공유
- (물류취약지역 지정) 지정 예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 애로사항 및 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의견 수렴
- (물류 효율화 지원) 물류 효율화 컨설팅 수혜 업체 및 컨설팅 업체의 우수사례 공유,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물류기업 릴레이 간담회	'24.1월
간담회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 지자체·업계 간담회	'24.2월
회의	국제 물류산업대전	'24.4월
회의	장관님 주재 물류산업계 간담회	'24.4월
간담회	물류취약지역 지정 지자체 간담회	'24.7월
간담회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업계 간담회	'24.12월

□ 기대효과

- (도심 내 물류시설 확대) 빠른 배송 서비스의 일상화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택배 이용 편의 제고
- (택배 사각지대 해소) 공동배송 시범사업 등을 통해 배송기간 단축 등 물류취약지역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 증진
- (물류시설 첨단화·스마트화) 촘촘한 배송거점 구축을 통한 기업의 물류체계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가속화
-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물류 거점 확대를 통해 해외의 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IV-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물류정책)				
①	물류산업지원(4034)			
	▪물류산업지원(309)	일반회계	31.49	31.68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315)	일반회계	114.7	103.22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314)	일반회계	27.4	29.0
	▪디지털물류실증단지조성지원(321)	일반회계	50	44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323)	일반회계	-	4
	▪친환경물류지원(301)	예특회계	14.37	12.39
VI-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				
①	국토교통연구개발(4153)			
	▪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사업(R&D)(309)	일반회계	213.01	191.7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택배 사각지대 해소(35%) (a 20%, b 15%)	-	-	신규	법령 제정	생활물류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려는 것으로(최초 지정), 추가요금·배송소요기간 등 지역별 서비스 수준 측정 및 지자체 의견 조율이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과제	㉠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신규	시범 사업 착수	민간 택배사의 물량을 우체국에 일괄로 위탁·배송하는 프로세스 를 신규 구축해야 하며, 요금·전 산망·프로세스 관련 우정사업본 부·택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의견 조율이 요구되는 난 이도 높은 과제	㉠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20%) (a 10%, b 10%)	-	-	신규	법 발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물류특구 조성'과 관련된 법제정을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민생토론회 핵심과제 후속 조치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	㉠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포함한 법률안 발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신규	대책 발표	우리부 주도 하에 관계부처와 합동 으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물류산업을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 보도자료	보도자료
㉢ 도심 속 빠른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 도입(15%)	-	-	법 개정	하위 법령 개정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는 소형 도심 물류거점인 "주문배송시설"의 도입·관리를 위해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목표 달성 시 기업이 주거지역 인근에 배송거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도심 생활물류시설 부족이 일부 해소되고, 빠른 배송서비스의 확 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건축법 시행령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10%)	-	-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지정 (1곳)	도시 첨단 물류 단지 지정 (1곳) 및 법령 개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15.12), 시범사업 6곳 지정('16)된 이후 추진 중인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해석, 지자체 협의 등이 요구 되며, 취득세 감면, 환지대상 확대 등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등 매우 도전적인 목표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고시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통시장의 디지털 물류전환을 위한 공동·빠른 배송 확대(10%)	-	-	신규	210	소상공인 밀집한 전통시장에 디 지털 기반 물류체계를 도입해 소 비자 편의증진과 전통시장 경쟁 력 강화를 목표로하는 것으로, 실증 기간('22.11~'23.12) 동안 일평균 174건에 그친 배송건수를 고령상 인 맞춤형교육 등 지자체(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210건까지 전년대비 20%를 상향하는 도전 적인 목표를 결과지표로 제시	일평균 배송건수	서울시 공문, 실적보고서
㉥ 제3자 물류 활용률 달성(공동) (10%)	70.7	70.8	71.4	71.6	생활물류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물류 전문기업의 공급용량 한계, 영세기업의 자가물류 선호경향 등 3자물류 전환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나, 물류시장 육성·물류선 진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	(제3자물류 이용업체/전체 조사업체)×100	3자물류 활용 실태조사 보고자료

⑤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Ⅱ-1-⑤)

□ 추진배경(목적)

① 세계흐름에 발맞춘 친환경·항공 제작·정비 산업 경쟁력 확보 필수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50 Net Zero(순배출 제로)” 목표를 채택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상쇄·감축 제도*” 이행과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강조

* ICAO가 정한 탄소 배출량 기준 초과 시 항공사가 배출권을 구매·상쇄 하는 제도('21~)

** “SAF(Sustainable Air Fuel)”는 폐식용유, 동식물 유지, 폐기물 등을 원료로 탄소감축 효과가 화석연료 대비 평균 80%인 항공유 (기존항공유와 혼합 사용 가능하고 2~4배 고가)

- 국제항공 탄소배출 감축을 선도하고 친환경 항공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진취적 목표설정과 이행 추진 필요



- 최근 항공사 수요맞춤형 부품 개발·인증으로 국산품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국내 정비업체의 해외 항공기 정비수요 확대 등 정비산업 지원을 위한 해외 항공당국의 인증절차 간소화 업무약정 체결 등 추진

< 국산 개발·인증 항공부품 및 판매 현황 >

부 품 명	객실부품			화물부품
	컵홀더	웨어디스크	창문덮개	팔레트
부품사진				
판 매 량	4,000개	1,000개	400개	15개

- 항공기 제작사(베셀)에서 소형비행기(2인승, KLA-200) 개발에 도전, 국산 항공기 상용화를 위한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 지원 필요

* 비행기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한 KC-100(4인승, '13) 이후 2번째 인증

- 아울러, 미래항공 UAM 실증사업('25년 상용화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 UAM 기체(5~6대)에 대한 우리부 안전성 확인 필수

* 실증 1단계('23.8~'24.12) : 개활지(전남 고흥), 2단계('24.8~25.6) : 도심(수도권)

② 국제항공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항공리딩국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 우리나라 항공분야에 대한 국제위상 상승*에 따라 ①이사국 파트 상향 (Part III→I,II) 대응력 제고, ②국제의제 선도, ③전략적 교류 협력 강화 등 글로벌 항공리딩국으로 도약 필요(Follow → Leading)

* ICAO 이사국 8연임('01~), ICAO 항행위원 7연임('05~), ICAO 재정 기여도 세계 7위, 세계항공운송 8위('21년, ICAO) 등

- 글로벌 경쟁력·국가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ICAO 평가('25년 예상) 대비, 국제기준 이행·관리체계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08년 ICAO 평가(98.24점, 現 ICAO 3위) 이후 첫 수점으로, 기존 평가 방식과 상이한 새로운 평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중요

* ICAO는 '13년부터 체약국의 항공안전관리 수준을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형태의 항공안전평가(USOAP-CMA)를 시행 중(舊 스냅샷 → 新 실적기반)

※ USOAP-CMA(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세계흐름에 발맞춘 친환경·항공 제작·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① 저탄소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제항공 탄소배출 감축 선도 및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24.8)

* (주요내용) 국제항공 탄소배출 상쇄 이행의무자(항공사) 지정,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 상쇄의무량의 산정·통보, 항공사의 상쇄의무 이행·보고 등

- 국제항공 탄소감축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국적항공사 사용 촉진을 위해 'SAF 활성화 대책' 발표 추진
- 항공사 대상 SAF 사용목표 설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 탄소감축 이행상황 관리·점검 체계 마련 등

2 국내 항공 제작·정비 산업 활성화

- (제작산업 활성화) 항공부품의 중요도·신청업체 등의 위험도를 평가, 수준별(高/中/低)로 간소화된 인증 진행 방안 마련(연구용역, '24.5~)
- 국산화 가능 품목 추가 발굴을 위해 항공사·부품 제작사 간 수요·공급 수요에 관한 소통의 장(간담회) 마련('24.3)
- (정비산업 활성화) 韓-日 간 협력회의*('24.1~)를 통해 정비조직 상호인정을 위한 업무약정** 체결('24.下) 등 해외 항공기 정비수요 확대 기반 마련

* 한·일 항공 협력회의('23.5.11~5.12, 제주)에서 기술분야 협력과제로서 "정비조직인증 상호인정"을 韓-日 양국 관심 사안으로 확인하고 추진기로 협의

** 일본 항공당국의 국내 정비업체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등 규정

3 국산 항공기 인증 및 UAM 실증사업 비행허가를 통한 비행안전 확보

- 국내업체(베셀)에서 개발 중인 소형비행기(2인승) 개발단계에 맞춰 구조·비행성능·동력계통 등 372개 인증기준에 따라 검증 추진

* 국토부(기술원)은 구조, 비행성능 등 분야별 인증팀을 구성하여 기술검증 진행 중

< 2인승 항공기 제원 >

구 분	성 능	
좌석 수	2석(조종석 1석포함)	
추진방식	단발 피스톤 엔진	
최대출력/이륙중량	100마력/650 Kg	
항속거리/비행시간	1,400Km/6시간 이상	

- UAM 실증사업 일정에 맞춰 기체* 안전성 및 비행경로 상 지상 사람·건물 등에 위험요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증비행** 허가('24.下)

* 국내업체 외에 美 조비·아처社, 獨 오토플라이트社, 英 버티컬社 기체 등이 참여 예정

**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침에 의거 국내 UAM 기체는 특별감항증명, 외국 UAM 기체는 실증비행 허가 등 수행 예정

< UAM 실증사업 참여 국내·외 기체 현황 >

				
美 조비社	美 아처社	獨 오토플라이트社	英 버티컬社	한국 OPPAV

② 글로벌 항공 선도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① ICAO 이사국 상향진출 기반 마련

- (이사국 선거 대응) '25년 제42차 총회 대비, 아국 이사국 지위 유지 및 파트상향에 유리한 정수배분 등을 위한 선제적 선거 대응전략 마련
 - '25년 러시아 이사국 지위 회복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와 사전 협력체계 구축
- * 지난 제41차 총회('22.9)에서 러시아 파트 I 선거에서 탈락(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트 III 정수가 14개로 확대되어 카타르가 경합없이 이사국(Part III)에 선출

이사국	Part I (10국)	호주,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Part II (12국)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이집트, 스페인, 인도, 오스트리아, 멕시코, 아이슬란드,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Part III (14국)	UAE, 대한민국 , 적도기니, 말레이시아, 칠레,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모리타니아, 자메이카, 가나, 루마니아, 짐바브웨, 볼리비아, 카타르

- (이사국 정수 확대) 정수 확대(36→40개국) 미비준 국가를 대상으로, 항공분야 자원 및 외교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한 조속한 비준 독려
 - * '16년 ICAO 총회에서 정수확대(40개국) 합의 후, 시카고 협약 개정 비준 절차 진행 중
 - ※ 전체 193개 회원국 중 2/3인 128개국 비준 필요, '24.3월 현재 92개국 비준 완료
-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가 등 미비준국가 고위급(장관, 청장 등)에 대한 항공 관련 행사 우선 초청 및 교육훈련 지원 강화 추진
- (글로벌 親韓인사 네트워킹 강화) ICAO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AO 회원국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개최 추진

- * ICAO **의장/사무총장**, 이사국 대표, 지역그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원국 **고위급** (장차관, 항공청장), 지역 민항위 **의장/사무총장** 등
- 아울러, ICAO 및 아태 지역협력체 회의* 등에 고위급 인사를 수석 대표로 파견하여, 인적 네트워크 공고화를 통한 親韓 세력 확보
- * 'ICAO 법률세미나(장관급, 우리나라 주관)', 'ICAO GISS(실장급)', '아태 항공장관회의(차관급)', '아태 항공청장회의(실장급)' 등

2 국제항공 아젠다 주도

- (ICAO **패널 활성화**) 국제항공 '룰 셋팅' 선도 경쟁이 치열함을 고려,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외교·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패널*** 활동 강화

◆ "ICAO 패널"은 세계 항공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국제기준 제·개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여 세계 항공정책 및 기술표준 마련 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24년 우리나라는 항공자격·감항·항공교통 등 15개 분야에서 **패널** 활동 중

- 패널과 국내 産·學·研의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국제회의 의제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표준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 패널 워킹그룹 참여 확대를 통한 新 국제항공 기술기준·표준 등에 대한 국내 정책과의 발빠른 연계로, 국제항공 질서 주도
- (국제행사 개최) 글로벌 항공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양한 ICAO 국제회의 국내 유치*를 통한 국가 신인도·위상 제고
 - * ICAO Legal Seminar, ICAO ATMRPP 회의, EASA SBAS 국제협력 회의, 한-EU 디지털 항공정보관리 워크숍,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 등
- 국제현안 및 항공정책 관련 국제회의의 아젠다를 적극 발굴·발표하고,
- 행사 개최 시, ICAO 사무총장 및 회원국 장·차관, 항공산업계 주요 인사 초청 및 양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추진
- (국제회의 저변 확대) 미래 국제 항공정책 결정 등에 아국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ICAO 이사회, 항행위원회, 지역 회의 등 多분야 회의* 참석을 통한 글로벌 항공의 주도적 역할 수행
 - * 아·태 항공장관회의, ICAO Innovation Fair, ICAO GISS, ICAO LTAG Stocktaking, ICAO Symposium on non-CO2 Aviation Emission, 아·태항공청장회의(DGCA) ICAO APANPIRG, 한·미·일 항공교통안전협력회의, APAC-RASG 등

3 글로벌 국제협력 체계 공고화

- (개도국 무상교육) ICAO 회원국 중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및 '현지 교육(중남미·아프리카지역 등)'을 통한 무상 12개 협력 과정 추진
 - '01년부터 ICAO 개도국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韓-ICAO 협정('06년)에 따라 지원범위 지속 확대 중
 - * '01년~'23년 누적 실적 : 137개국, 총 3,167명 수료
 - ** 대륙별(지원국가) : 아프리카(51)·아메리카(31)·아시아(24)·오세아니아(11)·유럽(12)·중동(9)
- (석사학위 장학사업) ICAO 이사국 선거 대비 親韓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장학사업 추진
 - * ICAO의 'NO COUNTRY LEFT BEHIND' 정책 기조에 부합

③ ICAO 안전평가의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항공안전 경쟁력 강화

1 지속 가능한 국제기준 이행·관리체계 구축

- (기준·절차 마련) 국제기준 제·개정 전 과정의 적시 대응(아국 입장 제시 및 관련 국내 입법 조치 등)을 위한 국제업무 관리 규정 마련
 - * '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정('24.9), 국제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관리시스템 개선) 국제기준 이행을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관리 단계별 이력 관리기능* 강화 및 소 분야에 대한 이행현황 공유 추진
 - *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용역('24.3~'24.12), 국제기준의 검토, 입법, 차이점 관리 등 전 주기의 이력 관리(검토내용 및 검토 담당자·관리자 등) 개선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소개】

화면 구성	주요 기능
	○ 국제기준과 국내법령·규정 간 비교·분석·차이점 관리 ○ 세부평가항목·시정조치계획 관련 답변 및 증빙자료 관리 ○ ICAO 체약국 공한(State Letter) 조치 현황 관리 ○ ICAO OLF(OnLine Platform)와 데이터 연동

- (선제적 평가대응) 사전 모의평가를 통한 국제기준 이행현황 분석, 개선·보완 과제 식별, 우선순위* 부여 등 체계적인 조치계획 마련
 - * 법/령/규칙별 입법소요 기간을 고려, 입법 및 하위규정 제·개정 종합계획 수립

【ICAO 국제기준 이행 현황】

부속서 (1~19)	전체 조항수	차이점 없음	차이점 있음			미적용	검토 중
			㉠ 강화적용	㉡ 다르게 적용	㉢ 미이행		
	11,824	10,114 (85.5%)	19 (0.2%)	13 (0.1%)	223 (1.9%)	744 (6.3%)	740 (6.3%)

2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소통 강화

- (합동대책반 운영) 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향 결정 및 협력과제 논의·조정 등을 위한 범정부 고위급 협력체계 구축·운영 추진
 - * 국토부(위원장 항공정책실장), 국방부, 기상청, 해경, 소방, 교통공단, 의학협회, 기술원 등
- (안전소통 강화) ICAO 항공안전평가 이해도·관심도 제고 및 취약 분야 발굴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소통의 장(워크숍, 자문회의 등)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항공안전상시평가 대비 실무작업팀 가동	2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3월	5%	메모보고(실장)
	2024 ICAO 법률세미나 개최계획 보고	3월	10%	방침결정(장관)
2/4분기	2024 ICAO GISS 참석계획 보고	4월	5%	방침결정(차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방침	5월	10%	방침결정(장관)
	항공안전상시평가 대비, USOAP CMA 워크숍 개최	5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안전상시평가 대비 범정부 합동대책반 구축	6월	5%	메모보고(차관)
3/4분기	일본과 정비조직원증 업무약정 체결을 위한 협력회의	7월	5%	메모보고(실장)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	8월	5%	관보게재(공포)
	국산 비행기(KLA-200) 인증 진행사항 점검회의	9월	5%	메모보고(실장)
	석사학위 장학사업 프로그램 추진 보고	9월	5%	메모보고(실장)
	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제정 추진	9월	5%	방침결정(장관)
4/4분기	UAM 실증사업 참여 기체 실증비행 허가	10월	5%	허가 또는 증명서
	항공부품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1월	5%	메모보고(실장)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성능 개선 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일본과 정비조직원증 업무약정 체결	12월	10%	업무약정서
	지속가능항공유 활성화 대책 발표	12월	5%	보도자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항공연료 등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관련 국내 정유 업체, 항공기(UAM 포함)·부품 제작사, 정비업체, ICAO 회원국(도서국) 등
- (이해관계집단) 항공사, 정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항공기(UAM 포함)·부품 제작사, 국방부, 기상청, 해경, 경찰, ICAO 회원국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항공부품 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4.3월
워크숍	항공안전상시평가 대비, USOAP CMA 워크숍 개최	'24.5월
회의	일본과 정비조직인증 업무약정 체결을 위한 협력회의	'24.7월
회의	국산 비행기(KLA-200) 인증 진행사항 점검회의	'24.9월
회의	항공부품 인증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4.11월

□ 기대효과

-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마련, 지속가능항공유 기반 구축 등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항공강국으로서의 국제 위상 강화
 - 항공부품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규제완화)을 통한 제작사 투자리스크 저감 및 국산화 부품 추가 발굴 등 제작산업 활성화에 기여
 - 외국 항공당국과의 정비조직인증 분야 업무약정을 통해 국내 정비 업체의 해외 항공기 정비수요 확대 등 정비산업 활성화 도모
 - 국산 2인승 비행기(KLA-200) 개발·인증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교육·항공측량 用으로 사용 중인 외산 단발비행기(160여대) 대체 가능 기대
 - UAM 기체의 안전성 확인 및 실증비행 허가를 통해 '25년 국내 상용화 목표 달성에 기여, K-UAM 선점 기반* 마련 기여
- * UAM 기체·부품, 항행·교통관리, 인프라, 서비스, 핵심기술 등
-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ICAO 이사국 파트 상향(Part III→I/II) 지지기반 마련 및 항공정책 논의 주도 등 국제 신임도 제고

- 체계적인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제기준 이행 등 세계 일류 항공안전국 위상 유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① 국제항공협력(3633)	일반회계	44 (44)	47 (47)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304)		44	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韓-日 간 정비분야 업무약정 체결 (20%)				체결	국내 정비업체의 항공기 정비수요 확대 및 중복인증 부담 완화 등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본과 업무약정 체결을 목표로 함 * 업무약정 체결을 위해서는 상호 인증체계 동등성 확인 및 지속적인 협의 필요	업무약정 체결	업무약정서 서명본
② UAM 기체 실증 비행 허가 건수 (20%)	신규	신규	신규	2	UAM 국내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로 실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UAM 기체 실증 비행 허가를 목표로 함	실증비행 허가 건수	허가서 또는 증명서
③ 「국제항공 탄소배 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	신규	신규	신규	시행규칙 마련	국제항공 탄소배출 감축 선도 및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목표로 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후 시행	국가법령 정보센터
④ 'SAF 활성화 대책' 마련(20%)	신규	신규	신규	대책 발표	국제항공 탄소감축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국적항공사 사용 촉진을 위해 'SAF 활성화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함	'SAF 활성화 대책' 대외 발표	보도자료
⑤ ICAO 회원국 유대 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국내유치 (20%)	-	1	-	3	우리나라의 국제항공협력 선도 이미지 각인과 親韓 세력 확보, 항공위상 강화 등을 위한 ICAO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이사국 파트너십의 초석 및 교 두보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목표임	ICAO 등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국내 개최 건수 ×100%	결과보고

⑥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Ⅱ-1-⑥)

□ 추진배경(목적)

○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으로 ICBAM(IoT, Cloud, Big Data, AI, Mobile)이 등장하고 사회적 수요가 확장되며 공간정보도 급격한 변화에 직면

- 정적이고 2D 지도에서 현실을 그대로 구현·분석하는 '디지털트윈'으로 발전 중, 이용 주체도 사람에서 사물·센서 등으로 확대

과거/현재		가까운 미래		중장기 미래
과거기록	⇨	실시간 지도	⇨	미래예측이 가능한 디지털트윈
인간이 이용	⇨	인간 + 기계	⇨	기계가 스스로 이용
필요시 선택적·간헐적 이용	⇨	-	⇨	일상에서 늘 이용
평면·이미지	⇨	3차원	⇨	3차원 실감형, 4D/5D
데이터	⇨	인공지능	⇨	거대AI, 공간지능

- 도시관리·에너지·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하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ICT 기술 성숙에 따라 변화가 빨라질 것

* (도시) 신도시 개발 가상실험, 재난·재해시 대피 등 시뮬레이션, (에너지) 태양광패널 최적입지분석, 탄소배출량 분석 (국방) 지상·지하 공간정보+ AR/VR 결합 훈련지원 등

- 주요국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노력이 급격히 증가*, 미국은 국가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선전으로 최대 시장·기술을 선도 중

* 2025년까지 전 세계 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디지털 트윈 도입 전망(ABI research, 2020)

** 구글, 전세계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구글어스), 최근 메탄배출량 지도 생성 추진 예정

○ 우리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신 등의 핵심 자원으로 '디지털 트윈국토'(국정과제) 구축 중으로,

- 고정밀 공간정보 확보,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융복합 인재양성 등 산업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공간정보가 국가 핵심인프라로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핵심기술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전략적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고정밀·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기반 고도화

- (고정밀·고품질 공간정보 확보) 기초자료의 활용도 향상과 세밀한 국토 기록을 위해 기초 공간정보 기반의 생산·공급 혁신방안 마련

* 항공사진 해상도 25cm → 5cm, 3D지도 수동제작 → 자동제작 등

- (기술개발 활성화) 제1차 로드맵('17~'26)* 이후 자율차, UAM 등 미래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수립

* ①측위 고도화, ②공간정보 자동 갱신, ③비공간정보 연계, ④동적 주제도 구축 등

** (추진방향) ①자율차, UAM 등 기계도 이용할 수 있는 고정밀·실시간 정보 구축, ②AI를 활용한 정보 구축·갱신 자동화, ③데이터 연계 및 활용 확대

- 기술 수요조사 등 산·학·연·관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 전망을 예측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추진계획 마련
- (법률기반 마련)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및 운영 체계화, 민간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추진
 - 디지털 트윈국토 정의, 플랫폼 구축·운영방안, 협의체 구성 등
 - 민간이 공간정보 구축 및 유통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보안처리 지원, 품질인증 및 유통플랫폼 구축 등도 법률 개정(안)에 포함

② 공간정보 접근성 확대 및 활용 강화

- (플랫폼* 고도화)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산업계 서비스 개발 지원 및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단계적 확대**

*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V-World 구축 운영 중('12~)

** (1단계) 경관분석(조망권·일조권), 지형분석(고도·경사도) 등, (2단계) 안심길 건물노후도, 바람길 분석 등

- 개발된 기능은 민간 기업 및 국민이 자유롭게 추가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여 활용 극대화
- 고사양(분석·시뮬레이션), 대용량(정밀도로, 고해상도), 민간지원(SaaS) 등 최적의 대민용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추진('24.8)

- (공간정보 개방) 공간정보 안심구역('23.10, LX서울)에서 민간기업 등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분석·가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간정보 등급별(비공개·공개제한·공개) 세부분류기준(좌표 포함 여부, 해상도 등)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공간정보 제한범위 축소**
 -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에게만 보안심사를 거쳐 제공하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모든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표준 확산)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가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 확산을 위한 표준 활동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OGC) 제130차 총회를 개최('24.11)하여 글로벌 공간 정보 선도 및 네트워크 강화
 - 국내 공간정보 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사후검토**를 통한 **표준 적용 활성화** 도모, 업무편람 제작 및 실용적 표준 교육 실시
 - (디지털 트윈국토 성공모델 발굴·확산)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지자체·부처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활용모델 발굴·확산**
 - (지자체 활용모델) 지자체 행정 활용 3차 시범사업('23.3~'24.9)을 통해 **분야별 성공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본사업 추진 전략 마련**
- * AI 활용·안전·도시계획 등 6개 분야별로 지자체(7개)를 선정('23.7)하여 행정 활용모델 구축 중(국비45억)

【 3차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주요내용 】

구분	사업명
최신AI 활용	(경주) 디지털트윈브릿지: 경주의 과거와 현재를 여행하다
	(울산) 인공지능과 공간정보를 융합한 신개념 공공정보 검색모델 구축
안전	(대전)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도시계획	(광명) 디지털트윈으로 그리는 광명의 미래
	(이천)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도시디자인 시뮬레이션 개발
행정	(용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환경	(안동) 기후위기를 고려한 안동시 스마트 맑은물 관리 체계 구축

- (부처 활용모델)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부내 및 타 부처 협업모델 추가 발굴

<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시스템 개요 >

- ▶ 인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업무담당자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국토부-산업부 협업 추진

- ▶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 건축, 환경 등 분야의 규제, 법령·조례 등 다양한 정보*를 단일 플랫폼으로 수집·활용 체계 구축

* 소유권구분, 도시계획선 가분할, 건축물 후퇴선, 대지면적 산출, 건폐율, 용적률 등

- ▶ 토지 인허가 규제 적합도 분석, 가상 공장 건축물 시뮬레이션 기능 구축 및 팩토리온*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공동 활용 체계 마련

* 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장 인허가 신청·승인을 위해 내외부망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

③ 공간정보산업 혁신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및 인재양성

- (기업지원) 창업투자펀드(~'24년까지 30억 출자)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도약(Scale-up)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추진

-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24.4~9), 시장성 검증('24.7~10), 법률자문('24.5~11)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

* (기간/기업 수) '24.4~11월 / 총 40개 기업 지원 추진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창업기업을 발굴(年 10개 社) 및 사업화 자금(최대 3,000만원), 창업프로그램(공간·투자유치·기업홍보 등) 등 지원

- (교육강화) 공간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등 융·복합 실무역량을 갖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 (산학연계 실무교육) 특성화전문대학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기술 교육('24.12)

* 공간정보 관련 산·학·연과 협력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 활용

- (학교밖 교육) 특성화고에서 개설 및 운영이 어려운 교과목에 대한 특성화고-교육기관(LX 등) 간 학교밖 교육 실시('24.7, '25.1)
- * 산업계에서 요구되나 학교에서 실습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항공측량, 라이다측량 등)
- (국가기술자격 교육) 특성화고 교원 및 학생들의 공간정보 융합 역량강화 및 기술자격 합격률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24.8)

④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 활성화) 소규모 기업 중심*인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 및 관련 인사와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 57.8%(3,391개), 종사자 10인 미만이 61.8%(3,629개)

- (스마트국토엑스포 추진) 미래 트렌드를 담은 대규모 주제관 운영 등 융복합 기회의 장 마련* 및 주요국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 '24.11.6~8, 킨텍스 / '23.실적 국내외 144개 기관·기업 및 13,200명 참관객 참여

** 해외 정책결정자·바이어 및 기업 간 비즈 매칭을 통해 국내기업 판로개척 지원

- (한-카타르 협력체계 구축) 한-카타르 간 공간정보 협력 MOU 체결(VIP 중동순방, '23.10) 계기 기술협력 등 후속조치 추진
- (아프리카 협력기반 마련)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분야 첨단기술 전시·홍보 프로그램 운영
- (공간정보 ODA)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토지정보화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등 ODA 추진

*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ODA 프로젝트 사업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24년 제1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총괄위원회 개최	1월	5%	메모보고(실장)
	디지털 트윈 3차 시범사업 착수보고	2월	5%	메모보고(실장)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브이월드) 통합 추진계획 수립	2월	5%	방침결정(정책관)
2/4분기	기초공간정보 생산 및 공급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4월	5%	메모보고(실장)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사업 추진 언론홍보	5월	5%	보도자료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24년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총괄위원회 개최	5월	5%	메모보고(실장)
	한-카타르 MOU 관련 후속조치	6월	5%	메모보고(실장)
	창업지원펀드 투자유치대회 개최	6월	5%	결과보고서
3/4분기	기초공간정보 생산 및 공급 혁신방안 공청회 개최	7월	5%	메모보고(실장)
	대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브이월드)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	8월	5%	보도자료
	기초공간정보 생산 및 공급 혁신방안 수립	8월	5%	메모보고(장관)
	국가표준 제·개정(안) 예고고시 및 기술심의회 상정 요청	9월	5%	고시문, 공문
4/4분기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 수립	10월	5%	방침결정(정책관)
	제130차 국제표준화기구(OGC) 국내 개최	11월	5%	보도자료
	2024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특성화전문대학 산학연계 실무교육 실시	12월	5%	메모보고(실장)
	공간정보 표준 적합성 사전·사후검토 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2024년 공간정보 ODA 사업 성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전국 지하공간통합지도 수정 갱신 완료	12월	5%	결과보고서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수립	12월	5%	방침결정(정책관)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 3D 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기술 현황을 파악 등을 위해 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 의견수렴	'24.2월
간담회	○ 공간정보 인력양성사업 개선방안 논의 등 학계·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지자체 행정활용모델 구축·활용 현황 점검 및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 지하 정밀탐사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정확도 조사 현장확인 및 관계자 의견수렴	'24.4월
회의	○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을 예측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현황(한국수자원공사) 및 향후계획 등 논의	'24.5월
현장방문	○ 국가기준점 측량 현장방문 및 업계 애로사항, 의견 수렴	'24.5월
회의	○ 공간정보 R&D 연구 총괄점검 회의 개최	'24.5월
현장방문	○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 취업·진학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24.6월
간담회	○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안) 관련 간담회 개최	'24.6월
현장방문	○ 국토위성 2호기 발사준비 사항 점검 및 논의(한국항공우주연구원)	'24.7월
간담회	○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공공분야 현장간담회	'24.8월
간담회	○ 지하정보통합체계 간담회(지자체 포함)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국토문제 해결지원) 디지털 트윈을 재난·재해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 선제 대응, 시설 관리·공사 효율적 관리 가능
 - 특히, 공장 인허가 등에서 복잡·다양한 정보의 원스톱 활용 지원을 통해 민원 편의 및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 (산업 진흥) 공간정보 융·복합 생태계 조성 및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배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지속적 혁신 및 진흥 기반 마련
 - * '22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총매출액 11조원, 최근 10년간 매출액 연평균 7.3%, 종사자 수 5.4% 성장('23년 공간정보산업조사)
- (해외진출 활성화) 국내 공간정보기술 활용사례 해외전파를 통해 「K-공간정보」 해외 브랜드화 및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VI-1-일반재정)				
①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5734)	일반회계	66.08 (66.08)	63.39 (63.39)
	▪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301)	일반회계	20.30	19.60
	▪ 국토공간정보 정책지원(302)	일반회계	39.78	37.79
	▪ 국가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306)	일반회계	6.00	6.00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및지원(VI-1-정보화)				
①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지원(4270)	일반회계	312.90 (312.90)	287.57 (287.57)
	▪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501)	일반회계	81.90	84.77
	▪ 국토공간정보기반조성(503)	일반회계	8.60	7.00
	▪ 지하시설물 전산화(504)	일반회계	136.05	131.88
	▪ 지상지하 공간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505)	일반회계	41.35	63.92
	▪ 공간정보기반디지털트윈시범사업(512)	일반회계	45.00	-

		회계구분 ¹⁾	'23	'24
국토교통연구개발(VI-4-R&D)				
① 도시건축연구(4156)			199.86 (652.84)	258.83 (461.85)
	▪ 지하공간통합지도 갱신 자동화 및 굴착현장 안전 관리지원 기술 개발(R&D)(314)		8.00	8.00
	▪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재난 지원 통합플랫폼 기술 개발(국토부)(R&D)(315)		10.00	10.00
	▪ 디지털국토정보기술개발사업(R&D)(319)		106.50	151.53
	▪ 공간지식추론엔진기술개발(R&D)(321)		17.28	10.37
	▪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국토종합관리기술개발(R&D)(322)		15.84	41.67
	▪ 차세대중형위성2호대체발사지원사업(R&D)(353)		42.24	45.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 표 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수립 (20%)	-	-	신규	100%	제1차 로드맵에 따라 진행 중인 기술 개발 R&D 사업 종료('26년)에 대비하여 그간 트렌드 변화 등을 반영한 전략을 조기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R&D 사업 추진계획 마련	로드맵 수립(50%) + 연구용역 결과보고(50%)	방침수립(정책관) 및 메모보고(장관)
㉡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공간정보 오픈플랫폼)활용 건수(20%)(공통)	497	561	628	697건 (누적)	공간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작에 필요한 교육·컨설팅·기술지원 등을 통해 신규 OpenAPI 서비스 제공 (69건)을 목표로 설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OpenAPI의 활용건수 조사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API인증키 관리시스템 확인
㉢ 공개제한 공간 정보 민간 제공을 위한 보안심사 건수(15%)	-	-	신규 (12건)	24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고품질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보안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안건수를 전년 대비 100% 상향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	공개제한 공간 정보 보안심사 건수	공개제한 공간 정보 보안심사 결과보고
㉣ 국가공간정보 표준 적용률(15%)	-	-	60%	70%	중앙-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간 정보사업에 대해 표준 적용 적합성 관리 강화를 통해 표준 적용률을 작년 실적보다 10%p 상향하여 '24년 70%를 목표치로 설정	(실제 표준을 적용한 건수/30)*100% *'23년도 표준적용 사전 검토를 수행한 공간정보 사업 중 30개를 샘플링	국가공간정보 표준 사후검토 보고서
㉥ 창업지원 기업 연 매출성장률(15%)	-	-	11.2 %	14%	공간드림센터 입주기업(예비창업자 제외 16개) 대상으로 컨설팅, 시장성 검증 등 맞춤 지원을 확대하여 벤처 기업 창업지원 전/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8%('23년/중기부) 보다 약 3% 상향한 14%로 도전적 목표 설정	('24년 매출액/ '23년 매출액)×100%	창업지원 운영성과 결과보고서
㉦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외 비즈니스 미팅 건수(15%)	-	-	신규 (44건)	49건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해외 바이어(정책결정자, 국제기구 등)와 국내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활성화하여 전년보다 10% 상향한 49건을 목표치로 설정	2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외 비즈니스 미팅 건수	'2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개최 결과보고

(1) 주요 내용

- (건설산업) PF 관련 공적 보증(책임준공, 비주택 PF 보증 등)을 신규 도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고 건설사에 유동성 공급
 -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유찰방지, 민간공사에 대해 분쟁조정 등으로 공사비 갈등해소를 지원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
- (스마트건설) PM(Project Management) 등 고부가 가치영역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 건설엔지니어 유입 촉진 등 건설 Eng. 산업 활성화
 - (입찰제도) 전문성 있는 위원이 공정하게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검토
- (물류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시장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직된 산업 구조와 근로환경 및 종사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
 -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급제한 대상인 차량도 증차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개정
- (항공산업) 최근 국제선 수요가 높은 국가(인도네시아, 몽골, 호주 등)의 운수권을 증대하는 등 국내 공항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 동남아·中↔韓↔美, 日↔韓↔유럽 등 주요 환승축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등 주요공항 슬롯을 지속 확대하여 항공사의 국제선 증편 기반을 마련
 - KE·OZ 기업결합 이후 우리 LCC의 노선 다변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합 FSC를 전세계를 누비는 메가캐리어로 육성
- (지적관리) 변화하는 사회적·행정적 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목제도를 개편하고, 지적측량 오차허용범위를 신기술에 부합되게 개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개수)	-	-	20	40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은 스마트건설 관련 매출이 30%이상이고 고용·매출 등이 3년간 지속증대되고 있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심층평가 등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어 강소기업을 추가로 20개 발굴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 과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명단	보도자료 등
② 물류기업 고용규모 (천명)	714	788	817 (잠정)	835	물류산업 규제개혁을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하여 2% 이상 고용규모 확대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	통계청 '23년 운수업 조사	통계청 보도자료
③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률 관리	-	-	신규	34.9%	'24년 정부안 예산(433억)을 기준으로 신속한 업무 추진 및 사업비 이월 방지 등을 위해 예산 전액을 소진하는 적극적인 산출 근거 마련. 총 정비계획 물량 대비, '24년 예산 전액 정비물량을 목표로 전년대비 3.8% 상향되는 적극 추진 목표 설정(전년도 31.1%)	'24년도까지 정비물량 / 총 정비계획물량 ('30년까지 542만 필지)	내부자료 (전산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설시장)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이며, 폐업수('23, 1,948개사) '17년만 최대치, 구조조정 업체 증가*

* 신일(113위, '23.6), 태영건설(16위, '23.12), 선원(122위, '24.2), 새천년(105위, '24.2) 등

⇒ GDP 15%, 근로자 210만명이 근로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건설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 필요

□ (운송시장) 운임제 공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등을 우선 추진하고,

○ 전반적인 화물운송시장 체질개선(표준운임제, 지입제 개혁 등)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국회·운송사·차주와 적극적으로 협의

□ (데이터 개방)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안보·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안 당국의 안보 우려로 미온적이나,

○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 제한범위 축소 및
제공 대상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보안 당국과 적극적인 소통 추진 계획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Ⅱ-2-①)

□ 추진배경

-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이며, 건설업체 폐업수('23, 1,948개사) '17년만 최대치, 구조조정 업체 증가*

* 신일(113위, '23.6), 태영건설(16위, '23.12), 선원(122위, '24.2), 새천년(105위, '24.2) 등

- 건설수주와 건축착공이 '22년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하였고, 건설 투자도 '23.4분기부터 하락, '24년 하락세가 심화될 전망

* (전년동기비, %) '23년 수주 △18.5%, '23년 착공 △31.7%, '24년^{전망} 투자 △2.6

⇒ GDP 15%, 근로자 210만명이 근로하는 ❶ 건설산업에 대한 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건설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응 필요

-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공공공사 유찰,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여 대책사업 차질, 수분양자 입주지연 등 국민 불편 야기

⇒ ❷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유찰방지, 민간공사에 대해 분쟁조정 등으로 공사비 갈등해소 신속 지원

- 채용강요 및 월레비 요구(인건비 상승), 불법하도급(공사비 누수)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등 유발

- 자재수급난에 따른 자재값 급등, 건설기계 등 안전사고로 인한 따른 공사중단(간접비 등)은 공사비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❹ 건설인력·자재·기계 관리 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활력 회복

- (지원대책) PF 공적보증 확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완화, SOC 신속집행 등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1월)

※ '건설경기 보완'은 건설 경기와 밀접한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한 '1.10 대책'으로 발표

- PF 관련 공적 보증(책임준공, 비주택 PF 보증 등)을 신규 도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고 건설사에 유동성 공급
-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지방 미분양 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PF 시장 연착륙 지원(3월)
- **(리스크 관리)**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수분양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대응반(국토부)* 운영(1월~)
 - * 건설경기 지표, 구조조정 건설사사업장 등을 모니터링(일단위)하고 지원방안 등 검토
 - 신속대응반과 연계하여 유관기관(HUG, LH 등)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1월)하여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 ※ 특히, 업계 파급영향이 큰 태영건설(순위 16위)에 대해, 워크아웃 동향을 관계기관(금융위 등)과 모니터링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전환, 근로자 임금 현금지급 등 적극 지원
- **(PF 불합리 개선)** PF 대출 시, 건설사에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유도(금융위 협업)
 - * (예) 분양트리거 수수료(분양률 미진시 패널티), 주선수수수료(대주 모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사가 부담 중인 과도한 책임준공 등에 대해 PF 참여자(시행사, 대주, 건설사 등) 간 합리적 리스크 분담방안 마련(금융위 협업)

② 물가상승 대응 및 공사비 현실화

- **(종합대책)**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 방지, 민간 공사비 갈등 조정 등을 지원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마련(3월)
- **(공공공사)**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등) 협의,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 단가와 물가반영 등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 계획 - 설계 - 발주 - 계약 - 공사 등 공사 쏠 단계에 걸쳐 개선방안 검토
- **(민간공사)**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 추진
 - 물가변동 관련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③ 불법행위 근절 등 건설산업 정상화

- **(불법근절)** 관계부처 등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운영
 - 노조의 채용 강요 및 월레비 요구 등에 대해 집중점검('24.3~4) 하고, 건설사 불법하도급에 대한 상시단속체계 가동
 - 상시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을 명확히 부여(건설법 시행령)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단속 노하우 전파
 - 정부의 단속강화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내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내부신고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3월)
- **(임금체불 근절)**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근로자의 출퇴근 이력관리를 위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확산*
 - * 전자카드제 적용범위 확대(공공공사 50억원 → 1억원, 민간공사 100억원 → 50억원)를 통해 소규모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원천 차단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공공사 대상으로, 명절 대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임금 체불현황 점검 및 체불해소 지도
 - 팀장이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 수령(타인 명의계좌 등 이용)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24.6)
 -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

④ 건설 인력·자재·기계 관리

- **(인력관리)** 플랜트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등 외국인력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추진 (외국인력정책위 상정)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타워크레인(T/C)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T/C 조종사 양성교육 최초 도입(160명)
 - 숙련도에 따라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기능인등급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24.6)하고, 등급제와 연계한 교육 제공 강화*('24.9)
 - * (현재) 형틀목공 등 20개 직종 → (개선) 도배 등 추가하여 49개 모든 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자재관리)** 수급난에 따른 자재값 상승 방지를 위해 주요 자재(시멘트 등)의 수급관리, 파업 등 이슈 대응 위한 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

* 관계부처(산업부·기재부·공정위·조달청 등), 주요 건설자재 관련 협단체 등 참여

- 보다 체계적 자재관리를 위해 협의체를 법적 상설기구로 격상
- 콘크리트 주재료인 골재의 불량유통 방지를 위해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24.12), 골재업체 수시검사 확대 등으로 골재 품질관리 강화

- **(기계관리)** 타워크레인(T/C) 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객관적 원인 분석을 위한 T/C 작업기록장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4.9)

- 건설기계 안전성능 강화 및 국제표준 연계를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제작결함 조사·시정조치(리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수분양자·협력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1월	10%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활성화 제도개선	3월	10%	보도자료
2/4분기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방안 마련	6월	10%	메모보고(차관)
	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6월	10%	방침(국장)
3/4분기	상시단속체계 활성화를 위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	8월	10%	관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한 건산법 개정	9월	10%	개정안 발의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가이드라인 마련	9월	10%	방침(차관)
4/4분기	추석 명절 공사대금 체불 실태점검 결과보고	10월	10%	메모보고(차관)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	11월	10%	메모보고(장관)
	골재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12월	10%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경기회복)** 건설·부동산 PF 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논의(간담회)
- **(공사비 현실화)**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실화 방안 모색(간담회)
- **(불법근절)** 불법하도급 단속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단속 노하우 전파(교육)

- **(자재수급)** 건설자재 수급 동향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회의 개최

구분	내용	세부일정
교육	찾아가는 불법하도급 교육 실시	1월
간담회	건설경기 보완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한 업계 간담회	3월
회의	공사비 현실화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	5월
회의	건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회의	8월
간담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관련 지방청 간담회	11월

□ 기대효과

- **(경제회복)** 유동성 공급, 공사비 현실화, SOC 신속집행 등으로 건설산업 (GDP 16%, 일자리 210만)을 지원하여 경제회복 기여, 근로자 피해 최소화
- **(부실시공 차단)** 상시 단속체계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품질·안전 확보, 부실시공 차단 및 국민 피해 최소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 건설경기 활력 회복 (20%)	① 건설경기 보완대책 (10%)	-	-	-	대책 수립	집체된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부처합동) 수립	대책발표	보도자료
	② PF보증 신규도입 (10%)	-	-	-	보증도입	비주택 PF 사업의 원활한 추진, 건설사의 안정적 자금조달 등을 위한 비주택 PF보증 최초 도입 * 현재는 주택PF 보증만 운영 중	보증상품 신규 도입	메모보고(장관)
㉡ 물가상승 대응 (25%)	①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경기 회복방안 (15%)	-	-	-	대책 수립	물가상승에 따른 유찰방지,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종합대책(부처합동) 발표	대책발표	보도자료
	② 건설분쟁 조정 (10%)	10	4	10	12 (건)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3년 평균(8건)보다 50% 상향된 12건 목표 설정	건설분쟁조정위 안전 상정건수	메모보고(장관)
㉢ 불법행위 근절 (25%)	① 불법행위 단속(15%)	-	-	1,000	1,000 (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항구적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해 설정한 도전적* 목표치(가용 인력상 최대 한계치) 유지 * 23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부처역량 집중 (종합대책(2월,5월), 100일 특별단속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현장 수	메모보고(차관)
	② 불법행위 근절교육 (10%)	-	-	1	6 (회)	지난 해 시범교육을 토대로 격월로 지자체 단속공무원 교육 실시 * 1월 준비, 1월 교육 체계 구축	교육 실시횟수	메모보고(차관)
㉣ 인력·자재·기계 관리 (30%)	① 기능인 등급제 교육확대 (10%)	-	6	14	29 (직종수)	기능인등급제 49개 직종 관련한 기능인 모두에게 교육기회 제공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현재 20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전체 49개(+29개, +145%)로 확대 운영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개발	메모보고(차관)
	② 외국인력 규제개선 (10%)	-	-	-	안전의결	플랜트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금지 규제 최초 개선 등 외국인력 관련 제도개선	외국인력정책위 심의·의결	메모보고(장관)
	③ T/C 조종사 인력양성 (10%)	-	-	-	160 (인)	직무능력 향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초로 T/C 신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도입 * T/C 신규인력(900명/년) 중 약 20%를 국가에서 전문성 제고 위해 인력 육성	조종사 교육 인원	메모보고(차관)

②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Ⅱ-2-②)

□ 추진배경

<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

- (스마트건설)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화, 자동화, OSC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건설이 글로벌 건설산업의 미래로 부상 중*

* 글로벌 스마트 건설시장은 연평균 26% 성장 예상 (Ernst&Young, '20)

- 국내에서도 스마트건설 적용 현장은 증가 추세이나 관련 시장은 해외대비 미성숙*하고 기술격차**도 일부 있어 지속 지원 필요

* 전체 건설 시장 대비 스마트건설 시장 규모 : 해외 4.6%, 국내 1.5%

**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최고기술국 미국 대비 82.5%, 기술격차는 4.1년(KAIA, '21)

- (Eng.) 고노동·저임금 구조로 인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Eng.)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해외에서의 경쟁력도 부족**

* (젊은 Eng.기술인 비율) 전체 종사자 중 20~40세 기술인은 12.0% 수준('23, 건엔협)

** (영업이익률, '23) 캐나다 WSP(8.3%)·미국 Jacobs(7.23%) ↔ 도화(3.8%)·한중(1.1%)

- 이에, PM(Project Management) 등 고부가 가치영역을 집중 육성하고, 청년 건설엔지니어 유입 촉진 등 건설 Eng. 산업 활성화 필요

< 건설산업 입찰제도 >

- 그간 업체 선정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이 공정하게 심의·평가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여러 차례 개선*해왔으나,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 → 턴키제도 개선방안('11.12) →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 방안('12.4) →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14.1) → Eng. 중심제 위원풀 통합('22.9) 등

- 업체·발주청·심의위원 간 로비 등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관련 기사) "심사위원 '인사비'로 수천만원...뇌물마저 담합"(KBS, '23.12.21)

◆ 국정과제 28-2번

- BIM, OSC 등 스마트 기술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적용
-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PM(건설사업관리)을 활성화하고, 기술형 입찰도 확대(9%→20%)해 기술 중심의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 스마트건설 보편화 기반 마련 >

① 스마트건설 기업 지원

- (강소기업 선정·지원)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중견·중소 기업 육성을 위해 '24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선정(20개)하여 지원
 - 선정된 기업에게 기술개발, 사업화 컨설팅, 금융 지원
- (스타트업 지원) 새싹기업에 기술·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경기 일산)를 수도권 남부(판교*)로 확장하여 지원 강화
 - * 기술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건설의 경우, IT 기업들의 참여도 높음
 - 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기술컨설팅 단계를 지나 IT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기업에게 판교 입주 기회 제공
- (실증 지원) 기존 건설업체와 첨단기술 개발업체 간 상호 협력의 장으로 출범된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술실증 지원
 - 스마트건설 기술 '수요자_{대·중견기업, 발주처}-공급자_{중소기업, 스타트업}' 매칭을 통해 기업들에게 기술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 비용도 지원
- (EXPO·챌린지 개최) 스마트건설 생태계 간 소통·혁신을 위해 기술 전시, 홍보, 국제포럼 등을 포함한 "스마트건설 EXPO" 개최(11월)
 -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기술시연의 장인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9월)하여 스마트건설 저변확대

② 스마트건설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기준 마련

- (법적근거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의 명확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12월)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의 사업 발주, 사업 관리, 지원 역량 등 스마트건설 역량 진단을 위한 시범평가를 실시(10월)
- 개별사업 단위로도 우수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경연대회 추진하고 스마트건설 EXPO와 연계하여 시상 추진
- (스마트 기술기준) 자동화 장비 작업(위치계측, 토공량 산출 등) 관련 지형 데이터 처리 기준, 자동화 장비 점검·운영 기준 등 마련
- 학교 이설 및 학령인구 변화와 관련된 조립식 학교(모듈러공법)와 자동화 토공장비(MC* 도저)에 대한 표준품셈 신설(12월)
- * MC : 건설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 MG : 건설기계 이용 시 네비게이션 역할 수행

③ BIM 적용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설계지침 개선) 기존 2D 설계 외 BIM도 성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공고)' 보완(8월)
- (대가기준 보완) BIM 설계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외 상수도 부문까지 BIM 대가기준을 마련
- (건설기준 디지털화) BIM 시스템 내에서 건설 기준 준수 여부를 자동 판단하도록 건축 분야 등 건설기준 디지털화(12월)

④ 스마트건설 전문인력 확충

- (교육 확대) 기술인이 법정교육 이수시 매 3년마다 스마트건설 교육을 이수하고, 커리큘럼에 BIM을 포함하도록 의무화(1월)
- (교육 지원강화) 민간의 BIM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설계사(토목·설계)·시공사 대상* BIM 교육지원사업 추진(교육비의 50% 지원)
- * BIM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대기업 제외)
- (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스마트건설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매년 우수 교육기관을 지정(4월)하고,
- 정기·수시점검 등을 통해 부실기관은 퇴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 2. 건설 Eng. 선진화 >

① 고부가가치 영역 집중 육성

- (제도적 기반 강화) 기존 감리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건설 사업관리(PM) 적용을 계획 단계(現: 설계~시공)로 앞당기고,
 - 복수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종합사업 관리(PgM : Program Management) 도입 근거 마련(건진법)
- (공공발주 확대) 공사 특성·유형에 맞게 PgM이 활용되도록 '발주 가이드라인' 배포 및 'PgM 대가기준' 신설
- (설계사 역량 강화) 건설 Eng. 社 설계·시공 통합역량 육성을 위해 '설계 주도형 턴키 시범사업(3건, 도로·항만·건축)' 추진

② 청년 건설엔지니어 유입 촉진

- (청년 가점제) 젊은 건설엔지니어들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청년 가점* 도입(11월)
 - *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의 사업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유사사례 : PQ 기준)
- (청년 포상 쿼터제) 능력 있는 젊은 건설엔지니어들이 업무수행에 자긍심을 갖도록 '청년 포상 쿼터제(청년 15% ↑)' 도입(11월)

③ 건설 Eng. 산업 활성화 지원

- (서류 부담 경감) 가격평가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자만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받는 '가격 입찰 후 PQ' 대상 확대(5→10억 미만, 9월)
 - * (現) 통상 수행능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모든 입찰자가 수행능력평가 서류 준비
- (PQ 입찰 확대) 정량 평가비중이 높아 업계 부담이 적은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입찰 대상(現 : 2.2억~^{기본설계}10억 . ^{실시설계}15억) 확대(11월)

< 3. 공정·투명한 입찰 환경 조성 >

① 건설산업 입찰제도 혁신

- (입찰제도 혁신방안) 전문가·업체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3월 발주)을 통해 '건설산업 입찰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 (턴키 비리 차단) 심의위원 대상 로비 등 입찰비리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역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6월, 개정안 발의),
- 중앙·발주청 간 상호 견제체제 구축(중앙중심위-발주청기술자문위 공동 참여), 밀어주기식 평가 방지(평가 배점 미공개) 등 심의제도를 개선(6월)

②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운영방식 개선

- (기술형 입찰) 중앙심의위 위원 후보자 결격 여부 조회, 세평 사전 확인 등*으로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 (전문성 검증) 학·경력, 수상실적 등 후보자 전문성을 점수화하여 전문성 평가 (제3자 검증) 인터넷 검색, 검증위원 평가 등

- 행정·법률위원 신규 위촉(기준정비분과위), 공공 위원 확대*, 각 분과별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운영방식도 개선(2월)

* (중앙심의위 공공 위원 비중) 40%('23) → 50% 이상('24) → 60% 이상('25)

** 중앙심의위 위원 600명 중 기준정비분과, 설계심의분과에 미소속된 위원은 100여명

위원회 구성	역할	현행	개선안
중앙심의위-직할	기술정책, 입찰방법 등 심의	200명 이내 (혼용 운영 中)	100명 이내
기준정비분과위	건설기준 제·개정 심의		100명 이내
설계심의분과위	턴키 등 설계평가 심의		400명 이내

⇒

- (건설 Eng. 중심제) 위원 후보자 추천 기준 강화(결격 확인) 및 검증절차 신설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위촉(8월)

< 4. 건설기술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

① 건설 신기술 ·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

- (공모형 Track 신설) 기술혁신 선도 및 발주처 기술 수요부응을 위한 공모형 신기술* 지정으로 신기술 지정 다변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

* 공공기관이 국민수요에 따라 필요로 기술테마(충간소음 저감, 저소음 포장 등)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

- 지정기술은 공공기관 기술마켓에 자동 등록되며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

- (규제완화) 신기술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이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발자 부담 완화

- (사후평가 이행제고) 사후평가 표준양식을 마련·배포하고, 사후평가 담당자 대상 설명회(거점별 상·하반기)를 통해 전문성 제고

② 기술인 교육·경력 제도

- (우수 교육기관 지정) 교육시장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기관 심사를 거쳐 우수 교육기관 지정*(4월)
 - * 총량의 범위 내에서 권역별 교육수요 및 공급 비중,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일자리 매칭 고도화) 건설워크넷과 건설 관련 취업포털사이트 연계* 및 건설협회와 협력을 통해 지역 우선채용 추진
 - * 건설 워크넷 외에도 취업포털사이트를 통해 각종 건설 관련 취업정보 제공
- (경력관리 서비스 개선) 증명서 활용 편의성을 위해 경력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부분 발급제' 도입(행정규칙)

③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산정체계 구축

-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현장 여건(지역, 건물 층수 등)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여건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 * (現) 건축물 지하 2~5층 1.02 → (改) 층마다 1.02~1.05 순차 적용
 - 주요 공종에 대해 비용 증가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공종별로도 보정기준*을 신설(12월)
 - * (예시) 물류창고 등 대형 구조물의 철콘 공종에 대해 크레인 등 장비 투입비용 반영
-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표준공정표 제시, 기준 보완 등으로 공사기간 가이드라인의 작업일수 기준(1일 작업량 기반) 개선

④ 세계화에 발맞춘 안전한 건설기준 마련

- (건설기준 국제화) 건설기준 영문화율을 높이고(목표 86%), 해외 국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도로 건설 환경 분석안 마련(12월)
- (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보호 대책이 완비된 후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개정(6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2월	5%	방침결정(장관)
	스마트건설 R&D 간담회 개최	3월	5%	메모보고(장관)
	BIM 교육지원사업 추진	3월	5%	방침결정(정책관)
2/4분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공모	5월	10%	보도자료
	공모형 신기술 신설안 마련	5월	5%	방침결정(정책관)
	가격 입찰 후 PQ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5월	5%	공고문
	우중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방서 개정, 가이드 배포	6월	5%	관보게재 등
3/4분기	BIM 성과품 인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8월	10%	공고문
	신기술 평가기준 규정 개정	8월	5%	공고문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 통합풀 위원 선정방식 개선	8월	5%	방침결정(정책관)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9월	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스마트건설 EXPO 개최	11월	5%	메모보고(장관)
	청년 가점 등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11월	10%	공고문
	건설엔지니어링 BIM 대가기준(상수도 분야) 개정	12월	5%	공고문 등
	스마트건설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12월	5%	의안정보시스템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적격심사 구간 조정	12월	10%	방침결정(정책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공)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스마트건설 기술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들과 지속소통
- (민간) 제도개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모집방식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24.2월
간담회	우중 콘크리트 타설 관련 시방서 개정 설명회	'24.4월
현장방문	스마트건설 기술 실적용 건설현장(신탄진 하이패스 IC) 방문	'24.9월
간담회	24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간담회	'24.9월
포럼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24.9월
간담회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 운영위원회	'24.11월 /분기별

□ 기대효과

- (스마트건설) 기업지원 강화, 제도 및 기준 마련, 전문인력 확충 등으로 현장에서의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여 건설체질 개선*

* (As-Is) 현장작업·인력 중심 전통산업 → (To-Be) 미래형 기술주도 산업(스마트 건설)

- 건설의 첨단화로 건설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젊은 청년들이 건설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 (Eng.) PM(건설사업관리) 활용 확대, 청년 엔지니어 유입 등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 고부가가치 건설사업관리 확대, 능력 위주 평가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선

- (입찰 환경)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여, 저비용 · 고품질의 국민 생활 SOC 공급 지원

*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엄격한 위원 관리 등 심의위원-업체 간 로비 원천 차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스마트건설지원센터운영(Ⅲ-1-일반재정⑫)			
① 스마트건설지원센터운영(4325)	일반회계	64.15	64.15
▪ 스마트건설지원센터운영(301)	일반회계	64.15	64.15
건설사업정보화(Ⅵ-3-일반재정④)			
① 건설사업정보화(4241)	일반회계	31.95	31.5
▪ 건설사업정보시스템(512)	일반회계	31.95	31.5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Ⅲ-1-일반재정)			
①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4314)	일반회계	20.58	20.58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301)	일반회계	20.58	20.58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Ⅲ-1-일반재정)			
① 건설공사기준운영(4317)	일반회계	76.61	71.68
▪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301)	일반회계	76.61	71.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스마트 건설 산업 생태계 육성 (50%)	①-1 스마트건설 EXPO 참여 기업 (10%)	132	144	195	200	지난 3년간 평균 참여기업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 건설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도전적 목표	스마트건설 EXPO 부스 참여기업	관련문서 등
	①-2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수 (10%)	-	-	20	40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은 스마트건설 관련 매출이 30%이상 이고, 고용·매출 등이 3년간 지속증가하는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층평가 등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강소기업 추가 20개 발굴은 매우 도전적 과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명단	보도자료 등
	①-3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10%)	-	-	-	5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해외 전시회 참석한 수치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여 스마트건설 입주기업	관련문서 등
	①-4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활동(10%)	-	-	-	70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ICT·드론 등 첨단기술 개발업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책현장 소통 강화	간담회, 워크숍, 엑스포, 회의 등 업계 간 교류 횟수	관련문서 등
	①-5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10%)	-	-	-	10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서 개발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매칭 등을 지원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현장 기술실증 수	
②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건수(10%)		-	2	6	9	현장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한해 관련 건설기준을 제·개정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대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현장 수가 매우 적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작년대비 제·개정 건수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수치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설기준 코드 수	관보게재 등
③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대상 확대 (20%)		14.9	12.9	12.6	25.2	·서류 부담이 적은 '가격 입찰 후 PQ 평가' 입찰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 Eng.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전년 대비 100% 이상 확대하는 것은 법령 개정 등 일정 고려시 매우 도전적 목표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대상 비율 (건설엔지니어링)	공문, 메모보고 등 (건설 Eng. 실적 관리시스템 기반)
④ 입찰 공정성 강화 (20%)	④-1 중앙심의위 청렴워크숍 개최 횟수 (10%)	-	-	-	3	중심위 심의위원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산업 입찰환경 조성	중앙심의위 청렴 워크숍 개최 횟수	메모보고(차관) 및 관련 증빙자료
	④-2 중앙심의위 청렴워크숍 참석자 수 (10%)	-	-	-	400명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385명, 발주청 담당자는 수십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심의 위원 및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제시	청렴워크숍 서명부 참석자 수(명)	메모보고(차관) 및 관련 증빙자료

③ 낮은 규제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Ⅱ-2-③)

□ 추진배경

- (공정성 측면) 최근 화물운송 등 물류 플랫폼 산업이 성장 중이나, 관리제도 부재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

*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해 차주에게 일감을 위탁한 운수사의 운임 미지급 사례 빈번

- 이에, 플랫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운임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편, 화물차 수급조절제 등 현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법 증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지입제 폐단으로 인한 피해 여전

- (안전 측면) 화물차 사고는 다른 업종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사망자수/교통사고건수('18~'22) : 화물차 3.2%, 전세버스 2.0%, 노선버스 1.3%, 택시 0.8%

- 한편, 최근 배달 이륜차의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 시급

- (종사자 보호 측면) 안전운임제 일몰,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컨테이너·시멘트 운임기준 공백이 지속되어, 차주 소득 불안 고조

- 이에, 화물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임기준을 제시할 필요
- 한편, 물류산업 종사자가 걱정없이 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물차 휴게소, 생활물류 쉼터 등 휴게시설을 확충 필요

- ☞ 기존 경직된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물류산업을 구현하고,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 (물류 플랫폼 관리 강화) 물류분야 플랫폼 업종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사 책임 부여 등 제도화 방안 마련
 - 전문가, 업계 논의 및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 활성화·관리방안 마련
- (화물차 공급규제 완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급제한 대상인 차량도 증차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개정하고,
 - 그간 허가조건(20대 이상)로 인해 증차하기 어려웠던 '2~19대 보유 일반 운송사업자'도 증차할 수 있도록 완화(화물차법 하위법령)
- (화물운송시장 불법행위 개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는 감차처분하고, 해당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화물차법 하위법령)
 -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수수료 기준 등을 운송주선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화물차법 하위법령)
 - 연구용역 통해 불법증차 예방 위한 전국번호판 도입방안 마련('24.12)
- (화물운송통합행정시스템 구축) 화물처리 전산화 및 각 기관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②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 (배달업 안전 강화) '찾아가는 이륜차 체험형 교육' 등 배달업 종사 환경에 특화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추진
 - 또한, 배달업 종사자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간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시행규칙 개정)
 - 한편, 배달 종사자의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강력범죄 등 중범죄자의 배달 종사자격 제한 기준 마련(시행령 개정)

- (화물차 안전관리) 일반 운송사업자 대상 운수종사자 관리, 휴게 시간 준수,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 '21년부터 일반운송사업자 대상 전수조사 중으로, 올해는 차량 5~9개 보유자 대상 점검

- 과적, 적재불량, 자동차 안전기준 미준수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경찰청,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 추진

- (물류창고 화재안전) 물류창고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안전 점검 (국토부·지자체·전문가) 실시,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술개발* 추진

*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개발 R&D('22~'26)

-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신이 불안정한 위험물질 단말기 교체 및 모바일 앱 신규 개발 추진, 위험물질 정보공유 대상기관 확대

③ 종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

- (화물운송 종사자 지원) 화물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화물차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변동비(유류, 장비비 등), 고정비(차량 감가상각 등), 평균 영업이익율(운송사) 등에 대한 객관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해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기간을 감경하는 기준 마련

- (배달공제상품 출시) 배달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여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출시

- (휴게시설 확충) 기 수립된 화물차휴게소 확충계획의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분석, 연도별·지역별 후보지 선정,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한편,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쉼터 확충 촉진 및 관리를 위해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 세부기준 마련

- (전문인력 양성) 안정적인 신규 물류전문인력 공급과 실제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물류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세부추진 방안 수립	1월	5%	방침결정(실장)
	최소운송의무 위반시 감차하고, 소속 차주에게 개인운송 사업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방침	1월	10%	방침결정(장관)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2월	5%	공문
2/4분기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4월	5%	메모보고(차관)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강화 및 활성화방안 마련	6월	5%	메모보고(실장)
	물류창고 집중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시행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운송주선약관에 중개 수수료 및 운임 정보를 명시하도록 시행령 개정	7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수급조절 완화를 위한 공급기준심의회 개최	8월	5%	메모보고(실장)
	경기도ITS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추진	8월	5%	보도자료
	배달종사자용 전용 공제보험상품 출시	9월	5%	보도자료
	배달업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시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감경기준 마련 등을 위한 화물차법 시행령 개정안 방침	10월	5%	방침결정(장관)
	지입제 개혁 위한 화물운송정상화 법안 발의(화물자동차법)	12월	10%	의안정보시스템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12월	10%	방침결정(장관)
	성범죄 등 중범죄자 배달업 종사 제한 기준 마련	12월	5%	방침결정(실장)
	위험물질운송차량 단말장치 모바일 앱 개발 추진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 진행
 - 향후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이해관계자(운수사, 차주 등) 의견을 수렴하고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한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화물운송 플랫폼 간담회)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물류분야 플랫폼 제도화를 검토 위해, 화물운송플랫폼 주요 업체와 릴레이 간담회 실시*
 - * 전국24시콜, 원콜, 화물맨, CJ, Kakao, KT, LG, 로지스팟, 센디, 프리모, 화물마당 등
- (물류시설 집중안전점검) 안전점검시 국토부, 지자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 (화물차 휴게시설 종합계획) 정부, 지자체, 화물차 운전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T/F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 (화물차 전국번호판 도입)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실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24.2월
간담회	화물운송 플랫폼 업계 간담회	'24.2월
회의	물류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4.6월
회의	화물차 휴게시설 계획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24.8월
회의	화물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	'24.10월

□ 기대효과

- (공정한 물류산업 구현) 적정운임 기준을 제시하여, 화물차주 권익 보호 및 집단운송거부 등 국가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
 - 화물운송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차주 일감 확보 등 물류분야 플랫폼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활성화를 추진하되,
 - 동시에 불합리한 이용정지 처분, 과적 주선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 (화물차 공급규제 완화) 화물차의 유연한 공급을 통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직영차 비율을 증가로 산업 정상화에 기여
 - 허가요건 완화를 통해 화물차 20대 이상 보유 사업자 대비 일방적으로 제한되었던 2대~19대 보유 사업자의 증차 수요에 대응
- (화물운송시장 불법행위 개선)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지역 이전을 이용한 불법증차를 예방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
 - 이와 별개로, 번호 변경과 번호판 재발급 등 지역을 이전할 때마다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화물차주에게 중개 수수료율을 공개하여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 (종사자 지원 강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근로여건 향상 및 공급 부족의 주·박차난 완화 기여
 - 시중 대비 약 30% 저렴한 공제상품을 통해 배달운전 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대폭 낮춰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제고
- (안전관리 강화) 과적·적재불량, 불법튜닝 등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 종사자 경각심 제고 통해 화물차 사고 감축
 - 물류창고 화재대책 마련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여 안전성 제고하고 배달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IV-3.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물류정책)				
① 화물자동차지원(4032)		일반회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비(302)		일반회계	9.62	8.64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301)		일반회계	-	5
VI-4. R&D 등의 성과활용을 증대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				
① 교통물류연구(4158)		일반회계		
▪물류시설 화재안전성 및 위험도관리기술개발(R&D)(314)		일반회계	40	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공정한 물류산업 구현을 위한 물류 플랫폼 관리방안 마련(15%)	-	-	신규	제도화 방안 마련	현재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물류분야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을 해야하는 등 난이도가 높음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 화물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방안 마련(15%)			신규	도입 방안 마련	전국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용 범위가 넓어 행정·비용 분석 등 도입방안 검토에 난이도가 높고, 도입 시 기존 이권(번호판 프리미엄)에 주는 영향으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의견수렴 및 이견 조정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제	메모보고 (장관)	내부 보고자료
㉢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15%)	-	-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해서 화주 단체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어 참여 유도 난이도가 높으며, 운임 마련 과정에서도 화주·운수사·차주 단체(화물연대)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되어 이해관계자 이견 조정 등 난이도가 높음	보도자료	보도자료 배포
㉣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을 위한 규제개선 (a: 10%, b: 5%)	-	-	신규	법령 개정	a) '04년 이후 화물시장에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직영 차량 증차 허용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할 경우 차주들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임 감소 우려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운송사 및 화물차주 등 지속 설득 필요 b) 또한 일반운송사업자에 대한 증차 허용 또한 기존 차주들의 운임 경쟁 심화, 번호판 프리미엄 영향 우려 등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	a)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b)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달업 공제 보험상품 가입률 제고(15%)	-	-	신규	40%	현재 33%(전체 종사자 63.5만명 중 21만명 가입)에 그치고 있는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가입률을 연내 40%(25.4만명)까지 제고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 과제	유상운송보험 가입자수(시간제 포함)/전체 배달 종사자수	보험개발원 및 배달공제조합 상품 가입 통계
㉥ 배달업 안전교육 과정 개설 및 실효성 있는 운영(15%) (a: 5%, b: 10%)	-	-	신규	총 24회 교육 실시, 총 600명 수료	배달종사자 체험형 교육 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각각 개설(a)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횟수 및 수료인원을 확보(b)하는 것은 종사자 인식개선 및 배달플랫폼 업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음	a) 교육과정 개설 : 보도자료 b) 교육규모 : ('24년 체험형 교육횟수/24)*0.5 + (24년 체험형교육 수료자수/600)*0.5	a) 교육과정 개설 : 보도자료 배포 b) 교육규모 : 교통안전공단 교육실적자료 회신 공문
㉦ 불법 주·박차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0%)	6	6	7	8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지자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며('20년)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지자체 대상 공영차고지 확충 인센티브 마련 등으로 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 개소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5~'29) 현황자료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Ⅱ-2-④)

□ 추진배경(목적)

- 3.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후속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 (3.7일 민생토론회 v말씀) “항공과 해운이 세계를 경제영토로 만들었기에 오늘날 세계 속 경제대국 대한민국 가능,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해운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
- 특히,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신시장 발굴, 환승) 마련 필요
- 한편, 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심사 최종 승인 시,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이 수반되는 바,
 - 통합항공사 출범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차질 없는 기업결합 이행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신수요 창출》

-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최근 국제선 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 몽골, 호주 등 운수권을 증대하고,
 - * ('23년 운항 회복) '19년比 평균 대비 인도네시아 109%(국적사), 몽골 140%, 호주 200%
 - 중장기적 EU 노선 자유화에 대비한 효과분석도 진행
 - 한편, 인천* 등 주요 국제공항 슬롯을 지속 확대하여 항공사 노선 확대를 지원하고, 신규항공사 취항 등 증편 기반 마련
 - * (現) 75회/h → ('24) 78회/h(T2확장) → ('25) 80회/h(활주로4분) → ('30년 이후) 100회/h
- (항공사간 협력 강화) 국적사 직항편 부족 지역의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위한 제휴협정* 체결을 지원하되, 독과점 부작용은 최소화
 - * 코드쉐어 협력을 포함하여 항공사간 운임·홍보·판매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

- LCC가 기존 얼라이언스 그룹에 가입하거나, 통합사와의 코드쉐어*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

* 협력 항공사가 실제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의 일부를 자사 명의 항공권으로 판매

- (HUB 기능 강화) 운수권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동남아·中↔韓↔美, 日↔韓↔유럽 등 주요 환승축을 강화 하고,
- 슬롯 배분 시 환승 노선은 인접 시간대(예: 3시간 내 연결)에 배치하고, 터미널 배치 시 항공사 간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환승 편의성 제고
- * 기업결합 승인 이후 KE-OZ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T1·T2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T2로 이전(심사 완료 후)
- 수도권 및 지방권역까지 포함한 1~3day 환승관광 상품을 다변화 (법무부 등)하여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관광 유도
- (여객 맞춤형 공항 서비스) 출·입국장 공항 면세점에서 탑승 30분 전까지 상품예약·구매 등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24)
- (도심지 체크인)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및 이용가능 항공사 확대 추진 등 코로나로 위축됐던 국제 항공이용객 출국편의 제고

《2. KE·OZ 기업결합 대비 항공사 구조개편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항공사 경쟁력 강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 그간, FSC 중심으로 운항한 유럽·서남아시아·인도네시아 등 중·장거리의 운수권을 LCC에도 배분하여 LCC의 경쟁력 강화
- 한편, KE-OZ 중복 노선*을 효율화하여,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 다양화 및 중남미 등 新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통합 FSC를 전세계를 누비는 메가캐리어로 육성

* 코로나 이전('19년 하계) 기준, KE 116개, OZ 80개 국제선 노선 중 55개 중복

- 기업결합 승인 이후 KE-OZ 계열사 간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T1·T2에 분산된 통합 항공사를 T2로 이전(심사 완료 후)

* 4단계 공사 종료 이후 T1의 아시아나 계열사를 T2(現 대한항공·진에어)로 이전 검토

- (항공운송사업 관리강화) M&A, 금융자본 투자 활성화* 등에 따른 기업구조 다변화에 대응, 면허 등 인허가 기준** 개선 검토(연구용역)

* 최근 경영난을 겪던 LCC에 사모펀드가 투자, 정상화(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

** 여러 M&A 방식 중 영업 양수도, 합병 등만 인가제로 관리 중, 그 외 대주주 변경, 분할매각 등 방식은 인허가 공백('61년 제정된 舊항공법과 동일)

- (시장건전성 강화) 기업결합 대비 국제선 운임 및 소비자 관리방안 마련

- (국제선 운임) 노선별 평균요금 추세 파악 등 항공요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급 확대 필요노선 발굴 등에 활용

- (이행감독위) 최종 기업결합 전 공정위 부과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감독위 구성·운영방향 등에 대해 공정위와 MOU 체결('24.12)

- (이용자 보호) 월간 소비자리포트(항공사별 지연·피해실태 등)를 발간('24.下) 하고, 법령상 환불·변경정보 고지의무 구체화* 등 알권리 제고

* ①고지시기(항공권 구매과정, 환불기한 도래前), ②고지방식(알림톡, 메일 등)(고시개정, '24.上)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발표를 확대(연 1→2회)하되, 미흡 항공사는 패널티* 및 지연방지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상습지연 개선 유도

* (예시) 2회 연속 정시성·이용자보호 C등급 이하 시 슬롯배분 후순위 적용 등('25)

- 특히 국내선에서는 스케줄 인가 시 지점 간 실 소요시간을 반영* 하여 단거리 반복운항 과정에서 유발되는 연쇄지연 개선 유도

* (現) 비행거리 기반으로 계산된 운항시간 → (改) 실 운항소요시간 평균 데이터 활용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한-인도네시아, 몽골 등 항공회담 개최	2월	6%	보도자료
	'24년 하계 국제선 정기편 인가	3월	6%	보도자료
	항공사 간 조인트벤처(제휴협정) 재인가	3월	6%	방침결정(실장)
	항공산업 발전방안 마련(3.7일 민생토론회)	3월	7%	보도자료 등
2/4분기	한-우즈벡, 카자흐스탄 등 항공회담 개최	4월	7%	메모보고(장관)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공개	6월	6%	보도자료
	신규·증대 운수권 항공사 배분	6월	6%	방침결정(차관)
	운수권·슬롯 이전 등 「운수권 배분규칙」, 「운항시각 배분규칙」 개정	6월	6%	관보
3/4분기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고시) 개정	8월	6%	법령정보시스템
	월간소비자 리포트 발간	8월	6%	홈페이지 등
	운항시각 정책위원회 인чин공항 슬롯 확대 심의·의결	9월	7%	메모보고(실장)
4/4분기	'24년 동계 국제선 정기편 인가	10월	6%	보도자료
	상반기 서비스 평가(운항신뢰성, 이용자보호 충실성) 결과 공개	11월	6%	홈페이지 등
	'24년 국내선 하계 인가 시 실제운항시간 적용효과 분석	12월	6%	메모보고(실장)
	슬롯전략배분 기준 등 「운항시각 배분규칙」 개정	12월	6%	관보
	시정조치 이행감독위 관련 공정위와 MOU 체결	12월	7%	MOU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환불곤란 등으로 불편이 많았던 항공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소비자 관련 기관(소비자원 등), 단체 및 학계 등 적극 의견수렴
 - 한편,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는 항공사에는 규제로 체감될 수 있어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간담회 등도 병행
- 인허가 기준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견 등 반영을 위해 관련 항공사 및 전문가 간담회 지속 개최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외항사 간담회 개최	'24.2월
현장방문	원주공항 국내선 운영현황 및 현안점검(高低연·결항)을 위한 현장방문	'24.2월
간담회	항공산업 발전방안(3.7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24.3월
서면 또는 회의	월간 항공소비자 리포트(안)에 대한 항공사 의견 수렴	'24.5월
간담회	항공산업 발전방안(3.7일 민생토론회) 추진상황 점검 및 간담회	'24.3분기
회의	국내선 슬롯 컨퍼런스	'24.4분기

□ 기대효과

- LCC 육성을 통한 항공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불균형 발생을 제한하고 건실한 성장을 유도
 - 중단거리·여객 중심의 국적 LCC의 사업모델을 장거리·화물까지 확장하여 FSC로 국한되었던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
- 체계적 면허관리를 통해 부실한 사업자 유입을 방지하고 통합과정에서 운항 공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
- 월간리포트 발간 등으로 항공사에서만 보유하던 서비스 정보를 투명하게 대국민 공개하여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서비스 개선 유도
- 항공여객 수요회복 및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지연율 동반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소비자 불편을 개선

* 지연율 : 7.4%('19) → 4.1%('20) → 6.4%('21) → 7.4%('22) → 10.4%('23, 신기준 23.2%)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토교통행정지원(V-12-일반재정)				
① 국토교통국제협력(7037)		일반회계	2.76 (33.11)	2.78 (30.85)
▪ 국제항공회담및노선개발(309)			2.76	2.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국내공항 HUB 기능 강화(40%)	-	-	-	110%	▶ 환승여객은 HUB 공항의 주요 지표로서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전환하여, 코로나19 이전 3년간('16~'19) 우리나라 국제선 환승여객 연평균 성장률(4.6%)의 배 이상인 10% 확대를 목표치로 설정	'23년 대비 환승여객 증가율 ('24년 실적/'23년 실적)(20%)	항공운송통계 (항공협회)

	- - -	31.8 만명	▶ HUB 기능 강화를 위한 여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 이전 '19년도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수(28.9만명) 대비 10% 증가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수(20%)	메모보고(실장)
노선개발 및 항공회담(20%)	- - -	18회 이상	▶ 항공영토 확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외국정부와 실무협력회의를 포함하여 과거 5년 평균(8.8회) 대비 2배 이상(18회)의 적극적인 항공회담 개최를 목표로치로 설정	'24년 항공회담 개최 실적	메모보고(실장)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20%)	- - -	16개 이상	▶ 주로 단거리(한국항공 평균비행 시간 4시간 이내 도시) 위주로 운항 중인 국내 LCC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3년(8개) 대비 중장거리 노선의 2배 확대를 목표로치로 설정	'24년 LCC 중장거리 노선수	항공운송통계 (항공협회)
시장 건전성 강화(20%)	- - -	100%	▶ 시장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유류할증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 실시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적정성 점검률	메모보고(실장)

㉑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Ⅱ-2-㉑)

□ 추진배경(목적)

- 항공 산업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3.7일 민생토론회 v 말씀) 항공기 개조, 정비 등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통해 5,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향후 10년간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만들 필요

- 특히, 항공 MRO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국내 MRO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필요
- 또한, 신산업인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공원 확대지정, 드론배송 및 레저스포츠(레이싱, 드론축구) 상용화·해외진출 등 지원 필요

- 지방공항發 국제선, 국내선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국내외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육성

- 한편, 세계적 수준의 항공 네트워크, 스마트 물류 기술을 활용한 항공물류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제고

* (항공화물 운송비중) 국내 수출입 물량의 중량기준 0.16% 수준이나, 금액기준으로는 28.5% (외국인 관광객 운송 기여도) '23년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중 93.2%가 항공편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MRO·K-드론 산업 육성 등 신항공 생태계 구축》

- (MRO 육성) MRO 업체의 LCC 대상 부품 공동구매 사업 착수를 지원(인천 MRO 단지 내 부품창고 조기 준공, 항공사 참여 독려 등)하고,
- 국내 MRO 산업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항공기 부품의 관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관세법 개정, ~24)을 추진(기재부 등 협의)

- B777 대형기 개조사업(IAI社^{인천}, '25~)의 원활한 착수를 위해 신축시설 완공 전까지('25.10) 개조작업을 위한 대체시설 확보
- 지역별 MRO 특화 지원방안, 현장의견 정책반영을 위한 업계 간담회, MRO 지원협의회(항공정책관 주재) 등 지속 개최
- (K-드론 인프라 조성) 드론기업이 개발 단계의 드론 구성품·조립체 등 시험 및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고성 드론인프라 운영('24.上)
 - * (예산) 장비비 124억 (규모) 구성품, 조립체, 비행시험 등 부문별 시험장비 21종 등 구축
-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드론공원 지정 근거 마련(드론법 개정) 및 최신 기술을 반영한 드론 조종자격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 * 최근 드론 수직이착륙기 개발·도입에 따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조종자격(수직이착륙기 조종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을 신설
- (K-드론 상용화 지원) 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23.9)을 기반으로 섬·공원·항만에서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24년 14개 지자체 선정)
 - * 전국 드론배송체계 구축 확대를 위해 38개 섬, 8개 공원, 1개 항만에 드론배송거점 41개 및 드론배달점 183개 등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 국제 드론박람회 및 해외 드론로드쇼 개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5월) 등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 * 로드쇼·카자흐스탄/몽골/남아공, 국제박람회·미국/이탈리아, 협력국 초청 글로벌 팸투어(5월, 인천)
- 영암(F1서킷) 국제드론레이싱대회 신설 및 제2회 FIDA 국제드론 축구대회(인천) 개최 등 국내 드론레저 문화도 확산
- (드론분야 공공성 강화) 국토부·국정원·과기부 협업을 통해 안티드론 훈련 및 장비 시험이 가능한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24.上)
 - * 협력기관이 인정하는 안티드론 기업 등 대상 훈련시설·장비 지원(고성, 의성)
- 지적조사, 구조물점검, 수색탐색 등 공공분야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드론 전문인력 양성(목표 603명)

《2. 공항의 지역경제 허브기능 강화》

- (지방發 국제선 확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설정하고, 운수권 배분 시 지방공항 취항실적이 많은 항공사에 인센티브 강화
 - 양양·무안 등 국제선 네트워크가 부족한 공항은 관광·전세편 부정기 운항을 적극 허가하고, 지방공항發 국제선에 인센티브* 지원
 - * 지방공항發 국제선에 착륙료·홍보비(공항공사), 취항 보조금(지자체) 등 지원
 - 한편, 지방공항 외국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단체 관광객(5인이상) 대상 무사증 입국기간을 연장하고,
 - * 무안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3개국 단체관광객(5인이상)은 비자 없이 15일간 전남·전북·광주·제주 여행 가능(~'25.3월)
 - ** 양양공항으로 입출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단체관광객(5인이상)은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서울·경기·인천 여행 가능('24.5월 이후 연장 추진)
 - 외국 관광객 대상 여행 홍보 강화 및 여행사 인센티브 신설 등 지원
- (거버넌스 구축)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운영 우수 성과 전파 및 공항분야 전문지식 공유 등을 위해 “국토부-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 협업 채널 구축하고,
 - 관할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운영, 지역 기반 항공사 유치·지원 등 우수 지자체 노하우(행정·재정지원*) 타 지자체에 전파·공유
 - * 항공분야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되어 지자체 지원이 필요
 - 또한, 지역 항공 수요 창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교수진, 대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협업 강화
 - * 여객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대학생 등 청년그룹 의견 수렴
- (축축한 국내선 네트워크)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공항 네트워크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 지역수요를 반영한 국내선 스케줄 인가*를 추진하고, 지방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의 수익성 개선(좌석상한 50석→80석 완화)을 통해 국내선 운항 확대 유도**

* 예) 지자체 의견수렴 통해 오전에 집중된 운항편을 오전-오후-저녁 시간대로 분산

** 그간 70~80석 운항가능 기재를 50석 이하로 개조·운영하여 매출 부족, 수익성 악화

- (물동량 확대) 항공사·물류기업 등에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 공항물류단지에 우수 물류업체 유치** 등 신규 물동량 창출

* 항공사 화물 증가 톤당 1~2만원 지원, 물류기업 증가 톤당 2만원, GDC 환적화물 톤당 5만원

** 콜드체인(세인트앤엘 2월 사업허가), 외항사 화물(AACT, 2월 사업허가), 반도체(PNS네트웍스, 5월 준공)

- 항공기 화물 집하·분류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 조성, 웨어러블 로봇장비, 자율주행 화물전인차량 등 항공 물류 첨단화

* 웨어러블 기술 검증('24.12), 자율주행 기술 시범운영('24. 3월~)

-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하여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

* 스마트화물기반 설계(~'24.上) / 공동물류실시 설계(~6월), 건설 공사 착수(10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드론공원 지정 근거 마련(드론법 개정)	2월	6%	관보
	운수권 배분 규칙 개정(지방공항 취항 가점)	2월	6%	관보
	항공기 부품 공동구매 설명회 참석	3월	5%	메모보고(실장)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자 선정	3월	6%	보도자료
	‘국가안티드론훈련장’ 협약식	3월	6%	메모보고(실장)
2/4분기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 지자체 현장점검	5월	5%	메모보고(실장)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개최	5월	6%	보도자료
	항공 MRO 간담회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지방공항 활성화 토론회 개최	7월	5%	메모보고(실장)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시작	7월	6%	보도자료
	소형항공사업자 좌석수 규제 완화(50→80석)	8월	6%	관보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9월	5%	보도자료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착수 현장점검	9월	5%	메모보고(실장)
	드론공원 지정 및 운영 관련 제도 정비	9월	6%	방침결정(장관)
4/4분기	영암(F-1 서킷) 국제드론레이싱 대회 신설 개최	10월	6%	보도자료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11월	6%	메모보고(차관)
	드론 분류체계에 따른 조종자격 신설	12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물류단지 기업 유치 및 물동량 성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우리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공항 활성화 솔루션 제공(성공사례 공유 및 컨설팅 지원 등) 및 지자체 소통채널 구축
- 드론기업 간담회(2회), R&D연구기관 간담회, MRO 단지 방문 및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추진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드론기업 간담회 2회 이상 개최	'24.1월/11월
간담회	항공분야 R&D 과제 연구기관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항공정비 단지(사천) 및 드론 현장(고성) 방문	'24.3월
회의	드론교통 & 배송 글로벌 심포지움	'24.5월
현장방문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 지자체 현장점검	'24.5월
토론회	지방공항 활성화 토론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섬 드론배송 현장 방문 주민 의견 수렴	'24.9월

□ 기대효과

- 울산, 전남 등 공항 활성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와의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전담조직 신설 및 지방공항 활성화 기대
- 글로벌 MRO 기업 유치를 통해 국내 정비산업 활성화 등 항공 시장 성장 촉진
- 섬지역 드론배송 상용화로 소외지역 생활편의 제고, 인명구조·치안·화재감시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			
① 항공인력양성(3635)	일반회계	28 (28)	27 (27)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303)		28	27

항공발전지원(V-12-일반재정⑤)				
① 항공산업지원(3637)			교특회계	
			411	328
			(756)	(677)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323)		156	75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324)		226	233
	■드론 기업지원허브 운영(326)		28	14
	■K-드론지원센터 구축(328)		-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30%)	-	-	-	4건	▶ 지방공항(김포,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 국제 노선 신규 개선을 위해서는 외교적 이슈 등으로 이해관계가 상이한 타국과의 적극적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항공사 취항을 유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핵심 지표로 지방공항 노선 4건을 신설을 목표치로 설정	지방공항 노선 신설 수 (15%)	항공운송통계 (항공협회)
	-	-	-	34.8백만명	▶ 지방공항 취항을 기피하는 항공사의 지방발 국제선 증편을 유도하고, 한정된 항공기 보유 상황 하에서 국제선 증편에 따른 국내선 네트워크 유실을 최소화하여, '23년 31.6백만명 대비 10% 이상 증가한 34.8백만명을 목표치로 설정	지방공항의 여객 수(국내선, 국제선)(15%)	
MRO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25%)	-	-	-	신규	▶ MRO 산업의 사업영역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위해 많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 조율, 합의를 도출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화물기 개조 위한 대체 격납고 확보 (15%)	메모보고(실장)
	-	-	-	신규		관세감면 일몰기한 연장(관세법 개정) (10%)	관보
K-드론경쟁력 강화(25%)	-	-	-	거점 30개, 배달점 150개	▶ 드론배송거점 및 드론배달점 확대·구축 등 도전적 목표 설정	드론 배송거점 30개, 배달점 150개 이상 달성(15%)	메모보고(실장)
	-	-	-	622명	▶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커리큘럼 개선, 다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현장맞춤 교육 확대 등 도전적 목표 설정 * 한정된 예산(272억, 전년대비 △ 33%)에도 불구하고 전년(592명) 대비 5% 상향	드론 조종인력 양성 수(10%)	메모보고(국장)
항공 화물 물동량 확대(20%)	-	-	-	115만톤	▶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량을 5% 이상 확대('23년 108만톤)	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중량)	항공수출입통계 (무역협회)

⑥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Ⅱ-2-⑥)

□ 추진배경(목적)

- 지적업무는 토지의 기초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는 업무로 매년 약39만건의 지적측량과 약126만건의 공부 등록사항 변동이 발생하며,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정보(경계·면적·지목 등)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적업무의 신뢰성·일관성 확보가 중요
 - 이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비이동지 측량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측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오차 허용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적공부의 수치화를 가속화할 필요

* 지적공부 등록사항 변경이 없는 지적현황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을 말함

- 또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따라 각종 인·허가 기준 및 부동산 거래 가치가 달라지므로 사회적·행정적 변화가 제도에 잘 반영되어야 함
 - 이에, 토지이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지목제도 개선, 측량기술 발달에 따른 신기술 도입 및 측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 국민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 및 연속지적도 최신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오류 등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12~)

*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로, 낙후된 측량 기술과 종이에 제작된 지적·임야도면의 훼손·마모, 분실·소실 등으로 발생

- 사업기간(30년)내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기능개편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他 개발사업과 연계한 협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활성화 견인

* '12~'23년까지 3,389억원을 투입하여 554만 필지 중 169만필지(계획량 대비 31.2%) 완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 지적측량 성과 다툼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적측량업무 환경개선
 - (수치지역 확대) 측량의 정확성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경계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수치(좌표)지역 사업대상 확대
 - (오차허용범위 축소) 종이지적도와 아날로그식 측량기계 사용 당시 적용한 오차 허용범위를 신기술 공정을 반영하여 오차범위 개편
 - (경계점 확인 편의 제고) 분할 등 토지이동측량(3종목)에 대해 작성 하던 지상경계점등록부를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까지 확대
 - (미등록토지 정비) 지적도·임야도에 누락된 미등록된 토지(국유재산)를 조사하고 국유지로 신규등록하여 국유재산 발굴
- (지적행정 선진화) 변화하는 사회적·행정적 환경을 제도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지목제도 개편 및 신기술 도입·적용 등
 - (지목제도 개선) 새로운 토지이용형태를 반영한 지목 구분 기준 마련 및 대표성이 없는 지목의 명칭을 개선하여 지목설정 체계화
 - (지적측량 신기술 도입) 세부측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GNSS 수신기 개발·도입으로 측량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감축
 - (지적측량 방법 개선) 드론(초소형무인비행장치), GNSS 수신기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 등 지적측량방법 개선

*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지적확정측량규정/GNSS 지적측량규정 개정
- (대국민 서비스 개선)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속지적도 정비기반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출방안 마련
 - (연속지적도 관리체계 정비)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사항이 실시간 반영되어 공공·민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연속편집관리시스템 구축
 -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 복잡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표준품셈·규정 개정 및 지적측량수수료 고시(‘24.12.)

② 지적재조사사업 기능 개편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능 개편)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집행-완료’ 사업 쏙단계 효율화로 사업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 (기존) 업무량 조사·사업집행 중심 → (개선) 지역별 업무량 모의산정 등 과학화
 - 전국의 사업추진 지자체(223개)를 대상으로 매월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 구축
 - * 전담 관리 시·도 지정, 매월 사업지구별 관리카드 분석 및 점검회의 실시
 - MZ세대 특징을 반영하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빌드업(build-up) 청년 고용정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청년층 기술자 인터뷰 실시
 - * 근로소득, 근로시간, 업무량, 복리후생 항목을 정기적 조사로 직업 가치관 제고
 -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사업지구 내 측량데이터(건수 등)를 누구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확대 추진
- (민간산업 활성화) 재조사사업에 민간참여율을 높이고, 신생 업체도 사업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및 지원방안 체계화
 -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관계기관·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지구·민간업체별 사업 수주 금액 등 정보를 분석하여 채용여건 등 수요맞춤형 취업·채용지원으로 고용서비스 활성화 유도
 - 민간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측량대행자와 협력·상생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제도개선) 사업추진 적기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절차 및 비효율 사항 개선으로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사업 효율화 도모

< 주요 개정사항 >

- ▶ (절차개선) 토지소유자의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예측금액(조정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지
- ▶ (사업의 효율화) 토지소유자의 신속·정확한 주소정보(주민등록·가족등록 관계·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근거 마련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제고 방안 연구 추진계획 수립	1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적재조사측량 조기 발주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2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적재조사 전문교육계획 수립	2월	5%	시·도발송 공문
2/4분기	연속편집도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4월	5%	방침결정(실장)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월	10%	메모보고(장관)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의견수렴	6월	5%	메모보고(실장)
	수치등록 대상확대(등록전환) 시행령 개정안 마련	6월	5%	방침결정(장관)
	민간대행자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6월	5%	메모보고(실장)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의견수렴	6월	10%	메모보고(실장)
3/4분기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안) 발의(의원입법)	7월	5%	메모보고(실장)
	지목제도 개선방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장관)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및 시행	9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공포	9월	5%	고시문
	재조사분야 청년기술자 대상 설문지 분석결과 보고	10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확대 제도개선 방안 마련	10월	5%	메모보고(장관)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분야 표준품셈 개정	12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적재조사 기능 개편 및 사업성과 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지적확정측량규정/GNSS 측량규정 개정·공포	12월	5%	고시문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수혜자)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적측량수행자,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등
- (이해관계집단) 공간정보산업협회 및 산업계, 주택·건설업계 (사업시행자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LH공사, LX공사 등) 등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토론회	지적업무 정책 공유를 위한 업무 협력 토론회 개최	'24.3월
간담회	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가 의견수렴	'24.4월
현장방문	지목제도 개편을 위한 현장방문	'24.4~5월
경진대회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24.5월
설문조사	지적재조사 청년기술자 대상 설문 조사	'24.5월
간담회	민간대행자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24.6월
간담회	지적확정측량규정/GNSS 측량규정 개정안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7월
현장방문	토지경계 조정 방안 의견청취를 위한 지자체 현장방문	'24.8월
경진대회	지적재조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24.9월
현장방문	국가기준점 관리 및 도서관리 방안 의견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24.9월
공청회	지적측량 품셈개정을 위한 공청회	'24.10월

□ 기대효과

- (측량성과 일관성 강화) 토지 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일관성을 확보하여 지적행정 신뢰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지적은 국민의 토지거래의 기준이면서 건축행정·농지행정 등 토지 관련 행정의 기준

- (국민 편익 제고) 국민이 알기쉽게 토지 경계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측량비용을 절감하고 지적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 (행정능률 제고) 현장에서 지적측량에 사용 중인 신기술 측량기술을 규정에 반영, 지목설정을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체계화하여 능률 제고
- (기능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체계적인 기능 개편으로 사업지구 선정 시 실시간 데이터분석으로 지역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

- (개별불부합지 해소) 이웃 간 경계분쟁·다툼 조기 해결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극대화
- (민간성장 지원) 지적재조사사대행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으로 민간측량업체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기회 확대
- (제도개선) 법·제도 개선 및 연구개발, 관측 데이터의 융복합문제 해결, 부처·지자체·기업·시민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국토정보관리(Ⅱ-8-일반재정②)				
국토정보관리				
①	국토정보제도선진화(5735)	일반회계		
	▪ 지적관리(301)	일반회계	11.35	52.3
	▪ 지적재조사(302)	일반회계	542	449
국토교통정보화				
국토교통정보화				
②	부동산행정정보화(4263)	일반회계		
	▪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44.89	90.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지적측량 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20%)	-	-	신규	100%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국민재산권에 직접적 영향 지적측량의 정확성·일관성 확보를 위 하여 지적측량 허용오차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지적측량 오차범위 36cm~180cm→24cm~120cm 기준오차의 1/3 범위 축소 (100%)	장관방침, 개정안 메모보고, 입법예고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확대 (20%)	-	-	신규	100%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분할, 등록전환 등) 지상경계점의 위치설명, 경계점 사진 등이 기록된 등록부를 운영 중임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지 않는 경계복 원측량 등에도 지적측량 수행자가 이 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지적 측량성과를 제시하여 국민 재산권 보 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전적 의지 를 담아 목표 설정	지상경계점등록부 대상확대 (분할, 신규등록→ 경계복원측량 추가)	장관님 메모보고, 개정안 발의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20%)	-	-	신규	100%	지적측량 표준품셈을 기술발전 및 전산화 등에 따른 작업공정, 투입인력, 처리시간 등 반영하여 재산정 합리적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를 마련·개선함으로써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적 극적인 목표로 설정	측량수수료 9종 품셈 개정 (신규등록·등록전환·분 할·경계·지적현황·도시 계획선·축척변경·불부 합지, 지적확정 측량)	표준품셈 개정,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효율성 강화 (20%)	-	-	신규	100%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종 부동산 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지구 선정이 필요 한 상황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지구 선정 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자 등이 지적재조사사업에 이 해도를 제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신청에 대 한 동의서 동의율을 촉진시켜 사업지구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 는 도전적인 의지를 담아 적극 적인 목표를 설정	-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 터를 활용(과거측량 연혁DB:측량결정방 법, 나이·성별·거주 지·공시지가·용도지 역 등)하여 사업지구 선정 (50%) + -(현행 법기준) 동 의서 동의율 66.7% → 70%이상 달성 (50%)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수치)등록 확대(20%)	-	-	신규	10.0%	국민 누구나 알고싶은 경계점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계 점좌표등록지역 확대를 추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로 수치(경계점좌표등 록)지역을 확대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필지수 확인 -('23년 말) 9.5% → 10%이상 확대 * '23.12.31기준, (전국39,631,891 대비 수치3,758,292)	메모보고(장관)

기 본 방 향

☐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거품질 제고

-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및 산업 육성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3	6	9	32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 장기 공적임대주택 제고율(%) ㉡ 1인당 주거면적(m ²)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 주택공급규제 개선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층간소음 해소 세부추진방안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선도지구를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 체계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 공공주택 공급확대 ㉡ 도심사업을 통한 우수입지의 주택공급 추진 ㉢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소규모정비 활성화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실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만호, 사업계획 승인) ㉢ 주거급여 선정기준(%)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전월세거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규정 개정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대상(단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실적(호) ㉤ 안심전세App 누적 다운로드 수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 공급확대 ㉡ 공공임대 질적 개선 ㉢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민간 임대 활성화기반 마련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 ㉢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결정 ㉡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제도·홍보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 ㉣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 확보 ㉡ 공시제도 개선 ㉢ 거래시 부동산소비자 보호 및 중개거래의 안정성 강화 ㉣ 외국인 투기 차단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 부동산산업지원 강화

(1) 주요내용

<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 ☐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 주거사다리 복원 및 주거품질 제고 >

- ☐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및 산업 육성 >

-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 ☐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7.4	7.8	7.94	8.1	'24.下 발표 예정	8.7	2020년 이후 재고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0.1%씩 확대 하는 목표치 산출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10년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 / 총주택수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 임대주택통계 총 주택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1인당 주거면적(㎡)	32.9	33.9	33.9	34.8	'24.下 발표 예정	35.1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 최근 3년 평균 수치가 34.2㎡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평균 0.15㎡씩 확대하는 목표치 산출	전국단위가구방문 면접조사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연구) <1인당 주거면적 산정방식> 개별가구의 주택사용 면적(S _i)를 개별 가구원수(n _i)로 나눈 값의 평균 $1인당주거면적 = \frac{\frac{S_1}{n_1} + \frac{S_2}{n_2} + \dots + \frac{S_N}{n_N}}{N}$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내용

(1) 주요 내용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

- (도심 공급기반 확충)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 (다양한 주택공급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여 도시·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해 수요 정상화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PF대출 대환보증 신설 등 공적기관 공급 확대,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등 접근성 확대를 통해 자금흐름 개선
- (주택품질 향상) 층간소음 해소 방안 마련,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대상 확대, OSC 공법 활성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정비기본방침 마련) 정비사업의 국가 정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도시기능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 도시재구조화 전략 제시
- (정비사업 본격화) 특별법 제정('23.12) 후 최초 사업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모범사례 전파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도모
- (이주대책 시행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 원활한 이주, 무주택 서민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 (기존·신규 택지) 3기 신도시는 본격적인 주택착공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내 신규택지 추가 발표
- (공공주택 공급)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12.5만호→14만호) 지구계획 승인·변경, 사업승인 등 적극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 주택공급규제 개선	-	-	신규	100%	도심 내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규제 개선을 목표로 설정	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25%) ② 주택법 시행령 개정(25%) ③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25%) ④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25%)	관보게재 홈페이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주택공급)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와 함께 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도 정체된 상황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3.9월) 0.64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 전국 주택거래량(만건): ('23.10월) 4.8 (11월) 4.5 (12월) 3.8 / (최근 10년 월평균) 7.9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

⇒ 규제 개선과 PF 대출보증 확대 등 공급여건 개선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 전달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 언론 홍보 등 적극 소통

- (노후계획도시) 광역적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 필요

⇒ ①국토부-지자체 간 업무협약, ②지자체 정책이해도 제고, ③지역주민 문의사항 해소 등 적극 지원을 통해 광역적·체계적 도시대창조 추진

- (공공주택사업) 물가인상,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 및 주택시장 대외환경 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입장 변화 등이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공공주택사업은 보상, 환경, 교통 등 현안이 많아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으며, 농지협의를 등 중앙부처간 협조도 필수

⇒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지자체장 면담, LH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차질 없는 공급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Ⅲ-1-①)

□ 추진배경

-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건설 사업성 악화와 함께 주택시장도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도 정체된 상황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23.9월) 0.64 (10월) -0.25 (11월) -0.79 (12월) -0.78

** 전국 주택거래량(만건): (‘23.10월) 4.8 (11월) 4.5 (12월) 3.8 / (최근 10년 월평균) 7.9

- 최근 재건축 3대 규제(분상제, 안전진단, 재초환)는 개선되었으나, 과도했던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기반은 약화
- 구조조정 등 건설사업 리스크 상승과 PF시장 위축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 사업 추진 애로와 유동성 확보 부담 발생
-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
- 또한,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필요
- * 가구수(만 가구): (‘20) 2,073 → (‘23) 2,183 → (‘25^e) 2,231 → (‘30^e) 2,318 → (‘40^e) 2,387
- 국민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주요 거주공간인 공동주택의 성능과 품질,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 지속 상승
- ☞ 주택건설 관련 제도개선·기술개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질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조성 】

- **(공급대책 수립)**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을 위해 종합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와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
 - **(도심 공급기반 확충)**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 **(정비사업 요건 완화)**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 (재개발 노후도요건) 30년 이상 건축물 전체 2/3 → 60%로 완화(촉진지구 50%)
 - ✓ (정비구역 지정요건)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 → 20%까지 포함
 - ✓ (공유자 동의요건)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전체동의 → 3/4동의 인정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 **(공사비 갈등 완화)**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조정기준 마련 등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 **(사업비 보증 확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조합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HUG 보증상품 확대 운용
 - **(조합 투명성 강화)**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지자체 합동 조합 정기점검 지속 추진(반기별)
 -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청년 등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 및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3.5대 비율로 주차대수 기준 완화
- * 現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30㎡ 미만 설치 불가, 30~60㎡ 3개까지 설치 허용)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 **(PF대출 공급 확대)** 고금리의 일반 PF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보증을 통해 저금리 PF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보증 대상 확대
 - HUG의 PF보증 공급 한도를 당초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심사요건을 완화*("24년 한시)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 * (한도) 총사업비 70% 이내 → 80% 이내, (요건) 시공순위 100위 이내 → 200위 이내
- **(자금지원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용자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24년 한시)하여 건설자금 지원 확대
 - * (분양) 7,500만원 → 1억원, (임대) 장기일반 1.0 → 1.2억 / 공공지원 1.2 → 1.4억원
 - ** (분양) 30~100bp 인하, 최저 3.0%, (임대) 20~100bp 인하, 최저 2.0%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대상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非아파트 용자심사기준을 신설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 촉진
 - * (지원수준) 실당 5천~9천만원, 연 3.2~4.0%, 대출기간 14년
- **(PF대출 접근성 확대)**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PF대출과 관련된 정보 (금리, 요건 등)를 상시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하고,
 - PF 보증기관 간 실적 공유, 업계애로사항 청취 및 업무 노하우 공유가 가능하도록 보증기관 상설협의체 구성(HUG·HF)
- **(보증 여력 확충)** HUG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지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증여력 대폭 확충
 - 특히, HUG 자본을 4조원 이상 확충하고,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 (5→10조원)하여 건설사 파산 시 수분양자 보호에 차질 없도록 지원
 - * HUG 재무여건 개선 등 원활한 정책보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택 품질 향상 기반 강화 】

- **(충간소음)** 기축 공동주택 충간소음 해소를 위해 성능보강 용자사업(매트시공*, 바닥 방음공사**) 지원기준 합리화 및 실질 지원 강화

* 現 용자 지원사업을 25년부터 재정보조 사업으로의 전환 추진(기재부 협의 필요)

** (예) ①대상 확대(조합→주택소유자 개인), ②기준 완화(1.2→1.2.3등급), ③이자율 하향(4→2%)

- 충간소음 검사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 소음 저감노력 유도 위해 바닥 슬래브 상향*시 높이제한 완화

* 바닥 슬래브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하는 경우 최대 115%까지 조례로서 높이제한 완화

- 충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충간소음 피해 신속 대응 및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

- **(스마트주택)** 장수명주택 '내구성' 평가항목 등 인증기준 정비* 및 인센티브 대상 확대*를 위해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

* 콘크리트 시방서 등에 맞게 정비 ** (최우수) 90↑→80점↑ / (우수) 80↑→70점↑

- OSC(Off-Site Construction)공법 활성화를 위해 장수명인증 대상을 모듈러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 추진

* 철근콘크리트 구조 중심의 현행 인증기준을 철골구조(모듈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1월	5%	보도자료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PF대출 보증 확대 및 요건 완화	2월	5%	HUG 내규
	도시형생활주택 용자한도 상향	2월	5%	기금운용계획
	「주택법 시행령」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3월	10%	관보게재
	충간소음 용자사업 개선방향 마련	3월	5%	메모보고(실장)
2/4분기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4월	10%	관보게재
	정비사업 사업비 HUG 보증 확대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성능검사 결과 통보)	7월	10%	관보게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9월	10%	홈페이지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정(인센티브 대상 확대)	9월	10%	홈페이지
4/4분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충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10월	10%	관보게재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 마련(모듈러주택 인센티브)	12월	10%	방침결정(장관)
	하반기 국토부-지자체 합동 조합점검 실시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업계 간담회	'24.2월
현장방문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24.2월~3월
회의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 회의	'24.6월
간담회	OSC 관련 건설기준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24.8월
회의	충간소음 정책협의체 회의	'24.12월

□ 기대효과

- 민간 부문의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충하고, 서민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자금조달 지원체계를 원활히 하고 주택건설 사업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유지
-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거안정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Ⅱ-2-일반재정①)				
①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1131)	주택도시기금	190	
	▪ 충간소음성능보강(융자)(407)	주택도시기금	150	27
	▪ 충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408)	주택도시기금	40	12
통합공공임대(융자)(Ⅱ-2-일반재정①)				
①	통합공공임대(융자)(1338)	주택도시기금	11,900.3	
	▪ 모듈러주택융자(406)	주택도시기금	14.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40%)	-	-	신규	대책 수립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방해하는 잘못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방안 마련	보도자료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20%)	-	-	신규	시행령 개정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 구역지정 요건,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등 획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관보게재
㉢ 층간소음 해소 세부추진방안 마련(25%)	-	-	신규	대책 수립	층간소음 기준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중간점검 도입 등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핵심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법정 소음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등 신축 공동주택의 성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	방안 마련	방침문서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15%)	-	-	신규	시행령 개정	서민들의 정책보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여건 개선 및 보증업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당국과 원활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관보게재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Ⅲ-1-②)

□ 추진배경(목적)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주택 대부분이 2~3년 내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포함

* 1기 신도시(약 29만호)는 '88~'89년 주택공급 200만호 계획을 통해 조성된 지역으로 향후 3년 이내에 27.3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포함(현재 노후주택은 6.5만호)

-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 등 ①주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 높은 상황

*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주민의식조사, 경기연)

< 연도별 1기 신도시 노후주택 >



< 1기 신도시 주요 단지 주차대수 >



- 주거용지 비율이 높아 ②자족기능도 부족*하고 일시에 정비사업 추진 시 ③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

* 1기 신도시(상업4.3%, 업무3.2%), 2기(상업3.6%, 업무5.5%), 3기(상업1.0%, 업무12.0%)

- 그러나 단순한 점 단위 정비사업*으로는 주택공급 외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확충, 이주수요의 체계적 관리 등 광역적 정비에 한계

* (도시정비법) 아파트 단지 정비, (도시재정비법)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재생법) 쇠퇴도시

- 특별법 제정하여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①6~7년 내 1기 신도시 30만호의 정비시기 도래로 부동산 시장 혼란, ②단순 재건축 시 기반시설 정비가 어렵고 주거단지 고밀개발로 정주환경은 악화

⇒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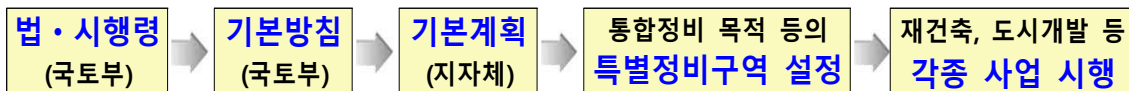
- (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및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구축
- (국정과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특별법 제정(23.12.26)에 따라 창의적 도시계획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토록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시행령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정비구역 지정 요건, 안전진단 면제·완화, 건축규제 완화, 공공기여 산정방식 등을 규정(24.4.27 시행예정)
 - (시행규칙 주요내용)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등 제안서,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따라 6개 별지 등 마련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절차 >



- (정비기본방침 마련) 정비사업을 통한 미래도시 모델 제시를 위해 도시기능강화 및 주거환경개선 방안 등 도시재구조화 전략 수립

< 도시 재구조화 전략 주요내용(예시) >

- ❶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최근 도시 트렌드를 고려한 정비방향
- ❷ 기반시설·교통시설·생활SOC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방안
- ❸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방안
- ❹ 통합 정비 추진방안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비계획 수립 지원방안
- ❺ 친환경·장수명 주택기술 적용방안 및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 등

- (기본계획 ^{지자체} 가이드라인) 정비사업시 現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 밀도계획*, 단계별 정비물량 산정** 등의 구체적 작성 방법 제시

*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수용가능한 인구 산출, 용적률로 전환(도시 평균 용적률)

** 전체 정비대상, 지역 주택시장, 이주주택 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정비물량 산정

- (특별위원회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30명의 위원(정부 14명, 민간 16명)으로 구성·설치

* 임기 2년으로 한 차례 연임가능, 여성위원 40%이상, 비수도권 50% 이상 등

- (위원회의 기능) ^{국토부}기본방침의 수립 및 변경, ^{지자체}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시 도시계획·건축·교통·주거·부동산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심층 심의

② 선도지구를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 (선도지구 선정) 특별법 제정('23.12) 후 최초 사업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모범사례 전파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도모

- (선정방향)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 선정할 계획으로, 노후도·이주단지·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지자체가 선정

<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언론동향 >

언론사	날짜	기사제목
헤럴드	'24.3.11	분당·평촌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후끈'
세계일보	'24.2.25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디?...성남시, 민관합동 TF로 지원사격
머니투데이	'24.2.20	"우리가 재건축 1등" 주민 동의를 쭉쭉쭉...1기 신도시 경쟁 후끈
데일리안	'24.2.16	막 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경쟁...'재건축 1호' 어디?

- (선정방법) 지자체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5월중 발표하고 이후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신청을 받아 '선도지구 공모' 진행

- (선정기준)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표준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재창조, 모범사례확산 등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

< 선도지구 지정기준 >

지정기준(법률)	세부내용(시행령)
주민 참여도	토지등소유자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노후도 및 주민불편	건축물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
도시기능 향상	기반시설·공공시설이나 자족용지 제공으로 도시기능 향상에 기여
확산 가능성	생활권 내 주요 거점으로서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지역

- (지원기구 지정) 정책방향제시, 사업성 분석, 금융지원, 국토정보활용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연구원 등이 지자체·주민 지원

- (지자체 컨설팅)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적정 인구밀도, 기반시설 설치, 건축밀도계획, 교통대책 수립, 3D시뮬레이션 등 지자체별 밀착 지원

-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시 정비사업 추진절차, 분담금·사업성 분석, 조합설립, 주요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집중 컨설팅

③ 체계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 (이주대책 시행지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 원활한 이주, 무주택 서민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이주단지 조성에 공공택지 활용, 유희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
 - 이주민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마련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증가한 용적률을 공공기여금으로 산정하여, 총액의 범위에서 현금·기반시설·생활SOC 등 다양한 기여방식 허용
 - 새로운 공공기여 체계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지자체·주민·사업시행자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구역별, 계획수립 단계별 공공기여금 산정방안, 기여방식별 공공기여금 전환방안 등

 - 산정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하여 도시 차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 체계와 연계 검토
- (교통계획 기본방향) 1기 신도시 정비에 따라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처리방안 제시
 -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른 교통량 및 이용패턴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광역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 예상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대책 및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나아가 他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기본방향 제시
- (디지털 특화서비스) 정비사업 전/후의 도시 및 주택의 변화를 3D시뮬레이션으로 가시화하여 지자체·지역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1기 신도시의 現도시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용적률·높이·인동간격 등의 변화에 따른 도시경관, 건축밀도 등을 3D그래픽으로 비교 가능토록 지원

*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쏠과정 지원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1월	5%	메모보고(차관)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5곳)	1월	5%	보도자료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3월	10%	고시공고
	노후계획도시 법령, 기본방침 지자체 설명회 개최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자체별 평가항목 등 발표	5월	5%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설치	6월	5%	방침결정(장관)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6월	5%	메모보고(차관)
3/4분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자체별 공모 공고	7월	5%	고시 · 공고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8월	5%	메모보고(차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원방안 마련	9월	10%	메모보고(차관)
4/4분기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5%	보도자료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12월	5%	메모보고(차관)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교통계획 기본방향 수립	12월	5%	메모보고(차관)
	플랫폼 기반 노후도시정비 특화서비스(3D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12월	5%	메모보고(차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지자체 기본계획 협의	12월	10%	방침결정(장관), 관련공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신도시별 1곳 이상)	12월	10%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법 제정('23.12.26) 후 최초 시행되므로 ①국토부-지자체 간 업무협의, ②지자체 정책이해도 제고, ③지역주민 문의사항 해소 등 적극 지원

- (상설협의체 운영) 1기신도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을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22.9)하여 쟁점 · 협의사항 등 논의
- (기본계획 컨설팅)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가 수립중인 1기신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실시
 - * 노후계획도시 공간적 범위, 건축물 밀도계획,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등
- (정책설명회) 지자체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시행령·기본방침 적용기준 안내 등 지자체 역량 강화
- 정책기조 및 추진실적 공유, 정책 집행현장에서 요구된 제도 개선사항 논의, 선도지구 공모 및 지자체별 추진계획 전파 등

- (미래도시 지원센터) 주택공급대책(1.10) 후속조치로 노후도시 정비사업 지역주민 컨설팅을 위해 1기 신도시(5곳)에 설치 및 운영
- (패키지 지원)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정비사업 추진절차, 일정, 선도지구, 특례지원, 이주대책, 분담금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집중 상담
 - * 공무원·공공기관 외에 정비사업 관련 법률·회계·정비 등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초빙(요일별 상주)하여 단지별 집중 상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 (운영확대)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지역주민 컨설팅 수요 확대 등에 맞춰 선제적 인력 배치 및 지원센터 추가 설치 검토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회 의	1기 신도시 지자체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24.1월
정 책 설 명 회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기본방침 지자체 대상 설명회	'24.3월
회 의	1기 신도시 지자체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24.6월
현 장 방 문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현장점검	'24.9월
회 의	1기 신도시 지자체 상설협의체(기본계획, 이주대책 등) 운영	'24.12월

□ 기대효과

- (미래도시로의 전환) 20세기 기준에 규격화된 노후계획도시(약 110곳)를 21세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도시로 광역적·체계적 도시재창조
- (도시경쟁력 강화)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여 단순 재건축에서 벗어나 자족기능 확충,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향상
- (삶의 질 향상) 최신 건축기준, 친환경·스마트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주차난 해소, 층간소음 감소, 난방비 절감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도시재생(I -2-일반재정③)				
① 도시재생(5641)			-	-
▪ 도시재생사업(5641-301)	지역균형발전	5,624	4,295	
· (내역사업)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지원	특별회계	-	2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 과 지 표	실 적			목 표 치	'24 목 표 치 산 출 근 거	측 정 산 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①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45%)	-	-	신규	100% (45%)	특별법 제정('23.12.26) 및 시행 (‘24.4.27)에 따라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기반 마련	①기본방침수립(5%) + ②기본계획 협의(1%)×5곳 + ②시행령·시행규칙 제정(10%) + ④특별위원회 설치(5%) + ⑤법령, 기본방침 지자체 설명회 (5%) + ⑥상설협의체 운영(5%)×3회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관련문서
② 선도지구를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25%)	-	-	신규	100% (25%)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최초 사업시행을 위한 1기 신도시(5 곳)별 선도지구 1곳 이상 선정	①선도지구 선정(2%)×5곳 + ②선도지구 지자체별 평가항목 발표(5%) + ③선도지구 공모 공고 (5%) + ④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1%)×5곳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관련문서
③ 체계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30%)	-	-	신규	100% (3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 완방안('24.1.10)에 따라 1기 신 도시(5곳) 대상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컨설팅 제공	①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원 방안 마련(10%) + ②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 마련(5%) + ③교통계획 기본방향 수립(5%) + ④플랫폼 특화시스템 구축(5%) + ⑤미래도시 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5%)	보도자료 메모보고 등 관련문서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Ⅲ-1-③)

□ 추진배경

- 정부는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270만호* 공급 로드맵('22.8), 공공분양(뉴:홈) 50만호('22.10) 및 공공임대 50만호('23.1) 공급계획 발표

* 270만호 중 공공택지에서 88만호, 도심복합사업에서 20만호 공급

-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나

- 지난해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공급 위축 장기화시 건설산업, 지역경제 등에도 영향 가능성 존재하여

* '23.1~11월 인허가는 29.4만호(전년동기比 △37%), 착공은 17.0만호(전년동기比 △52%)

⇒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 확충 및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공급 견인

- (공공주택 공급)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호)을 상회하는 14만호로 확대

- 용적률 확대,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추가확보하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공급 추가 확대

-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확대('23년 4천호→ '24년 1.5만호)

*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LH는 토지를 출자, 민간이 주택건설 담당하여 수익 배분

- “관계기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하여 LH·지방공사와의 현안점검 등을 통해 차질없는 주택공급 이행

② 신도시 등 사업속도 제고를 통한 공공주택 본격 공급

-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곳의 주택착공을 본격 착수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 광명시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지구계획 수립 추진
- (보상조기화) 공공택지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조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③ 공공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한 사업 재원 다각화 및 기관참여 확대

- (신도시 리츠 도입) 신도시 사업 조기화를 위한 신도시 리츠에 다양한 재원이 참여토록 여건 마련
- (지방공사 참여 확대) 지방주택도시공사(GH, iH 등)의 역할 확대 하여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추가 인력·자본 확충 추진

④ 일몰연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공공복합사업) 사업 연속성 확보 및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해 일몰을 연장('24.9→'27.9)하고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연내 1만호 사업승인과 1.5만호 지구지정 등으로 공급 가시화
- (민간복합사업)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위법령 마련 추진

⑤ 제도개선,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 (제도개선) 소규모주택정비의 진입문턱 완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교통·경관심의 등) 확대

*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완화(現2/3→60%, 관리지역 50%)

- (사업비 지원) 기금융자 한도를 확대(300→500억)하고, 관리지역* 국비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기반시설 등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블록별 정비계획을 수립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24년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계획 수립	2월	10%	메모보고(장관)
	도심 복합사업 일몰연장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3월	5%	의안정보시스템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3월	5%	의안정보시스템
	3기 신도시(인천계양) 주택 최초 착공	3월	5%	보도자료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3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2/4분기	공공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후보지 공모	4월	5%	보도자료
	소규모정비 사업요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4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신도시 리츠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시행)	4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공모	4월	5%	공모공고문
3/4분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1차)	7월	5%	지구지정 고시
	‘25년도 공공주택 공급계획(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장관)
4/4분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10월	5%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 승인	12월	5%	사업승인 고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차)	12월	5%	지구지정 고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12월	5%	내부방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 (용적률 상향 등)	12월	5%	변경승인 고시
	‘24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최종 점검회의 개최	12월	5%	메모보고(장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지원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주민(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인 간 참여한 이견 조율을 위한 관계자 면담 및 설명회 개최
- 「도심복합개발법」 제정(‘25.2 시행)에 따라 부동산신탁·리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인·허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현안 및 추진사례 공유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관계기관 회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 지방공사 등 회의 개최	월 1회
현장방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소규모 정비사업, 쪽방촌 등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수시
주민 면담 등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관련 이해 관계자(주민대표 등)와의 면담 및 설명회 개최	수시
간담회	부동산신탁 및 리츠의 민간 도심복합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청취	'24.2월, 4월
워크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지역별 현안 공유	'24.5월
설명회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관련 지자체 설명 및 의견수렴	'24.9월

☐ 기대효과

- 270만호 공급 로드맵,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이행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민간 위축 보완하고,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통해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조기화
- 일반 정비사업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주거지에 정비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도심지 내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_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공공주택 공급확대(45%)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15%)	-	-	-	법령 등 개정	신도시 리츠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표로 설정	개정완료(공포·시행)	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10%)	-	-	-	지침 개정	보상 조기화를 통한 신도시 사업 속도 조기화를 위하여 지침 개정을 목표로 설정	개정완료(발령)	법령정보센터
- 공급점검회의개최 (10%)	-	-	-	4회 이상	공급물량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공급 점검회의 정례 개최를 목표로 설정	회의 개최	메모보고(장관)
- 민간참여공공주택 사업(10%)		-	0.4	1.5만 호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 물량을 기준으로 설정	공모 공고	공고문
㉡ 도심사업을 통한 우수입지의 주택 공급 추진(30%)							
- 도심복합지구 지정(5%)	7곳	2곳	4곳	5곳	전년대비 1곳 증가한 5곳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	지구지정 고시	고시문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				법 제정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목표로 설정	제정완료	법령정보센터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10%)	-	-	-	법안 발의	도심복합사업 일몰연장을 위한 관련 법안 발의를 목표로 설정	발의완료	의안정보시스템
㉢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소규모정비 활성화(25%)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 (15%)	-	-	-	법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개정완료(시행)	법령정보센터
- 자율주택 및 가로 주택정비 사업지 기금융자 지원 (10%)	99	41	71	72	기금 융자한도 확대 및 특례 추가 등을 통한 융자지원 대상 사업지 확대	기금 지원 실적	메모보고(실장)
* 단위 : 개소							

(1) 주요 내용

□ 임대차 제도 합리화 및 주거 부담 경감

- (임대차 제도 합리화) 임대차 규제 전면 재검토, 임대차 갈등 조정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제도개선 추진
-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 확대, 임대사업자 허위신고 검증을 위한 정보 연계, 안심전세앱 고도화 등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
- (주거 부담 경감)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전·월세대출 등 기금대출을 지원하고, 청년드림통장,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주택관리 강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을 확보 하고, 중대하자 우선처리·하자판정기준 마련 등 하자관리 강화 추진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공급임대 공급 확대)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4년 공공 임대 공급규모 상향 조정(총 11.5만호, 국정과제 목표대비 1.5만호 상향)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가구 주거지원 확대(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등)
- (노후임대 품질개선) 재정비·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되는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 구축

- (주거약자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실버스테이 신규(시범사업) 추진,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주거약자 지원 강화

□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률·금융·주거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개선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회복 도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실적	-	218, 352 호	215, 196 호	216, 775 호	최근 2년간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평균으로 목표치 설정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호수 통계	수탁은행별 자료를 집계한 HUG 실적자료 메모보고(정책관)
㉡ 공공임대주택 공급(만호, 사업 계획 승인)	11.2	11.3	7.78	11.5	국정과제 목표(10만호)를 상회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메모보고(정책관)
㉢ 주거급여 선정기준(%)	45	46	47	48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중위소득 50% 목표)	중앙생활 보장의원회 심의의결	메모보고(정책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임대차 제도 합리화) 집값 하락 전망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가중될 우려

* 전세가격 변동률(% 동향): '23.8월 0.15 → '9월 0.32 → '10월 0.36 → '11월 0.27 → '12월 0.12 → '24.1월 0.05

** 월세 변동률(% 수도권): [非아파트] ('23.11월) 0.35, (12월) 0.26, ('24.1월) 0.18 (6월 누계) 1.49

- 임대차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갱신 분쟁증가 등 시장혼선이 지속됨에 따라 임대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 제기

⇒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대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임차인 보호체계 구축 등 예방조치 적극 추진

- (주거위기 극복) 1인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주거관련 트렌드 변화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증대되는 가운데,

-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한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 및 집단행동 등 갈등요인 상존

⇒ 포럼, 토론회 등 공론화를 통해 적극적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주민 의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 추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Ⅲ-2-①)

□ 추진배경

-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하였으나 전세가격 급증, 계약갱신 분쟁증가 등 시장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 제기

* (계약갱신권) 임차인 1회 갱신요구, 임대인 갱신거절 제한, (전월세상한) 인상을 5% 제한

- 전세사기가 지속 발생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

☞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도 강화할 필요

- 지속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집값 하락 전망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계속하여 가중

* 전세가격 변동률(% , 동향): '23.8월 0.15 → 9월 0.32 → 10월 0.36 → 11월 0.27 → 12월 0.12 → '24.1월 0.05

** 월세 변동률(% , 수도권): [非아파트] ('23.11월) 0.35, (12월) 0.26, ('24.1월) 0.18 (6월 누계) 1.49

☞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모기지 지원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부당한 관리비 부과, 관리비리*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한 관리비 상승 요인 발생

*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연평균 62건 가량의 관리비리 신고 접수('15~'23)

☞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 절감 및 권리보호를 위해 관리비 투명성 제고, 관리비리 근절 등 감시체계 강화 필요

- 국민 안전·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중대한 하자는 조속히 해결하고 일반 하자도 법정기한 내 처리를 통해 국민 주거의 질 보장 필요*

* 법정기한 내 하자분쟁심사위원회 사건처리 및 시급안전 조속처리 요구('23년 국정감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임대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 **(임대차 제도개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임대차 규제 전면 재검토,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인 공급확대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도모
 - 임대차2법의 영향을 이론모형 등을 활용해 심층 분석·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임대차신고 편의제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 안내 강화
 - * 모바일 임대차 신고 기능 도입, 미신고 대상에 대한 안내 강화 등
- **(임대차 갈등조정)** 임대인-임차인 분쟁의 원활한 조정 및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 지원 활성화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체계 고도화 】

- **(임차인 보증금 보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 연계사업'에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임대차신고)만으로 대항력을 갖출 예정임을 확인하고, 주담대 심사에 반영하여 대출 실행
- **(허위신고 검증)** 임대사업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허위보증가입 방지를 위해 RTMS와 렌트홈·HUG 정보를 연계하여 검증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정보와 렌트홈·HUG에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정보·서류를 대조하여 진위여부 확인
- **(확정일자 열람권한 확대)**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확정일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RTMS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 (現) 해당 소재지에서만 열람 가능 → (改) 전국 어디서나 열람 가능
- **(안심전세앱 고도화)** 안심 전세계약 사례 표출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챗봇 성능 개선, 전자증명서 추가 등 이용자 편의 제고

【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 및 내집마련 기회 확대 】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출산 시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저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대출 상품 출시

구분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기존(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	8.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대상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금리	2.15~3.25%	1.6~2.7%	1.5~2.7	1.1~2.3%

- **(청년 전세대출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이용 가능한 주택기금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대출)의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 (現)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 → (改)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 버팀목대출 만기 연장 시 1회에 한해 금리가산이나 필수 상환 의무 등 패널티 없이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청년 월세대출 지원)**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월세계약 종료 후 최장 8년간 분할납부 허용

*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청년드림통장·대출)** 청년층 대상으로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금리 (2.8→4.5%)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하고,

- 주택드림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최저 금리 2.2%)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現) 청약 기회 + 저축기능 → (改) 청약당첨 시 저리 대출을 패키지로 제공

- **(신생아·다자녀특공)**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이 증명되는 가구 대상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연 1만호 공급

- 혼인 및 출산 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 하고, 다자녀 특공 자격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부부 개별신청 허용, 배우자 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반영 등

【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통한 주거부담 경감 】

- **(관리비 투명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의무공개 확대
(의무관리대상→100세대 이상)로 **비리 근절 및 입주민 알 권리 보장**
 - K-apt 31개 비리의심 항목*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수행기관 지정**·점검을 통한 관리 투명성 확보
 - * 「K-apt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의 항목 통·폐합으로 조정(前44개→現31개)
 - **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 한국부동산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하자관리 강화)** 하심위의 하자사건 심사시 국민 안전·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는 선별하여 우선 처리**(Fast-Track)
 - * 구조체 균열 등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거나, 승강기 고장 등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
 - ** 중대하자는 위원장 결정 후 30일 내 처리(현재는 중대하자 미선별 + 평균 420일 소요)
-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성능을 보장하고 하자발생시 객관적 처리가 가능토록 하자 판별, 조사방법, 보수비용 등 기준 신설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신생아 특례대출 개시	1월	10%	보도자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규칙」 개정안 마련	2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마련	3월	5%	방침결정(정책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신생아·다자녀 특공 관련)	3월	10%	관보게재
	청년 월세대출 한도확대 및 분할납부 허용	3월	5%	관련문서
2/4분기	금융권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 확대	6월	5%	메모보고(실장)
	중소기업 청년 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주택 임대차 신고 모바일 시스템 구축	7월	10%	보도자료
	전국 주민센터 확정일자 열람 기능 개선	8월	5%	공문시행
4/4분기	안심전세App 시스템 전면개편 및 고도화	10월	5%	메모보고(실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리비 K-apt 공개 세대수 확대)	10월	10%	관보게재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마련	11월	10%	메모보고(장관)
	임대차분쟁 법률지원서비스 운영현황 점검 결과 보고	11월	5%	메모보고(실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방안 마련	12월	10%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확정일자 제도 운영 실태 등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24.3월
회의	k-apt 관리비 조기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회의	'24.6월
회의	안심전세업 전문가-청년자문단 회의	'24.7월
회의	임대차2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4.10월

□ 기대효과

- 임대차법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임대인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임차인 주거 안정 도모
 - 정보연계를 통한 임차인 보호체계 구축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에 기여
- 공동주택 관리비등 공개·비교대상 확대를 통한 관리비리 근절 및 단지별 상호작용 유도 등으로 관리비 절감 기대
- 하자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입주민 분쟁·피해를 줄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Ⅱ-2-일반재정①)				
①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1)	기금	113,605	123,645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401)	기금	113,605	123,645	
주택정책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주택정책지원(1034)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탁(307)	일반회계	26	27	
▪ 주택청약 시장관리(309)	일반회계	12	1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320)	일반회계	71	73	
부동산행정정보화(Ⅱ-2-일반재정①)				
① 부동산행정정보화(4263)				
주택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502)	일반회계	15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규정 개정 (20%)	-	-	신규	훈령 개정	확정일자 전국 열람 권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관보게재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대상(단지수) (20%)	17, 583	18, 057	18, 531	19,000	전국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여 매년 평균 2% 정도 증가하던 K-apt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수를 3% 이상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목표 설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등재된 관리비등 공개대상 공동주택단지	한국부동산원 통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	-	-	신규	규칙 개정	신혼·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혼인 시 불리했던 청약조건들을 개선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관보게재
㉣ 주택구입·전세 자금 지원 실적(호) (25%)(공통)	-	218, 352	215, 196	216, 775	최근 2년간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평균으로 목표치 설정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호수 통계	HUG 실적자료
㉤ 안심전세App 누적 다운로드 수 (15%)	-	-	398 만	60만	'23년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수 대비 50% 증가라는 과감한 목표치 설정	실제 다운로드수 / 목표 다운로드수	구글 및 앱스토어 앱 다운로드수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Ⅲ-2-②)

□ 추진배경

- 現 정부는 5년간('23~'27)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23.1)하여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뉴:홈) 50만호 등 균형 있는 공급 추진
 - 공공임대 재고율 8.1%('22 181만호)로 OECD 평균('20 7.0%)를 상회하나, 경기침체 등으로 저렴하고 안정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수요 지속
 - 또한,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주택 공급 부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 증대
 - 아울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을 활용한 주거지원도 강화할 필요

- 한편, 민간임대주택은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공급 감소 추세*로 등록임대 정상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등을 통한 활성화 필요

* 등록임대 재고(만호) : ('20) 153.3 → ('21) 153.3 → ('21) 151.5 → ('22) 143.6 → ('23) 139.2

- 합리적 규제 개선,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차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 기반 확충
-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가구 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돌봄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 증가

* 합계출산율이 '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 OECD 국가 중 유일한 '0명'대

** 고령사회^{14%} → 초고령사회^{20%} 도달년수 : <佛>29년 <美>15년 <日>11년 <韓>7년

- 주거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신혼·출산가구 등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필요, 고령자 등 수요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도 필요

* 초저출산은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과 연관('23.12, 한은)

👉 도심 내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공공임대 지속적인 공급과 함께 민간 역량을 활용한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임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망 강화

- **(공공임대 공급 확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4년 공공임대 공급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 '24년 공공임대는 총 11.5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3.5만호, 매입임대 4만호, 전세임대 4만호 공급 추진
 - * ('23년 공급실적) 7.9만호 → ('24년 공급계획) 11.5만호
 - 매입임대는 고품질 주택이 도심 내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약정 중심으로 공급하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0.5만호) 등 구축매입도 확대*
 - * ('24년 경제정책방향) LH 등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공공매입 단가(現, 원가이하 매입) 현실화, 매입기준 및 절차개선 등 검토 → 물량 확대 추진
 - 또한,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임대(3천호)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6)
 -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단기간 내 도심 공급이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공급확대방안 마련('24.上)
- **(공급방식 개선)** 건설비 상승,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차질없는 공공주택(건설형) 공급을 위해 공급여건 개선방안 마련*('24.上)
 - * 업계 건의사항 수렴 및 과제발굴(1분기) → 개선방안 마련 및 대외 발표(2분기)
 - 매입임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등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매입가격 평가방식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24.2)
 - 또한,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신축매입약정 PF 보증 도입('24.3), 주차장* 및 용적률**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24.5)
 - * (現) 30㎡미만 세대당 0.3대 가능 → (改)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추가완화
 - ** (現) 지자체별 조례 한도 1.2배까지 완화 가능 → (改) 법제한도의 1.2배까지 완화 가능
 - 아울러, 신속하고 편리한 공공임대 청약·입주자 선정 등을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24.12)

-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주거불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3단계 지원 체계* 구축 및 다가구·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24.1)

* ①기존 주택 매입임대 → ②전세임대 → ③대체 공공임대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요건 완화, 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등

- LH가 現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24.3)

- **(출산가구 지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출산가구에 연 6만호(공공분양 3만호, 공공임대 3만호)를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24.3)

- 공공임대 입주가구가 출산 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변동과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② 수요자 맞춤형 특화임대 공급 및 공공임대 질적 제고

- **(청년 맞춤형 공급)**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부담 가중, 높은 직주 근접 수요 등 청년층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에 청년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시설·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임대 본격 공급('24.上, 첫 공모)

- 창업인·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연계 주택(연 4천호), 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24, 5천호 착공) 등 기존 특화임대도 지속 공급

-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단 등 중기 근로자를 위해 일자리연계 주택의 중기 기숙사(관사) 공급 실효성 제고*(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4.8)

* (現) 엄격한 소득 등 제한으로 중기근로자 입주 한계 → (改) 입주자 선정 재량 부여

- **(특화형 임대 공급)** 지역 여건, 수요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화형 공공임대(건설·매입) 활성화

- 출산·청년농업인 장려 등 지역여건을 반영, 지자체가 테마를 기획하는 지역제안형 임대주택(건설형) 공급기반 마련(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24.8)

- 건설형 특화임대 공모사업(4개 유형*)의 체계적인 선정·관리, 공급 촉진 등을 위한 통합 업무처리지침^{훈령} 제정(5월)

*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임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정신질환자 자립,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을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 추진('24.6, 2천호), 운영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24.6)
-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23.12)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공모
- **(장기공실 해소)** 행복주택 장기공실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3 → 2단계로 간소화*하여 단기간 내 효과적인 입주자 모집 유도
- * (現) 1단계 소득 및 자격기준 완화 ⇒ 2단계 소득·자산배제 ⇒ 3단계 중장년층 입주 허용
→ (改) 1단계 소득 및 자격기준 완화 ⇒ 2단계 소득·자산배제 및 중장년층 입주 허용
- 청년·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을 6 →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수요를 통한 공실해소가 어려운 곳은 군·대학 등 기관공급 확대
- **(노후임대 품질 개선)** 싱크대 등 설비 교체, 빌트인 가구 추가 설치 등 노후 영구임대 세대 리모델링으로 입주자 만족도 제고('24년 1만호)
- 준공 15년 이상 영구·매입임대*는 단지 내 노후시설(공용부 등) 개선, 내진보강·승강기 설치 및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 * 준공 후 15년 이상('22년말) : 영구·50년임대(29.9만호), 매입임대(4.28만호, 18.7%)
- 준공 20년 이상 국민임대 시설개선 신규 반영에 따른 추진전략 수립 및 CCTV·공동배관 등 노후 시설물 적기 개선 추진
- 공공임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과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공공 임대 생애주기 관리 추진전략 수립* 및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 * 단순 유지관리(점검) - 시설개선 - 리모델링 - 재정비 등 주택의 생애주기 고려
- ** '24년 SH 2곳(하계5, 상계마들), '25년 LH 1곳(중계1) 사업 승인 예정

③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 활성화 기반 마련

- **(등록임대 활성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열기에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아파트 등록임대*를 합리적 범위 내 도입
- * (단기 등록임대) 기간은 6년으로 하되, 非아파트로 한정('24.2월 법안 발의)
(아파트 등록임대) 기간 10년 이상 85㎡ 이하로 한정('23.3월 법안 기 발의)
-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 도입('24.上)

- 리츠가 매각수익 대신 임대수입으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공공지원 확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사업참여 부담 완화, 사업착수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24.上)

*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리파이낸싱 허용, 민간주식 담보대출 요구조건 및 양수도 기준 완화, 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공사비 검증 조건부 면제, 중복절차 통폐합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 추진전략 수립 연구 계획 수립	1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방침결정	1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공모 공고	3월	5%	공고문
	'24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3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추진	3월	5%	방침결정(장관)
	'24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3월	5%	메모보고(실장)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근거 마련 시행규칙 등 개정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일자리연계형 주택의 중기 기숙사 공급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4월	5%	방침결정(실장)
	'24년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4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역제안형 임대주택 신설 방안 마련	4월	5%	방침결정(실장)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발표	5월	5%	보도자료
	매입임대 공급확대를 위한 훈령 개정 방침결정	5월	5%	방침결정(정책관)
	특화형 매입임대 운영관리 연구용역 발주	6월	5%	관련 공문
3/4분기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공고	7월	5%	방침결정(정책관)
	공공주택 청년층 선호 조사 결과 보고	7월	5%	메모보고(실장)
	공공주택 공급 여건 개선방안 마련	7월	5%	메모보고(실장)
	행복주택 청년층 거주기간 및 기관공급 확대	8월	5%	방침결정(실장)
4/4분기	공공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12월	5%	공문(사업시행자)
	'24년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지원 완료	12월	5%	공문(사업시행자)
	공공임대 연간 공급 실적 점검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안정적인 공공·민간임대 공급을 통해 주거 부담이 완화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자
- **(이해관계집단)** 공공임대 공급으로 재무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시행자, 등록임대 제도개선 등에 민감한 민간 임대사업자
 - 지역 내 공공임대 공급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지역반대에 따른 민원 업무 증가, 관련 주거복지업무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자체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방문	'24.1월
간담회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 업계 간담회	'24.1월
현장방문	반지하 매입임대 커뮤니티시설 방문	'24.2월
수요조사	청년층 선호형 공공주택 수요조사	'24.6월
현장점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상반기 사업현황 점검 및 현장점검	'24.7월
현장점검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하반기 사업현황 점검 및 현장점검	'24.12월

□ 기대효과

- **(공공임대 공급 확대)** 양질의 공공임대 공급,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망 강화
- **(수요 맞춤형 공급)** 청년특화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맞춤형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선택권 보장 및 주거 불안 해소
- **(노후임대 품질 개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 및 주거만족도 제고
- **(민간임대 활성화)** 등록임대·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통한 임차가구 주거안정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①)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42,131	38,780	
	▪ 다가구매입임대출자(402)		28,393	24,343	
	▪ 전세매입임대경상보조(403)		1,237	1,453	
	▪ 영구임대출자(407)		1,797	823	
	▪ 통합공공임대출자(411)		10,704	12,161	
	②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	주택기금	32,370	36,120	
	▪ 다가구매입임대용자(401)		32,370	36,120	
	③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1337)	주택기금	41,750	45,469	
	▪ 전세임대용자(401)		41,750	45,469	
	④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1338)	주택기금	11,900	14,013	
	▪ 통합공공임대용자(406)		11,900	14,013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②)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47,989	43,922
		▪ 다가구매입임대출자(402)		28,393	24,343
		▪ 행복주택출자(408)		6,846	5,288
		▪ 통합공공임대출자(411)		10,704	12,161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412)		2,046		2,130	
②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		주택기금	32,370	36,120	
▪ 다가구매입임대용자(401)			32,370	36,120	
③ 통합공공임대지원용자(1338)		주택기금	11,900	14,013	
▪ 통합공공임대용자(406)			11,900	14,013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③)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4,221	3,000
		▪ 임대주택리츠출자(409)		4,221	3,000
		②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1333)		17,088	14,770
		▪ 민간임대용자(404)		17,088	14,7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공공임대 공급확대(40%)	-	-	1.2	1.5 만호	-전월세시장 여건을 고려해 전년 실적 대비 목표치 25% 상향	① '24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적 목표대비 달성률 x 30%	공문(공급자), 메모보고(실장)
	-	-	신규	제도 개선	-'23년 매입실적 저조(목표 대비 21%)를 만회하기 위해 매입가격 현실화,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 제도개선안 마련 -매입임대 규제완화로 난개발, 주차난 등 우려하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용적률·주차장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② LH 제도 개선안 마련 x 25% ③ 국토계획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x 25%	LH 보도자료, 시행령 개정
	-	-	-	500호	-제도 도입 이후 최초 공모이며, 기존 공모사업 실 및 도심 내 부지확보 여력 등을 감안하여 도전적 목표 설정	④ 청년 특화임대 목표치 대비 공모 실적 x 20%	메모보고(실장)
㉡ 공공임대 질적 개선(30%)	-	-	-	수립	-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 전략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동력 확보	① 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전략 수립 여부 x 50%	메모보고(실장)
	-	2,000	2,000	2,000 호	-테마별 ·공유공간을 갖춘 신축 주택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24년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 추진	②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 목표치 달성 x 50%	방침결정(정책관)
㉢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민간 임대 활성화 기반 마련(30%)	-	-	신규	제도 개선	-단기 등록임대 복원으로 소형 임대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	①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x 40%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	-	신규	제도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법 개정	②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x 30%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
	-	-	신규	제도 개선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③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등 제도개선 x 30%	보도자료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Ⅲ-2-③)

□ 추진배경

- **(주거약자)** 베이비붐 세대('55~'63년, 710만명)의 고령층 진입, 저출산 가속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

* 고령사회^{14%} → 초고령사회^{20%} 도달년수 : <佛>39년 <美>15년 <日>10년 <韓>7년

※ 고령가구는 자가거주 비율(77.6%)이 높으나, 소득이 낮아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음(월소득 대비 임대료 : 고령 29.4% vs 일반 15.7%)

- 또한,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필요

- **(주거취약계층)** 그간의 주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 46.2만 가구 등 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

- 특히,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및 이재민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는 등 두터운 지원이 절실한 상황

* '22년 지하층 거주가구(수도권) : 34.8만 가구

- **(주거비 부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악조건 속에서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주거위기가구 확대 우려

*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5% → ('22) 5.1% → ('23) 3.6%

**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21) 15.7% → ('22) 16%

- **(주거복지 전달체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재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 신청주의의 한계로 여전히 제도·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비주택거주자 등 사각지대 존재('19 주거실태조사, 서비스 미신청 사유 : 제도모름 25%, 신청 어려움 22% 등)

- 온·오프라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편차 없는 주거안정망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

- **(고령자복지주택)**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최대 3천호로 확대*하고, 중산층 고령가구 입주기회도 확대**

* (기준) 신축 1천호 → (향후) 리모델링형, 민간제안형 신설(각 1천호)하여 연 3천호 공급

** (現) 사회배려계층 순차 입주 100% → (改) 저소득층 배점제 60% + 중산층 포함 추첨 40%

<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 >

공급체계	신축 ^{현행}	리모델링 ^{신규}	민간제안 ^{신규}
입지특성	지역 중심	도심 중심	도심 & 지역
공급방식	신규 건설	노후임대 리모델링	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
공급목표	연 1천호	연 1천호	연 1천호

- **(실버스테이)** 고령자에 특화된 시설·커뮤니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 거주(20년) 가능하고, 식사·청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동작감지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적용

- **(주거약자용 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정

- 지체장애 등 특정 장애유형에만 적용되는 선택시설(높이조절세면기 등) 중 일부 항목을 고령자 등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 **(주거복지사 배치)**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밀집 거주하는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를 지방공사 단지까지 확대

* '23년 500세대 이상 LH 영구임대단지에 배치(112명)

- 입주민 주거복지 상담, 사각 지대에 처한 입주민 발굴과 자원연계, 주거위기·정신위기 가구 사례관리 등 밀착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②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거주 여건 조성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항목으로 침수방지시설을 법제화하여('24.1월), 자가 가구의 설치를 유도
 - 또한, 향후 매입임대주택 정기점검 시 반지하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 기능 점검 및 보강 시행(매년 2-3분기)
- **(주거상향 지원)**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 대상자를 폭염에 취약한 옥탑가구 등*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 *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등 주요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 등
- **(이주비용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무이자 보증금 대출*(0.9천호→ 1천호) 및 이사비용(40만원) 지원(7.6천호→ 9천호) 확대
 -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최대 8천만원, 5천만원 이하 무이자, 초과분 1%대 저리
- **(긴급지원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 공가를 지자체에 순환형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여 일시적 주거위기 가구의 임시거처로 공급
 - * 운영희망 수요조사→ 임대주택 공가 사용 협의→공급계약 체결→대상자 선정 및 지원
 - LH-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여 공급

③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을 확대(기준중위소득 47%→48%) 하고,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도 상향('23년 比 3.2 ~ 8.7%)
 - *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되는 실제임차료
 - '25년 기준임대료 및 수선유지비 상향(건설원가 상승분 반영) 추진
- **(청년월세 지원)** 기존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청년월세 지원(2차) 추진
 - * (1차) 월세 60만원 이하, 생애 1회 지원
 - (2차) 월세 70만원 이하, 既 수혜자도 수혜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중복지원)
 - 지자체·대학 등에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렛) 배포, 홍보영상 송출(유튜브, 카드뉴스 등) 등을 통해 신청 적극 독려('24.3.~)

- **(주거복지센터)** 지역별 편차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설치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 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24.10~)
 -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대상 교육·컨설팅, 대외 협력 및 유관기관 연계 등
- **(온라인 전달체계)** 온라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이홈포털'의 사용자 편의 향상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 추진
 - * 홈페이지 UI 개편, 인공지능 기반 상담 챗봇 서비스, 실시간 임대주택 모집공고 제공 등
- 서비스 개편에 따라 플랫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확산을 위한 SNS 홍보, 오프라인 출시 행사 등 대국민 캠페인 추진('24.3~4)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개정	1월	5%	관보 게재
	'24년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 수립	3월	5%	관련 공문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매뉴얼 배포	3월	5%	관련 공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업무처리 가이드 배포	3월	5%	관련 공문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변경·배포(지자체)	3월	5%	관련 공문
2/4분기	마이홈포털 AI챗봇 서비스 출시	4월	5%	보도자료
	주거복지앱 온·오프라인 홍보	5월	5%	메모보고(실장)
	실버스테이 세부추진방안 마련	5월	5%	보도자료
	청년월세 홍보 결과보고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8월	5%	보도자료
	고령자복지주택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	9월	5%	방침(실장)
	'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9월	5%	관보 게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9월	5%	방침(국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자체별 실적 점검	9월	5%	관련 공문
4/4분기	주거복지센터 지원기관 설치	10월	5%	메모보고(실장)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	11월	5%	관보 게재
	'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적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신규후보지 선정	12월	5%	보도자료
	'24년 순환형 긴급지원주택 추진 실적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주거복지사 배치사업 성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 등
 - 주거급여 확대, 청년월세 지급 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저소득층, 청년층 등
- **(이해관계집단)** 청년월세 지급, 주거상향 이주 등으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지자체, 공공주택을 공급·관리하는 공공사업자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장 방문	'24.3월
현황점검	집중호우 대비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점검	'24.6월
현장점검	이사비 지원사업 지자체 현장 점검	'24.9월
현장방문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장 방문	'24.10월
현장점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자체 현장 점검	'24.11월

□ 기대효과

- **(주거약자 지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특화 서비스도 지원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자연재해에 노출된 비정상거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 지원 등을 통해 최소주거권 보장
-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청년층 등에 주거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위기 해소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이홈포털 등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빠짐없이 주거 정책 전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①)				
① 주택정책지원(1034)	일반회계	22,558	26,006	
▪ 주거급여지원(302)		21,737	25,564	
▪ 청년월세한지특별지원(311)		821	442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②)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33,861	28,546	
▪ 다가구매입임대출자(402)		33,467	28,393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412)		394	153	
② 다가구매입임대용자(1336)	주택기금	58,093	32,370	
▪ 다가구매입임대용자(401)		58,093	32,370	
③ 주택정책지원(1034)	일반회계	65	130	
▪ 주거급여지원(302)		65	130	
④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237)	주택기금	-	2,550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401)		-	2,550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③)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435	469	
▪ 영구임대출자(407)		271	210	
▪ 통합공공임대출자(411)		164	259	
③ 주택정책지원(1034)	일반회계	17	29	
▪ 주거급여지원(302)		17	29	
① 임대주택지원(1440)	주택기금	-	57	
▪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412)		-	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정 적인 주거환경 마련(40%)	1,255	753	1,060	1,500 세대	급속한 고령화 추세 대응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신규 공급 물량을 작년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향	① 사업추진 목표치 달성 x 35%	메모보고(실장)
	-	-	신규	제도 개선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임법 시행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치로 설정	② 시행령 개정 x 15% ③ 시범사업 공모 x 20%	관보, 공모 공고문
	11	15	112	130명	대규모(500세대 이상) 영구임대 단지(LH 112개, 지자체 37개) 중 85%이상 확대를 목표	④ 영구임대 내 주거복지사 배치 목표치 달성 x 30%	관련공문 (공공주택사업자)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 (30%)	-	-	7,662 (신규)	9,000 호	비정상거처 거주자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및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목표치 산정	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x 50%	메모보고(실장)
	-	-	902	1,000	이주지원 용자 사업수요를 고려 하여 보증금지원 목표치 산정 (전 년 대비 10% 상향)	② 비정상거처 버팀목 대출 실적 x 50%	메모보고(실장)
㉢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 (30%)	127.3	134.5	141.5	145.0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중위 소득 47%→48%)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 추정	① 주거급여 기준 상향에 따른 목표치 (추정 수급가구수) 지원 완료 x 5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	30.4 만 (1차)	20만 (2차)	1차사업 최종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2차사업 신청인원 산출(24.12월 기준)	② 청년월세 2차 신청인원목표치 달성 x 20%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	신규	설치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신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 종사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목표	③ 주거복지센터 지원기관 설치 x 15%	관련공문 (주거복지기관)
	-	-	신규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인 마이홈포털 내 24시간 실시간 주거복지상담이 가능한 AI상담 챗봇 구축	④ 상담챗봇 구축 x 15%	관련공문 (시스템구축사업자)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Ⅲ-2-④)

□ 추진배경

- 과거 전셋값이 급등하여 저렴한 빌라* 수요 증가, 보증보험**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등 전세사기 위험계약이 다수 체결

* 신축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위험계약 체결가능성 높음

** HUG가 보험료를 받고 임대인 대신 반환(기존에는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가능)

- 위험계약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었고, 특히, 빌라왕(서울 강서), 건축왕(인천 미추홀) 등 집단피해 발생

- 이에,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22.9, '23.2, '23.4)

-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야, 정부가 2개월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즉시 시행('23.6)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위원회 수시 개최*를 통해 법 시행 6월('23.6~12) 간 약 1만건을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하고 피해지원** 착수

* 접수부터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50일('23.9 기준) 소요(법정기한 60+15일)

** ①경·공매 특례(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안분, 경·공매 대행) ②주거지원(매입임대, 긴급주거) ③금융지원(무이자·저리 대출, 분할상환, 신용등록 유예) ④긴급 생계비 등

- 다만,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책 보완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피대위·야당은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先구제·後회수'를 포함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야당 단독 강행 회부 등 갈등 고조

* "전세사기 피해회복 1년째 제자리...특별법 추가 개정해야"(세계일보) 등

* '先구제·後회수' 정부 입장 : 정부의 직접지원은 他사기와 형평성, 범죄자 채무를 수조원 국세로 해소 등 쟁점이 많은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 ☞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통한 촘촘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전세사기 예방)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피해 예방 지원

-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보증금 범위의 적정여부를 진단토록 전세 신고가격 분석체계 마련(용역, 21억원)

【 전세 신고가격 분석체계 주요 기능 】

- (가격 적정성 분석) 공동주택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적정성 상시 분석 및 확인
- (전세사기 예방 지원) 적정 가격범위 내 계약의 거래정보를 안심전세앱 등 게재
 - 적정 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계약 관련 정보는 피해조사 등 참고자료로 제공

- (대국민 홍보) 전세계약 시 주요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웹툰·리플릿 제작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대국민 홍보

* 접근성이 높도록 유명 웹툰 작가 등을 활용하여 주요 사례 위주로 제작

- (기초지자체 교육) 주요 피해지역 외에도 기초단위에서 피해 예방 및 지원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

② (주거지원 보완) 보증금 피해가 경감되도록 주거지원 방안 보완

- (협의매수) LH가 現 경·공매 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액도 확대*

* 임차인 外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시행(3.4~),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 조정협의를 거쳐 협의매수하는 방안까지 순차적 확대

- (경·공매 매입)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최장 20년 거주 지원

- (다가구·근생빌라) 매입임대 지원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매입요건 완화*, 근생빌라 등 매입불가 시 전세임대** 등 지원

* (現) 임차인 전원 동의 → (改) 피해자 전원 동의

** 경매낙찰 소유자-LH 간 전세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임대

③ (기존 지원책 확대) 지원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부담 경감

- (경·공매 대행) 법률전문가 대행 비용지원 확대(70% → 100%)
- (소송대리 지원) 피해자 결정 이전에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실시한 경우까지 소송비용 소급 지원
 - * 다만, 피해자 결정 이후 진행 시 필요경비에 준하여 1인당 140만원 한도 지원
- (금융지원 확대)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기존 고금리 은행 대출을 저금리로 조기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지원 확대

④ (절차 효율화) 신속한 피해자 결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 합리화

- (온라인 시스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피해자 신청에서 결정 여부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피해지원 전산망 구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 】

- (피해 접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 진행상황 확인
- (결과 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 재발급도 가능
- (지원방안 연계) 지자체·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 진위 확인

- (심의 조기화) 피해조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피해자 신청 후 결정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법정기한 75일) 피해지원 신속화

* 접수부터 위원회 의결까지 평균 50일('23.9 기준) 소요(법정기한 60+15일)

- (원스톱서비스) 피해지원 대책별로 분산된 접수창구*를 각 지역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전세 피해자의 편의성 제고

* 임대 : LH / 조세안분 : 세무서 / 경매 유예 : 법원 등 * 신용확인 필요한 금융지원 제외

** 서울(2), 경기(1), 대전(1), 부산(1), 인천(1) 총 6개 지역(전체 피해자의 86.7%)

- (금융특화지점)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등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별도 지정하여 원활한 금융지원 제공

* KB 국민은행 MOU를 통해 주요 피해지역의 2개소 이상의 특화지점 운영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보증금 피해 경감 등 전세피해 지원방안 마련	1월	10%	보도자료(안전)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및 금융상담 특화지점 운영 착수	2월	8%	보도자료
	피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기초지자체 방문 교육	3월	8%	메모보고(실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리플릿 배포	3월	5%	공문
2/4분기	전세계약 신고가격 적정성 분석 추진계획 마련	4월	7%	메모보고(실장)
	피해주택 협의매수 방안 시행	4월	5%	LH 공고문
	전세사기 지원정책 사례연구 연구용역 추진	5월	5%	방침(국장)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6월	12%	메모보고(장관)
3/4분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및 운영	7월	8%	보도자료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저리 대환대출 조기화	8월	5%	보도자료
	전세피해자 금융지원 보완 상품 개발	9월	5%	은행 홈페이지
4/4분기	국토부-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담회	10월	5%	메모보고(실장)
	피해지원 위원회 실적점검 및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	11월	5%	메모보고(장관)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12월	12%	메모보고(장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청취 지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간담회	피해지역 현장 점검 및 대전 피해지원센터 방문	'24.2월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실무 교육	'24.3월
관계기관 회의	피해주택 협의매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	'24.3월
관계기관 회의	금융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5월
현장방문	전세 피해상황 점검을 위한 지역 현장 방문 및 지자체 간담회	'24.9월
관계기관 간담회	국토부-전국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금융·주거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개선하여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회복 도모
- 피해 발생 이전에 전세계약 적정가격 분석과 대국민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3	'24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Ⅱ-1-일반재정①)			
① 주택정책지원(1034)			
▪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323)		-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㉑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결정 (20%)	피해자 결정 처리기간 단축 (15%)	-	-	50일	45일	특별법 상 75일 이내에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전적 목표부여 (10% 이상 감축)	실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 처리기간 산출	위원회 안전자료, 메모보고(장관) 등
	전세피해지원 위원회 개최 (5%)	-	-	17	32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시행 7개월 간('23.12.20 기준) 평균 개최 횟수보다 10% 증가한 도전적 목표 부여	위원회 개최 횟수	개최 공문
㉒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계도·홍보(20%)					신규	전세피해 해결은 피해 이후에 대한 지원보다 예방이 근본적 방안으로서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예비 임차인 등 시장 당사자의 인식개선 및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수적임	피해지원 리플릿(5%), 웹툰(5%)·웹드 라마(5%), 피해사례집(5%) 제작 여부	홍보 실적 제출
㉓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20%)		-	-	3,799	8,000	피해지원 방안의 보완 등 내실화를 거쳐 법 시행 6개월('23.12.5 기준) 간 평균 실적의 110%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지원 실적 합계	보도자료
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발의(40%)		-	-	-	개정안 발의	전세특별법 개정안 논의 중 '선구제후회수' 등 사회적 갈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된 대안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회부하여 재의요구까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법안 발의만으로도 협의 과정의 난이도가 최상인 과제임	개정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1) 주요 내용

□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 (공공 주택건설 품질강화) LH의 권한 이관(→조달청) 및 전관 차단, 공동 주택 민간-LH 간 경쟁체제 도입, 법상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등
- 공공주택 전반의 부실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의 「LH 혁신방안」, ('23.12) 차질없는 이행 추진
- (공시제도 개선)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조세·부담금 및 복지혜택 등 타 제도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공정한 부동산시장 기반 마련
- (소비자 보호 강화) 부동산 거래 쏠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개거래 신뢰성 제고 및 전세사기 조사 강화도 추진

□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 (부동산 PF사업 연착륙 지원) PF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부실을 관리하고, 공공의 역할 증대로 사업 정상화를 지원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토지리턴제 적용 확대, 개발부담금 감면 등), PF 조정위 상설화, 건설업계 보유토지 선별적 매입(LH), 비주택 PF사업 상시 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 등 추진
- (리츠 활성화) 리츠 자산 확대를 위해 리츠 우량 자산편입 및 투자 다각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보고서 개편 및 리츠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추진
- (산업 발전 지원)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품질 제고,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신규	100%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해 구조적 으로 조성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공공주택의 공정쟁을 통한 품질강화, 공정한 부동산 시장 기반 마련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 외국인 투기 차단 등을 목표 설정	①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 확보 - LH법·공동주택법· 공직자윤리법 발의 - 공공주택 상·하 준제정 ② 소비자 보호 및 중개거래의 안정성 강화 - 자체대 부동산관 리시스템 전환 및 운영 - 부동산도법 개정발의 -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 ③ 공시제도 개선 - 공시법 발의 - 공시법 시행령 개정 ④ 외국인 투기차단 - 거래허가구역가이드 라인 개정시행	보도자료, 메모보고, 의안정보시스템, 관련문서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신규	100%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리츠 활성화 방안, 공공데이터 공개 등 국가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지표로 구성	① 부동산PF연착륙 지원 - PF조정위 상설화등 법률제정안발의 - 건축물분양법 발의 - 개발사업법규칙 개정 ② 부동산투자기회 확대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발의 - 정보시스템 활용 ③ 부동산산업지원 강화 - 아파트 실거래가 등 정보 공개 - 데이터 개방 - 창업캠프 지원 - 통합 통계 신규생산	보도자료, 메모보고, 의안정보시스템, 관련문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갈등요인

-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기적인
조사만으로는 관리에 한계, 조사기관에 대한 빅브라더 논란도 존재
-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부동산서비스 활성화가 신산업 위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기존 산업계의 반발도 가능

□ 갈등관리계획

- 조사기반 고도화, 신기술 활용을 통해 의심거래 분류·분석 강화로 갈등 해소
- 부동산 유관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산업동향 공유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Ⅲ-3-①)

□ 정책환경 분석

-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금리인상, 고물가, 지역 양극화 등을 주요한 키워드로 인식(국토연구원, '23년)*

* 일반인 1,000명 대상, 20개 키워드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 및 나와의 연관성 조사(한국리서치)

- 이와 함께, 단기 이슈로는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사기 등을, 일반 부동산 시장 이슈로는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을 선정

-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건설업계 위축 우려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등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 오히려 LH에서 건설 전(全)과정의 부실로 인해 인천검단 주차장 붕괴('23.4), 철근누락(7.30, 9.25) 등 국민 생명·재산권 침해 발생

* 감리는 사업시행자(LH)와 계약 → 준공지연 등을 유발하는 적극적 감리활동 어려움

-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가중 및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따른 역전세 발생 등 국민 주거부담은 심화되고 있고

- 한편,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을 통한 주택 대량매집 등 이상동향 다수 확인

□ 추진배경(목적)

- **(LH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 '23년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 사태* 이후 V께서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지시**('23.8.1)

- 이는 ▲LH의 독점적 권한으로 형성된 이권 카르텔,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 ▲감리 등 사업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 LH 무량판 단지는 121개 중 22개 단지 철근누락, LH 외 427개 단지 철근누락 없음

**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함(V 지시사항, '23.8.1)

- ☞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23.12)의 속도감 있는 이행 필요

- **(국민 보유부담 증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 등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및 국민부담 가중*

* (재산세, 주택분) ‘19년 5.1조 → ‘20년 5.8조 → ‘21년 6.3조 → ‘22년 6.7조
(종부세, 주택분) ‘19년 0.95조 → ‘20년 1.46조 → ‘21년 5.7조 → ‘22년 4.1조

-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22.11) 및 동결(‘23.11)하였으나,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 간의 괴리로 인해 공시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

☞ 민생토론회(21번째, ‘24.3.19) 당시 ‘무모한 징벌적 과세 전면폐지’라는 V 말씀에 따라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전세사기 피해 확대)** ‘22년 서울·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가 ‘23년 전국으로 확산*되며 ‘24.2월까지 1.2만명의 피해자 발생

* (지역별 분류)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부산(11.7%), 대구(10.7%) 등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23.6) 등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등 지원방안 추진 중

-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중개사가 전세사기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실망감 가중

☞ 서민주거 안정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저해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V께서 일벌백계를 지시(‘22.7.20)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 부동산 매집)** 우리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을 위해 그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관세청 등과 기획조사를 추진

* 새정부 공약인 외국인 투기규제를 통한 국민 거주권 보호가 국정과제(2-7)로 채택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근거 마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4)·시행(‘23.10),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동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3.8) 등

- ‘22년~‘23년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지속 포착

☞ 시·도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성적인 투기 판단지표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기행위 조사도 지속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공주택건설의 공정경쟁을 통한 품질강화(V 지시사항)

- (전관 카르텔 해체)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입찰 전 과정에서 LH 전관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해체('24.4)
-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대폭 감점하는 등 LH 전관이 존재하면 입찰에 불리한 구조로 재편('LH법 개정안 발의, '24.7)
- (독점적 공급구조 해체) 지금까지 LH가 누린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경쟁구도로 재편함으로써, 민간-LH 간 품질경쟁 유도
-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공공주택법」 개정안 발의, '24.7)하게 하고, 택지도 매각하는 등 민간시행 공공주택 도입 추진
- *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체(LH, 민간)에 보다 많은 공공주택 물량 배정
- (품질 강화) LH 공공주택에는 법상 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LH 내·외부 전문가의 구조검증 강화, 시공 중 구조안전점검 강화, 부실 업체 일정기간 낙찰제한, 구조도면 대국민 검증 등 시행(LH 내규 개정, '24.7)

②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정한 부동산시장 기반 마련(국정과제, V 지시사항)

- (현실화 계획 폐지) 공시가격이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위적 현실화율 인상 폐지 추진
- * 부담금(재산세, 건보료 등), 복지(기초생보, 기초연금 등) 등 60여개 행정목적에 영향
- 또한, 조세·부담금 및 복지혜택 등 타 제도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 방안은 별도로 마련
- 아울러,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11)에 따라 '23년과 동일(≒'20년 수준)한 현실화율을 적용한 '24년 공시도 차질없이 추진

일 정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표준지	개별지	공동주택
결정·공시	1.25	4.30	1.25	4.30	4.30
조정공시	3.14	6.27	3.14	6.27	6.27

* 음영 : 국토부 공시일정, 비음영 : 지자체 공시일정

③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통한 부동산소비자 보호(V 지시사항, 부 업무계획)

- (거래 전(全) 단계 제도개선) 매물-계약-등기 등 거래 쏠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강화
 - (매물단계) 계약 前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가 임차인에 주요정보*를 설명하는 의무 부과(「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4.8))
 -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변제금 등
 -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전문성 강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확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추진
 - * 실무교육 확대(28~32h→64h) 및 실습 위주로 개편, 연수교육에 직업윤리 필수과목 지정
 -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직방 등)과 협력하여 허위매물 등 불법광고 차단 강화, '위법 표시·광고 조치결과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거래완료된 인터넷 표시·광고는 삭제조치 및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이를 알려 재위반하지 않도록 제도
- (계약단계) 국토부와 신고관청(시·군·구청)뿐만 아니라 시·도에도 이상 거래 조사권한 부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4.11)
 - 점차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24.2~)*
 - * ❶통합단일서버(보안강화), ❷간편인증(사용편의 향상), ❸모바일 임대차신고(편의성 증대), ❹정보공개 확대(실거래정보 공개), ❺거래신고 이력조회 기능 도입 등
 -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 운영('24.3.27~6.30) 및 최초로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조사 실시('24.9)
- (등기단계) 등기여부(등기일) 공개('23.7)와 연계하여 자전거래 등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은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강화(반기별)

- **(중개거래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중개사의 손배책임 강화를 위해 공제한도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이 아닌 분쟁 조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24.10)

* 연간 공제한도(現 개인 2억원/법인 4억원)를 위험요인 등에 따라 상향·차등화

- 필요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등록 중개, 명의대여 등으로 발생한 중개사(공모자 포함)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도 검토
- 이와 함께 기존 까끌이 종이계약 관행을 탈피하여 중개거래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서버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

*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홍보, 매뉴얼 배포, 중개사 활용 독려 등 추진

- **(전세사기 조사 강화)**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 등 신기술* 기반 선별모형을 구축하고, 사고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확대(아파트·연립 → 다세대 등)

* (예시)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SNA) 등을 통한 전세사기 임대인간 조직적 공모관계 파악

- 지난해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2,615명) 재점검 결과 적발된 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24.1)

④ **외국인 투기차단을 통한 부동산소비자 보호(국정과제, V 지시사항, 부 업무계획)**

- **(외국인 토지거래 제도 보완)** 외국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위한 정성지표 마련 추진

*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 '23.6월 기준) 외국인 85,358명이 총 87,223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의 0.46% 수준

- **(외국인 투기조사 선별 강화)** 출입국기록(법무부), 세대구성(건강보험공단) 등 추가 연계 외부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조사 강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23.8.22)을 통해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 서류 제출 의무화, 출입국기록,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 자료 공유 법적 근거 마련

** (예) 새롭게 연계된 세대구성 정보를 통하여 귀화 외국인(자녀)와 내국인(부모)간 편법성 증여 거래 조사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1월	5%	보도자료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1월	5%	메모보고(장관)
	'24년 부동산 이상거래(기획부동산, 전세사기 등) 조사계획 수립	2월	6%	방침결정(실장)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결과 발표(상반기)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4월	5%	메모보고(장관)
	LH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 권한 조달청 업무이관	4월	7%	보도자료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6월	6%	방침결정(장관)
3/4분기	LH 공공주택 품질강화 방안 시행	7월	7%	메모보고(실장)
	AI를 통한 전세사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8월	6%	보도자료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8월	7%	보도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9월	6%	방침결정(장관)
4/4분기	공인중개사 공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10월	7%	방침결정(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1월	7%	메모보고(장관)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12월	5%	메모보고(실장)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결과 발표(하반기)	12월	5%	보도자료
	외국인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12월	6%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전문가 자문	설계시공감리 등 LH 사업자 선정업무 조달청 이관을 위한 기준마련	'24.1월
회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을 위한 관계부서 회의 개최	'24.5월
회의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 관련 시·도(광역시자치체) 의견 수렴	'24.6월
전문가 자문	공시제도 개선 관련 학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개최	'24.8월
간담회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협회, 전문가, 업계 등 관계자 회의	'24.11월

□ 기대효과

- 공공 주택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
- 인위적 현실화율 인상 폐지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안정성과 정확성·투명성 강화 및 공시제도의 신뢰성 확보
 - 부동산 기준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다양한 행정제도의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
- 부동산 투기거래·중개 관련 불공정행위의 예방·억제로 소비자 권익 및 국민 재산 보호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및 배상 책임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주택가격조사지원(Ⅱ-1-일반재정 ①)				
①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600	614
			(789)	(789)
	▪ 주택공시가격조사(302)		600	614
부동산공시(VI-1-일반재정 ②)				
①	부동산공시(5731)	일반회계	1,212	1,252
			(1,212)	(1,252)
	▪ 지가조사(301)		875	894
	▪ 부동산거래조사(302)		337	3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 확보 (35%)	-	-	신규	100%	①LH 권한축소 및 이권개입 해소를 위한 업무이관에 수반되는 신규 심사 기준 제정은 총 11건에 달하며, 동 과제는 3개 기관 협업과제일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가 기 정해진 사항으로 3개월 내 완수하여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제 ②전관업체 시장진입 차단, 공공주택 민간개방, 퇴직자재취업 강화 등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LH혁신방안 실질적 완수를 위한 과제이며, 특히 기본권 제한 등 법률적 이슈로 인해 개정 난이도가 매우 높음	① 조달청-LH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 (25%) + ② LH법·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발의 (각 25%×3)	보도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내부보고
㉡ 공시제도 개선 (20%)	-	-	신규	100%	공시가격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및 현실화 계획 재검토 등 국정 과제 이행	① 공시법 시행령 개정 (40%)+ ② 공시법 발의(60%)	법령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 거래시 부동산 소비자 보호 및 중개거래의 안정성 강화 (35%)	-	-	신규	100%	①'06년 이후 약 20년 가까이 229개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를 통합하고 이력조회 기능 등을 추가 하는 등 방대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추진 난이도가 높음 ②시·도에 조사권한 확대 부여는 전세사기 등 이상거래 적시 대응을 위한 선결 과제로써 17개 시·도의 개정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 난이도가 매우 높음 (‘21년 지방이양 과제로 검토될 당시 서울시는 찬성하였으나 경기도 등 다른 시·도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음) ③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인 중개사에게 임대차 주요 정보 설명 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	① 차세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전환 및 운영(20%)+ ② 부동산거래신고법 발의(40%)+ 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40%)	보도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 외국인 투기 차단 (10%)	-	-	신규	100%	상호주의 등 국제법상 대원칙에 부합하고 외교분쟁 우려가 없으 면서도 내·외국인 모두 납득가 능한 정성지표를 마련하려는 것 으로 매우 난이도가 높은 과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00%)	내부방침 관련공문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Ⅲ-3-②)

□ 정책환경 분석

- **(종합)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23.하반기 부동산산업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하락 추세

* 기업체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동산업, 부동산 관련 금융업, 프롭테크 대상으로 표본조사(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 중)

* (조사기간) '23.11.20 ~ 12.5 / (사업체) 총 2,850개(부동산업 2,733, 금융업 75, 프롭테크 42)

- 부동산업계는 PF 시장 위축을 이유로, 부동산관련 금융업계는 상장 리츠의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이자부담 리스크를 이유로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프롭테크업계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

- **(부동산업계 상황) PF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기존 사업장의 정상화·구조조정이 더딘 상황

* PF 대출금리(선순위) : ('21.12) 3~4% → ('22.12) 10~11% → ('23.12) 8~9%

- PF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망 악화 등으로 신규 PF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브릿지론 → 본PF 전환에 애로 발생

- 부실사업장은 만기연장·연체유예가 지속되거나 대주단 이견으로 경·공매가 지체되는 등 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연

* PF 사업장 수(개, <부실사업장 수>): ('22.12)3,642 <633> → ('23.6)3,528 <1,045>

- **(부동산관련 금융업계 상황) 그간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감소, 자산 편중 리스크* 및 신규자산 편입 애로 등에 따른 성장 둔화

* 국내 리츠 자산 비중 : 주택 48%, 오피스 28%, 물류센터 8%, 리테일 8%, 호텔 1% 등
(비교) 미국 : 주택 15%, 인프라 14%, 산업 13%, 데이터센터 10%, 헬스케어 9% 등 분산

- **(프롭테크업계 상황)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전반에 해당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공공정보 공개 확대 요구**

□ 추진배경(목적)

○ **(부동산 PF) 금융권 및 건설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민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부동산 PF사업 부실은 금년 경제 최대 리스크**

- 비주택 사업은 최근 부동산 PF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 우려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나 실태 파악도 어려운 한계

☞ PF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부실을 관리하고 공공의 역할 증대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할 필요(‘1.1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특히,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시행자가 민간 매수자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위기극복 노력 필요

○ **(리츠 활성화) 리츠는 현재 선진국 대비 3~10% 수준*에 불과하나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시장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이므로, 이를 통해 부동산 산업의 활력 회복 필요

* GDP 대비 상장리츠 규모 : 우리나라 0.3% VS 미국 9.1%, 일본 3.2%, 싱가포르 27.0%

- 특히 임대 운영할 우량 부동산을 저렴하게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리츠 규제 합리화 필요

☞ 국민의 우량 부동산(대형 오피스빌딩 등) 투자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추진(국정과제7)

* 우량 부동산 투자수단이 확대되어, 기축 주택 매수 또는 투기 수요 진정 효과

○ **(공공데이터 등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부동산 신산업의 시장 규모*와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국내 프롭테크 투자 규모 추이 : (‘13년~’17년) 3,761억원 → (‘18년~’22년) 5조 2,195억원

☞ 부동산 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맞춤형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창업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관리 확대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부동산 PF사업 연착륙 지원(1.610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공공택지 공급 활성화) 매수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매수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토지리턴제 적용을 확대*('24.1)
 - * 1년 연장('23.8~12→~'24.12) 및 대상 확대(미매각 용지 → 신규 공급 용지 포함)
- 민간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토지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실시('24.3)
 - * 민간사업자는 토지 대금과 공공주택 건설비를 상계처리하여 차액만 납부(평택고덕 시범사업)
-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게 공공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중단된 인센티브 재개 등 공급제도 정비('24.7)
- (개발부담금 감면) 지역의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4년 신규 개발사업(수도권 50% · 비수도권 100%) 감면('24.11)
 - * '14.7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행(~'18.6)한 이후 10년 만에 재적용

《 부동산 PF사업 연착륙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

- (PF 조정위) PF 조정위*의 조정('23.12월 조정안 마련)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관계장관회의 등에 안전 상정('24.3)
 - * 민관 PF사업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 간 갈등 조정(국토부 훈령 근거)
 - ** 공공의 조정 결과 이행을 위해 감사, 경영평가 불이익 등 리스크 해소 필요
- PF사업 조정 수요에 따라 필요시 2차 조정 접수 진행 및 원활한 조정 수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로 격상·상설화 추진('24.12)
- (PF사업 관리) PF사업 부실 관리 및 조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PF사업 이력관리가 가능토록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추진('24.12)

- **(사업장 공공인수)** PF 시장의 연락처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 토지를 LH가 선별적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긴급 지원
 - 본PF 전환이 어렵지만 할인매각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은 LH 직매입(3조원, 채권발행)
 - 또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하여 준공 後 미분양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책 마련
- *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츠
- **(비주택 모니터링 강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분양 및 PF 자금조달 현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체계 마련
 - 비주택 분양 규모, 미분양 현황 등 분양 정보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비주택 분양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추진('24.12 건분법 개정안 발의)
 - 사업별 PF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자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현황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토록 개선('24.6)

②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처로서 리츠 활성화(국정과제 7)

- **(리츠자산 확대)** 리츠의 우량 자산편입 및 투자 다각화(산단·헬스케어 등)를 지원하기 위한 리츠 제도개선 방안 마련('24.5)
 - PFV보다 높은 자기자본율*을 확보하는 리츠로써 안정적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리츠의 진입·운영 여건 개선(「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24.12)
- * 자기자본율 : PFV 통상 5% 이내 VS 리츠(공공지원민간임대)는 26%
- **(재원구조 다각화)** 공모리츠가 기관이 참여한 공모 예외 리츠와 합병할 수 있도록 개선(「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24.12)
 - 또한, 현재 이익의 90%이상을 의무배당하고 있으나, 주주 동의를 받아 신규 자산편입을 위한 자금 유보 허용 방안 마련('24.5)

- (투자자 보호) 리츠 운영 및 자산 현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투자보고서* 개편 및 리츠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추진('24.4)

* 리츠 재무제표, 주주 구성·주요 주주, 자산구성 등 중요 사항을 매 분기 공시

③ 공공데이터 공개 등 국가 지원 확대(부 업무계획)

- (통계품질 제고) 시장의 통합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상가 통합 지수와 지가변동률 관리지역 통합지수를 새롭게 생산·공표('24.6)

* (상가 통합지수) 중대형상가+소규모상가+집합상가+상가통합(추가)

** (지가변동률 관리지역 통합지수) 관리지역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통합(추가)

- 지방 인구감소* 문제, 이용자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지가변동률 보조 지수**로서 '지방침체 지수'도 시범 생산·공표 추진('24.6)

*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하고, 21년 89개 시군구 지정

** 공표 중인 보조지수(6종) : 역세권, 혁신도시, 국가산단, 실질, 농지, 개발사업(3기 신도시)

- 이용자 맞춤형 통계정보 확대 제공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 조사 결과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통계 적시성 개선('24.12)

* (당초) 조사 기준 연도 익익년 3월 → (개선) 조사 기준 연도 익년 12월

-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아파트 '동' 정보(기존 층→동), 등기정보 (기존 아파트→연립·다세대), 거래주체 구분 등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전반의 데이터 공개 확대

- 부동산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민간수요 맞춤형 데이터 70여종을 추가로 개방하여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도모('24.12)

* 택지개발사업지구 건축물 현황정보, 상권별 대중교통 도보 접근성 정보 등

- (스타트업 기업 발굴·육성)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창업캠프 확대 운영(18팀→19팀) 등 후속지원 추진('24.8)

-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육성을 위해 사업자 부담완화 등 지속 가능한 인증제도로 개편('24.12)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토지리턴제 적용 확대 조치	1월	6%	공문
	비주택 건축물 분양통계 상시 관리방안 마련	2월	7%	방침결정(실장)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2월	6%	법령정보시스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운영 현황 점검	2월	5%	메모보고(차관)
	1차 PF조정계획 확정(관계장관회의 안건상정)	3월	7%	보도자료
	평택 고덕신도시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 추진	3월	5%	보도자료
	민간사업장 공공인수방안 발표	3월	7%	보도자료
2/4분기	상가 통합지수 공표	4월	5%	메모보고(차관)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 발표	5월	7%	보도자료
	지가변동률 통합지수 및 지방침체지수 통계청 승인	6월	7%	메모보고(실장)
3/4분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시행 및 공급제도 정비	7월	6%	메모보고(실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최종 심사	8월	5%	메모보고(실장)
	리츠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8월	7%	방침결정(장관)
4/4분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11월	7%	의안정보시스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편안 발의	12월	6%	의안정보시스템
	부동산 금융 PF 관리방안 마련	12월	7%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전문가 자문회의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4.2월~4월
현장 의견수렴	리츠 AMC, 투자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24.2월~3월
회의	1차 PF조정안 수용에 대한 공공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24.3월
회의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4.6월, 9월
회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공표 시기 조정 관련 자문회의	'24.6월
간담회	PF조정위원회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법률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정부, 공공기관, PF사업시행자 등) 간담회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PF사업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권 등으로의 부실 전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 공공택지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위축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
- 주택 뿐만 아니라 비주택 분야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산업 전반의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
- 리츠의 원활한 운영·투자 활동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가계소득 증진 기대
-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창출, 신규 산업을 발굴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및 편의증대 기대
-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 확대, 규제개선,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기존부동산 산업의 활력 제고 및 신산업 육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주택가격조사지원(Ⅱ-1-재정①)				
① 주택가격조사지원(1031)		일반회계	789	812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399)			11	11
도시개발(Ⅰ-2-일반재정③)				
① 도시개발(5632)		일반회계	36	43
▪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지원(302)			31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40%)			신규	100%	부동산PF 조정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마련 등	① PF조정위원회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법률 제정안 발의(40%)	의안정보시스템
			신규	3회		②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 개최 (10%)	메모보고
	-	-	신규	100%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대응하여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주택 분양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 수집 근거 마련 및 PF 재원 조달현황 보고 의무화 등 상시 관리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비주택 분야 모니터링 강화	③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발의 (30%) ④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개정 (20%)	의안정보시스템, 법령정보시스템
㉡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30%)	-	-	신규	100%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펀드 등 경쟁상품에 비해 규제가 많은 점을 개선하여 리츠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제도개선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80%)	의안정보시스템, 리츠정보시스템
	16.3	20.9	27.2	30	리츠 투자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리츠 정보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 투자자의 75% 이상*이 리츠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 부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리츠정보 시스템에 분기별 공시되는 리츠 투자 보고서 상 리츠투자자는 40만명임	② '24년 12월 기준 리츠 정보시스템 총 누적 접속자수 (만명, 20%)	
㉢ 부동산산업 지원 강화 (30%)	-	-	신규	100%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되는 매우 난이도 높은 과제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한 과제	① 아파트 실거래가 “동” 정보 공개 (30%)	보도자료
	-	-	신규	100%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한 민간수요 맞춤형 데이터 70종 생산·개방을 통해 데이터 유통 시장 기반을 조성	②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거래소 신규 개방 품목 (70종, 30%)	메모보고
	-	-	18팀	19팀	창업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참가팀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캠프 대상자 확대 지원	③ '24년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실시팀 수 (10%)	메모보고
	-	-	1건	2건	시장 수요가 높은 통합 통계지수에 대하여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을 거쳐 국가승인통계로 확대 제공	④ 통계청 승인받은 외부 공표 통계 건수 합산 (30%)	통계청 고시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

기 본 방 향

☐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 구축

-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5	20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철도 및 도로 연장(km)
1.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		㉠ 광역버스 공급확대 ㉡ 광역철도 총 수송인원
①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 광역교통 인프라 수혜범위 확대 등 ㉡ BRT 이용자 수 ㉢ 관계기관 갈등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 ㉣ 신규 사업 이용자 만족도
②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을 위한 갈등 조정건수 ㉡ K-패스 이용자수(만명) ㉢ 광역버스 안정적 관리 확대 ㉣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
①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		㉠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 선정 및 지원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 ㉣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장치 분석률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 ㉡ 수소교통 복합기지 확충 ㉢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 택시충량제 고시 개정
②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보호내실화 ㉡ 안전관리강화 ㉢ 위법·편법행위 근절 ㉣ 규제개선

(1) 주요내용

<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 구축 >

☐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철도 및 도로 연장 (km)	철도	4,274	4,281	4,307	4,313	4,360 (239 발표 예정)	5,06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및 최근 개통 추이 등 반영	전국 철도연장 (고속 일반철도 기준)	철도통계연보 및 운영기관 통계 * 매년 9월경 발표
	도로	18,797	18,946	19,040	19,139	19,214 (잠정)	19,902 (추정)	연도별 개통 계획	전년도 간선도로 연장 + 당해년도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연장	도로통계연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매년 5월말 발표

(1) 주요 내용

□ 수도권 내 시급한 교통현안 해결로 출퇴근 불편 해소

- (서·북부권 단기 교통대책) 광역버스 도입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서부권·북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발표
- (장기지연과제 조정·해결)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은 대광위가 직접 조정하여 사업 지연 방지
- (GTX 수송대책) GTX-A 개통('24.下) 대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협의체 확대, 환승센터(운정·킨텍스·대곡) 중심 연계교통체계 조성

□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견인

- (광역·도시철도) 남양주 별내·갈매·진건·지금지구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별내선 개통
 - 하남·남양주·일산지역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의정부·양주·포천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사·설계
- (광역·혼잡도로·BRT) 동김해-식만JCT(12월 준공) 등 9개(58.5km) 광역도로 사업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 17개(72.3km) 혼잡도로 추진

□ 광역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광역버스 노선확충) 준공영제 노선 이관(경기도→대광위)*을 진행하고 '24년 준공영제 노선 신설(12개) 등으로 서비스 공급 확대·운영

* (총 192개 노선) ('22) 66개 → ('23) 41개 → ('24) 49개 예정 → ('25) 36개 예정

-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2층 전기버스 보급('24, 50대) 및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日250회 이상) 등 지광역권 교통 수송량 증대
 - 좌석예약제 확대, 급행화 등* 서비스 다각화로 他수단 이용객 흡수, 강남·서울역行 광역버스 노선조정으로 도로 혼잡완화 및 시간단축

□ 편리하며 부담없는 광역교통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비 지원)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편의성 및 혜택 등을 개선하여,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K-패스 도입('24.5~)
- (MaaS) 철도·버스·항공·PM 등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24.上~)하고,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 추진

* MaaS(Mobility as a Service) : 다양한 교통 서비스의 데이터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앱)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광역버스 공급 확대			14,800	15,460	광역버스 입석금지 이후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교통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23년도 목표치(日 14,800회) 대비 4.5% 증가를 목표 설정	하루 운행 횟수 = 정규버스 운행 횟수(2층 버스 × 2) + 전세버스 운행 횟수	BMS (버스정보시스템)
② 광역철도 총 수송인원	-	-	-	1,420.8 (백만명)	광역교통 수혜범위 및 수혜자 확대를 정량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	당해연도 광역철도 총 수송인원	통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교통시설 특성상 운영범위가 넓고, 관리주체·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기관 간 갈등 발생 시 해소되지 않고 지연 다수

⇒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갈등 관리

- (현장방문) V업무보고, 민생토론회 등 既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장·차관급부터 실무자까지 수 차례 현장방문
- (의견수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GTX 환승협의체 등 관계 기관 이견조정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IV-1-①)

□ 추진배경

- 대도시권 인구집중 심화로 전체 인구 80%가('22 기준) 거주*하고 있고, 교통시설 혼잡도 포화(철도110%, 도로116% 등) 상태

* 전체 인구 대비 대도시권 인구 비중 : ('75년) 59% → ('92년) 69% → ('10년) 74% → ('22년) 80%

- 기존 서울 지하철(도시철도)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팽창(연장)하는 등 생활권 광역화로 교통서비스·인프라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스마트·친환경 교통 등 패러다임 변화로 서비스의 질적 개선 요구도 증대

- 現 정부도 광역교통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부담없는 대중교통 혁신'을 국정과제*(39-4번)로 선정하여 추진 중

*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수도권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 BRT 고급화 시범사업 등

- 올초 대통령께서도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및 교통격차 해소를 강조하였으며('24.1),
- 이후,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인천, 울산 등 대도시권 내 철도, 도로 등 속도감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약속*

* 尹, '교통혁명 시작 ... 노래 한 두곡 들으면 서울 도착할 것'(중앙), 윤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fn) 등 수 차례 강조

- 다만, 그간 철도망 누적 약 1,547km 확충 및 도로망 구축 등 시설 확충에 꾸준히 투자 중이나 국민 체감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 광역교통시설 특성상 운영범위가 넓고, 관리주체·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기관 간 갈등 발생 시 해소되지 않고 지연 다수

⇒ 이에,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갈등·현안을 적극 중재하여, 광역 철도·도로 등 광역시설 구축으로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 맞춤형 교통서비스 공급,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편의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수도권 내 시급한 교통현안 해결로 출퇴근 불편 해소

- **(서·북부권 단기 교통대책)** 광역버스 도입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서부권·북부권)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발표
 -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
 - * (기존 대책)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버스로 전환 유도하고자 일부 구간 전용차로 설치 및 도로구조 개선, 70A~F노선 80회 운행, 안전요원 집중배치 등
 - 북부권 운정역(GTX-A) 환승센터 연계교통체계 마련, 광역버스 증회 등 북부권(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광역교통 개선 방안 마련
- **(장기지연과제 조정·해결)**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은 대광위가 직접 조정하여 사업 지연 방지
 - (송파하남선 정비 위수탁) 송파하남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지축 차량기지 운영자인 서울교통공사 간 위수탁 협의 지연('23.3~現) 발생
 - 대광위 주도 갈등 중재를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는 '27.3월 최초 입주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
 - (장암역 운영주체) '도봉산~옥정'사업으로 개량되는 장암역 운영주체 결정, 토지 先 사용 등 쟁점을 해소하여 '26년까지 차질없이 개통
 - * (서교공) 장암역 신축이 '도봉산~옥정'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체(경기, 의정부) 운영 입장
 - * (의정부, 양주시) 기존 역사를 개량하는 것이므로 당초대로 서울교통공사 운영 입장
 - (9호선-공항철도 직결) 합의사항(재정분담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TF운영, 사업계획 수립 공동용역 추진
- **(GTX 수송대책)** GTX-A 개통('24.下) 대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협의체 확대, 환승센터(운정·킨텍스·대곡) 중심 연계교통체계 조성

구분	대상지	주요내용
기존	청량리, 용인, 망우·상봉, 창동, 양재	복합개발사업 추진, 행정절차 지원 등
신규	(GTX) 운정, 킨텍스, 대곡 (GTX 外) 익산, 천안아산, 서대구	GTX-A↔버스·택시 연계 및 주차장 확충,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책사업 연계 등

②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견인

- **(광역·도시철도)** 남양주 별내·갈매·진건·지금지구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별내선 개통
 - 하남·남양주·일산지역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의정부·양주·포천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공사**
- * 고양은평선('24.8), 강동하남남양주선('24.10) 등 ** 옥정-포천(설계, '24.10), 도봉산-옥정(공사, '20.~)
- 대전 2호선, 대구 4호선 등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사업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차질 없는 개통지원
- * 우이신설연장선(솔밭공원~방학) 완료('24.2), 대구4호선(수성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완료('24.2)
- **(광역·혼잡도로·BRT)** 동김해-식만JCT(12월 준공) 등 9개(58.5km) 광역도로 사업과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 17개(72.3km) 혼잡도로 추진
 - ※ (개통, 1개소) 동김해-식만JCT(12월), (착공, 4개소) 조야-동명, 광주북부순환 등, (예타完, 3개소) 제2대티터널 등, (예타新, 2개소) 봉오대로-경명대로 혼잡도로 등
- 성남S-BRT 실시설계와 청량리-평내호평BRT 개발계획 등 수도권 BRT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 창원 S-BRT('24.5 개통), 공주~세종('24.8 착공), 제주('24.11 착공), 전주('24.11 착공) 등 지방권 BRT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
- **(환승센터)** GTX-A 개통에 대비하여 **운정역**을 연내 준공('24.12)하고, 동탄('24.6 착공)·삼성역('21.6 착공) 공사 본격화 등 사업 추진
 - GTX-B·C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청량리·망우·창동·양재역 등 주요 환승센터 4개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추진
 -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중장기 환승센터 법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환승센터 확대 기반 조성

* 환승시설+상업·업무 등 환승지원시설이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

⇒ 대광역이 추진 중인 철도, 도로 등 86개 확정된 사업(예타통과 등) 중 연내 20개 사업 기본계획·설계 완료, 6개 사업은 개통 완료

③ 신규 서비스 · 인프라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 준비

- **(트램 가이드라인)** 무분별한 트램 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망계획 수립 前 차량시스템 선정, 노선검토 등 필요사항 제도화
 - ※ 트램은 설계단계에서 사업비가 크게 높아져 예타 통과 곤란, 총사업비 조정 등 이슈 발생
 - 트램 도입 적정 수요, 트램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개편 검토 강화, 사업비 증가 방지 등을 지침에 명시하여 망계획 수립 내실화
-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신도시 등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 중('23.8~)인 '광역콜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화 추진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화를 통해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추진 기반 마련(현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 **(BRT 발전방안)** 간선의 BRT와 지선의 DRT를 연계한 D-BRT 서비스 구체화, 기술·운영 방식 검토 추진 및 관련 R&D 추진 노력
 -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미래발전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23.7~'24.4, 스튜디오갈릴레이)
 - 지역별 특성 반영과 BRT 고급·첨단·친환경화 추진을 위해 우선 신호, 섬식정류장, 양문형 차량 등 S-BRT 핵심기술 확산
 - * 고급BRT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형BRT 고급화 시범사업 지정' 및 업무협약 체결('24.2)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관리 대책 발표	'24.01	10%	보도자료
	우이신설선 연장선·대구 엑스코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24.02	5%	관련 문서
	제주형 BRT 고급화 시범사업 선정 및 업무협약체결	'24.02	5%	보도자료
2/4분기	창원 S-BRT(원이대로) 개통	'24.05	5%	보도자료 등
	트램 가이드라인 수립	'24.06	5%	지침개정
	북부권 단기 교통개선대책 수립·발표	'24.06	10%	보도자료
	송파하남선 차량정비 위수탁, 장암역 신축·운영 중재	'24.06	5%	관련 문서
3/4분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광역콜버스 사업확대)	'24.08	10%	관련 문서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24.08	10%	보도자료 등
	공주-세종 BRT 착공	'24.08	5%	메모보고(위원장) 등
4/4분기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24.11	10%	관련 문서
	동김해-식만JCT 광역도로 개통	'24.12	10%	보도자료 등
	안심-하양 복선전철 개통	'24.12	10%	보도자료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현장방문) V업무보고, 민생토론회 등 既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장·차관급부터 실무자까지 수 차례 현장방문
- (의견수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GTX 환승협의체 등 관계 기관 이견조정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TF를 구성·운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관리 대책 현장점검	2·6월
현장방문	■ 인천광역시 광역혼잡도로사업 현장 점검	2월
회의·협의체	■ 신도시 광역교통TF(철도반) 회의 *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등	2~3월
현장방문	■ 대전광역시 광역혼잡도로사업 현장 점검	3월
현장방문	■ 광역혼잡도로 및 광역 BRT 구축사업 재정집행 확인 등 현장점검	3·6·9·12월
회의·협의체	■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5월
현장방문	■ '24년 개통사업 사전 현장방문 * 별내선 복선전철, 안심-하양 복선전철	6·11월
회의·협의체	■ 환승 데이터 포럼 발족	7월
회의·협의체	■ GTX 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3·6·9·12월

□ 기대효과

- (교통현안 해결) 서부권 교통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220%에 달하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을 180% 이내로 줄여 호흡곤란 등 사고방지
 - 송파하남선 차량 정비공간 공동활용(지축)으로 4,500억원 예산 절감*
 - * 서울교통공사 입장대로 경·중정비 시설 신축 시 약 4,500억원 예산 소요 전망
 - 공항철도-서울9호선 노선 간 직결로 인천~강남을 한 번에 이동
- (인프라 구축) 별내선 개통으로 별내~잠실까지 18분 단축(45→27분), 운정역 환승센터 준공 등으로 GTX-A 3분 이내 환승 지원
 - 창원BRT 신설로 26분이 소요되던 원이대로를 19분만에 이동(△7분)
- (신규서비스 도입) 「트램 가이드라인」, 「BRT 발전방안」 수립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트램사업을 BRT로 전환하고 BRT 활성화 도모
 - * 망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예타대상 미선정 등으로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
 - 시흥·광주·화성·용인·수원 등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이동시간 15%내외 단축) 교통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광역철도건설(V-10-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 건설지원(2833)		434	238
	▪ 안심~하양 복선전철 외 2건	균특회계	434	238
광역철도건설(V-11-일반재정①)				
①	광역철도 건설지원(2833)		1,513	1,341
	▪ 별내선 복선전철 외 2건	교특회계	1,513	1,341
도시철도건설(V-12-일반재정①)				
①	지하철 건설지원(3031)		4,560	4,012
	▪ 부산 사상-하단 외 11건	교특회계	4,560	4,012
②	경량전철 건설지원(3032)		468	256
	▪ 동북선	교특회계	468	256
지자체도로건설지원(V-4-일반재정①)				
①	광역도로(1938)		540	542
	▪ 초정-화명 외 8건	균특회계	540	542
대중교통지원(V-6-일반재정①)				
①	혼잡도로개선(4539)		1,125	1,425
	▪ 광주 북부순환도로 외 16건	균특회계	1,125	1,425
②	도시BRT(4541)		165	119
	▪ 광역BRT 구축	균특회계	165	149
광역교통정책(V-6-일반재정①)				
①	환승체계구축(4542)		131	166
	▪ 환승센터 구축지원(311)	균특회계	131	1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광역교통 인프라 수혜범위 확대 등 (40%)	737.1	744.8	744.8	757.7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법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반으로 산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개통 누적연장(km)(30%)	지자체 취합 공문,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3	4	1	6	환승센터의 최근 3개년간 착·준공 수 추세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착·준공 수를 목표로 설정	환승센터 착·준공 수 (10%)	메모보고, 공문 등 관련 문서
㉡ BRT 이용자 수 (20%)	11.2	18.6	25.3	27	BRT 일 평균 이용자 수('23 기준) 대비 10% 증가 목표(단위: 만명)	기 개통한 BRT 노선의 일 평균 이용자 수(명)	지자체 취합 공문, 메모보고 등 관련 문서
㉢ 관계기관 갈등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20%)	-	-	2	5	광역교통시설 관련 주요 갈등과제 관리 건수	지자체 갈등이 지속된 사항을 조정·완료한 건수	내부자료 (통계자료 또는 보도자료 등), 언론보도 등
㉣ 신규 사업 이용자 만족도 (20%)	-	-	-	3.5	대광위 추진사업인 신규 개통 철도·도로, 광역콜버스 등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70점 이상인 되도록 목표 설정	별내선, 용두담영(혼잡도로), 광역콜버스 3개 사업 만족도(설문) 조사	내부자료

②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IV-1-②)

□ 추진배경

- ①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신도시 등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으로 입주민 교통불편 지속

* '23년 상반기 기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은 약 60% 수준

- 개선대책 지연으로 교통불편이 큰 지구에 대해 보완대책을 추진* 했음에도,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 필요

* 수도권 29개 지구(집중관리지구)에 대해 광역· 시내· 마을버스, DRT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추진('23)

- ② **(광역교통 단기대책)** 수도권 지역별로는 인구 급증 및 신규 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교통불편사항(ex.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산재

- 광역버스 혼잡, 출퇴근 지·정체 등 지역별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맞춤형 단기 대책 마련을 통해 시급히 문제를 해소할 필요

- ③ **(효율적·안정적 광역버스 운영)** 수도권 인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많은 인구가 경기↔서울 간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 등 이동 중*

* 수도권 전체 1일 광역버스 이용객수 : 53.1만명('23.12)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자체 간 이전 조정 및 운영적자 해소 등을 통한 준공영제 기반의 안정적인 광역권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

- ④ **(대중교통비 지원)** 고물가 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서민·청년층 등 교통비 부담 가중

- 보행·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대중교통비 절감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하여 신규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추진

* 이동한 거리를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어렵다는 의견 多

- ⑤ **(통합교통서비스)** 미래의 교통서비스는 철도·버스·항공 등 여러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MaaS*로 수렴 예상되나, 데이터 연계에 한계

* MaaS(Mobility as a Service) : 철도·버스·항공·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경로검색, 예약, 결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총 7.4조원)을 선정하고, TF 운영을 통해 조기 공급방안 마련
 -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
 - 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사업은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 정상화 도모
- ② **(광역교통 단기대책)** 수도권 동부·남부권 주요 지역에 대해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맞춤형 단기 대책 마련
 - 특히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대책*을 단기에 수립·발표('24.1) 하고 김포→서울(환승역)行 4개 광역버스 노선 신설('24.상반기)

* 광역버스 4개 노선 신설 및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도입, 골드라인 차량증편 등
- ③-1 **(광역버스 노선확충)** 준공영제 노선 이관(경기도→대광위)을 진행하고 '24년 준공영제 노선 신설(12개) 등으로 서비스 공급 확대·운영
- ③-2 **(광역버스 이용편의 제고)** 2층 전기버스 보급('24, 50대) 및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日250회 이상) 등 지광역권 교통 수송량 증대
 - 좌석예약제 확대, 급행화 등 서비스 다각화로 他 수단 이용객 전환, 강남·서울역行 광역버스 노선조정으로 혼잡완화 및 시간단축
 - 효과적 광역버스 정책 운용과 정보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④ **(대중교통비 지원)**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적립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여 대중교통 실수요자 부담 완화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
- 이용계층(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에 따라 지원 혜택 상향

-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 등 단점을 개선(출·도착기록 불필요)하고, 적립 혜택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혜택을 대폭 강화

* 회당 1,500원씩 60회 지출 기준, (알뜰) 1.5~2.1~4.2만원 vs (K-패스) 1.8~2.7~4.8만원 절감
일반 청년 저소득층 일반 청년 저소득층

알뜰	~2천원	2~3천원	3천원 ~	⇒	K-패스	적립률	예) 1,500원 기준
일반	~250원	~350원	~450원		일반	20%	300원
청년	~350원	~500원	~650원		청년	30%	450원
저소득	~700원	~900원	~1,100원		저소득	53%	800원
비고	이동거리 비례 적립(최대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비고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 **(통합교통서비스)** 철도·버스·항공 등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 사업*을 본격 개시('24.上~)하고, 교통수단 및 플랫폼 확대 추진

* 여러 수단의 검색·예약 등 기능을 통합·중계하는 오픈MaaS를 기반으로 교통 서비스 고도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 발표	1월	10%	보도자료
	K-패스 추진 관련 대중교통법 개정	1월	5%	의안정보시스템
	집중투자사업 TF 구성 및 kick-off 회의	2월	10%	보도자료
2/4분기	수도권 남부권 단기 교통대책 마련	5월	10%	보도자료 등
	K-패스 사업 시행	5월	10%	보도자료 등
	전국 MaaS 시범서비스 오픈	6월	5%	공문 등
3/4분기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7월	10%	방침문서(위원장)
	수도권 동부권 단기 교통대책 마련	7월	10%	보도자료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 마련	9월	10%	메모보고(실장)
4/4분기	광역버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추진계획 수립	10월	5%	메모보고(위원장)
	연차별 투자계획 등 광역교통법 하위법령 등 개정	11월	5%	보도자료 등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 추진	12월	10%	방침문서(위원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축 구축 관련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지자체 등 의견수렴 실시('24.2)
 -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연사업지구 현장점검을 통해 지연 사유 파악 및 사업시행자 애로사항 정취('24.3~6)
- * 동시에 갈등사업현장 및 개선대책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 대광위원장 수시현장 점검 실시('24.1 ~)
- 도심(강남대로 등) 혼잡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조정 협의체 (대광위·서울시·경기도·인천시)로 이견조정 및 원보이스 관리('24.3~)
- K-패스 사업 시행 전, 정책수요자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UI·UX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자문단 간담회 개최(24.3)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집중투자사업 Kick-Off 회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 실시	'24.2월
현장방문	개선대책 지연사업지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실시	'24.3~6월
간담회	K-패스 시행 대비 청년자문단 간담회	'24.3월
관계기관 협의체	광역버스 노선조정 협의체 실시(수시)	'24.3월~

□ 기대효과

- ① **(광역교통망 신축 구축)** 집중투자사업(32개)에 대한 TF 운영*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사업별 최대 2년 조기완공 도모

* 32개 사업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단축방안 마련

【 (예시) 집중투자사업 유형별 추진방향 및 사업단축기간 】

사업명	주요 방안
신속 인허가형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1년 2개월 단축)	☐ (쟁점) 4개 지자체 (인천, 부천, 서울, 김포)에 걸쳐 있는 도로로 지자체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 ☐ (추진방향) 대광위가 직접 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의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 「광역교통법」 개정 추진 중

사업명	주요 방안
갈등조정형 (남양주 왕숙) 경의중앙선 역사신설 (갈등 신속 해소)	☐ (쟁점) 입주초기(소수만 입주) 역사 운영 손실의 부담주체 및 부담수준 등에 대해 코레일, LH, 남양주시 간 갈등 ☐ (추진방향) 대광위가 부담주체, 적정 부담수준 등 신속 조정
일반관리형 (고양 장항) 신평 IC기하구조 개선 (1년 3개월 단축)	☐ (쟁점)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출입 제한에 따라 토질조사 등 후속조치 지연되다가, '24.2월 토질조사 시행 ☐ (추진방향) 설계기간 단축 및 인허가 동시 진행 등을 통해 기간 단축

② (광역교통 단기대책) 수도권 주요 교통불편지역에 대해 광역버스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시간, 출퇴근시간 단축

* (대기시간 단축)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만차운행횟수 감소로 추정
(출퇴근시간 단축) 출퇴근시 광역버스 운행시간으로 분석

③ (광역버스 역할 강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교통 수단으로서 적기 대응이 가능한 광역버스 신속 확충으로 출퇴근 시 수송분담 확대

④ (대중교통비 지원) 고물가 시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민생 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대중교통육성(IV-2-일반재정①)			
①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교특회계	1,013	1,95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4931-331)	교특회계	336	22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교특회계	-	735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4931-342)	교특회계	581	998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4931-343)	교특회계	96	-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신도시 광역 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갈등조정건수 (25%)	-		5	10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갈등 조정·중재를 통해 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며, 지난해 5건 갈등조정 대비 100% 증가한 10건을 목표치로 설정 (5호선 연장사업, 수석대교 갈등 등)	갈등조정건수 (총 10건)	갈등조정 결과보고 (메모보고)
㉢ K-패스 이용자수 (만명) (25%)	29.0 (알뜰)	48.7 (알뜰)	109 (알뜰)	171.0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사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전년 대비 이용자수를 직전 3년 평균 증가 수준*의 2배 이상(+62만명) 증가시키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 '20~'23 연평균 이용자 증가 30.7만명	'24.12 누적가입자	K-패스 운영시스템 기반 통계 분석 등
㉣ 광역버스 안정적 관리 확대 (25%)	-	-	7,423	9,279	대광위 주요 설립목적인 수도권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준공영제 운행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를 순차적으로 대광위 이관 및 직접 관리를 추진 중으로, 경기도 및 각 시·군, 개별 운수사와의 적극적인 협상과 계약체결로 '23년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행 실적 (日 7,423회) 대비 25% 증가한 日 9,279회 운행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대광위 소관 준공영제 버스 일 운행 횟수(2층 버스는 ×2로 계산)	BMS (버스정보시스템)
㉤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5%)	-	-	-	법령 및 하위 규정 개정 (신규, 단년도)	< 주요 내용 > ① 신속한 갈등해소를 위해 갈등으로 사업 지연 시 조정 신청 의무화 ② 광역교통계정 신설 ③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직접 사업 계획 승인을 하고, 관련 인·허가는 의제 ④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 ⑤ 개선대책 변경절차 간소화	「광역교통법」,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개선대책 지침 등 개정	국회의안 정보시스템

(1) 주요 내용

□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약자 지원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의 시설 기준 개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복지지표 개발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 사업용 차량·이륜차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수립

□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수송분담률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수요 관리·경쟁력 제고·안전 강화 등 대책 마련
- 지선 교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DRT를 둘 이상의 시·도까지 운행 (광역 DRT)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도간 출퇴근 혼잡 완화
- 다양한 이동수요에 대응 위해 일방적 노선 운행에서 탈피, 정류장·운행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출퇴근·통학 전세버스 도입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자동차 소비자 보호 내실화, 이륜차 번호판 개선, 전기차 배터리 검사기준 내실화 등 국민의 재산·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강화
- 자동차 등록 모바일 서비스 개시, 무선업데이트를 통한 리콜 활성화 등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자동차 분야 위법·편법 행위 근절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01	0.93	0.89 (잠정)	0.83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의 연평균 감소율(6.5%)을 고려하여 목표('23년 실적 대비 6.7%) 설정	'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 '24년 자동차 등록대수	경찰청(교통사고 사망자 수) / 국토교통부(자동차 등록대수)
②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	-	-	-	법령 개정	전세버스 활용 출퇴근, 통학 지원 제도 개선, DRT 적용 확 대 제도화	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 관리계획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약 30%는 교통약자이나, 교통수단 등 양적 서비스 미흡, 교통약자 체감 만족도 등 부족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체감 불편 개선을 위한 안내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으며,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18%) 대비 약 2배(34.7%) 수준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이륜차 등 취약분야 대책 집중 추진 필요

□ 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 감소 중으로, 정해진 시간·노선대로만 운행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다양한 수요 충족 곤란

⇒ 다양한 이동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DRT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버스를 활용하여 출퇴근·통학 지원

□ 최근 택시 기사들의 이탈과 유희 차량 증가 등으로 승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유연하게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플랫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제도 보완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IV-2-①)

□ 추진배경(목적)

- (교통약자) 그간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23.1~) 및 특별교통수단 24시간·광역이동 의무 시행('23.7~) 등 인프라 개선 노력 지속
 - 교통약자가 체감 가능한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 특성에 맞게 인프라 기준을 강화하고,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사각지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미흡하고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의 이동권 보장 미흡
 - * 대중교통 취약지역 비율: 수도권 16.4%, 지방 28.6%('22년 기준)
 - 특히,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선이 축소** 되어 공적관리 강화 필요성 증대
 - * '19 比 '23 경기도 시외버스 노선 498개 중 수익성이 저조한 노선 70개 감소
- (교통안전) '91년(13천명) 대비 '23년 사망자(2,557명 잠정)는 1/5 이하
 - * ('20) 3,081명(△8.0%) → ('21) 2,916명(△5.4%) → ('22) 2,735명(△6.2%) → ('23) 2,557명(△6.5%)
 -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행 사망자는 전체의 34.7%로 OECD(평균 18%) 대비 약 2배 수준
 -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8/38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30/38위('21년 기준)
 - 특히, 사업용 차량(화물차 등) 및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집중관리 필요

☞ 지역별·대상별 교통격차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취약 요인별 맞춤형 대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 (서비스 수준 제고)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 가능토록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 고령자·임산부 및 다양한 장애특성 감안한 운수종사자 교육교재 개발,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대상을 現시외→ 改전세버스까지 확대
- (인프라 기준 개선)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인승·침대형휠체어(現 좌석형 휠체어만 可)가 이용가능토록 기준개선
 -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정류장 연석높이 개선, 지하철 내 점자안내판 보완 등 관련 규정 개정
 - 지자체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준을 측정·공표하기 위한 교통복지지표 개발
- (어린이·고령자 안전) 초등 늘봄학교를 활용한 교통법규 등 교육,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 등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지정
 - 성·강력범죄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종사제한을 통해 중증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안전한 서비스 제공

②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에 대한 공공성 강화

- (벽지노선 등 확대) 교통취약지역에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콜버스 등)·택시(100원택시 등) 등 지원 확대*
 - * 벽지노선: ('21) 339억원, ('22) 336억원, ('23) 336억원, ('24) 375억원
 - 도시형교통모델: ('21) 246억원, ('22) 240억원, ('23) 302억원, ('24) 360억원
- (필수노선 관리 강화)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수익성은 부족하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선정하여 지원
 - 다만, 단순 재정지원 대신 영구면허 반납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운행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수요 조사 → 타당성 평가 → 선정·지원)

○ (업계 경영개선 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및 버스 진입장벽 완화

- 고유가에 따른 버스업계 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예: 경유 1,700원 초과분의 50% 지원) 지급 기한 연장
- 전세버스 등록조건(특별광역시 최소 20대) 등 업계 진입장벽 완화, 버스기사로 종사하기 위한 자격(現 운전경력 1년이상) 완화
- 터미널 폐업(32개 폐업^{9.5%}, '18~'23)을 예방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터미널에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 허용*

* 現(파지티브): 약국, 매점 등 → 改(네가티브): 물류창고, 반려동물 시설, 스크린골프장 등

③ 보행자 등 취약 분야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추진

○ (교통안전 대책)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 사업용차량·이륜차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 수립

- 교통사고 감소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기관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보행안전 강화) 이륜차의 보행안전 위반 등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운영

- 보행자 및 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이 많은 대학교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 실태점검 도입

○ (사업용차량 관리 강화) 대형 화물차의 점검사항 개선, 미수검 차량 관리 철저,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개조 시 처벌 강화

- (화물차) 대형 화물차(25톤^{이상})의 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점검 대상으로 포함
- (이륜차) 단속 시 가시성 향상을 위해 후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고, 배달 종사자의 면허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 (종사자)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내실화를 위한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

○ (교통안전 문화 확산) 교통문화지수 조사, 교통문화발전대회 등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봉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교통문화 확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기초지자체 교통문화지수 조사결과 발표	1월	5%	메모보고(차관)
	경유, CNG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1차, 지침개정)	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휠체어 탑승가능 시외 및 전세버스 지원사업 공고	3월	5%	관련문서
	필수 시외·고속노선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용역 추진	3월	5%	관련문서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위탁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3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2/4분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	4월	10%	메모보고(장관)
	경유, CNG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차, 지침개정)	5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유관기관 교통안전 홍보 점검 협의회 실시	6월	5%	메모보고(차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6월	5%	메모보고
3/4분기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8월	5%	방침결정(실장)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대학 내 도로 안전 강화)	8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인승·침대형휠체어 특별교통수단 기준 마련	9월	5%	방침결정(실장)
	특별교통수단 전과자 종사제한 요건마련	9월	5%	방침결정(장관)
4/4분기	안전한 교통환경 유도를 위한 교통문화 발전대회 개최	11월	5%	보도자료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점자안내판 개선 등 기준개선	12월	5%	보도자료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정류장 표준모델(안) 도출	12월	5%	메모보고(차관)
	전세버스 진입장벽 완화(시행규칙 개정)	1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 시외·고속노선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12월	10%	관련문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화물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3월
현장방문	봄 행락철 전세버스 유관기관 합동 현장 점검	'24.4월
현장방문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	'24.6월
회의	17개 시·도 광역교통복지협의회	'24.9월,
협의회	유관기관 교통안전 홍보 점검 협의회 실시	'24.6월, 12월

□ 기대효과

- 저상버스 도입 등 그간 추진해 오던 교통약자 서비스의 양적확대에 더해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에 기여
- 획기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3	'24
대중교통육성(IV-2-일반재정)				
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4932)	교특회계	224,560	223,874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301)		224,560	223,874
자동차및교통정책(IV-1-일반재정)				
①	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호(4631)	일반회계	5,634	3,000
	▪ 교통사고예방지원(301)		5,634	3,000
광역교통정책(V-6-일반재정)				
①	대중교통지원(4539)	균특회계	33,680	37,537
	▪ 벽지노선지원(601)		33,680	37,537
①	도시형교통모델(4546)	균특회계	30,260	36,036
	▪ 도시형교통모델(제주, 세종 포함)(301)		30,260	36,0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 선정 및 지원(30%)	-	-	-	기준 마련	필수노선 선정 기준안 및 지원방안 가이드라인	계획수립	관련문서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30%)	1.01	0.93	0.89 (잠정)	0.83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의 연평균 감소율(6.5%)을 고려하여 목표('23년 실적 대비 6.7%) 설정	'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 '24년 자동차 등록대수	경찰청(교통사고 사망자 수) / 국토교통부(자동차 등록대수)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20%)	30.6	34.0	36.0 (잠정)	39.0	최근 3년 실적 추세 (평균 2.7% 증가)를 고려하여 목표('23년 실적 대비 3%) 설정	(저상버스 대수/전체 시내버스 대수)×100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
㉤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장치 분석률(20%)	44.3	47.3	57.1	60.0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23년 실적 대비 5%) 설정	(디지털운행기록분석 자동차 대수/사업용 자동차 대수)×100	디지털운행기록 분석률 보고자료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IV-2-②)

□ 추진배경(목적)

- 그간 버스·철도 등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 결과, 국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41~43%, '13~'19)은 세계 최고 수준(미국 8%, 독일 9% 등)
 - 그러나, 코로나 이후 승용차 위주로 이동패턴 급변* → 출퇴근 시간이 늘고,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혼잡비용 62.2조원, '21) 증가
- * (수송분담률 변화) '18년 42.9% '19년 43.0% '20년 27.8%, '21년 28.6%, '22년 32.8%
- 특히, 지하철 및 고속철도와 경합하는 버스(시내·시외·고속) 수요는 지속 감소 중*이며, 대도시권 등 출퇴근 혼잡 심화(예: 김포골드라인)
 - * 노선버스 이용객(억명): ('90) 81 → ('95) 63 → ('00) 52 → ('05) 48 → ('23) 43
코로나 전·후 이용객('19 比 '23): (시내버스) 82% 회복, (시외·고속버스) 60% 회복
- 과거의 버스처럼 정해진 시간·노선대로만 운행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지고 다양한 수요 충족 곤란
- 수도권 교통체계가 GTX 중심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하여 GTX 역사로 연결되는 지선 교통(First·Last mile) 선제적 정비 필요
-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 성격이 강한 택시의 면허는 과잉 공급된 반면, 기사이탈('19년比 △30%) 및 유희차량 증가('19년比 19%) 등으로 국민 불편 가중
 - * 철도·버스 등이 부족했던 과거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었으나 택시공급이 확대되고 요금은 저렴해진 반면, 대체교통수단은 증가하여 택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업계 경영난 가중
- 중형택시 일변도(97%) 시장에서는 획일적 서비스가 불가피하고,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카카오 90% 이상)은 불공정 배차 등 유발
- 대중·공공교통 이용 감소는 교통 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막대한 차질*
 - * 교통 분야 탄소배출량: 98백만톤(1위에너지 37%, 2위산업 36%, 3위교통 14%)

☞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마련

- 수도권·광역시·시군별 수송분담률 및 세부지표(예: 출퇴근시간 단축 등) 목표를 설정하고, 수요 관리·경쟁력 제고·안전 강화 등 대책 마련

② 버스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 → 수요 응답형·맞춤형'으로 전환

정해진 노선·시간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행

- (DRT 광역화) 지선 교통으로 활용*되고 있는 DRT를 둘 이상의 시·도까지 운행(광역 DRT)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現) 농어촌지역, 신도시, 심야시간, 규제특례로 실증을 완료한 지역 등
- (전세버스 활용 확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지역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광역버스의 부족한 수송력을 보완하고 이용객의 선택권 확대
 - * 지자체장 협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한시적 허용
- 통학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거나, 다수 학교 공동계약 허용
 - * (現)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자와 계약하는 경우만 가능
- (고속버스 편의 제고) 고속버스 중간 정차지 확대(최대 1개소 → 2개소), 일반·우등·프리미엄 좌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시외·고속버스 도입

③ 공정한 택시시장 형성 등을 통한 택시서비스 개선

- (적정 수준의 공급력 확보) 인구급증 등 지역특성을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기준 개선*, 개인택시 기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 * 신규택지지역 총량 완화, 지자체 재량 부여 / ** 양수교육 유효기간 조정(3→1년) 등
- (혁신서비스 발굴·확산)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고급화
 - 플랫폼에 대한 편의성·특화성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여, 승객 및 기사가 비교하여 플랫폼을 이용토록 행정 지원

-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독창성, 수요자 만족도, 부가 요금 등을 평가하는 '혁신 서비스 인증제' 및 인센티브 도입
- 수도권에 활성화된 대형승합택시(카니발 등)를 지방지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면허권자를 現시장 → 改군수로 확대

- (플랫폼 공적관리 강화) 자유업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개사업^{Type3}의 폐단(불공정 배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명령 등 신설

* 현재 플랫폼중개사업(Type3)은 국토부에 등록만 하고, 협의 및 제지 수단 부재

④ GTX 역사 주변으로 지선교통이 모이도록 연계교통체계 마련

- GTX-A 수서~동탄^{3월 개통} 구간 4개 역사(수서·성남·구성·동탄)에 대한 지하철·버스·택시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 연계교통대책 TF(관련 지자체, 철도공단, GTX 운영기관,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수요예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류장 신설, 버스노선 조정 등 역사별 대책 마련

- 나머지 역사들도 개통 전에 연계교통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재정립

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

- (계획수립 등) 지속가능 기본계획^{제2차('21~'30)}에 따른 '24 시행계획 수립

- 수송부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8%)에 따라 내연차 운행 수요 감축을 위한 통행량 관리 방안 등 마련

- (인프라 확대) 물류센터, 산업단지, 공공택지 등 주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충전소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확충

- 전기차 등의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의 입고 가능 차량 제원기준 상향(現 83% 주차 불가)

- (교통수요 관리)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개선(경감대상 항목 신설 및 경감을 상향 조정 등)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개인택시 양수교육 고시 개정	3월	5%	법령정보시스템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대비 연계교통체계 마련	3월	10%	보도자료
2/4분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입법예고(출퇴근통학지원 전세버스 DRT 확대)	4월	5%	보도자료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4월	5%	관련문서
	대중교통 활성화방안 마련	5월	10%	보도자료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준공(2건)	6월	5%	관련문서
3/4분기	택시 총량제 지침 고시 개정	8월	10%	방침결정(정책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개선방안 마련	9월	5%	메모보고(실장)
	내연차 운행수요 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준공	9월	5%	관련문서
4/4분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출퇴근 통학지원 전세버스 DRT 확대)	10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버스 중간 정차지(1개→2개) 확대(시행규칙 개정)	1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12월	10%	의안정보시스템
	플랫폼사업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마련	12월	10%	메모보고(차관)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상향(시행규칙 개정)	1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GTX-A 연계교통 TF 회의	'24.1월
회의	출퇴근 및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활용방안 관계기관 회의	'24.2월
간담회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	'24.3월
현장방문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점검	'24.6월
회의	내연차 운행수요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24.9월
간담회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교통업계 간담회	'24.11월

□ 기대효과

- 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승객의 이용 편의 증대, 대중교통 활용 확대 등을 도모하고, 교통혼잡 완화 및 탄소 저감 등 기여
- 중소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플랫폼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택시 산업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이동권 제고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3	'24
대중교통육성(IV-2-일반재정)				
	① 교통계획 및 평가(4639)	일반회계	1,365	1,188
	▪ 교통정책종합연구(306)		1,365	1,188
	-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150	142
	② 대중교통체계구축(4931)		20,315	18,171
			(125,184)	(217,198)
	▪ 대중교통체계구축지원(301)	교특회계	2,232	1,806
	▪ 택시산업지원(316)	교특회계	4,833	4,365
	▪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330)	교특회계	400	300
	▪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344)	교특회계	12,850	11,7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40%)	-	-	-	법령 개정	전세버스 활용 출퇴근, 통학지원 제도 개선, DRT 적용 확대 제도화	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소교통복합기지 확충(20%)	-	-	1	2 (준공)	수소교통복합기지 확충을 위한 사업 준공 건수	사업 준공 건수	관련 문서
㉣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20%)	-	-	-	발의	택시 플랫폼중개사업 개선명령 및 인증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 택시총량제 고시 개정(20%)	-	-	-	법령 개정	지역별 유연한 총량 관리를 위한 택시 총량제 고시 개정	택시총량제 고시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IV-2-③)

□ 추진배경(목적)

-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중요한 국민 자산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 및 안전 관리는 중요한 과제
 - 특히, 주택보다 거래가 빈번한 자동차(1.5배 ↑) 거래*에 있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 연간 거래 : (주택) 350만(매매 90만, 전월세 260만) (자동차) 540만(신차 170만, 중고차 370만)
- ** 중고차 시장 신뢰도 14.8%, 매매업자에 대한 신뢰도 11.2%(‘22.3, 소비자연맹)
- 화물차 정비불량,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일상 속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망도 필요
- 또한 자동차 2,600만대 시대로 자동차는 국민 일상·생계와 가장 밀접한 분야일 뿐 아니라,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분야*
- *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전체 GDP의 12.1%, 고용 11.2% 등 차지
- 자동차 분야 규제 개선으로 일상 속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할 필요
- 한편, 나이롱 환자, 무보험 등 위법·편법 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 증대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조치 필요

⇒ 자동차를 믿고 사고, 안전하게 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위법·편법행위를 근절하여 사회 질서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자동차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자동차 소비자 보호 내실화

- (중고차) 대기업 진출 등을 계기로 품질보증 등 서비스 다변화, 기존 중소기업에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 * (예) 법적 보증기간(30일, 2천km) 이상 기간을 보증(ex. 180일 또는 1만km 등)

- 중고차 침수사실 고지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처벌 강화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허위·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 (신차) 신차 하자에 대한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자 추정기간 6개월 → 1년)하고, 신속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도입
- 신차 구매시 차량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차량에 신차 안전도평가(NCAP) 라벨 부착제 도입 검토

② 사고 위험 걱정 없도록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업무계획

- (이륜차) 이륜차 사고 및 사망자 증가에 따라, 이륜차 단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행 이륜차 후면번호판 개선 방안 마련
-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을 위한 검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폐차 이행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법령 개정 추진
- (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등 안전 위협우려가 있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검사제도 강화
- (급발진 등) 급발진 의심사고, 스텔스 차량, 캠핑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일상 속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개선*
 - * 사고기록장치 기준 강화, 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캠핑카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설치 등
- (전기차) 전기차 제작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고, 정기검사시 배터리 세부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 내실화
- 또한 전기차 제작~운행 수단계에 걸친 배터리 성능평가·이력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배터리 산업육성도 지원

③ 국민·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차 분야 규제개선 민생토론회

- (자동차 등록) 모바일 서비스 개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전자서명 도입, 상속 말소등록 기간 연장 등 자동차 등록 관련 편의 증진
- 차량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62년전 도입된 봉인제*는 최근 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과감히 폐지
 - * 번호판 무단 탈착,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
-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높은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앞면 부착의무 폐지

- **(리콜)** 평일 정비소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어디서나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선업데이트(OTA)를 통한 리콜 활성화
- **(안전기준)** 자동차제작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차 등 국제기준과 상이한 국내 안전기준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
- **(정비·튜닝)** 전기차 전환에 따른 전기차 정비, 전환튜닝 등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비·튜닝업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법체계)** 친환경차, 자율차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국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체계 개편 추진

④ 국민 눈살 찌푸리는 자동차 분야 위법·편법 행위 근절

- **(나이롱 환자)** 과잉진료 우려가 큰 경상환자 한의 진료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첩약·약침 등 수가 개정)하여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 *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 ('19년) 2.2조원 → ('23년) 2.5조원(13.6% ↑)
 -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 ('19년) 0.9조원 → ('23년) 1.4조원(55.6% ↑)
- 의료기관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사지원권한, 의료기관의 검사 거부 시 처벌 규정 등 신설 추진
- 의료기관이 거짓, 착오 등으로 잘못 청구한 진료수가에 대해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하여 보험금 누수를 방지
- **(음주측정 불응자)**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 회피 목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 적용
 -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차량 운행정보 연계 확대(지자체 → 지자체 + 경찰청·환경부 등) 등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 **(공제조합)** 공제조합 방만 운영 방지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감독기준 등 고시제정, 제재강화 등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TF Kick-off회의 개최	1월	10%	메모보고(차관)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폐지 자동차 관리법 개정	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배법 개정	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약 첩약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2/4분기	전기차 검사 기준 내실화를 위한 자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5%	관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5%	관보
	공제사업 감독기준,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4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개정 용역 착수보고회	5월	5%	메모보고(차관)
3/4분기	자동차 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관련 시행령 개정	7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5%	관보
	무보험운행차량 관리체계 ISP 결과 보고	8월	10%	메모보고(차관)
	이륜차 후면번호판 개선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9월	5%	관보
4/4분기	정비기술인력 교육제도 시행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5%	관보
	수소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1월	5%	관보
	자동차 안전도평가(KNCAP) 콘퍼런스 개최	12월	10%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의심 의료기관 점검	12월	10%	메모보고(차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간담회·회의·현장방문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업계·전문가·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토론회	자동차 이전등록시 전자서명 도입 등 관련 대국민 민생토론회(V주제)	'24.2월
간담회	자동차 분야 규제개선 과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4.4월
토론회	이륜차 번호판 개선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24.6월
간담회	전기차 배터리 인증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지자체 등 간담회	'24.7월
공청회	이륜자동차 폐차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4.10월
간담회	이륜차 검사 시행 관련 검사소·지자체 간담회	'24.12월

□ 기대효과

- (소비자 보호) 중고차 서비스 질 향상, 중고차·신차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로 소비자 후생 증가
- (안전 관리) 이륜차, 화물차, 전기차, 급발진 등 안전 취약 분야별 안전관리체계 마련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강화
- (규제개선) 국민 실생활 밀접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규제개선으로 편의 증진, 안전(제작)기준 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담완화
- (위법·편법 근절) 자동차 보험료 누수요인 차단으로 사회 질서 확립,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자동차 및 교통정책(IV-1-일반재정)					
① 자동차안전도강화(4634) ▪ 자동차안전도강화(302) ▪ 자동차튜닝인증기술지원(324) ▪ 수소전기차안전인증센터장비구축(327) ② 첨단미래형자동차활성화(4633)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운영(308) ③ 자동차사고피해지원(4641) ▪ 의무보험전산망(300) ▪ 피해자지원(301)	일반회계	323 (631) 158 135 30	175 - 164 11 -		
	일반회계	2 (2) 2			
	기금	249 (606) 23 226	240 (589) 22 218		
	국토교통연구개발(VI-4-R&D)				
	교통물류연구(4158) ▪ 한국형 Green NCAP 평가 기술 개발(316)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 기술 개발(317)	일반회계	60 (60) 25 35	77 - 41 36	
		국토교통정보화(VI-3-정보화)			
		② 자동차전산망(4258) ▪ 자동차전산망운영(501)	일반회계	91 (91) 91	143 (143) 1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 소비자 보호 내실화 (15+10%)	-	-	신규	조합 설립	[중고차 경쟁력 강화] 중고차 서비스 제고를 위해 새로 추진하는 대표적 과제로서 조합 설립을 위한 조직 구성은 물론 구체적인 공제상품 설계, 사업계획 수립,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 등을 거쳐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제로 조합 설립이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매매공제조합 설립 인가	공고문
	-	-	신규	법령 개정	[신차·중고차] 침수 사실 고지의무 위반 처벌 강화, 신차 하자추정기간 확대 등 중고차와 신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중고차업계 및 제작사의 이견 조율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목표 설정. 특히 신차 하자추정기간 확대는 소비자 입증책임을 제작사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제작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으로 도전적이고 적극적 목표 설정	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신차 하자추정기간 확대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전관리 강화 (10+10 +5+5%)	-	-	신규	법령 개정	[이륜차] 이륜차 안전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국민적 우려는 신호위반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이 이륜차 안전정책의 대표적 과제이며, 라이더 등 기존 이용자의 이견 조율은 물론 국민 의견수렴, 전국 지자체의 이륜차 등록번호 배정 시스템 전면 개선 등 획기적인 정책개선 사항으로 도전적 과제를 지표로 설정	이륜차 번호판 개선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신규	법령 개정	[급발진 등] 국민 일상 속 위협 요인이 되는 급발진 의심사고, 스텔스 차량, 캠핑카 질식사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이라는 대표적·객관적 결과물을 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은 국내 제작사는 물론 자동차 무역·FTA 등과 관련한 주요국(美, EU 등)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표를 목표로 설정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	신규	40개소	[화물차]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 등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용 중·대형화물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 대책으로, 항만·공업단지 등 중·대형화물차의 검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민간검사소의 불법·부실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화물차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량적인 지표로 설정 * '23년 점검업체(370개) 대비 10% 이상은 사업용 중·대형 화물차 검사대수가 많은 검사소를 신규로 설정	사업용 중·대형화물차 집중 점검 민간검사소 개수	보도자료, 점검리스트 등

	- - 신규	법령 개정	[대형차 검사기준 강화] 중대형 승합·화물차 등의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하여 대형승합차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정기검사에 냉각·연료계통 부적합 기준 신설하는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기준 강화를 목표로 설정	대형차 정기검사 기준 개선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㉔ 위법·편법 행위 근절 (25%)	- 고시 400 개정 억	550억	[과잉진료 개선] 나이롱 환자 등 위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이고 정량화된 지표로서 보험금 누수액 절감 목표를 전년대비 37.5% 상향한 550억으로 제시하는 등 도전적 목표 설정	보험금 절감액 및 부당청구 보험금 환수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 등
㉕ 규제개선 (20%)	- - 7건	10건	[규제개선] 국민·기업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계량 지표로서 관련 규제개선 발굴과제 건수를 전년대비 42.8% 상향한 수준인 10건으로 제시하는 등 도전적 목표 설정	규제 관련 회의체 상정·심의 건수 + 법령·행정규칙 개정 건수 +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등	심의자료, 보도자료 법령개정자료 등

기 본 방 향

□ 국민의 안전한 이동 보장

-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 강화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2	5	7	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1.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 철도사고 건수 ㉡ 철도중사자사상자수 ㉢ 항공운송분야 '11년 연속 無사망 사고' 유지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 철도중사자 사상자수 ㉡ 철도사고 사상자수 ㉢ 철도5대 범죄 검거율 ㉣ 무선제어입환 도입 ㉤ 선로전환기 자동방식 교체
②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 철도사고 건수 ㉡ 운행장애 건수 ㉢ 철도안전 정책 혁신방안 수립 ㉣ 노후철도개선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 국적항공사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 ㉡ 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 방안 마련 ㉢ 미래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안) 마련 ㉣ 탄소절감, 녹색항공 지원 추진을 위한 조건부항공로 운영 확대 ㉤ KASS 안정적인 항공용 서비스 확대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개소) ㉢ 지하안전강화를 위한 지반탐사 실시(km)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관리체계 정비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②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 건축 절차 전반에 대한안전관리 강화 ㉡ 기존 건축물에대한 유지관리 내실화 ㉢ 건축규제운영 합리화
	③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제도 개선 ㉡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 첨단기술 및 소속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 강화
	④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 소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 ㉡ 지상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 ㉢ 공항 시설 확충 ㉣ CT X-ray 도입·설치 비율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개선

(1) 주요내용

< 국민의 안전한 이동 보장 >

- ☐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 ☐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 ☐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 강화 >

-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 ☐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 ☐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 ☐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22	1.09	1.01	0.93	0.89 (잠정)	0.63	최근 3년간 사망자 수의 연평균 감소율(6.5%)을 고려하여 목표(연간 평균감소율 6.7%) 설정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경찰청 통계(교통사고) 및 국토부·농림부 등 통계(자동차·농기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428	458	417	402	356	340	최근5년내 건설사고 사망자 최소 목표치 적용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1) 주요 내용

□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 지난 철도안전 강화대책('23.1) 성과, 국제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도안전정책 혁신방안」 수립('24.4)

*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23.3~11,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화물역 대상으로 무선입환을 도입하고, 탈선사고가 집중된 화물역 등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개량

□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 본격적인 항공수요 증가, 미래 항공기 도입 등 다가올 새로운 항공산업 대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항공안전·교통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 ① 民·官·研 안전자산 공유, ② 데이터 분석피드백 강화, ③ 데이터 기반 위해 요인 발굴취약분야 집중 안전감독 등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 차량정리 작업이 빈번한 화물역 대상으로 무선입환을 도입하고, 탈선사고가 집중된 화물역 등 선로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개량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철도사고 건수	25.1	31.9	26.0	25.0	○ 최근 3년간 철도사고 건수 평균은 27.7건임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27.7건보다 10% 감축한 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24년 철도사고 건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메모보고)

㉑ 철도종사자 사상자수	5.5	5.8	4.3	4.2	○ 최근 3년간 철도종사자 사상자수는 평균은 5.2명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52명보다 20% 감축한 것으로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4년 철도종사자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분서 (메모보고)
㉒ 항공운송분야 '11년 연속 無사망 사고' 유지	0	0	0	0	○ 데이터 기반 취약분야 항공 안전리스크 집중관리 등 차세대 혁신 항공안전·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국제 기준 이행을 제고 등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예방체계 구축 -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항공사고 발생 예방	운송분야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통계 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 (철도안전) 철도분야 강화 관련 정책은 대부분 규제사항으로, 철도 노조 등을 중심으로한 철도 운영기관·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됨

⇒ 정책수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속적 의견청취를 통해 이견조정

- ☐ (항공안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 (지상조업사 의견)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업무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됨

⇒ 그간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해왔으나 실효성이 낮고, 지상안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 및 처벌 강화 필요성 설명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법인의 의무 및 처벌도 규정됨을 설명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V-1-①)

□ 추진배경(목적)

- 안전대책 추진으로 인해 철도사고 건수는 감소*했으나, 에스컬레이터(E/S) 역주행, 스크린도어 끼임 등 안전사고는 지속**

* ('16) 123건 → ('18) 98건 → ('20) 58건 → ('21) 65건 → ('22) 82건 → **(23) 68건**

**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23.6), 사당역 스크린도어 갇힘 사고('24.1)

- 또한, 철도종사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보수 장비의 자동화·기계화를 시도했으나, 도입실적은 부진한 실정
- 한편, 묻지마 범죄 증가,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양화

☞ 철도종사자·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묻지마 범죄 등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 스크린도어 등 안전관리 강화

① (작업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무선 차량정리**) 차량정리가 많은 역사 대상(3개역, '24),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시스템 확대

* (기존) 기관사-작업자간 교신으로 소통장애 발생 / (개선) 작업자가 리모콘으로 기관차 직접 제어

** '24년 3개역(도담역, 제천조차장역, 오봉역) 도입, '25년까지 8개역 10개소 도입 추진

- (**자동 선로전환**) 탈선사고가 발생한 화물역 등 주요역 내 선로 전환기를 자동방식*으로 교체(8개역 48개소, '24년)

* (기존) 작업자가 선로 내에서 조작(수동)하여 전환 / (개선) 역사 내에서 조작(자동)하여 전환

- (**음주처벌 강화**) 철도운영자가 종사자 음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화, 음주종사자 처벌 형량강화* 등 추진(법 개정안 발의)

*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물 운송) 철도안전법 개정('23.4.18)에 따른 위험물 용기검사 및 안전교육 세부기준(위험물철도운송규칙) 마련(~'24.6)

* 위험물 운송규칙 개정안(용기검사 기준 및 취급자 안전교육 방법 등) 마련 연구 용역('23.5 ~ '23.12.)→규제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법제처 심사('24.3~)

② (작업자)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

- (도시철도 관제자격 신설) 무인철도, 노면전차 등 도시철도 환경을 반영한 도시철도 관제 자격을 신설('24.6)*하고 전문인력 양성**

* 관제자격을 일반철도(기준)·도시철도(신설) 관제자격으로 이원화

** 24년 6월부터 최초 교육시행 예정(서울교통공사, 송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 (노면전차 기관사 양성)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25.下, 국내 최초)에 대비하여 신규 면허발급을 위한 교육 훈련기관 지정('24.11)
- (철도차량정비 기술자 역량강화) 차량정비에 제작사, 연구기관, 학계 등 민간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연 4회)
- (대체기관사 양성) 이례상황시 수도권 지하철의 수송력 유지를 위해 국방부·철도경찰대 인력에 대한 대체기관사 교육(40명) 시행

③ (승객)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 개선

- (건널목 사고 예방)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CCTV) 의무 설치토록 규정(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8월)
-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 안측 검지센서를 개선(개폐시→정차시 작동)하고, 작동 오류 시 기관사가 인지토록 출발선 표시창에 알람 표시(50개역)
 - 간힘사고 발생 시, 열차측 승객들이 안측 스크린도어에 기대면 (안전바를 밀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안전바 설치 확대(6천개소)
- (궤도안전 강화)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 증가에 대비하여 궤도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등 개정(2월)

* 준공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절차 보완,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 등

④ (승객) 묻지마 범죄, 혼잡도 등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 역사·열차 내 범죄행위 근절 >

- (폭행범 처벌) 승무원이 열차 내 폭행 행위 제지 및 녹음·녹화·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차 내 금지행위 확대(기존 금지행위*+‘폭행’)
 - * 출입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방송실, 발전실) 출입, 철도차량장치 조작, 음주·약물복용 등
- 폭행범 처벌형량(2년이하 → 3년이하)을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에 벌칙조항 신설
- (현장대응 강화) 강력범죄자를 현장에서 즉시 진압하기 위해 철도 경찰의 고무탄 사용(시범 → 정식운영) 허용(법개정)
- (AI CCTV) 신속한 용의자 추적뿐 아니라 이상행동 감지를 통한 선제적 범죄대응*이 가능한(‘24년, 기능개선) ‘AI CCTV’ 확대**(‘24.12)
 - * (‘23년) 시범 도입 → (‘24년) AI 학습 등을 통해 기능개선 예정
 - ** (‘24년 사업 대상 예정 물량)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위주 50개역 카메라 850대 설치 예정
- 지자체(도시통합센터)와 철도경찰대(철도보안정보센터) 간 CCTV 정보 연계 확대 검토 등 추진

< 혼잡도 관리 강화 >

- (혼잡도 관리) 혼잡도 표준 측정방법, 위험 단계별 필수 안전 대책 등 혼잡관리 방안 구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24.7)
 - * (혼잡도 측정) 측정시점, 주기, 측정수단(승객하중, AI CCTV, 통신사 데이터 등) 등 (안전대책) 안전요원 투입 규모·시점,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 (차량증편) 김포골드라인 등 출근시간 이용객 집중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 추진
 - * (김포골드라인, 5편성) ‘24~’26년, 153억 / (서울 4·7·9호선, 8편성) ‘24~’27년, 256억
- (혼잡도 앱 개발) 혼잡도 완화를 위해 승객이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앱 개발(‘24.4)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철도안전감독관 점검업무 계획 수립	1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자체 연계 등 철도보안 정보센터 고도화 결과 보고	1월	5%	메모보고(차관)
	열차 내 범죄행위 근절(철도안전법 개정)	2월	10%	보도자료
	쾌도운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2월	5%	방침(장관)
	철도차량 정비전문가 컨설팅 운영계획 보고	3월	5%	방침(정책관)
2/4분기	혼잡도 앱 개발 보고	4월	5%	메모보고(차관)
	철도관제사 자격 표준교재 발간	4월	5%	보도자료
	대체기관사 교육훈련 실시	5월	5%	메모보고(차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6월	5%	고시문
3/4분기	혼잡도 이행가이드라인 마련 보고	7월	10%	메모보고(차관)
	건널목 CCTV 설치를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8월	5%	고시문
	철도사고보고시스템과 철도차량이력관리 DB 연계	9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노면전차 교육훈련기관 지정	11월	5%	방침결정(정책관)
	AI CCTV 구축	12월	10%	메모보고(차관)
	음주처벌 강화(철도안전법 개정)	12월	10%	의사정보시스템
	스크린도어 개선사업 추진	12월	5%	메모보고(차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24.1월
회의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4.3월
회의	도시철도 관제자격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운영사 등) 회의 개최	'24.5월
협의회	혼잡도 이행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운영기관 협의회 개최	'24.6월
점검회의	AI CCTV 구축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24.9월
점검회의	자동선로전환 교체 등 개량사업 추진점검 실시	'24.11월
점검회의	스크린도어 개선사업 추진점검	'24.11월

□ 기대효과

- 철도 차량·역사 내 범죄행위 근절과 혼잡도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철도이용 환경 조성
- 철도종사자의 인적요인으로 발생하는 철도사고·운행장애 감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 계 구 분	'23	'24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V-9-일반재정①)				
① 철도안전(일반)(2731)	일반회계	19,132 (21,635)	23,321 (23,321)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301)		4,286	5,109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302)		11,841	14,455	
▪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303)		2,107	2,437	
▪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304)		421	453	
▪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309)		259	258	
▪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312)		25	25	
▪ 철도치안관리(341)		31	11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사업(343)		162	573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V-11-일반재정①)				
① 지하철건설지원(3031)	교특회계	1,407 (1,407)	1,165 (1,165)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332)		748	584	
▪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351)		659	581	
○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VII-1-정보화①)				
① 철도정보화(4232)」	일반회계	21 (69)	20 (75)	
▪ 철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07)		21	20	
○ R&D 성과활용을 높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한다.(VI-1-R&D⑥)				
① 철도기술연구(4159)	교특회계	15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철도종사자 사상자수 (30%) * 운행거리 1억km당	5.5	5.8	4.3	4.2	○ 최근 3년간 철도종사자 사상자수는 평균은 5.2명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5.2명보다 20% 감축한 것으로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24년 철도종사자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철도사고 사상자수(30%) * 운행거리 1억km당	16.1	27.6	13.2	13.2	○ 최근 3년간 철도사고 사상자수 평균은 18.9명임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18.9보다 30.0% 감축한 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를 감안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임	'24년 철도사고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철도5대 범죄 검거율(20%) * 철도안전법위반·상해·폭행·성폭력·절도·횡령	88.9	92.4	92.1	92.4	○ 최근 3년간 철도지역내 5대 범죄 검거율은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24년 GTX-A 개통에 따른 관할구역 확대에 의하여 철도범죄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 최근 3년간 최고 검거율을 목표치(92.4%)로 설정하더라도 절대수치인 범죄검거건수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될 것이기에 도전적인 목표 * '22년 기준 철도경찰의 5대범죄 검거율(92.4%)은 일반경찰의 5대범죄 검거율(76.6%) 보다 23.3% 높음	('24년 5대범죄 검거건수 / '24년 5대범죄 발생 건수) x 100	철도경찰 통계연보
㉣ 무선제어입환 도입 (10%)	-	-	1	3	○ 제천·대전조차장, 오봉역 등 입환작업이 빈번한 역 대상 무선입환 선제적 도입 - 무선입환 도입을 위해서는 장비도입, 인력양성 등 관련 제반사항이 갖춰줘야하므로, '24년에만 3개역을 도입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무선제어입환 도입역수	메모보고 등 내부보고 문서
㉤ 선로전환기 자동 방식 교체(10%)	-	-	18	48	○ 환경이 열악한 화물취급역을 중심으로 수동선로전환기 적극 개량 추진(48건) - '19~'23년 선로전환기 자동화 완료 건수(18건) 대비 '24년에만 48건을 교체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설정	자동화 개량완료건수	'24년 개량실적 보고(메모보고 등)

②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V-1-②)

□ 추진배경

- 철도안전 강화대책('23.1)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증가 추세였던 철도사고 전수가 '23년 감소 추세로 전환
 - * ('16) 123건 → ('18) 98건 → ('20) 58건 → ('21) 64건 → ('22) 82건 → **('23) 68건**
- 특히, 여객열차 탈선사고(사회적 피해 高), 종사자 사망사고(안전체계 구조적 문제) 등 중대한 사고는 **'23년 0건으로 감소**
 - * ('22년 여객열차 탈선사고) 무궁화호 탈선(11.6), SRT탈선 (7.1), KTX 차륜 파손 탈선(1.5) ('22년 종사자 사망사고) 오봉역(11.5), 정발산역(9.30), 중랑역(7.13), 대전조차장역(3.14)
- 그러나, 오봉역('23년 6건) 등 시설이 취약한 화물역에서 화물열차 및 차량정리 중 탈선은 증가*하여 여객열차 운행장애로 연결
 - * ('20) 0건 → ('21) 2건 → ('22) 9건 → **('23) 17건** (운행선 4건, 측선 13건)

☞ 화물열차 탈선 등 취약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사고 감소 추세 유지를 위해 관제독립성 확보, 유지보수 첨단화 등 안전강화 지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체질개선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 (안전체계 개선) 지난 철도안전 강화대책('23.1) 성과, 국제컨설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도안전정책 혁신방안」 수립('24.4)
 - *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3.3~11,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 (주요대책) ①관제 독립성 강화, ②유지보수 첨단화, ③안전관리 지표 도입, ④차량정비체계 개선 등 방안 마련

< 철도안전체계 국제컨설팅 결과 >

- (관제) 운영이 개입한 과다한 보고체계*(3단계), 운영과 혼합된 로컬관제(全역의 46%)로 인한 관제 미흡 등 **독립성 부재**가 안전저하의 근본 원인
 - * (국내, 3단계) 기관사 → 로컬 → 중앙 → 대전상황실 / (해외, 1단계) 기관사 → 관제집중화 센터
- (유지보수) 건설(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공단) 등 주체가 상이하여 **안전관리의 책임이 파편화**되고, 사고 원인해결보다 **책임공방** 경향

② 철도관제 독립성 강화

- (독립성 강화) 철도공사가 관제와 코레일 운영상황실을 분리하고, 관제↔운영사^{코레일·SR}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
- (중앙집중화) 로컬관제역을 제2관제센터 준공 시점('28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앙집중화하기 위한 “관제집중화 로드맵” 수립('24.12)
 - * 제도개선 사항, 미비점 등 발굴을 위해 수서·동탄역('24.2~) 시범사업 추진
- (관제역량 강화) 비상상황 시, 관제사(로컬관제 포함)의 운행조정·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제센터(구로) 내 시뮬레이터 설치('24.12)
- (철도사고 표준화) 철도사고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철도사고 보고 및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24.6)

③ 인력위주 유지보수 업무 첨단화

- (첨단장비 도입) 인력 중심의 유지보수 업무를 장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로검측차, 자갈 다짐·교환 장비 등 첨단장비 확대*
 - * ('24) 20대 발주 (궤도 안정기 등 유지보수 장비 17대, 통합검측차 등 검측장비 3대)
- (선로등급제)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에 따라 점검·보수 기준을 차등·효율화하는 ‘선로등급제’ 방안 마련('24.12)
- (시설 이력관리) 데이터 기반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시설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시('24.3)
 - *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건설→점검→유지보수→개량)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④ 화물열차 탈선 등 철도사고 취약요인 개선

- (화물열차 안전개선) 차축베어링 교체주기를 단축*하고 교체기록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국토부↔코레일, '24.12월) 하여 관리 강화
 - * (前) 8년 또는 80만km마다 분해·조립 / 20년 이상 신품 교체 → (後) 8년 이상 신품 교체
- 위험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에 탈선 감지장치 설치('24년, 250량), 차축온도 감지장치 설치(오산·조치원 2개역) 등 추진

- **(노후 시설개선)** 경부선 수도권 지역 등에 궤도구조 개량사업*, 노후역사(28개, '24) 개량사업 등 노후화된 시설의 성능개선 추진
 - * 교체시기가 근접한 서울~금천구청, 대전연결선 레일개량(15km) 및 분기기(40틀) 개선
 - 특히, 화차 탈선이 빈번한 주요 화물역 노후시설개량(7개역) 추진
- **(노후 차량개선)** 노후 도시철도 차량 적기교체를 통한 철도운행 안전을 위해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 교체 지원('24년, 581억원)
 - * (총 2,086대) '21년(572대) → '22년(260대) → '23년(272대) → '24년(462대) → '25년(520대)
- **(테마별 안전점검)** 사고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취약분야 등 점검 테마*를 선정(매월)하고 집중 점검·개선 추진('24.1~, 철도안전감독관)
 - * 노후부품의 적기교체 및 정비주기 준수 여부, 안전수칙 이행 및 사고·장애 예방대책 등
- **(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운영기관 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공개(6월)
 - * 철도사고, 운행장애 등 사고지표 / 안전투자 계획·실적 / 경영진 등 안전성숙도 평가

⑤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 **(GTX-A 안전관리)** 사고 초기 신속대응 및 원활한 수습복구 등 비상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훈련* 추진
 - * GTX-A 우선 개통(수서-동탄) 前·後 2회 훈련 실시('24.3월, 4월)
 - 안전한 개통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등이 총출동하여 안전관리 지원
- **(재난대응 역량강화)** 철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강화를 위한 비상대응훈련 실시(분기별 1회)
- **(24시간 상황반 운영)** 풍수해·폭염·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철도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재난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 (여름철, 풍수해·폭염) '24.5.15.~10.15. / (겨울철,大雪·한파) '24.11.15.~'25.3.15
- **(취약시설 점검·개선)** 철도 노선 급경사지* 전수조사를 완료(8월) 하고, 행안부 급경사지정보시스템(NDMS) 상에 입력 및 통합 관리
 - * 경사도 34도 이상의 자연(높이 50m 이상) 및 인공(높이 5m 이상) 비탈면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철도안전감독관 점검업무 계획 수립	1월	5%	방침결정(정책관)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개시	3월	10%	메모보고(차관)
	GTX-A 신규 운영사 비상대응 합동훈련 실시	3월	5%	보도자료
	GTX-A 개통대비 안전분야 추진실적 보고	3월	10%	메모보고(장관)
2/4분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철도상황반 운영	5월	5%	방침결정(정책관)
	철도사고 보고 및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6월	5%	메모보고(차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공개	6월	5%	보도자료
3/4분기	관제, 운영사 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계획	7월	5%	메모보고(차관)
	철도노선 급경사지 전수조사 완료	8월	5%	메모보고(차관)
4/4분기	관제센터 내 시뮬레이터 설치 완료보고	12월	5%	메모보고(차관)
	선로등급제 방안 마련	12월	10%	방침결정(국장)
	관제집중화 로드맵 수립	12월	10%	메모보고(차관)
	유지보수 첨단장비 도입 확대	12월	10%	메모보고(차관)
	화차 베어링 교체기록 이력관리시스템 연계	12월	5%	메모보고(차관)
	화물열차 탈선 감지장치 및 차축온도 감지장치 설치	12월	5%	메모보고(차관)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철도 안전정책 혁신방안 수립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24.2월
회의	GTX-A 유관기관간 비상대응매뉴얼 교차검토 회의 개최	'24.3월
회의	첨단장비 도입 확대관련 진행상황 점검	'24.6월
점검회의	철도노선 급경사지 전수조사 용역관련 추진점검	'24.8월
컨설팅	관제 집중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24.11월

□ 기대효과

- 철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근본적 요인 제거하고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철도사고 감소 및 이용자 안전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 계 구 분	'23	'24
○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V-9-일반재정①)				
① 철도안전(일반)(2731)	일반회계	19,132 (19,132)	23,321 (23,321)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위탁(301)		4,286	5,109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302)		11,841	14,455	
▪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303)		2,107	2,437	
▪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위탁(304)		421	453	
▪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309)		259	258	
▪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312)		25	25	
▪ 철도치안관리(341)		31	11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건설사업(343)		162	573	
○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V-11-일반재정①)				
① 지하철건설지원(3031)	교특회계	1,407 (1,407)	1,165 (1,165)	
▪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지원(332)		748	584	
▪ 도시철도노후차량 개선지원(351)		659	581	
○ 데이터 기반 국토교통행정 실현으로 고객편리를 증진한다.(Ⅶ-1-정보화①)				
① 철도정보화(4232)」	일반회계	21 (69)	20 (75)	
▪ 철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07)		21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철도사고 건수 (30%) * 운행거리 1억km당		25.1	31.9	26.0	25.0	○ 최근 3년간 철도사고 건수 평균은 27.7건임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27.7건보다 10% 감축한 것으로 과거 실적 추세치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 설정임	'24년 철도사고 건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운행장애 건수 (15%) * 운행거리 1억km당		54.4	50.1	52.7	51.4	○ 최근 3년간 운행장애 건수는 평균 52.4건임 - '24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인 52.4건보다 2%감축, 운행장애는 폭염·폭우로 인 한 지연 등 예측불가하고 발생원인도 다양한점을 고려, 도전적인 목표설정임	'24년 운행장애 건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 (교통안전공단)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 철도안전 정책 혁신방안 수립 (25%)		-	-	신규	수립	○ '22년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 함에 따라 「철도안전 강화 대책」 수립('23.1), 대책일환으로 철도안전체계 컨설팅 추진('23.3~11, BCG) - 기관 간 참여한 이해관계 조정과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도출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 마련은 추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지속적으로 철도안전에 최 우선으로 보완 필요	방안 마련	방침안
㉣ 노후 철도 개선 (30%)	노후차량 교체 지원율 (15%)	27	40	53	63	○ 철도운행 안전의 위협요인인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전년도 실적 대비 10% 증가목표 설정 * 노후차량 총 2,086칸 대상	누적교체지원수량 / 노후차량전체수량	예산배정 공문 또는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노후시설 개량 지원율 (15%)	100	100	100	100%	○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위험성 높은 노후시설(전차선로, 배 선설비 등)에 대한 시설개량 * '24년 노후시설 총 개량대상 1,686개소 대비 실제 개량한 실적	노후시설 개량개소 /'24개량필요개소 (1,686개소)	온나라시스템 내부문서 (메모보고)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V-1-③)

□ 추진배경(목적)

① 폭발적인 항공수요 증가

- 글로벌 항공수요는 '24년에 '19년 수준 완전회복 전망(IATA·ACI), 우리나라도 국제선 여객 8,658만명, '19년比 96% 회복 전망(교통연)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중장기적('19~'40)으로 여객은 연평균 3.4% 성장 전망, 타 대륙에 비해 아태지역(연 4.6%)은 빠른 회복 예상
 - * 아·태 4.6%, 중동 3.7%, 아프리카 3.4%, 남미 2.9% 북미 2.2% 유럽 2.1% 등
- ** ICAO는 '18~'50년 연평균 3.6%, 에어버스는 '19~'42년 연평균 3.6% (화물 3.2%) 전망
- 국내 항공사들도 수요 급증 전망에 따라 경쟁적으로 항공기 도입*
 - * (항공기 도입계획) '24년 426대(+32)→'25년 457대(+31)→'26년 477대(+20)

② 지속적인 항공안전 이벤트 발생

- 운송분야 10년 연속 無사망 사고 유지 중이나, 안전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발생(^{23년}항공기 사고 4건, 준사고 2, 장애 1,441건) 중으로,
 - * '22년 현황: 사고 6건(운송 2, 비운송 4), 준사고 1건(운송), 안전장애 1,040건
-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군* 및 다빈도** 지표 중심으로 전조징후 단계부터 사전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활주로이탈, 조종중 제어상실, 비행중 지면충돌, 공중충돌, 고장·결함, 추락 등
 - ** 최근 5년 동안 사고 발생 9건 중 난기류 조우에 따른 부상 건이 6건을 차지

③ 항공인프라 포화 및 신기술 항공기 도입

- 민·군 공역의 혼재, 높은 군 공역 비율(軍 64%, 民 36%), 인천공항 4단계, 울릉·가덕도 등 신공항 개항에 따른 공역활용도 증대 필요
 - * '20년 기준, 서울-제주 구간 세계 항공로 혼잡도 1위, 서울-김해 구간 2위, 제주-김해 구간 12위, 인천공항 정시율 34위권 등 공역 포화도 上

- 증가하는 항공교통량* 혼잡·지연 최소화, 흐름관리 최적화 및 新 모빌리티 도입에 대비,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필요

* '23년 항공교통량: 총 780,635대(日 2,139대), 전년比(539,788대) 45% 증가

- 항공기 안전운항 및 UAM 자율비행을 위한 정교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항공위성서비스(위치 오차 GPS 15~33m → 위성 1~1.6m) 확대 필요

☞ 본격적인 항공수요 증가, 미래 항공기 도입 등 다가올 새로운 항공 산업 대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데이터·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혁신 항공안전·교통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데이터 기반 위해요인 발굴을 통한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① 데이터 분석 및 피드백 강화 등 데이터 효용성 증대

-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안전 정보를 생산하고, 관련 업계와의 공유 등 환류체계를 통한 안전데이터 활용성 제고
- 항공기 도입·운영·말소 등 생애 주기별 안전 프로파일을 구축·관리 함으로써 항공기 쏘주기별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
- '24년 항공안전투자 공시 운영, 1만 운항 당 환산비용 공개, 항공사 투자규모에 맞는 안전투자 비교근거 제시, 우수 항공사 가점부여
- 업계 자체 위험관리에 활용토록 한국형 위해요인 분류체계 마련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분석(R&D)능력을 고도화하고, AI 기반 모든 항공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전략 수립

【데이터 분석 전·후 안전관리체계비교】



2 안전목표 강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체계 완전 정착

- 항공사 안전지표사고 유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독·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행 추진
 - 자주 발생하는 활주로이탈·침범, 유도로 오진입 등에 대한 숙달·예방훈련, 운항절차 개선 등 인적오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항공사별 종합 안전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취약분야 TOP3 선정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감독
 - * 시정지시, 개선권고, SMS평가, 안전지표 발생, 위규현황, 행정처분 건수 등 9개 항목
- 항공기 정비결함·안전장애 경향분석과 항공사별 운영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여 선제적 경감조치

3 民·官·研 보유 안전자산 공유 등 협력체계 강화

- 민·관에 산재한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 확대(10종→12종)
- 국가가 수집한 항공사 비행자료 분석·활용 과정에 항공사 참여 기회 보장 및 안전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 활성화
 - 사고 전조징후의 경향·원인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경감방안 도출

4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촘촘한 항공안전관리

- 국제노선 증가, 운항환경 다변화에 따른 승무원 피로도가 안전운항을 저해할 수 있어 항공사별 실정에 맞는 피로위험관리제도 도입
 -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승무원의 생체리듬, 휴식시간 분석 등을 통한 과학적·경험기반의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마련

시간제한 방식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 방식
근무인원數, 근무시간대 및 시차 등 다양한 피로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비행시간(例: 8시간 등)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	시차, 생체리듬, 운항형태, 노선, 생활양식 등 다양한 피로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 분석 및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비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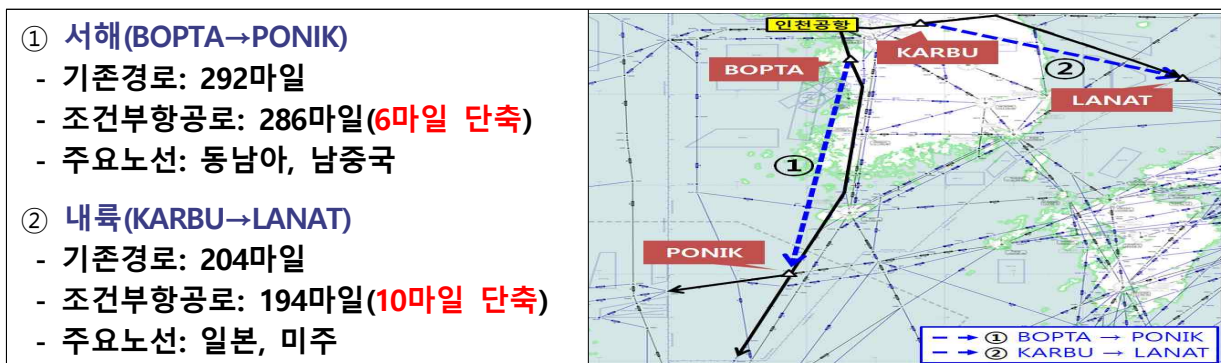
- 2차전지 산업성장에 따라 항공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 증가가 예상되어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 (위험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 항공사·화주 등 위험물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현장실태 점검 및 소형운송사업자(50인승 이하) 안전감독 대상 추가 등 감독대상 확대

② 미래항행 대비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① 항공교통 효율화를 위한 공역 현대화

- (마스트플랜 수립) 항공로 재편, 신항공모빌리티 운영 등을 포괄하는 미래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플랜 추진
- 민군 국가공역체계 기획전담반을 구성하여 수도권 공역*을 포함한 민군 공역의 효율적 조정 및 공동 활용 방안 논의
 - * 인천공항 활주로 4분 운영('25)에 대비하여 관제 수용량 증대(現75대/h→'29년 100대/h)를 위한 수도권 공역 조정 추진
- 민군 항공정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스트플랜 추진방향 확인 및 수립된 마스트플랜(안) 마련
- (탄력적 공역운영) 한정된 자산인 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행거리 단축(연료절감)을 통한 탄소절감, 녹색항공 지원 추진
- 민간항공기가 군훈련이 없는 야간, 휴일에 군훈련공역을 통과하여 비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도록 조건부항공로 운영 확대* 추진
 - * 국방부와 서해·동해 조건부 항공로 시범운영('24.10.16~'24.10.15, 22:00~06:00, 주말·공휴일 전일) 정규화 및 영공통과용 고고도 조건부 항공로 신설 협의



② 데이터 기반 항공교통관리 체계 구축

- (항공교통 DB 구축) 항공교통운영기관별로 산재된 항공데이터를 공동으로 저장·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ATM DB) 구축*

- * 지상·공중 항적, 항공기 운항정보, 기상정보 등 항공교통관리 및 정책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식별·저장하는 시스템으로 '24년 구축, '25년 시험운영 목표
- 실시간 공유 포털시스템, 항공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통계분석 시스템, ATFM 포털사이트 기능 개선,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R&D 사업 연계)**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R&D사업* 연구과제 결과물의 원활한 활용 및 연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환경 구축
 - * 데이터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사업 : ① ATM 성능평가 및 운용효과 분석, ② 항공교통 수용량 예측, ③ 4D 궤적기반 ATFM 구축
 - ** 빅데이터기반 항공안전관리 기술개발·플랫폼 구축 : ① 항공안전 마스터 데이터셋 구축 ② 안전이벤트 전조징후 도출·분석 ③ 분석결과 시각화 및 안전관리 활용 플랫폼 구축

3 국가항행계획(NARAE) 이행 내실화

-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미래항공 종합계획(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 ①^[운영]수요자 중심 공항·공역 운영, ②^[정보]데이터 기반 항공교통관리, ③^[기술]최적의 항행환경 구축, ④^[특별과제]新기술·비행체 대응, ⑤^[특별과제]포스트코로나 대비
- 팬데믹으로 인해 구성·운영이 미흡했던 위원회* 재구성 및 폭넓은 전문위원 참여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항공교통의 효율성·안전성 증대
 - * (위원장) 국토부 제2차관, (위원) 관련부처 고공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20명 이내

< 국가항행계획(NARAE) 중·장기 목표 및 기대효과 >

구 분	기준('19년)	~ '24년(단기)	~ '42년(중장기)
① 운항효율성 증대	국내 63분, 국제 97분	[국내] 62.7분, [국제] 96.7분 [비행시간 0.5% ↓]	[국내] 56.7분, [국제] 87.3분 [비행시간 10% ↓]
② 처리교통량 증대	전체운항 84만편	84만편 [ATM 교통량 회복]	169만편 [ATM 교통량 2배 ↑]
③ 이용자 편리 개선	출발76%, 도착56%	출발 77%, 도착 57% [정시성 1% ↑]	출발 91%, 도착 67% [정시성 20% ↑]

- 항공교통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운항의 모든 단계(비행계획제출 前 ~ 비행종료)에 대한 조정·관리가 가능한 新 항공교통흐름관리 도입
 - 동남아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적극적인 출발 시각 조정 등 흐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AMNAC* 가입 추진, 국민 편의 증대
 - * Asia-Pacific Cross-Border Multi-Nodal ATFM Collaboration: 동남아 입출항 항공교통량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로 중국·태국·싱가폴·홍콩·베트남 등 총 11개국 가입

- SWIM을 연계한 비행계획관리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및 FF-ICE* 체계를 통해 4D궤적기반** (위도·경도·고도·시간) 개념의 흐름관리 도입

* 비행계획 제출 전부터 비행 중 단계까지의 계획 조정·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체계

** 비행계획 단계부터 비행종료시까지 예측한 시간기반 항공기의 위치·운행 관리



4 미래항공교통체계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ICAO에서 결정된 의결사항은 우리나라의 비행안전, 항공교통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적시 대응 필요
- 급변하는 미래항공교통 환경 대응 및 항공안전선진국 자리굳힘을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활주로안전 등 국가 간 협조체계 강화
- ICAO 항행정책 수립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회의(APANPIRG, 전문그룹, 패널)에 참여, 우리나라 의견·입장 반영을 통한 항공위상 제고
- 분쟁지역 민항공기 안전운행 확보(SSCC), 한·미·일(ATM 안전협력회의) 및 유럽과 협력 강화(한-EU APP)등을 통해 경험 공유·협조방안 제안

③ 항행위성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산업생태 기반 조성

1 미래 항행위성시스템 중장기 국산화 구축전략 마련

- (전략마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 등에 의한 위성 등 항행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장기 국산화 전략 마련('24.11)
- * 항로·접근관제를 위한 레이더, 자동화처리시스템 등은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도 해외에 의존하여 국내자본 유출이 매년 발생(연 100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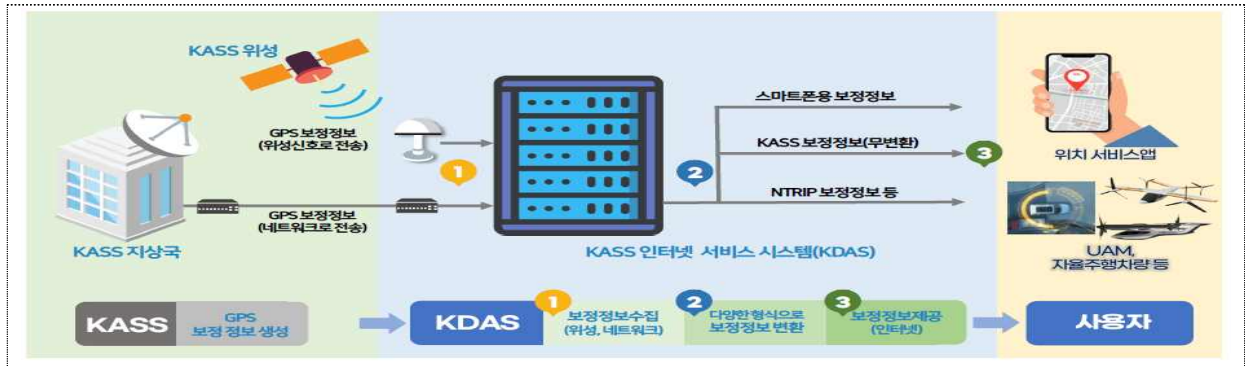
- 위성 등 항행시스템 국산화 전략마련을 위한 산, 학, 연 등 관계 기관 전문가 그룹 구성, 자문 및 실현 가능성 등 검증
 - 항로관제시스템 이중화(인천, 대구) 개량시, 최소 1개 시스템은 국산화 구축기반 마련, '28년 사업적용 기본설계 반영 방안 도출
 - 軍 국산화 레이더기술을 활용한 민 적용 가능여부 등 국내 기술 여건을 분석하여 단계적 국산화 추진방안 제시
 - (운영관리) 現 국내·외 항행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관리 기술표준화를 위한 대안 마련
- * 해외 개발 제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변경 등 권한을 주지 않음

2 항행위성시스템 서비스 확대 제공

<KASS 2호 위성발사 및 서비스 확대>

- 안정적인 고품질 KASS 정밀위치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및 항공위성 2호기** 적기 확보 추진('24.10~'25.1)
 - * 실제 시스템 운영사례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등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 (발사) '24.10~'25.1, 美 플로리다, (제작) 유럽 탈레스, (발사체) 미국 SpaceX(팔콘 9)
- 차질 없는 2호 위성발사 추진을 위한 위성 식별코드 획득('24.9, 美) 및 탑재체 성능시험 등 현장점검('24.5, 프) 시행 등
- 정밀한 위치서비스 제공으로 항공기 이착륙 최저치 개선*을 위한 전국 항공위성서비스(KASS) 준정밀접근(APV-I) 비행절차 확대** 추진
 - * 기존 RNP 접근절차 대비, 착륙 결심고도·시정치를 낮춤으로 항공기 착륙 실패율 개선
 - ** ('23) 무안, 울산공항, ('24) 제주, 포항경주 공항 등 수립, 향후 전국공항으로 확대
- KASS 정보의 지속적 제공, 활용성 증대 및 음영구간 해소 등을 위한 KDAS(인터넷기반)* 플랫폼 체계 구축 추진
 - * GPS 위치오차를 축소(15~33m→1~1.6m)한 KASS 데이터를 현재 위성을 통한 제공 방법에 추가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KASS Data Access Service)
- 특히, KASS 정보를 국내 통신망과 연계하여 LTE 등 유·무선 통신망 체계로 산업분야에 제공하는 기술 구현 등

【항공위성서비스(KASS) 인터넷기반 제공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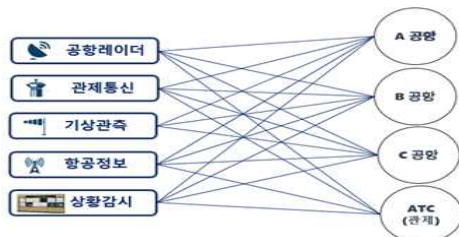
<차세대 국제표준 디지털 항공종합통신시스템 구축>

- (SWIM* 구축) 주요공항 등에 거점 차세대 SWIM 백본망을 구성하여 공항의 소규모 백본망과 연계 구축, 통합항공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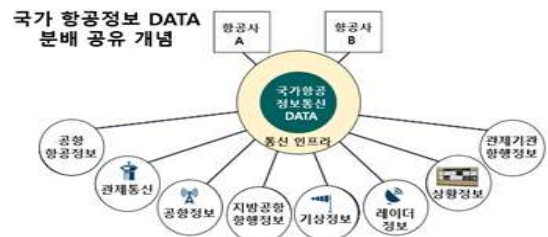
* (SWIM 개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항공교통관리(ATM) 정보들을 정보교환 모델을 통해 표준화하여, 다양한 항공정보 통합하는 차세대 항공정보처리 인프라

- 공항과 관제기관을 트라이앵글형 백본망으로 연결, 패킷 전송망 기법을 이용한 대용량·고속 전송 가능한 항공정보통신망 구축* 추진

* SWIM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조사, 단계별 로드맵 및 서비스전략 마련 등



< 현재 항공통신망체계 >



< SWIM 구축 이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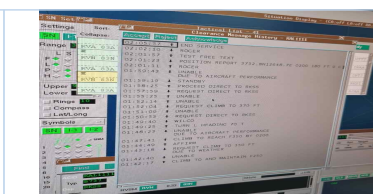
- (데이터 관제통신 구축) 관제사·조종사 간 음성통신 오류와 주파수 점유 최소화 등을 위해 항로관제 데이터 통신서비스(CPDLC) 체계 구축

* 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CPDLC): 항공기 ↔ 관제사간 음성통신 대신 데이터 통신을 이용, 항공교통관제 정확성, 신뢰성 향상

- 데이터링크(CPDLC) 연계서버(인천·대구ACC) 설치, VDL 지상국(강원·부산·대구·제주) 설치, VDL 서버 인터페이스(김포공항) 추진



데이터링크 메시지 교환(항공교통관제시스템)



데이터 메시지교환(항공기)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24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시행계획 수립	2월	5%	방침결정(실장)
	민·군 국가공역체계 기획전담반 운영 계획 마련	3월	5%	방침결정(실장)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 가입	3월	5%	메모보고(실장)
2/4분기	항공정책추진위원회 개최	4월	5%	메모보고(실장)
	국가항행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4월	5%	메모보고(차관)
	국제협력을 위한 패널회의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5월	5%	메모보고(실장)
	정보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한-EU 협력회의 개최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항공안전 투자 공시	7월	5%	보도자료
	KASS 데이터 인터넷 제공 기술협의회 개최	8월	5%	메모보고(실장)
	KASS 위성 2호기 식별코드(PRN) 획득	9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안전 백서 발간계획 보고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	10월	5%	법령정보센터
	항공정책추진위원회 개최	11월	5%	메모보고(실장)
	KASS 데이터 인터넷 제공 플랫폼 설계(안) 마련	11월	5%	메모보고(실장)
	항행안전시설 국산화 전략 수립	11월	5%	메모보고(실장)
	항로관제 데이터 통신시스템(CPDLC) 준공	11월	5%	메모보고(실장)
	KASS 이용 비행절차 확대	12월	5%	항공정보간행물 등
	통합 항공안전데이터(12종) 분석결과 보고(안전동향 보고)	12월	5%	메모보고(실장)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방안 마스터 플랜(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조건부항공로 신설 협의 완료 및 개시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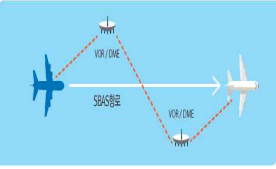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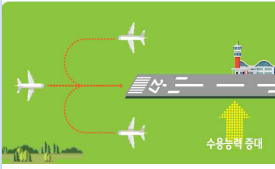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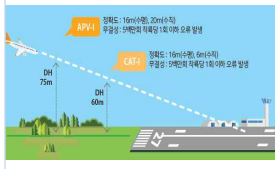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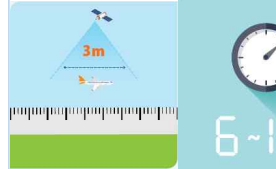
- (수혜자) 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산업종사자, 사업자 등 직접적 관계자 및 모든 항공교통 이용자,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 등
- (이해관계집단) 정부의 안전관리·감독 대상인 국내외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 대국민, 항공업계, 공항운영자, 모빌리티 산업분야 등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간담회	체계적인 국가항행계획 추진을 위한 혁신토론회 개최	'24.3월
회의	국가공역체계 전담반 회의 개최	'24.4월
회의	조건부항공로 운영 확대 관련 국토부·국방부 협의	'24.6월
회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구축 4차 사업 중간 점검	'24.9월
공동연구	비행자료 분석실무단(항공사 참여) 공동연구 추진	'24.11월
위원회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활주로 안전위원회 개최	'24.12월

□ 기대효과

- 안전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고도화를 통해 사후관리 방식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 기반 조성
 - 분석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예측, 의사결정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안전투자 공시제도 정착으로, 항공사 신인도 제고 효과 등을 감안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투자 유도 기반으로 작용
- 항공교통의 최적의 비행으로 효율성 제고 및 국민에게 지연감소, 항공업계는 비용절감*, 신산업 지원으로 국제사회 기여도 증가
 - * 항공기 지연감소·운항시간 단축에 따라 약 12조 1,361억(항공사 운항비 10조6,021억 절감 및 공항운영수익 1조 5,340억 증대) 등 경제적 효과 전망(~'42년 기준)
- 항행안전시설 국산화를 통해 국제위상*·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자본 유출 방지, 수출누적 약 1억불 달성('25, 0.7\$ → '30, 1억\$) 예상
 - * 항행분야 최초 항공정보검색·저장 국내 기술(레지스트리 부문)을 ICAO 국제 표준으로 채택
 - 아울러, 신속한 시스템 장애수리, 국내 제작사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비용 해외유출* 방지 효과 전망
 - * 관제시스템 등 매년 약 100억원 이상의 정기적인 해외 유지관리비 지출(兩 공항공사)
- KASS 항공용서비스로 GPS 신호를 보정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항공기의 항법신호로 사용, 항공 수용량 증대와 항공안전 강화

			
유연한 접근경로 설정	다양한 착륙경로 설정	정밀접근과 근접한 APV-I 성능제공	1.6m이내 정확성 유지와 오류경보(10초) 제공

- 아울러, GPS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UAM·드론·자율차·내비 등 다양한 위치정보 산업분야에 현재보다 정밀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가능

					
UAM 비행 정확도, 안전성 강화	자율주행 정확도 향상	드론 비행 안전성 강화	보다 정확한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실종자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

- 대용량의 고속화된 항공정보종합통신망(SWIM) 구축으로 회선 이용 효율 극대화(연 80억원, 30% 이상 절감), 다양한 데이터 공유체계 확보
- 데이터 통신서비스(CPDLC) 도입을 통한 데이터에 의한 명확한 관제 지시로 의사전달 오류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및 수용증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항공발전지원(V-13-일반재정)			
① 항행안전시설(3631)	교특회계	484 (484)	350 (350)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302)		484	350
② 항공안전운영(3636)	교특회계	99 (99)	97 (97)
▪항공기안전인증및감독활동(303)		7	7
▪항공안전체계구축및유지관리(311)		64	59
▪시스템기반항공안전감독시스템유지보수(338)		15	15
▪국가항공안전정보수집분석(340)		13	16
국토교통연구개발(VI-1-일반재정)			
① 항공기술연구(4161)	교특회계	551 (551)	1,194 (584)
▪빅데이터기반항공안전관리·보안인증기술개발(R&D)(308)		28	15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안전운용기술개발(R&D)(314)		32	616
▪데이터기반항공교통관리기술(R&D)(313)		36	29
▪정기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311)		71	110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R&D)(322)		384	4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국적항공사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20%) *백만운항 당	3.5	6.1	2.1	2.0	국적항공사 무사망사고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률을 '23년 실적치(2.1) 대비 5% 감축하도록 목표치를 설정	① 무사망사고 달성시 x 50% ② '23년 사고 발생률(2.1) 보다 5%이상 감축 시 x 50% * 사고발생률 = (당해년도 국적항공사 사고발생건수÷당해년도 국적항공사 운항횟수)×100만	안전정보 분석보고서
㉡ 승무원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방안 마련(20%)	-	-	신규	관리 시스템 방안	승무원의 과학적·경험기반 피로도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정부 승인 절차 등이 포함된 운영지침안 마련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지침안 마련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 미래 국가공역체 계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안) 마련(20%)	-	-	신규	마스터 플랜(안)	항공로재편, 軍 작전구역 광역화, 고고도 공역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미래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 방 안 마련	전담반회의 정책협의회 등 마스터플랜(안)마련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 탄소절감, 녹색항 공 지원 추진을 위한 조건부항공 로 운영 확대 (20%)	-	-	신규	조건부 항공로 운영	서해(동남아 노선) 및 내륙(일본· 미주 노선) 조건부 항공로 운영 개시	운영 세부 절차 등 협의 후 운영 개시 합의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 KASS 안정적인 항공용 서비스 확대(20%)	-	-	신규	16	KASS 안전운용기술개발을 통해 공간 신호 분석 등 분석프로그램 확보(14종) 하고, 국내공항에 점진적 KASS 서 비스 확대	① KASS 성능분석 전용 툴(14종) 개발 × 50% ②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항공용 서비스 제공 2개 공항 확대 × 50%	관련문서 (연구개발 성과 보고자료, 공항서비스 공포 , 항공정보간행물 등)

(1) 주요 내용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 (공공 감리강화) 실력·전문성이 우수한 감리인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실력 있는 기술인 육성 및 활용

☐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 (건축절차 강화) 무량판 구조,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자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규제 합리화)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의 증·개축 또는 해체 시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재기준 관련 용어 명확화

☐ 도로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도로제도·환경 개선) 교통정체 해소방안 마련, 접도구역 지정 및 운행제한차량 허가 서비스 개선,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등 추진
- (첨단기술 활용) 도로살얼음 예측을 통한 교통안전사고 예방, 비탈면·교량 실시간 계측관리 및 낙하물 자동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등 추진

☐ 선제적 공항관리 및 탑승객 중심의 보안 운영

- (선제적 안전관리) 공항 내 안전사고 감축, 항공산업 미래 혁신 등을 위해 공항 내 단계적 자동화 및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 (첨단보안장비 도입) 고도화·지능화되는 신종테러 위협대응을 위해 CT X-ray 검색장비 도입 및 안티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4			
①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	417	402	356	329	정부의 강력한 안전대책과 현장관리 등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는 사망자수에도 최근 3년간 감소를 추세(7.5%)를 적용한 도전적 목표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②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만족	만족	만족	만족	인천·김포·김해·인천·제주·청주·대구공항 등 6개 공항에 대해 실시한 최근 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평가) 매우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만족, 매우만족	6개 공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교통의 편리성, 시설정결성, 주차시설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항공교통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 산정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건설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건설비 및 시설물 유지비용 증가, 형사처벌 우려에 따른 소규모 업체 및 발주청 부담 증가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등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따른 건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기반시설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기능 제공 등을 통한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의사결정 지원(재정투입 최소화)

□ (건축기준 강화) 구조설계·감리 내실화 과정에서 건축사·구조기술사 간 업역 다툼이 예상되며, 건축기준 강화로 건축주 비용 부담 증대

⇒ 각 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건축주 및 관련업계에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 적극 설득

□ (위반건축물 관리) 불법 주거전용 생활숙박시설 등 원상복구를 위해 지자체 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반발 증대

⇒ 불법 전용 생숙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유도를 위해 '24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관련 절차 적극 안내

□ (도로안전) 공급자 위주의 제도·환경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AI, IoT 등 첨단기술로 선제적 사고 예방정책 추진

□ (항공안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 (지상조업사 의견)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업무 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됨

⇒ 그간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해왔으나 실효성이 낮고, 지상안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 및 처벌 강화 필요성 설명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자인 법인의 의무 및 처벌도 규정됨을 설명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V-2-①)

□ 추진배경

- (건설안전) 정부의 지원과 현장관리 노력으로 건설사고 사망자 지속감소, '23년에는 사고사망자가 최초로 300명대 진입

기간	'18	'19	'20	'21	'22	'23
전체 산재사망자	972명	854명	882명	828명	874명	812명
건설업 사망자	485명	428명	458명	417명	402명	356명
건설업 비율	49.9%	50.1%	51.0%	50.4%	46.0%	43.8%

- 다만, 「중대재해법」 소규모 현장 전면확대('24.1)로 인해, 소규모 현장을 포함, 건설안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 강화가 절실
- ⇒ 정부의 폭넓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국민 체감형 건설안전 확보 필요
- (SOC 안전) 정자교 붕괴사고*('23.4) 등으로 안전강화 요구가 커지며, 국가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진발생 증가 등 시설안전 우려 상존
- * 저가로 발주된 점, 정기점검(육안점검) 결과 '양호'로 분류되었다는 점 등 지적
- '93 준공, 2종, 관리주체: 성남시, 정밀점검('21.5) 'C등급' 정기점검('22.11) '양호'
- ⇒ 변화 환경에 대응, 안전점검·진단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중요

※ (국정과제 69-5) 예방 중심의 건설·건축 안전 관리 체계 확립

- 건설 주체별 책무 강화
- 건설 전 과정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 육성
- 건설현장내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 안전통합관제 등 기술개발 지원 및 점검체계 강화
-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지침 정비
- 소규모 시설물 중심으로 관리 강화
- 지하공간 조사범위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 건설안전 제도 혁신 및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

①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안전 문화 조성

- (공공 감리강화) 실력·전문성이 우수한 감리인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실력 있는 기술인 육성 및 활용
- (영상기록체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개정하여 공사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이 필요한 시설물을 구체화

②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한 안전제도 개선

- (건설안전지표 개선) 시공과정 및 결과, 유지보수 등 건설 전 포괄하는 안전종합지표 신설 관련 방향 설정
- (안전점검 내실화) 공사중 안전점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구조 안전성 제고
- (안전관리계획서 개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개선하여 고용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중복 작성 부담 완화

③ 소규모 현장 안전지원을 통해 안전성 강화

- (스마트안전장비) 중소현장 대상으로 AI CCTV 등 스마트안전장비 지원 사업 확대 실시('24년 130개 현장)
- (현장관리 R&D) 저비용 통합관제 기술과 자동 위험요인 탐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추진, 소규모 현장에 지원
- (안전컨설팅) 안전·품질관리 역량이 미흡한 민간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100억 미만)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24년 1,200개소)

< 2. 건설현장 점검 및 관리 고도화 >

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

- (정밀점검) 사망사고 현장 및 안전 취약현장 대상으로 지방청과 외부전문가간 협약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정밀점검 실시
- (지자체 교육) 지자체 점검역량 향상을 위해 국토부·관리원 등이 안전제도를 교육하는 '안전코칭' 사업 지속 추진(100회)
- (현장점검 주체 확대) 시·도지사에게 건설현장 점검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조사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

② 건설현장 위해요소 집중 관리

- (주요공종 의무점검)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 검증
- (품질시험 관리)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거짓성적서 발급을 근절하고 및 시험 신뢰성을 확보
- (빅데이터 활용 점검) 건설사고 신고시스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현장의 사고위험성을 도출하고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

③ 지하안전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

- (지하안전 기본계획)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24.12)
- (지반탐사 확대 등) 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 등 고위험구간 지반탐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23년) 1,665km → ('24년) 2,100km → ('25년) 2,800km → ('26년) 4,200km

- 해안가 등 연약지반 굴착시 보강 의무화 등 지하안전평가 고도화

<3. 주요 SOC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

① 국민안전 확보 위한 국가기반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시설 안전관리)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 중인 17만개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품질관리 및 중대결함 저감 추진

* (23.12월 기준) 1종[대형] 11,981개소 / 2종[중형] 105,092개소 / 3종[소형] 54,033개소

** 일정 규모 이상 중대형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사면, 공동구

- (유지관리 첨단산업화) 시설물 첨단 유지관리의 신산업 도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BIM 활용지침* 수립·배포(건설기술연구원 협조)

*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BIM 발주 업무와 발주자를 대행하는 기술인의 BIM 수행업무를 절차적으로 명시하고 수급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BIM 요구사항을 정의

- (점검관리체계 정비) 법 개정예 따라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육안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초급→중급)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을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등록기준상 '초급기술자 4명'에서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를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2명")

② 소규모 취약시설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확대 및 지원강화

- (안전점검 확대)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유관부처(복지부 등)와 협업 하여 연간 점검수 지속 확대(시니어활용) 추진

- (손쉬운 점검환경 구축) 시설물 안전점검 시 사진 촬영 및 문자를 입력하면 e-보고서로 자동 생성·전송되는 스마트 점검웹 개발·보급

③ 선제적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

- (첨단기술 활용) 기반시설 첨단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IoT센서, 드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원격 계측·관리체계 구축 확대

* (대상지역) 경남 진주시, 대구 군위군, (사업기간) '24.1~'26.12. (사업비) 40억

- (기반시설관리시스템) 인프라 총조사 결과 DB를 토대로 시설별 보강 시기·비용 등 시설별 최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기반터 운영

④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

- (의무이행 지원)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소관 각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총괄 구축하고 이행상황 점검

* 도로·철도·항공 등 우리부 소관, 시설물, 교통수단 및 사업장을 모두 포함

- 또한, 국토부 직원 산업재해 예방 및 청사 건축물·도로시설에서의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및 예방계획 구축

⑤ 지진 대응 체계 강화

- (지진방재) 행안부의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년)에 따라 우리부 '24년 지진방재 시행계획' 6개 과제 추진(계속 1개, 신규 5개 과제)
- (내진기준 정비) R&D('19~'22)* 성과물을 토대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준 신설 등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개정 추진

* (연구기관) 건설기술연구원 / (과제명) 액상화 평가 기술 개발 / (금액) 36.1억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중대법 대비 범부처 지원단 발족	1월	10%	메모보고(장관)
	기반시설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	1월	5%	보도자료
	건설현장 점검(해빙기)	2월	5%	메모보고(국장)
	액상화 평가기준 실설 및 고시	3월	5%	보도자료
	기반시설 첨단관리 시범사업 협약체결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개발 및 사용 메뉴얼 보급	4월	5%	메모보고(차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월	5%	메모보고(국장)
	중대재해 예방 조치상황 및 지원방안 마련	6월	5%	메모보고(장관)
	건설현장 현장점검(우기 대비)	6월	10%	메모보고(국장)
3/4분기	시설물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7월	10%	보도자료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8월	5%	메모보고(국장)
	영상기록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지침 개정	9월	5%	지침개정
4/4분기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유지관리편 발간	11월	5%	메모보고(차관)
	시니어를 활용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목표실적 보고	12월	10%	메모보고(장관)
	'24년 우리부 지진방재 시행계획 현행 결과 보고	12월	5%	메모보고(국장)
	건설현장 현장점검(동절기 대비)	12월	5%	메모보고(국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회의	소규모 현장 지원 관련 범부처 의견 수렴	'24.1
현장방문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진행현장 점검(1차관)	'24.2
회의	소규모 취약시설 시니어 안전점검 활성화 관련 지상파-유튜브 홍보방안 협의	'24.6
간담회	안전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위한 업계 간담회	'24.8
공청회	BIM 시행지침 유지관리편 발간을 위한 수요자 대상 의견수렴	'24.10

□ 기대효과

- 건설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통해 국민 생명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 따른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중대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계획을 구축함으로써 국민과 종사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뢰도 확보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미래 유지비용 절감 및 시설 장수명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 15종 기반시설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기능 제공 등을 통한 관리주체들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의사결정을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3	'24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일반재정)			
① 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		610	843
▪ 국토안전관리원출연(301)	일반회계	610	843
② 건설시설안전관리(4323)		8	20
▪ 건설및지하안전관리	일반회계	8	20
③ 건설공사품질관리(4316)		11	11
▪ 건설공사품질시험(451)	일반회계	11	11
④ 건설사업정보화(4241)		58	38
▪ SOC안전정보시스템 구축(511)	일반회계	35	32
▪ 기반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515)	일반회계	23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25%)	417	402	356	329	정부의 강력한 안전대책과 현장관리 등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는 사망자 수에도 최근 3년간 감소율 추세(7.5%)를 적용한 도전적 목표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승인 통계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개소)(15%)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실적				민간 소규모 현장에 최신의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되, 중대재해법 소규모 현장 확대시행을 고려 '21년 시범사업 대비 10배 이상 규모를 확대한 적극적 목표치 설정 연간 약 16만개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모든 현장점검은 한계가 있어, 위험요소에 대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 10% 규모의 맞춤형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실효적 안전방안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수, 현장점검 실적	메모보고
	12	32	87	130			
	빅데이터 활용 위험현장 안전점검 실적						
	-	-	-	15,000			
㉢ 지하안전강화를 위한 지반탐사 실시(km)(10%)	1,143	1,386	1,665	2,200	국정과제이자 국민 잠재적 위험요인인 싱크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신 장비를 활용한 지반탐사를 실시 중으로, 매년 전년대비 20%이상 목표로 실시하였 으나, 금년은 폭우 등 이상기후를 고려 전년대비 32%증가를 목표로 설정	탐사구간	메모보고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관리 체계 정비(20%)	-	-	-	자격요건 상향	시설물안전법상 신설된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마련 하고,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요건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하는 도전적 과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관보 정부입법시스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 (15%)	-	-	1만 건	2만 건	'23.10월 발표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상에 '24년도 점검성과 목표를 '23년도 대비 2배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목표치로 설정	'24년 점검수	국토안전관리원 SFMS시스템 내부자료 등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15%)	43.0	68.8	85.0	100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의 구축 완료 계획('24.3월 준공)에 따라 '100%를 성과목표로 설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정률	'24년 사업추진 공정보고 자료

②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V-2-②)

□ 추진배경

- (건축절차 강화) 인천검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23.12)'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
 - 한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여 구조·방화 등 건축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가설건축물의 각종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기준 마련 추진
- (유지관리 내실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에 따라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추진
 - * '23년 튀르키예 대지진 계기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TF 운영('23.4~9, 행안부 주관)
 - 건축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 방치·위반건축물 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및 화재성능보강 등 정비 지원 확대 필요
- (건축규제 합리화) 구조, 해체 등 일부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조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건축 절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무량판 구조)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층 배근 확인도 의무화
 - * (인허가) 구조심의 / (설계·감리)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 (시공) 사진·동영상 기록
- (가설건축물) 건축 단계(축조 신고)와 사용 단계에서 필요한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
- (자재 이력관리) 불량자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부터 유통, 시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플랫폼 2차 구축* 추진
 - * 각 주체별 상호 검증, DB구축 등 내화구조 플랫폼의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구조설계)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기술사 등 구조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 및 책임 명확화

- 구조설계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도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구조안전 모니터링 확대·강화*
 - * (기존) 소규모건축물 대상 1,400건 → (확대) 대형·특수구조건축물 포함 3,000건
- 건축 분야 구조도면 작성을 담당하는 구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방안 마련
- (공사감리) 감리가 건축주에 예속되지 않도록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
 - * 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감리전문법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 선정 방식도 개선*
 - * <현재> 명부 내 임의 지정 → <개선> 적격심사(중대형 건물)+명부 내 임의 지정(소형 건물)
- 감리 시 구조전문가 협력 의무대상 확대 추진(30→6층 이상 등 점진적 확대)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내실화

- (정기점검) 인천검단 사고를 계기로 무량판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 마련
- (위반건축물) 건축물 구매 시 건축법 위반여부를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행강제금 최대 감경을 상향(50→75%)
 - 전국 인파밀집지역(100개소)에 대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
 - 불법 주거전용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점검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 (방치건축물) 범죄, 붕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사례집을 배포하고, 반기별로 안전점검 결과 공개 및 후속조치 관리
 - 방치건축물 정비기준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직권철거 등 지침 배포
- (내진보강) 건축물대장에 기재중인 내진성능 항목*을 개편하고,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10%→20%)
 - * 표기 정보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됨
- (화재안전보강) 고시원, 의료·노유자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중 성능보강이 필요한 400여동에 대한 공사비용 지원

③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

- (구조규제) 기존 건축물 중·개축 시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구조안전 확인 방법만 적용하도록 절차 개선*

* 방화·방수·단열 성능만 개선 시 구조계산 확인서 면제 등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

- 건축물 품질 향상 및 공기 단축이 가능한 OSC(탈현장공법)*을 고층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설계기준 마련

* 공장에서 조립한 모듈을 현장에 운반·설치하는 공법으로 현행 지침상 15층 이하만 가능

- (해체규제) 해체 난이도 및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 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 (現) 규모와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해체신고서는 전문가가 검토·서명날인 의무

-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신고)는 대수선 허가(신고)와 통합 추진

* (現) 해체 수반 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별도 수행

- (화재규제) ‘방화유리창’ 등 일부 용어에 대한 범위 해석 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용어 명확화 등 관련 기준 개선

* 「건축법」에 창틀을 포함한 창호의 방화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령에 ‘방화유리창’으로 표기되어 국회에서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는 등 혼선이 있어 ‘방화유리창호’로 명확화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무량관 구조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건축구조기준 개정 방침	3월	5%	방침결정(정책관)
	지자체별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요청	3월	5%	공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3월	5%	공문
2/4분기	이행강제금 최대감경률 확대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방침	4월	5%	방침결정(장관)
	무량관 구조 점검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 점검지침 개정 방침	4월	5%	방침결정(정책관)
	내진보강 활성화, 구조규제 합리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방침	4월	10%	방침결정(장관)
	방치건축물 유형별 안전관리 사례집 제작·배포	4월	5%	공문
	화재 관련 용어 명확화를 위한 건축물피난규칙 개정 방침	5월	5%	방침결정(실장)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5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7월	5%	방침결정(장관)
	해체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7월	10%	메모보고(차관)
	방치건축물 정비기준 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9월	10%	공문
4/4분기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2차 사업 준공	11월	5%	메모보고(실장)
	허가권자(지자체) 지정감리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차관)
	건축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건축구조기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및 활용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차관)
	가설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12월	5%	메모보고(실장)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① 건축 절차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무량판구조) 무량판 점검기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 및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간담회 추진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내실화

- (방치건축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등 논의
- (위반건축물) 불법전용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24년말까지 유예되면서 향후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지자체 간담회 개최

③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

- (해체규제) 해체신고 대상 중 일부 전문가 검토를 면제하는 등 건축물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등 간담회 추진
- (화재규제) 건축·소방 분야 간 상충되는 화재 안전기준 개선을 위해 국토부-소방청 실무협의체 추진

구 분	내 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현장 방문	'24.3월
간담회	건축·소방 실무협의체 개최	'24.3월
	불법 주거전용 생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24.4월
	건축물 해체 관련 행정절차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등 간담회	'24.5월
	가설건축물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24.9월
	감리전문법인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24.12월
회의	무량판 구조 점검 방안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24.2월
	가설건축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4.6월

□ 기대효과

- 건축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 내실화를 통해 건물 성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물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부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관리자가 부담하는 행정절차 단축 및 경제적 부담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¹⁾	'23	'24
건축서비스산업 지원(I -3-일반재정②) ¹⁾				
① 건축서비스산업지원(6132)				
▪ 건축안전(308)	일반회계		82.7 (82.7)	80.62 (80.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① 건축 절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30%)	-	신규	-	하위 법령 개정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구조 설계 내실화 등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설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 건축구조기준 등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	고시문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내실화 (40%)	1,402	1,412	1,401	3,000 (10%)	구조설계 부실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분야 모니터링 목표를 과거 추세 대비 약 2배 높은 3천건으로 설정	구조설계도서 모니터링 시행건수	메모보고 또는 공문
	365	712	400	400 (10%)	'25년 종료 예정인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잔여 대상 499건 중 80%인 400여건을 목표로 설정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시행건수	메모보고 또는 공문
	-	신규	-	하위 법령 개정 (10%)	내진보강 활성화, 이행강제금 최대감경률 상향 등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설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규칙 등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	고시문
	-	신규	-	지침 개정 (10%)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개정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	고시문
③ 건축규제 운영 합리화 (30%)	-	신규	-	하위 법령 개정 (10%)	기존 건축물 증·개축 시 필수적인 구조안전확인 절차만 수행하도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설정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구조기준규칙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고시문
	-	신규	-	법률 개정안 발의 (10%)	해체 난이도 및 위험도가 낮은 경우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설정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의안정보시스템
	-	신규	-	하위 법령 개정 (10%)	방화유리창 범위에 창틀 포함 여부 등 혼란 해소를 위해 건축물피난 방화구조규칙 개정을 목표로 설정	건축물 피난방화구조규칙 개정	고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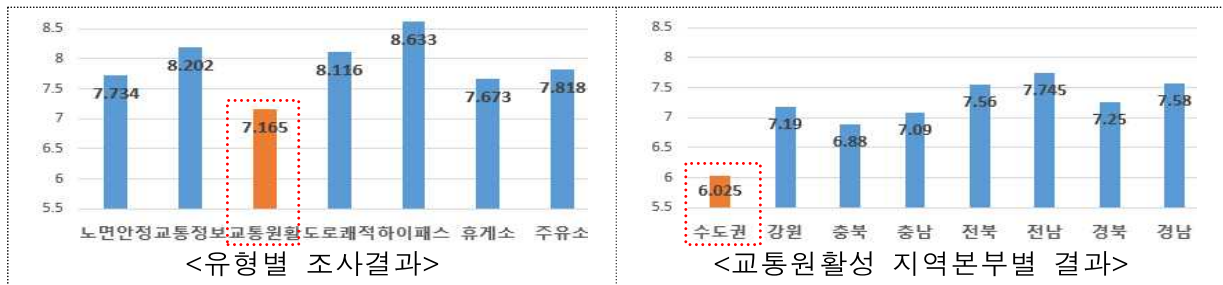
③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V-2-③)

□ 추진배경(목적)

- **(이용 편의)** 도로환경 쾌적성 등 도로이용자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 일반국도 : '00년 50%, '10년 62%, '23년 76%, △ 고속도로 : '20년 78%, '23년 78%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1938년 도입된 점도구역 제도도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제기
- 또한, 고속도로 신설·확장 등 지속적인 노선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소통 분야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



<고속도로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21년, 1,600명 대상)>

-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급자 위주 도로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할 필요
- **(도로 안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 등 선제적인 도로안전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 추세*

* 고속도로 : '18년 252명 → '22년 184명 / 일반국도 : '18년 635명 → '22년 468명

- 지속적 안전 투자 확대에도 도로살얼음 교통사고(44중 추돌, 23.1월) 및 지하차도 침수사고(14명 사망, 23.7월)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은 여전한 실정

-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그간의 관행·형식적 안전 관리로 중·대형 공사 대비 잦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 최근 4년간 소속기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건 중 50억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10건(62.5%) 발생
- 도로의 취약 요소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본부·지방국청간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수요자 관점에서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

- **[교통정체 개선]** 고속도로 최저속도(50km/h) 기준으로 병목현상 등 정체길이를 '26년까지 30% 감축 목표로 구간별 맞춤형 대책* 마련(3월)
 - * 진출입로 입체화, 민자 연결부 개선, 급행차로 도입, 환승체계 활성화, AI 정체 예측 등
- **[접도구역 개선]** 주행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은 도로구간은 접도구역* 완화 등 도로 주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1월)
 - * 도로경계선 양측으로 10m(고속국도), 5m(국도, 지방도) 지정
 - 전국 접도구역 현황조사, 실제 사례별 접도구역 제외기준 명확화, 접도구역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접도구역 관리 규정을 개선
 - * 접도구역 각종 대장에 대하여 정보화 등 관리 효율화 방안 도출
- **[운행제한 간소화]** 운송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재허가* 시 서류 간소화, 허가기간 확대 등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 수출용 방산물자, 디스플레이 장비 등은 허가기간이 짧아(2개월 내) 수출 일정 불편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 복잡한 서류 없이도 차량 제원만 입력하면 운행노선이 선정되도록 자동허가시스템 구축 추진
 - * 운행제한허가 신청에 필요한 하중계산서 작성에 과도한 비용(8백만원/교량) 소요

□ **[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권리의무승계 신고 등을 미리 온라인 안내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추진(1월)

□ **[포장파임 배상체계 개선]**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포장 파손 사고* 시 소액배상(50~100만원) 이하 건은 손해배상보험으로 처리토록 배상 체계 개선방안 마련(12월)

* 현재 3~12개월 소요 : 피해 발생 → 국가배상 신청 → 현장조사 → 국가배상심의위

□ **[개방형 휴게소^{국정과제} 확대]** 인근 지역과 연결*하여 특산물 판매, 지역 관광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 3곳 설치(12월)

*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IC, 후면주차장 등 설치

□ **[미연결 분기점 개선]**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향에만 접속되는 고속도로 분기점*을 대상으로 거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쏘방향 연결계획 수립(9월)

* 전국 분기점 총 120곳 : 쏘방향 연결 67곳, 일부 연결 43곳, 미연결 10곳

□ **[휴게소 서비스 개선]** 공공성이 높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 추진(6월)

○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4개 분야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서비스 개선도 병행(12월)

* 음식 맛·가격, 주차장 안전, 여자화장실 부족·비상벨, 행락철 질서, 충전기 고장 등

□ **[회전교차로 홍보]** 회전교차로 진출입 우선순위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 홍보 추진(4월)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손보험회

-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 지원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는 197기 이상(재정 161 · 민자36, 누적대수 1,559기), 수소차 충전기는 대용량 3기 이상(누적대수 42기) 확충(12월)

2.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본부 · 지방청간 협업을 통한 선제적 도로 안전사고 예방

- **[도로살얼음 사고 예방]** 기상청과 협업으로 IoT, 적외선을 통해 입수한 노면 · 기상정보를 AI 분석을 통해 살얼음 위험도 예측* 후 안내(9월)

* '25년까지 고속도로 26개 노선 확대 : ('24년) 경부선 등 10개, ('25년) 순천완주선 등 14개

- 살얼음 예측정보를 내비게이션사에 제공하고, 국도 등에도 확대

- **[비탈면 · 교량 계측관리^{국정과제}]** 비탈면 및 교량의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고, 긴급 대응*하기 위해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계측 관리시스템 확대*(12월)

* 비탈면 : '24년 100곳, '25년까지 500곳 / 교량 : '24년 215곳, '25년까지 1,252곳

- 특히,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폭우에 따라 증가하는 비탈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탈면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추진(4월)

* 일반국도상 비탈면 전수조사, 국토소 및 본부합동 비탈면 점검 강화, 사고대응 체계 구축 등

- **[낙하물 AI 단속시스템 확대]** 영상으로 화물적재 상태를 촬영 후 AI 판독하는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을 고속도로 영업소 25곳에 확대 설치(12월)

* '22년까지 고속도로 19곳 시범구축 : '24년까지 44곳, '25년까지 154곳, '26년까지 350곳

- **[안전기준 강화]** 방음터널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기준, 구조설계기법, 내화기준, 재료성능 등을 규정하는 설계기준 · 표준시방서* 마련(6월)

* 現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소음 저감 목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은 부재하거나 미흡

-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현장통제기준, 사전점검 매뉴얼 등을 담은 터널 방재지침 개정(4월)

* 국도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20여곳) 설치 및 배전반(13곳) 지상 이설(12월)

-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분리형 중앙분리대, 현광 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시설편)' 개정(10월)

-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분리형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현광방지시설 탈락·비산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통한 설치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 강화] 소규모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단기간 내 실행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강화 대책 마련(2월)

* 최근 4년 소속기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16건 중 50억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이 10건(62.5%)

- 최일선 현장 실무자를 포함해 본부·소속기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

- 사업 시행 주체인 소속기관 직원들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안전 다짐대회" 개최(3월, 장관님 주재)

* 권역별 안전순환교육 및 소속기관간 안전협력교류대회 추진(4월)

□ [도로제설대책 개선] '23~'24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고속·일반국도 등 각 도로관리청과의 논의를 통해 도로제설대책 개선방안 마련(5월)

- 잦은 폭설에 대비, 제설제 추가확보 및 제설 작업체계 개선, 국지성 폭설 대응체계 구축, 첨단기술 도입 및 겨울철 안전문화 유도, 제설 담당자 처우 개선 등 종합대책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지하차도 제도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1월	5%	메모보고(국장)
	본부·소속기관 '안전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2월	5%	메모보고(장관)
	터널방재지침 개정 행정예고	2월	5%	관련문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홍보방안 관계기관 합동회의	2월	5%	메모보고(장관)
	고속도로 교통정체 예측 관련 민간부문 협의 추진	2월	5%	메모보고(장관)
	고속도로 정체개선 TF 회의	3월	5%	메모보고(장관)
	국토청·국토사무소 '안전 다짐대회' 개최	3월	5%	보도자료
2/4분기	터널방재지침 개정 시행	4월	5%	관련문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관계기관 합동 집중홍보	4월	5%	보도자료
	AI 자동단속 시스템(25개소) 계약 발주	5월	5%	관련문서
	'23-'24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성과 및 개선방안 마련	5월	5%	메모보고(장관)
	포장파임 배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6월	5%	메모보고(국장)
3/4분기	운행제한간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차량의 운행 규정(훈령) 개정 방침	8월	5%	방침결정(국장)
	낙하물 AI 단속시스템 확대 중간보고회 개최	9월	5%	메모보고(국장)
4/4분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10월	5%	관련문서
	'24-'25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마련 및 추진	11월	5%	방침결정(국장)
	접도구역 개선방안 마련	11월	5%	방침결정(국장)
	24년도 비탈면·교량 계측시스템 설치 결과보고	12월	5%	메모보고(국장)
	도로 비탈면 붕괴 사례집 발간	12월	5%	관련자료
	AI 자동단속 시스템(25개소) 운영효과 분석 및 평가	12월	5%	관련문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교통안전 강화 등 도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 교류 추진
- (간담회) 전문가 그룹과 도로정책 방향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아카데미)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 대상 강의와 질의응답

구분	내용	세부일정
현장방문	소규모 도로 건설현장(추계교 개축, 우덕지구 위험도로) 점검	'24.2월
간담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24.2월
간담회	한국도로공사 업무 간담회 개최	'24.2월
브라운백 미팅	교통정체 개선, 회전교차로 홍보,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대책 논의	'24.2월
간담회	도로국 정책 관련 연구기관(교통연) 간담회	'24.3월
간담회	도로국 정책 관련 연구기관(국토연) 간담회	'24.3월
정책 아카데미	스마트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24.5월
현장방문	소규모 도로 건설현장 점검	'24.6월
간담회	도로 교통량 조사 및 분류체계 개선 방향	'24.7월
정책 아카데미	시설물 IoT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24.9월
간담회	도로살얼음 예방 및 도로제설 강화 방안	'24.10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국토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교통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건기연) 토의	'24.11월
간담회	도로분야 업무 관련 연구기관(도공·도교원) 토의	'24.11월

□ 기대효과

-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과감한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이용자 편의 한층 강화
- AI, IoT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 취약 요소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V-5-재정①)				
②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731)		교특	9,692	10,783
			(9,692)	(10,783)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461)			9,692	10,783
도로보수(V-5-재정②)				
② 도로보수(1733)		교특	7,784	8,378
			(7,784)	(8,378)
▪ 도로유지보수(461)			7,784	8,378
국도시설개량(V-5-재정⑩)				
① 국도시설개량(1752)		교특	297	203
			(297)	(203)
▪ 편의시설조성(464)			297	203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				
① 수소충전소인프라 구축(1534)		교특	45	45
			(45)	(45)
▪ 수소충전소 구축(301)			45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③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제도 개선 (30%)							
① 고속도로 정체개선 구간별 맞춤형 대책 마련 (10%)	-	-	-	맞춤형 대책 9건 마련	▪ 고속도로 정체구간 감축을 위해 정체구간별로 정체원인 등을 현장조사, TF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규모 투자로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 9건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계획 수립 후 개선대책 시행을 통해 대국민 도로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함	③a × 10% ③b × 10% ③c × 10% = 30%	메모보고 (국장) * 장관님 대면보고 추진
②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10%)	-	-	-	모바일 발급 개시	▪ 수작업(등기)으로 발급(종이) 중인 도로점용허가증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가증 빠른 발급, 분실우려 방지, 등 점용허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함		보도자료
③ 도로포장 파임 배상체계 개선 추진 (10%)	-	-	-	대책 수립	▪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포장 파손 사고 시 소액 배상(50~100만원) 이하 건은 손해배상보험으로		방침결정 (국장) * 위임전결 규정

				처리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험사 협의, 타 사례 검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개선방안이 시행 되면 도로 이용 시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게 빠른 보상처리 등으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실국장 전결 (세부계획 수립)	
⑥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30%)							
① 지역특화 개방형 휴게소 설치(10%, 다년도) 【국정과제】	-	-	3개소 (휴게소)	3개소 (휴게소)	▪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 개방형 휴게소를 지속 설치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① × 10% ② × 10% ③ × 10% = 30%	
② 휴게소 서비스 개선 (10%)	-	-	-	고속국도 휴게소 설치 운영 지침 제정	▪ 대다수 국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동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으며, 지침제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개선하고자 함		관련문서
③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 (10%, 다년도)	637기 (누적)	959기 (누적)	1401기 (누적)	1,601기 (누적)	▪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친환경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를 지속 구축(준공)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메모보고 (장관)
⑦ 첨단기술 및 소속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 강화 (40%)							
① AI분석을 통한 도로살얼음 예측 도입(5%)	-	-	-	제도 도입	▪ 동 과제는 기상청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이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① × 5% ② × 5% ③ × 10% ④ × 10% ⑤ × 10% = 40%	
② 낙하물 자동 단속시스템 설치 (5%)	-	-	-	25개소 (영업소)	▪ 영상으로 화물적재 상태를 촬영한 후 AI로 판독하여 적재불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동 과제를 통해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		메모보고 (장관)
③ 비탈면·교량 IoT 시스템 구축 (10%, 다년도) 【국정과제】	60	130	100	100 (비탈면)	▪ 도로비탈면과 노후교량을 계측기를 설치하여 거동분석 및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로 국민의 도로이용 안전을 강화하는 과제이기에 동 과제를 지표로 지속 설정 중		메모보고 (장관)
	316	287	248	215 (교량)			

④ 방음터널 화재 안전기준 강화 (10%)	- - -	관련 지침 개정	전문가, 관계기관 등 자문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현장통제기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 ‘터널 방재지침’ 개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메모보고 (장관)
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강화대책 마련(10%)	- - -	대책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은 관행·형식적인 안전 관리로 중·대형 공사 대비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과제를 지표로 설정하여 단기간 내 실행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내부방침 (차관)

④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V-2-④)

□ 추진배경(목적)

- (선제적 안전관리) 공항 내 안전사고* 감축, 항공산업 미래 혁신 등을 위해 공항 내 단계적 자동화 및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 조업사고 증가 추세('22년 27건 → '23년 36건), 사고원인의 80.6% 근로자 부주의 등 인적요인
- (주민친화적 소음관리)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23.3 발표)에 따라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 추진 및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첨단보안장비 도입) 고도화·지능화되는 신종테러 위협대응을 위해 CT X-ray 검색장비 도입 및 안티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필요
- (여객편의 제고) 생체정보 활용 본인확인 등 탑승절차 간소화, 짐배송서비스 및 한-미 위탁수화물 원격검색 등 보안효율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항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친환경 공항운영 및 안전성 제고 》

이용객 관점의 친환경 공항운영 정책 및 지상조업 안전 확보를 통한 공항 운영 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추진

- (디지털 공항 구현) 공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항을 목표로 BIM,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
 - (BIM) 디지털화된 공항 및 주변지역 정보 관리, 통합 플랫폼 운영 총괄 등을 위한 「국가 통합 공항 BIM 센터」 구축* 추진방안 마련(~'24.12)
- (자동화 공항*)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항 지상조업,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로드맵 도출('24.11)

* 국토교통부·공항공사·지원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화 공항 협의회 구성·운영('24.2~)

- (편의 개선) 민간 주도의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항 운영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개선 추진
 - * (운영) '24.4 ~ 12월 / 총 6인(현 항공정책특 민간위원, 국토부 청년위원 등으로 구성)
 - 김해·대구 여객터미널 증축, 청주 터미널·주차장·주기장 등 시설 확충 추진
- (안전관리 법제화)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인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 등 공항시설법 개정('24.2)
 - 법 개정애 맞춰 법에서 위임*한 법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24.8)
 - * 법인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필수 내용,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실태 점검·조사의 주기·절차, 법인·조업사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수준 등 규정
- (친환경 공항 구현) 친환경 조업장비 도입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매·폐차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24.6),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추진(~'24.12)
 - 공항 여객터미널 환기·청소 및 실내공기질 측정·점검 등 관리강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매연발생 저감

《 선제적이고 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항 소음정책 기반 마련 》

주민 실수요 반영을 위한 주민지원 공모사업 확대, 현금 지원방식 도입 및 주민지원 강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의 법적 근거 마련

- (공모사업 활성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공항운영자가 공모사업 방식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추진, 공모사업 우수사례 확산*('24.9)
 - * '23년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지방공기업 공모성과 발표회, 지역간담회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공항운영자가 공모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법 시행령 개정('24.2)
- (수요 맞춤형 지원) 주민 자율성 제고를 위해 냉방기 대신 현금 지급*, 방음시설의 실비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공항소음법 개정안 발의('24.下)
 - * (현행) 공사가 냉방·방음시설을 정해 현물지원 → (개선) 생활지원금(현금) 형태로 전환
- (선제적 소음원 관리)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등 운항절차를 규정하는 공항별 “저소음운항절차” 개선(~'24.12, 고시)

- (주민지원 강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이용시설**(복합커뮤니티 등)을 지자체가 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24.3)
- (소음대책 선진화) 공항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공항 소음저감 및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기간 : ‘24.1~’25.5, 용역비 : 196백만원)

《 첨단 항공보안장비 도입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휴대품 검색 **CT X-ray** 도입, **스마트패스** 확대 구축, **짐배송서비스** 대상지역 확대 및 **미국행 환승객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등 추진

- (ICAO USAP) 법무부·외교부·관세청·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T/F 구성(‘24.2), 질의서 분석 등 **체계적인 수검 준비 및 대응**
- * **USAP**(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 ‘24.7.22~8.2(2주간), 평가관 4명, 인천·제주공항
- (韓-美 OSS) 미국 내 환승검색 면제 등 보안 간소화를 위해 **원스톱 보안***(OSS) 대상에 **인천공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
- * **OSS**(One-stop security): 보안 수준이 높은 상대국 공항을 출발한 승객이 미국공항에 도착하면 美 국내선 환승시 보안검색을 면제해 주는 미국 환승 간소화 정책
- (韓-美간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세계 최초 인천發→아틀란타着 환승객의 ‘짐 없는 환승’을 위한 **IRS 2차 시범사업** 추진(‘24.下)
- * **IRS** : 인천발 **아틀란티행(대한항공델타)** 수하물 X-RAY 이미지를 美측(교통안보청^{TSA}·관세청)과 공유 → 美측은 항공기 도착 전 검색 완료 → 도착 후 수하물 찾지 않고 환승
- (첨단장비 도입) 인천공항의 휴대수하물 검색장비를 소형·액체류 폭발물 탐지기능이 강화된 **CT X-ray장비***로 전면 교체(~’25.12)
- * ‘24년 30대, ‘25년까지 45대 등 총 75대 도입 예정
- (스마트패스) 인천공항 **소구역**(출국심사 제외)에서 여권·항공권 없이 생체정보(얼굴)를 활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패스**” 확대 구축(‘24.12)
- * (‘23) 셀프체크인, 출국장, 탑승구 → (‘24.末) 수하물 위탁, 환승지역, 면세지역 추가

- 또한, 승객의 생체정보 수집·파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일치 확인 방법 등 마련을 위해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추진('24.8)
- (짐배송서비스) 호텔 등 공항 밖에서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현 홍대('23.12~) 1개소에서 서울 강남권 1개소 추가 확대('24.下)
- (보안장비 인증제도 선진화) 국내 보안장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美 TSA와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 공유 및 상호인정 추진('24.6)
- 또한, 국내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항만·철도 인증장비에 대해 항공보안장비 인증시 중복검사 면제 등 상호인정 제도개선 추진

< '2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가중치(%)	자료출처
1/4분기	한-미 CVAS 2차 시범사업 MOU 체결계획 보고 및 체결	2월	5%	메모보고(장관), MOU 서명본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안전기준 의무화 공항시설법 개정	2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화 공항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회의(Kick-off) 개최	2월	5%	메모보고(차관)
	공모사업 추진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	2월	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지원시설 무상사용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3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 참석계획 보고	3월	5%	방침결정(실장)
2/4분기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구성	4월	5%	메모보고(실장)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준공	4월	1.5%	온나라문서(공문)
	ICAO 항공보안평가(USAP) 대응계획 마련	4월	1.5%	메모보고(실장)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5월	1.5%	전자관보(고시)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계획 수립	6월	2%	메모보고(실장)
	한-미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정 공동인증서 연장체결	6월	5%	메모보고(실장)
3/4분기	ICAO 항공보안평가(USAP) 수검결과 보고	8월	2%	메모보고(실장)
	조업안전관리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항시설법 하위법령 개정	8월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 시행	8월	10%	온나라문서(공문)
	소음대책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9월	5%	메모보고(실장)
4/4분기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리모델링 사업 준공	11월	1.5%	온나라문서(공문)
	자동화 공항 추진계획 수립	12월	5%	메모보고(차관)
	인천공항 CT X-Ray 도입 중간 진행상황 현장점검	12월	5%	메모보고(실장)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고시) 개정	12월	5%	전자관보(고시)

□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계획

- 민간기업·연구원·공항공사·지상조업사 등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동화 공항 협의회** 분기별 최소 1회 개최(현장방문 포함)
-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24.3) 지원·후속조치 추진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
- 항공관련업무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24.6)하여 법령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이해도 제고
- 공항소음 문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전문가 기고 및 지역주민 면담(반기별 1회), 주민만족도 조사(연 1회) 실시, 정책 개선 방안 고찰

구 분	내용	세부일정
협의회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동화 공항 협의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의견 수렴 등)	'24.2월, 4월, 6월, 8월, 10월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지원	'24.3월
전문가 자문회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국내선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 등)	'24.3월, 4월
현장방문	공항소음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면담	'24.5월
설명회	공항시설법 개정 취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 및 의견 수렴	'24.6월
현장방문	인천공항 등 자동화 공항 추진 현장 방문	'24.9월
설문조사	공항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24.10월

□ 기대효과

-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법제화, 친환경 조업장비 도입 활성화, 미래대비 자동화 계획 수립 등으로 **안전하고 친환경 공항 구현**
- 공모사업 확대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 및 소음원 관리로 **공항과 주민의 상생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
- CT X-ray 등 첨단 검색장비 조기 도입을 통해 **신종테러 위협 대응 강화** 및 추후 액체류 기내반입 제한조치 해제 대비 기반 구축
- 출국수속시 생체정보를 활용해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및 짐배송 서비스 확대로 **출국시간 단축 및 여행객 편의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3	'24
항공발전지원(V-13-일반재정②)				
① 소음대책(362) ³⁾ ▪ 공항소음대책(301)	교특회계		201	129
			201	1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1	'22	'23	'24			
④ 소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20%)	53.5	56.2	59.6	60.3	소음대책 내실화방안 발표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최근 3년간 평균 점수(56.4점) 보다 7% 증가한 60.3점을 달성하도록 적극적 목표를 설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보고서 (한국공항공사)
⑤ 지상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10%)	0.300	0.431	0.448	0.373	지상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 피해,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을 최소화하여, 공항 이용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3년 평균 발생 빈도 0.393에서 5% 감소한 0.373를 목표로 설정	연간 지상안전사고 발생 (건수*10000/연간 항공기 운항편수)	메모보고
⑥ 공항 시설 확충(20%)	-	-	신규	시설 확충 추진	이용자 편의 개선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확충 등을 위한 사업 절차 추진, 준공 등	-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준공(25%) -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계획 수립(50%) -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리모델링 사업 준공(25%)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⑦ CT X-ray 도입·설치 비율(25%)	-	-	-	40% 이상 설치	'25년까지 75대 도입·전면교체 계획으로 '24년에 40% 이상 설치완료율 목표로 설정	전체 도입대수 대비 '24년 설치완료 비율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⑧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개선(25%)	-	-	-	규정 개정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관련 국토부 고시 개정 완료 (철도·항만 인증장비의 항공보안장비 인증시 상호인정)	고시 개정 완료	내부자료 (메모보고, 방침문서 등)



IV. 협업과제

협업과제	379

1.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통한 부동산소비자 보호

□ 과제 목표

-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대응을 통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도모

□ 주요 내용

- 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 및 서울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 '22년 인천 미추홀구 등에 발생한 전세사기가 '23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4.2월 1.2만명의 피해자 발생

-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부)·지방정부(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거래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도(광역시자치)에 확대 부여* 추진(부동산거래신고법 발의)^{우리부 '24년 업무계획}

* 현행법상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부장관과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있음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관련 법제도는 토지정책과 소관이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조사 및 기획조사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
- 이처럼, 법제도가 실무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법 개정안 마련에 있어 소비자보호기획단과의 충분한 협업이 필수적
- 특히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비자보호기획단과 시·도의 조사범위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

□ 추진계획

- 실무회의 개최 등 수시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 마련 및 발의(~'24.11월)

*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 관련 현황 파악 및 기초자료 조사(~'24.2분기) → 법 개정(안) 초안 공유 및 내용 검토(이해관계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을 포함)(~'24.3분기) → 개정안 발의(~'24.4분기)

2. GTX-A 수서~동탄 개통 대비 연계교통 개선

□ 과제 목표

- GTX-A 개통(수서·성남·동탄 '24.3, 용인 '24.6)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현재 지자체가 검토한 연계교통대책은 기존 노선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새로운 노선·수단 등 발굴 검토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교통정책총괄과) GTX-A 역별 이용수요를 분석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PM 등 first·last-mile 이동수단을 결합한 최적 연계방안 마련
 - 국토부(교통실·철도국·대광위), 역 소재 지자체, SG레일(운영), 전문가, 철도공단(건설)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대책 TF 구성·운영
 - 역사별 연계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등)이용에 필요한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개선, 이용수요를 고려한 버스운영(노선·횡수) 조정 추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GTX-A 이용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이용객 안전 및 환승동선 편의 등을 위한 안전 개선 등 추진
 - GTX-A 열차운행계획*, 정거장별 규모·이동동선·편의시설 등 현황과 여객관리계획을 제공하고 일일·첨두시 예상 수요 분석 등 실시
 - * 영업시간(05:30~익일 01:00), 운행횟수(60회/일) 및 배차간격 등
 -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매주 실시하여 이용객 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승동선 편의를 위한 안내인력·안내판 추가 배치 등 개선 추진
 - * 국토부(2차관, 철도국장, GTX단장·과장 등), 철도공단, SG레일 및 운영사

□ 추진계획

- '24.3월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순차적 개통*
 - * ('24.3) 수서~동탄 → ('24.末) 운정~서울역 → ('28) 전구간 완전 개통
 - 개통 시기에 맞춰, GTX-A 연계교통대책 대국민 홍보

3.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 추진

□ 과제 목표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획기적 개선

□ 주요 내용

-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용자 확대, 용적률 완화 등 주택 정비 인센티브 제공
 - * (국비지원) 기반시설(주차장·도로·녹지 등), 편의시설(방범·운동·도서관 등)
 - (기금용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 정비연계형 :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 연계 지원
- 도시재생형 : 주거지 기반시설·편의시설 공급을 위한 유형 신설
 - * 주거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기존 특화재생(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등) 재구조화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기존 소규모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조정 및 개선을 위한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뉴빌리지팀)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 설명회 및 선정 관리 등 뉴빌리지 사업 추진 총괄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기금용자 확대 등 제도개선, 정비연계형 사업관리 지원 등
- (도시재생과) 기존 도시재생사업 물량 조정(축소) 및 예산 협의, 절차 협조(관계기관 협의, 특위 심의) 및 도시재생형 사업관리 지원 등

□ 추진계획

-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23.6), 시범사업 선정('23.12)

4.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단기 대책 추진

□ 과제 목표

- (배경) 김포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 서부권 주요 주택공급 지역으로 10년 간 인구가 급격히 성장(87.4%증)
 - 주민 다수는 여전히 통근·통학 등 서울 의존도가 높고, 인구 증가 등 김포↔서울 간 광역교통수요 지속 증가(5년간 통행량 23%증)
 - 김포시 핵심 대중교통 인프라인 '김포골드라인은' 2량 운영(정원 172명)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수송한계 및 안전사고 우려
- (목표)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집중투입 및 열차증편 등 대중교통 중심 단기대책을 통해 골드라인 혼잡완화
 - 버스경쟁력 강화 및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통해 교통수요 전환(자가용·철도→버스) 및 주요거점 혼잡완화를 통한 출근 편의 제공

□ 주요 내용

- (광역버스 확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하여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대용량 2층버스·전세버스 등 공급 대폭 확대(40대 ↑)
 - (계통분리)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외곽 주요 역 중간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하여 신속 환승 지원("24.3~)
 - * 양촌역, 구래역, 마산역, 장기역 등 김포골드라인 상부 지역 지하철역 수요 흡수
 - (노선신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 및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2개 노선 신규 확충**("24.6)
 - * 김포본동(걸포북변역), 풍무동(풍무역), 고촌읍(고촌역) 등 서울 강서 인접 지역
 - ** 신속한 투입을 위해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노선을 신설하고 부분 운행개시 진행
 - (공급확대) 출퇴근시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 및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하여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
 - * 기존 노선 운수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추가 투입
 - ** 1층 버스(44석) 대비 1.6배(71석) 수송력으로 도심 교통혼잡 영향 완화 가능

- **(전용차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대해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 도입하여 버스 경쟁력 제고
 - (1단계)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약 7.0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약 4.9km)에 시간제 전용차로 우선 도입('24)
 - (2단계) 가양나들목~당산역(약 6km)까지 1단계 구간을 연장하여 도입
- **(열차증편·안전관리)**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 추가 투입(시격 3.1→2.5분, '24.6~'25.3) 및 주요 혼잡역 안전·구급요원 32명 운영(철도경찰 6명 추가, '24.1~)
- **(혼잡도앱 개발)** 혼잡도앱을 개발('24.3) 하여 승객의 열차 혼잡도 사전 확인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광역시설정책과)** 김포골드라인 단기대책 총괄 및 관련 부서별 협업 사항 조율, 김포시·서울시 협의 등 대외 소통창구 역할 수행
- **(광역교통도로과)** 투입되는 광역버스의 시간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이동시간 단축효과 분석(시뮬레이션) 등
- **(광역버스과)** 노선신설 및 광역버스 집중 투입 등 공급확대 추진, 버스전용차로 도입 이후 광역버스 추가 확대 및 노선변경 협의
- **(철도안전정책과)** 차량증편 국비지원, 안전인력 배치, 혼잡도앱 개발

구 분	역 할	협업사항
광역시설정책과	열차 수송력 확대, 골드라인 안전관리	대책 총괄(⇒도로·버스과) 및 부처内外 협의
광역교통도로과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설치, 버스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노선 분석 등	교통량 및 도로 소통상황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 광역버스 공급량 분석(⇒버스과)
광역버스과	광역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공급 확대	버스 수요분담으로 지하철 혼잡완화(⇒시설과)
철도안전정책과	차량 증편 국비지원, 안전인력 확대 배치 및 혼잡도앱 개발	차량증편 지속 추진, 혼잡도앱 개발 및 안전인력 확대로 교통량 분산 유도(⇒시설과)

□ 추진계획

- (3월) 개학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2개 노선 운행 개시, 혼잡도 앱 개발을 통해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교통량 분산 유도
 - * 8600A 6대, G6003A 4대 우선 투입 후 지속 확대(전세버스 수급 등 고려)
- (6월) 신규노선 신설(2개), 골드라인 6편성 순차 증편, 전용차로 도입

5.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

□ 과제 목표

- 고금리, 고물가, 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민간부문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공공 SOC 사업 신속한 집행 등 필요
-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취약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필요
- 다만, 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3년간 30% 상승*했으나,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대형 SOC 유찰 등 사업지연

* 건설공사비지수 증감율(전년비, %) : '194.0, '202.0, '2111.3, '2210.7, '233.7

⇒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 국책사업 정상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 추진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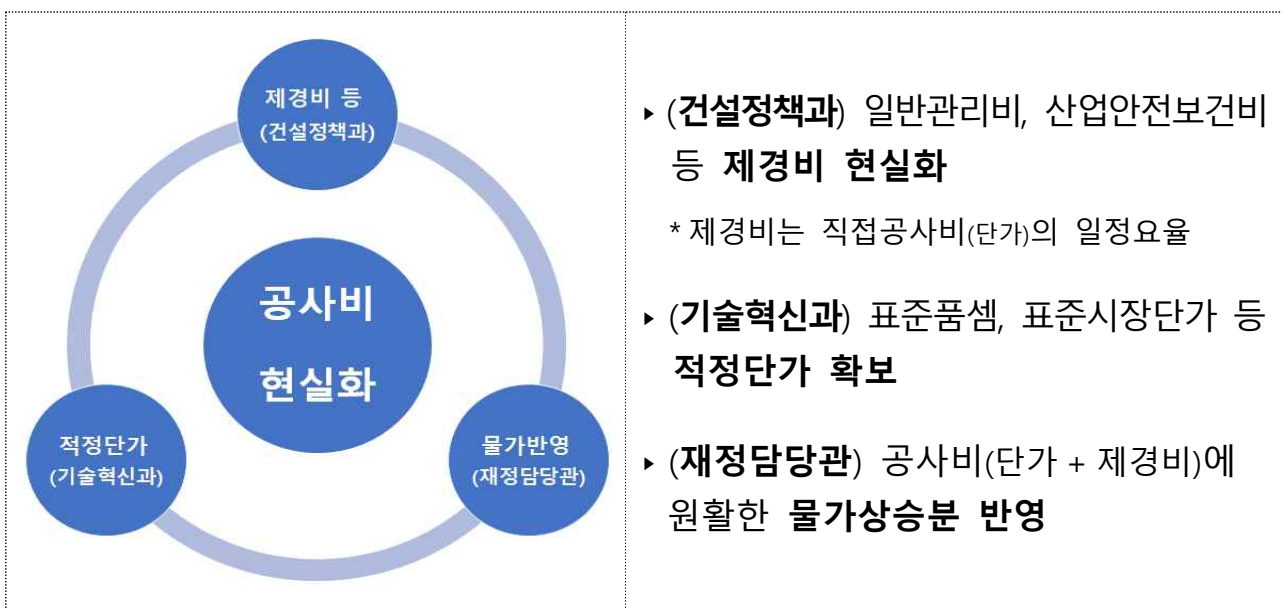
- 관계부처(국토부, 기재부 등) 협의,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 단가와 물가반영 등 공공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 적정 단가 확보를 위해 단가 산정기준(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건물 층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할 수 있도록 개선
- * 예시: (현행) 건물 지하 2~5층 동일하게 2% 할증 → (개선)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 일반관리비(본사 운영비용), 산업안전관리비(산재예방 등 목적) 등의 제경비가 공사비에 적정수준 반영토록 현실화

-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합리화하고, 턴키사업 물가보정 시점도 조정 검토

*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여 물가 반영 중

□ 부서간 협업필요 사항

-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①적정단가 확보, ②제경비 상향, ③원활한 물가반영 등 3박자가 갖춰져야 하는 사항이며,
-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 추진계획

- 적정 단가, 제경비, 물가반영 위한 업계·발주청 등 의견수렴(2~3월)
- 국토부·기재부 공동 작업반 구성(3월)
 - * (국토부) 건설정책과, 기술혁신과, 재정담당관 등
 - (기재부) 계약정책과, 총사업비관리과, 타당성심사와 등
-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24.下)



V. 환류 등 관련 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389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90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연말 평가 (반기)

- (상반기 점검) 관리과제별 상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 점검을 통해 부진사유 철저 파악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강구('24.6)

* 하반기 자체점검은 자체평가로 같음

- 부진 및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원인과 유형을 검토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집중 관리

* 장관 주재 간부 회의(월 2~3회), 자평위 지원반(매월 수시) 등을 통해 점검

- (연말 평가) 과제별 실적보고서를 자평위에 사전 제공*하고, 하고, 이행 노력도 및 목표 달성도에 대한 대면 평가 실시('24.12~'25.1)

* 연말 평가('25.1월초 예정) 1개월 전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

□ 장관 주재 주요 정책 점검회의 및 간부회의 실시

- 국정과제, 업무계획 등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장관 주재로 세부 추진방안, 대내외 의견 수렴, 언론동향 및 대응방안 등 점검(월 2~3회)
- 장관 주재 실국장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성과관리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점검(매주)

□ 자체평가위원 추진상황 점검 (수시)

- 자체평가위원이 과제별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원팀을 통해 정책자료 제공, 대면 설명회 실시 등 추진

* 자평위원 정책현장 방문, 정책 관련 자료 제공, 과제 설명 등 평가 지원업무 수행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일정은 코로나19, 정책현장 여건, 위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자체평가 결과 환류

-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여 통합 관리하는 체계(성과 관리시스템, Balanced Score Card) 구축·운영
 -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는 모두 BSC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정량평가 이외에 정성평가도 반영
- 정책관급 이상에 대해 소관 관리과제 모두를 BSC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부서장들의 관심도 및 책임의식을 제고
 - BSC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고공단 포함 과장급 이상과 4급 직원은 개인성과 평가 시 BSC 부서평가 점수를 90% 반영, 4.5·5급 이하는 50% 반영토록 규정

< 개인 성과급 및 성과연봉 결정시 BSC 부서평가 반영비율 >

고위 공무원	부서 평가(90%)	개인실적평가 (10%)	개인 가감점
과장급	부서 평가(90%)	개인실적평가 (10%)	개인 가감점
4.5 및 5급 이하	부서 평가 (50%)	개인실적평가 (50%)	개인 가감점

- 또한, BSC 평가결과를 보수지급 기준 이외에도 인사 분야에 활용하여 일반직원 등의 성과관리 관심도 제고
 - 전년도 개인별 BSC 점수를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제공함으로써, BSC 개인평가 점수를 인사 인센티브로 활용

*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제16조제1항제6호제바목

- 또한,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국외 훈련자 선발시에 BSC 평가를 정식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작년 대비 반영 비율을 확대 시행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 자체선발기준에 전년도 개인별 BSC 점수를 정식 평가항목으로 반영
(100점 중 15점 반영)

- (주요정책) '23년 부진과제 및 '24년 상반기 실적 미흡 과제에 대해 평가지원팀, 자평위원과 함께 심층 분석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재정사업) 미흡사업 등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및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을 담은 성과관리 개선대책 수립하여 분기별 점검 계획

□ 행정관리 역량 제고

-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전년도 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평가지표 및 측정방식 등을 보완하고,
- 타기관의 행정관리역량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미흡사례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환류

□ 성과지표 POOL 활용 및 이력관리

- 성과관리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중 자평위원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대표성, 명확성, 연속성 등이 우수하여 활용도가 높은 성과지표 선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POOL을 내부 공유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토교통 정책 추진의 연속성 제고 도모
- 지표POOL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그간의 실적과 당해년도 목표치, 지표 종류(정량화, 성격 등), 연도별 활용 여부 등 기록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5	8	- (-)	- (-)	- (-)	8 (100.0%)	8 (100.0%)
성과목표	11	29	- (-)	- (-)	15 (51.7%)	14 (48.3%)	16 (55.2%)
관리과제	44	182	- (-)	- (-)	119 (65.4%)	63 (34.6%)	74 (40.7%)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 수도권 인구집중도(%)	서울+경기+인천 주민등록인구 / 전국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제외)	51.1	정량	결과	
	㉡ 국토교통분야 취업자 수(천명)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中 국토교통부 소관 업종의 취업자 수 합산 (소분류 기준 : 건물건설업, 육상 여객 운송업 등 22개 업종)	4,600	정량	결과	
	㉢ 국가물류 부가가치 비중(%)	물류활동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GDP)	7.5	정량	결과	
II.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8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 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 한다.	㉠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장기공공임대주택 수(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 10년 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 총주택수	8.20%	정량	결과	
	㉡ 1인당 주거면적(m ²)		전국단위가구방문 대면면접 조사(국토연구원 및 한국리 서치 연구) <1인당 주거면적 산정방식> 개별가구의 주택사용 면적(Si)를 개별 가구원수(ni)로 나눈 값의 평균 $1인당주거면적 = \frac{\frac{S_1}{n_1} + \frac{S_2}{n_2} + \dots + \frac{S_N}{n_N}}{N}$ (‘19년부터 기준 표본은 61,000여개 가구)	34.8	정량	결과	
Ⅳ.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 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 철도 및 도로 연장(km)	철도	전국 철도연장 (고속·일반철도 기준)	4,411.70	정량	결과	
		도로	전년도 간선도로 연장 + 당해년도 간선도로 (고속도로, 국도) 연장	19,612	정량	결과	
Ⅴ.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을 조성한다.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 / 자동차 등록대수) × 10,000	0.5	정량	결과	
	㉡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명)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300명 이하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1.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① 4대 초광역권 육성 방안 마련(40%)+ ②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40%)+ ③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20%)	100%	정성	산출	
	㉡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① 신규 국가산단 신축 조성(50%)+ ② 기업주도의 일자리 거점 육성(40%)+ ③ 수도권 체계적 개발 및 규제 합리화(10%)	100%	정성	산출	
	㉢ 성과평가 및 종합발전계획 관리	① 제도개선안 마련(50%) + ②제2차 종합발전계획 핵심사업 정기점검(50%)	100%	정성	산출	
	㉣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추진을	① 클러스터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25%) + ② 어린이 가족특화 시설 4개소 준공(25%)+ ③ 복합혁신센터 1개소 준공(25%)+ ④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개선 법안 발의(25%)	100%	정성	산출	
2.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한다.	㉠ 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체증 완화방안 마련	교통체증 완화 방안 수립	방안수립	정성	산출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 하위법령 제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하위법령 제정	정성	산출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50%) -재해영향평가(10%) -전략환경영향평가(20%) -계획수립·고시(20%)	기본계획 수립	정성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 해외건설 누적 실적	누적 실적(10%)	1조불	정량	결과	
	㉡ '25년 UAM 상용화 기반 마련	수도권실증, 제도적 기반마련 여부 등	수도권 실증 등	정성	산출	
	㉢ 물류기업 고용 규모(천명)	통계청 '24년 운수업 조사	835	정량	결과	
	㉣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정량	결과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을 선진화한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현장 수	1,000(건)	정량	산출	
	㉡ 물류기업 고용 규모(천명)	통계청 '23년 운수업 조사	835	정량	결과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률 관리	'24년도까지 정비물량 / 총 정비계획물량	34.90%	정량	결과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 주택공급규제 개선	① 도시정비법시행령 개정(25%) ②주택법시행령개정(25%) ③주택건설기준규정개정(25%) ④재건축안전진단기준개정(25%)	100%	정성	산출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실적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호수 통계	216,775호	정량	결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만호, 사업계획 승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11.5	정량	산출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	48	정량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④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①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 확보 - LH법 · 공동주택법 · 공직자 윤리법발의 - 공동주택심사기준제정 ② 소비자보호및중개거래의안 - 자채대부동산관리시스템전환및운영 - 부동산신고법개정발의 -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개정 ③ 공시제도개선 - 공시법발의 - 공시법시행령개정 ④ 외국인투기차단 - 거래허가구역가이드라인개정시행	100%	정성	산출	
	④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① 부동산PF연착륙지원 - PF조정위상설화등법률제정안발의 - 건축물분양법발의 - 개발사업법규칙개정 ② 부동산투자기회확대 -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발의 - 정보시스템활용 ③ 부동산산업지원강화 - 아파트실거래가동정보공개 - 데이터개방 - 창업캠프지원 - 통합통계신규생산	100%	정성	산출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하고, 신도시 등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④ 광역철도 총 수송인원	당해연도 광역철도 총 수송인원	1,420.8 (백만명)	정량	결과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한다.	④ 광역버스 공급 확대	하루 운행 횟수 = 정규버스 운행 횟수(2층버스 × 2) + 전세버스 운행 횟수	15,460	정량	결과	
	④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	법령 개정	법령 개정	정성	산출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 '24년 자동차 등록대수	0.83	정량	결과	
	㉡ 항공운송분야 '11년 연속 無 사망 사고' 유지	운송분야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0	정량	결과	
	㉢ 철도사고 건수	'24년 철도사고 건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25	정량	결과	
2.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 철도종사자사상자수	'24년 철도종사자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4.2	정량	결과	
	㉡ 공항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평가	6개 공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교통의 편리성, 시설청결성, 주차시설 등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항공교통서비스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 산정	만족	정성	결과	
	㉢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329	정량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1.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④ 4대 초광역권 육성 방안 및 새로운 국토 공간전략 마련(40%)	① 초광역권 계획 표준안마련(12%) + ②국토종합계획 수정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 전략 연구(8%) + ③도심융합특구 하위법령 제정(12%) + ④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승인신청)(8%)	100%	정성	산출	
		⑤ 활력넘치는 지역 만들기(40%)	① 투자선도지구 신규사업대상지 3곳 선정(12%) + ②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16%) + ③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만족도 90% 달성(12%)	100%	정성	결과	
		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20%)	① 지역활력타운 신규사업대상지 10곳 선정(10%) + ②성장촉진지역 재지정(10%)	100%	정성	산출	
②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기반 확충		④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50%)	용인 국가산단 산단계획 승인 신청(20%) + 지방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또는 완료 3곳(15%) + 산단신속화 등 관련 제도개선 5건(15%)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㉞ 기업 주도의 일자리 거점 육성(40%)	「기업도시법」 개정(12%)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2개소 이상 선정(12%) + 기업혁신파크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 컨설팅 2회 이상 지원(8%) + 제1호 캠퍼스혁신파크 준공 및 입주기업 80개사 모집(8%)	100%	정성	산출	
		㉟ 수도권 체계적 개발 및 규제 합리화 (10%)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4%) + 「시화호 스마트융합도시(가칭)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2.0」 마련·발표(6%)	100%	정성	산출	
③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누적 개社)(35%)	혁신도시내 입주기업 수(연구소 포함)	4,069	정량	결과	
		㉡ 지역인재 채용률(%) (25%)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	37.6	정량	결과	
		㉢ 복합혁신센터 준공(개소)(15%)	준공 개소 수	1	정량	산출	
		㉣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25%)	(연간 지역물품 우선구매액÷연간 이전기관 총구매액)×100	16.8	정량	결과	
2.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한다.							
①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마련(10%) (단년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마련 ≥ 1건	1건	정성	산출	
		㉡ 철도 지하화선도사업 선정(10%) (다년도)	선도사업 선정,가이드라인 마련 ≥ 2건	2건	정성	산출	
		㉢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 조성(10%) (단년도)	공익사업(키즈레일) 신규 개원 건수 ≥ 2건	2건	정성	산출	
		㉣ 고속·간선열차 이용자(15%) (다년도)	고속열차(KTX+SRT)+간 선열차(새마을, 무궁화 등) 이용자수 ≥ 160백만명	160백만명	정성	결과	
		㉤ 화물취급역 신설 건수(10%) (단년도)	화물취급역 신설수 ≥ 2개역	2개역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㉑ 교통약자 명절 사전 예매 실적(10%) (다년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좌석수 $\geq$ 13.9만건	13.9만건	정성	결과	
		㉒ EMU-320 신규도입(10%) (단년도)	EMU-320 $\geq$ 2편성	2편성	정성	산출	
		㉓ 해외사업 수주 건수(15%) (다년도)	해외사업 수주 건수 $\geq$ 6건	6건	정성	산출	
		㉔ 국제인증 취득교육 이수 실적(수료생 수) (10%) (다년도)	국제인증 교육을 받은 수료생 수 $\geq$ 420명	420명	정성	결과	
	②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㉕ 미래도로 준비 및 도로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30%)	① 스마트 도로관리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10%) + ② 도로교통량 조사방식 고도화방안 마련 (10%) + ③ 디지털도로추진계획 수립(10%)	방안수립 방안수립 계획수립	정성	산출	
		㉖ 국가도로망 확충 (30%)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개통 (10%, 다년도) + ②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 착공 (10%, 다년도) + ③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10%)	19건 10건 방안마련	정성	결과	
		㉗ 지하고속도로 본격 추진 (40%) [국정과제 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① 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교통체증 완화방안 마련 (10%) + ② 지하고속도로사업추 진분위 조성을 위한홍 보추진(20%) + ③ 지하고속도로기술개 발R&D신규착수(10%)	방안수립 토론회, 세미나, 국민참여행사 등 5회 사업착수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 도심복합거점 조성(35%)	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17.5%) + ②도시계획시설규칙개 정(17.5%)	100%	정성	산출	
		㉡ 원도심 활력제고를 위한 新도시재생추진 (30%)	① 가이드라인 개정(9%) + ②도시재생혁신지구 신규사업 선정 개수(10.5%) + ③주민공동이용시설 공급개수(10.5%)	100%	정성	산출	
		㉢ 토지규제 전면정비(35%)	①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개혁방안 마련(8.75%) + ②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8.75%) + ③광역시도계획 수립지침 개정(8.75%) + ④GB해제지침 개정(8.75%)	100%	정성	산출	
④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30%)	건설공단 설립등기 및 출범	완료	정성	산출	
		㉡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40%)	㉡-1 부지 조성공사 발주(20%) ㉡-2 건축설계 공모 및 기본설계착수(20%)	완료	정성	산출	
		㉢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사업추진체계 마련(20%)	(도로) - 사·적 완료(3%) -도로노선지정(3%) -사업관리위임(4%) (철도) -전환평완료(3%) -총사업비협의를(3%) -사업관리위임(4%)	완료	정성	산출	
		㉣ 사업추진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기반한 효율적인 소통 관리(10%)	○ 각종 회의 24회 이상 개최 및 참석 · 자문회의 5회 · 지자체협의회 3회 · 업계 설명회 4회 · 주민설명회·협의회· 주민면담 8회 등	24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⑤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① 기본계획 수립(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15%) 재해영향평가(3%)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최종보고(6%) 계획수립(6%)	완료	정성	산출	
		② 민·군공항 통합건설 시행방안 마련 (20%)	추진방안 마련 (16%) 통합건설 제도적 근거 마련(4%)	완료	정성	산출	
		③ 군공항 이전 SPC 구성 공공기관 협약체결 (30%)	공공기관 간 협약체결(21%) 공공기관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9%)	완료	정성	산출	
		④ 신공항 화물터미널 추진방안 마련(20%)	전문가 검토기구 보고서 채택(12%) 추진방안마련(8%)	완료	정성	산출	
⑥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① 신공항 건설 사업추진(40%)	· (제주2공항)기본계획 고시(16%) · (제주2공항)환경영향 평가착수(4%) · (새만금국제공항)실시 설계착수(12%) · (백령공항)기본계획 (안)마련(8%)	완료	정성	산출	
		② 해외공항사업 추진성과(20%)	· 사업참여 제안서 제출건×0.3 + 수주지원 활동건수×0.5 + 수주성공건×1.0	7.8	정량	결과	
		③ 공항혁신을 위한 제도개선(20%)	· (공항 디지털화, 6%) 공항 BIM 적용지침 마련 · (공항 수용능력 설정 지침개정 고시, 6%) · (공항물류단지활성화, 4%) 제도개선안 마련 · (주변지역개발,4%) 공사법 개정 및 주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정성	산출	
		④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추진(20%)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행정절차 및 협상 착수, 6%) · (제3연륙교손실보상 세부합의서체결, 14%)	완료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 해외건설 누적실적(10%)	누적 실적(10%)	1조불	정량	결과	
		㉡ 범부처 수출지원 협력강화(20%)	해외건설 수주지원 관련 회의(10%) + 수출관련V주재, 관계부처 장차관회의(10%)	3회 11회	정량	산출	
		㉢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역량 강화(35%)	신규PPP사업 직접투자 승인 건수(10%) + 정책투자플랫폼 실시 횟수(10%) + 해외인프라사업 지원금액(10%) + PPP 특성화대 모집·교육인원(5%)	8건 4회 424억원 70명	정량	결과	
		㉣ 인프라협력 네트워크 확대(25%)	국외 수주지원단 파견 횟수(10%) + 프로젝트 설명회 횟수(10%) + 실시횟수(5%)	9회 15회 15회	정량	산출	
		㉤ 민관소통 강화(10%)	간담회, T/F, 면담, 서한발송, 강의·강연 횟수(5%) + 해외건설현장 훈련 청년층 선발 비율(5%)	23회 이상 70%이상	정량	결과	
②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 미래도시 선도모델, 한국형 스마트시티(35%)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거점형, 강소형, 솔루션 확산) 선정 지자체수(10곳)(21%) + 신규센터(코트라 일본 도쿄 무역관) 개설 완료(14%)	100%	정성	산출	
		㉡ 과거·현재· 미래가 살아 숨쉬는 용산공원 (35%)	용산어린이정원 내 개방(리모델링) 건물 개수(10.5%) +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완료(14%) + 용산어린이정원 유튜브 구독자 수(10.5%)	100%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탄소중립도시 조성확대(30%)	컨퍼런스 행사 2회(6%) +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개도시×1회)(6%) + 수소도시 사업모델 설명회(6%) + 탄소중립도시 계획수립 지원 기술 실증 지자체 선정(12%)	100%	정성	산출	
③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㉑ UAM 상용화 지원(35%)	수도권 실증 착수(15%) + 제도 기반 구축(10%) + 지역확산기반마련(10%)	착수 법령 등 제정 5건 이상 3개 기관 이상	정성	산출	
		㉒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35%)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15%) + 제도기반마련(10%) + 인프라구축(10%)	20곳 이상, 18만km 5대이상 45km이상	정량	결과	
		㉓ 모빌리티 혁신기반 공고화 (30%)	규제샌드박스 사업발굴(15%) + 지역확산(15%)	15건 이상 2곳	정량	결과	
④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㉑ 녹색건축 확대(40%)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10%)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 법령 개정(10%) + 제3차 녹색건축물기본계획 관보게재(10%) + 예산집행율(5%) + 예산집행율(5%)	100%	정성	산출	
		㉒ 건축문화 진흥(40%)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관보 게재(10%) + 답사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점수(10%) + 설계공모 관리시스템 활용 지자체 수(10%) + 설계공모심사위원등록 인원수(명)(10%)	100%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건축공간 혁신(20%)	‘스마트+빌딩 지원법(가칭)’ 제정안 마련(10%) + 스마트+빌딩기술개발 로드맵마련(10%)	100%	정성	산출	
⑤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㉕ 택배 사각지대 해소(35%) (a 20%,b 15%)	㉕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 제정 + ㉖ 보도자료	100%	정성	산출	
		㉖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20%) (a 10%,b 10%)	㉕ ‘국제물류특구 조성’을 포함한 법률안 발의 + ㉖ 보도자료	100%	정성	산출	
		㉗ 도심 속 빠른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 도입(15%)	건축법 시행령 및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부령) 개정	100%	정성	산출	
		㉘ 도시첨단물류단지 활성화(10%)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	100%	정성	산출	
		㉙ 전통시장의 디지털 물류전환을 위한 공동·빠른 배송 확대(10%)	일평균 배송건수	210	정량	결과	
		㉚ 제3자 물류활용률 달성(공동)(10%)	(제3자물류 이용업체/전체 조사업체)×100	71.6	정량	결과	
⑥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㉛ 韓-日 간 정비분야 업무약정 체결(20%)	업무약정 체결	체결	정성	산출	
		㉜ UAM 기체 실증비행 허가 건수(20%)	실증비행 허가 건수	2	정량	결과	
		㉝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후 시행	시행규칙 마련	정성	산출	
		㉞ ‘SAF 활성화 대책’ 마련(20%)	‘SAF 활성화 대책’ 대외 발표	대책 발표	정성	산출	
		㉟ ICAO 회원국 유대강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국내유치 (20%)	ICAO 등 국제회의 및 세미나 국내 개최 건수×100%	3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⑦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 제2차 공간정보 R&D 로드맵 수립(20%)	로드맵 수립(10%) + 연구용역결과보고(10%)	100%	정성	산출	
		㉡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활용건수(20%) (공동)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발급된 OpenAPI의 활용건수 조사	697건(누적)	정량	결과	
		㉢ 공개제한 공간정보 민간 제공을 위한 보안심사건수 (15%)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건수	24건	정량	결과	
		㉣ 국가공간정보 표준 적용률(15%)	(실제 표준을 적용한 건수/30)*100% *23년도표준적용사전검 토를수행한공간정보사 업중30개를샘플링	70%	정량	결과	
		㉤ 창업지원 기업 연 매출 성장률(15%)	(‘24년 매출액/‘23년 매출액)×100%	14%	정량	결과	
		㉦ 스마트국토 엑스포 해외 비즈니스 미팅 건수(15%)	24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해외 비즈니스 미팅 건수	49건	정량	산출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을 선진화한다.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 건설경기활력 회복(20%)	① 건설경기보완대책(10%) + ② PF보증신규도입(10%)	대책수립 보증도입	정성	산출	
		㉡ 물가상승 대응(25%)	① 공사비현실화등건설경 기회복방안(15%) + ②건설분쟁조정(10%)	대책수립 12(건)	정성	산출	
		㉢ 불법행위 근절 (25%)	① 불법행위단속(15%) + ②불법행위근절교육 (10%)	1,000(건) 6(회)	정량	결과	
		㉣ 인력·자재·기계 관리(30%)	① 기능인등급제교육확대(10%) + ②외국인력 규제개선(10%) + ③T/C조종사 인력양성(10%)	29(직종수) 안전의결 160(인)	정성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육성(50%)	㉠-1 스마트건설 EXPO 참여기업(10%) +	200	정량	결과	
			㉠-2스마트건설 강소기업수(10%) +	40			
			㉠-3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기업 해외전시회참석(10%) +	5			
			㉠-4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활동(10%) +	70			
			㉠-5스마트건설기술 실증(10%)	10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건설기준 제·개정건수 (10%)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설기준 코드 수	9	정량	산출	
		㉢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대상 확대(20%)	'가격 입찰 후 PQ 평가' 대상 비율 (건설엔지니어링)	25.2	정량	결과	
		㉣ 입찰 공정성 강화 (20%)	㉣-1 중앙심의위 청렴위크숍개최 횟수(10%) +	3	정량	결과	
			㉣-2중앙심의위청렴위 크숍참석자수(10%)	400명			
③ 낡은 규제 효과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한 물류산업 구현을 위한 물류 플랫폼 관리방안 마련(15%)	보도자료	100%	정성	산출	
		㉡ 화물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방안 마련(15%)	메모보고(장관)	100%	정성	산출	
		㉢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공표(15%)	보도자료	100%	정성	산출	
		㉣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을 위한 규제개선(a: 10%, b: 5%)	a)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b)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개정	100%	정성	산출	
		㉤ 배달업 공제보험상품 가입률 제고(15%)	유상운송보험 가입자수(시간제 포함)/전체 배달 종사자수	4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⑥ 배달업 안전교육과정 개설 및 실효성 있는 운영(15%)(a: 5%, b: 10%)	a) 교육과정 개설 : 보도자료 + b) 교육규모: (‘24년체험형교육횟수/ 24)*0.5+(24년체험형교 육수료자수/600)*0.5	100%	정성	결과	
		⑦ 불법 주·박차완화를 위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1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준공 개소수	8	정량	산출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① 국내공항 HUB 기능 강화(40%)	‘23년 대비 환승여객 증가율(‘24년 실적/‘23년 실적)(20%) +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수(20%)	110% 31.8만명	정량	결과	
		② 노선개발 및 항공회담(20%)	‘24년 항공회담 개최 실적	18회 이상	정량	산출	
		③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20%)	‘24년 LCC 중장거리 노선수	16개 이상	정량	결과	
		④ 시장 건전성 강화(20%)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적정성 점검률	100%	정량	산출	
	⑤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①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30%)	지방공항 노선 신설 수 (15%) + 지방공항의 여객 수 (국내선,국제선)(15%)	4건 34.8백만명	정량	결과	
		② MRO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강화(25%)	화물기 개조 위한 대체 격납고 확보(15%) + 관세감면일물기한연장 (관세법개정)(10%)	100%	정성	산출	
		③ K-드론경쟁력 강화(25%)	드론 배송거점 30개, 배달점 150개 이상 달성(15%) + 드론 조종인력 양성수(10%)	거점30개, 배달점150개 622명	정량	결과	
		④ 항공 화물 물동량 확대(20%)	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량(중량)	115만톤	정량	결과	
	⑥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① 지적측량 성과 일관성 확보 방안 마련(20%)	지적측량 오차범위 36cm~180cm→24cm~12 0cm 기존오차의1/3범위축소	100%	정량	산출	
		②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대상 확대 (20%)	지상경계점등록부 대상확대 (분할, 신규등록→경계복원측 량 추가)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편(20%)	측량수수료 9종 품셈 개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경계·지적현황·도시계획선·축적변경·불부합지, 지적확정측량)	100%	정성	산출	
		㉕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효율성 강화(20%)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과거측량 연혁DB:측량결정방법, 나이·성별·거주지·공시지가·용도지역 등)하여 사업지구 선정 (10%) + (현행법기준)동의서동의율66.7%→70%이상달성 (10%)	100%	정성	결과	
		㉖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수치)등록 확대(2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 필지수 확인	10.00%	정량	산출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㉑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40%)	방안 마련	대책 수립	정성	산출	
		㉒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시행령 개정	정성	산출	
		㉓ 층간소음 해소 세부추진방안 마련(25%)	방안 마련	대책 수립	정성	산출	
		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15%)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시행령 개정	정성	산출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45%)	①기본방침수립(5%) + ②기본계획협의(1%)×5곳 + ②시행령·시행규칙 제정(10%) + ④특별위원회설치(5%) + ⑤법령, 기본방침 지자체설명회 (5%) + ⑥상설협의체운영(5%)×3회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선도지구를 통한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25%)	① 선도지구 선정(2%)×5곳 + ② 선도지구 지자체별 평가항목 발표(5%) + ③ 선도지구공모공고 (5%) + ④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1%)×5곳	100%	정성	산출	
		③ 체계적·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30%)	①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원 방안 마련(10%) + ② 공공기여금 가이드라인마련(5%) + ③ 교통계획 기본방향수립(5%) + ④플랫폼특화시스템 구축(5%) + ⑤미래도시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5%)	100%	정성	산출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① 공공주택 공급확대(4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15%)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10%) + 공급점검회의개최(10%) +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 (10%)	100%	정성	산출	
		② 도심사업을 통한 우수입지의 주택공급 추진(30%)	도심복합지구지정(5%) + 도심복합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10%)	100%	정성	산출	
		③ 제도개선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소규모정비 활성화(25%)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개정(15%) +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기금융자지원(10%)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전월세거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규정 개정(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훈령 개정	정성	산출	
		㉡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공개대상 (단지수)(20%)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에 등재된 관리비 등 공개대상 공동주택단지	19,000	정량	산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규칙 개정	정성	산출	
		㉣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실적(호)(25%) (공통)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호수 통계	216,775	정량	결과	
		㉤ 안심전세App 누적 다운로드 수(15%)	실제 다운로드수 / 목표 다운로드수	60만	정량	결과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공공임대 공급확대(40%)	① '24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적 목표대비 달성률(12%) + ②LH 제도개선안 마련(10%) + ③국토계획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10%) + ④청년특화임대 목표치 대비 공모 실적(8%)	100%	정성	산출	
		㉡ 공공임대 질적 개선(30%)	① 노후 공공임대 생애주기 관리전략 수립 여부(15%) + ②특화형매입임대 공모 목표치 달성(15%)	100%	정성	산출	
		㉢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민간 임대 활성화기반 마련(30%)	①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12%) + ②민간임대법개정(안)발 의(9%) + ③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등 제도개선(9%)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촉촉한 주거안정망 구축		①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40%)	① 사업추진 목표치 달성(14%) + ②시행령개정(6%) + ③시범사업공모(8%) + ④영구임대내 주거복지사 배치 목표치 달성(12%)	100%	정성	산출	
		②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주거여건 조성(30%)	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15%) + ②비정상거처 버팀목 대출 실적(15%)	100%	정량	결과	
		③ 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및 전달체계 강화(30%)	① 주거급여 기준 상향에 따른 목표치 (추정 수급가구수) 지원 완료(15%) + ②청년월세 2차 신청 인원 목표치 달성(6%) + ③주거복지센터 지원기관 설치(4.5%) + ④상담챗봇 구축(4.5%)	100%	정성	결과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촉촉한 지원체계 구축		①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결정(20%)	피해자 결정 처리기간 단축(15%) +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개최(5%)	-	정량	산출	
		②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제도·홍보(20%)	피해지원 리플릿(5%), 웹툰(5%)·웹드라마(5%), 피해사례집(5%) 제작 여부	100%	정성	산출	
		③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20%)	지원 실적 합계	8,000	정량	결과	
		④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발의(40%)	개정안 발의	개정안 발의	정성	산출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① 공공주택 건설의공정성 확보(35%)	① 조달청-LH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8.75%) + ②LH법·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발의(각8.75%×3)	100%	정성	산출	
		② 공시제도 개선(20%)	① 공시법 시행령 개정(8%) + ②공시법발의(12%)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㉔ 거래시 부동산소비자 보호 및중개거래의 안정성 강화(35%)	① 차세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전환 및 운영(7%) + ②부동산거래신고법 발의(14%) + ③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4%)	100%	정성	산출	
		㉕ 외국인 투기 차단(1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개정·시행(10%)	100%	정성	산출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㉖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40%)	① PF조정위원회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법률 제정안 발의(16%) + ②간담회,전문가회의등 개최(4%) + ③건축물분양법개정안 발의(12%) + ④부동산개발업법시행 규칙개정(8%)	100% 3회 100% 100%	정성	산출	
		㉗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30%)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24%) + ②'24년12월기준 리츠정보시스템 총 누적 접속자수 (만명, 6%)	100% 30	정성	결과	
		㉘ 부동산산업지원 강화(30%)	① 아파트 실거래가 “동” 정보 공개(9%) + ②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거래소 신규개방품목(70종,9%) + ③'24년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실시팀수(3%) + ④통계청 승인 받은 외부공표통계 건수합산(9%)	100% 100% 19팀 2건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GTX 시대를 본격 개막하고, 신도시 등 광역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①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 전국 GTX 구축(40%) (다년도)	전국 GTX 구축을 위한 사업절차 이행건수≥ 15건	15건	정량	산출	
		㉡ 개통(부분 개통 포함)(30%) (단년도)	개통(부분개통포함) 건수 ≥ 8건(20%) + 정차역수≥38개(10%)	8건 38개	정량	산출	
		㉢ 착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30%) (단년도)	착공 및 예타선정≥ 5건	5건	정량	산출	
	②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 광역교통 인프라 수혜범위 확대 등(40%)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개통 누적연장(km)(30%) + 환승센터착·준공수 (10%)	757.7 6	정성	결과	
		㉡ BRT 이용자 수(20%)	기 개통한 BRT 노선의 일 평균 이용자 수(명)	27	정성	결과	
		㉢ 관계기관 갈등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20%)	지자체 갈등이 지속된 사항을 조정·완료한 건수	5	정성	결과	
		㉣ 신규 사업 이용자 만족도(20%)	별내선, 용두담영(혼잡도로), 광역콜버스 3개 사업 만족도(설문) 조사	3.5	정성	결과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한다.							
	①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구축을 위한 갈등 조정건수(25%)	갈등조정건수(총 10건)	10	정량	결과	
		㉡ K-패스 이용자수(만명) (25%)	'24.12 누적가입자	171	정량	결과	
		㉢ 광역버스 안정적 관리 확대(25%)	대광위 소관 준공영제 버스 일 운행 횟수	9,279	정량	결과	
		㉣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 (25%)	「광역교통법」,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개선대책 지침 등 개정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신규, 단년도)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전세버스 출퇴근, 통학 지원, DRT 적용 확대(40%)	법령 개정	법령 개정	정성	산출	
		㉡ 수소교통 복합기지 확충(20%)	사업 준공 건수	2(준공)	정량	산출	
		㉢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20%)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발의	정성	산출	
		㉣ 택시충량제 고시 개정 (20%)	택시충량제 고시 개정	법령 개정	정성	산출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交通安全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①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 필수 시외·고속버스 노선 선정 및 지원(30%)	계획수립	기준 마련	정성	산출	
		㉡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30%)	'24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 '24년 자동차 등록대수	0.83	정량	결과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20%)	(저상버스 대수/전체 시내버스 대수)×100	39	정량	결과	
		㉣ 디지털 운행기록분석장치 분석률(20%)	(디지털운행기록분석 자동차 대수/사업용 자동차 대수)×100	60	정량	결과	
②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 보호내실화 (15+10%)	매매 공제조합 설립 인가(15%) + 침수차 불법유통 처벌강화, 신차 하자추정기간 확대 여부 (자동차관리법령개정) (10%)	조합설립 법령개정	정성	산출	
		㉡안전관리강화 (10+10+5+5%)	이륜차 번호판 개선 여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10%) + 자동차안전기준 개선여부 (자동차관리법령개정) (10%) + 사업용중·대형화물차 집중점검 민간검사소 개수(5%) + 대형차 정기검사기준 개선여부 (자동차관리법령개정) (5%)	법령개정 법령개정 40개소 법령개정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㉓ 위법·편법행위 근절(25%)	보험금 절감액 및 부당청구 보험금 환수액	550억	정량	결과	
		㉔ 규제개선(20%)	규제 관련 회의체 상정·심의 건수 +법령·행정규칙 개정건수 +규제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등	10건	정량	산출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㉑ 국적항공사 항공사고 발생률 감축(20%) *백만운항 당	① 무사망사고 달성시(10%) + ② '23년 사고발생률(2.1)보다 5% 이상 감축 시(10%)	무사고 2.0	정량	결과	
		㉒ 승무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 방안 마련(20%)	운항분야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영지침안 마련	관리 시스템 방안	정성	산출	
		㉓ 미래 국가공역체계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안) 마련(20%)	전담반회의 정책협의회 등 마스터플랜(안) 마련	마스터 플랜(안)	정성	산출	
		㉔ 탄소절감, 녹색항공 지원 추진을 위한 조건부항공로 운영 확대(20%)	운영 세부 절차 등 협의 후 운영 개시 합의	조건부항공로 운영	정성	산출	
		㉕ KASS 안정적인 항공용 서비스 확대(20%)	① KASS 성능분석 전용 툴(14종) 개발(10%) + ②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항공용 서비스 제공 2개 공항 확대(10%)	16	정량	산출	
④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㉑ 철도사고 건수(30%)	'24년 철도사고 건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25	정량	결과	
		㉒ 운행장애 건수(15%)	'24년 운행장애 건수/ '24년 운행거리(1억km)	51.4	정량	결과	
		㉓ 철도안전 정책 혁신방안 수립(25%)	방안 마련	수립	정성	산출	
		㉔ 노후철도개선 (30%)	노후차량 교체지원율(15%) + 노후시설 개량 지원률(15%)	63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2. 건설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한다.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 철도중사자 사상자수(30%)	'24년 철도중사자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4.2	정량	결과	
		㉠ 철도사고 사상자수(30%)	'24년 철도사고 사상자수 / '24년 운행거리(1억km)	13.2	정량	결과	
		㉢ 철도5대 범죄 검거율(20%) * 철도안전법위반· 상해·폭행·성폭력·철도 ·횡령	('24년 5대범죄 검거 건수 / '24년 5대 범죄 발생 건수) x 100	92.4	정량	결과	
		㉡ 무선제어입환 도입(10%)	무선제어입환 도입역수	3	정량	산출	
		㉣ 선로전환기 자동방식 교체(10%)	자동화 개량완료건수	48	정량	산출	
②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 소음대책사업 주민만족도 (20%)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60.3	정량	결과	
		㉡ 지상안전사고 발생 빈도 감소(10%)	연간 지상안전사고 발생 (건수*10000/연간 항공기 운항편수)	0.373	정량	결과	
		㉢ 공항 시설 확충(20%)	· 김해공항 여객터미널 확충사업 준공(5%) + · 청주국제공항시설 확충계획 수립(10%) + · 대구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 리모델링사업 준공(5%)	시설 확충 추진	정성	산출	
		㉡ CT X-ray 도입·설치 비율(25%)	전체 도입대수 대비 '24년 설치완료 비율	40% 이상 설치	정량	산출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제도개선(25%)	고시 개정 완료	규정 개정	정성	산출	
③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제도 개선 (30%)	① 고속도로 정체개선 구간별 맞춤형 대책 마련 (10%) + ②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 발급(10%) + ③도로포장 파임 배상체계 개선추진(10%)	맞춤형 대책 9건 마련 모바일발급 개시 대책 수립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 국민 편의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30%)	① 지역특화 개방형 휴게소 설치(10%, 다년도) 【국정과제】 + ②휴게소서비스 개선(10%) + ③친환경 충전시설 확충(10%,다년도)	3개소(휴게소) 고속국도 휴게소 설치운영지침 제정 1,601기(누적)	정성	산출	
		③ 첨단기술 및 소속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 강화 (40%)	① AI분석을 통한 도로살얼음 예측 도입(5%) + ②낙하물 자동단속시스템 설치(5%) + ③비탈면·교량IoT 시스템구축 (10%,다년도) 【국정과제】 + ④방음터널 화재안전기준 강화(10%) + ⑤소규모건설현장안전 강화대책마련(10%)	제도도입 25개소 (영업소) 100(비탈면), 215(교량) 관련지침개정 대책마련	정성	산출	
④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① 건축 절차 전반에 대한안전관리 강화(30%)	건축법하위법령 등 개정	100%	정성	산출	
		② 기존 건축물에대한 유지관리내실화 (40%)	구조설계도서 모니터링 시행진수(10%) +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행진수(10%) +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10%)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10%)	100%	정성	산출	
		③ 건축규제운영 합리화(30%)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10%) +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발의(10%) + 건축물피난방화구조 규칙개정(10%)	100%	정성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⑤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 건설 사고 사망자 감축(명)(25%)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수	329	정량	결과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개소) (15%)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수(7.5%) + 현장점검실적(7.5%)	130 15,000	정량	결과	
		㉢ 지하안전강화를 위한 지반탐사 실시(km)(10%)	탐사구간	2,200	정량	산출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관리체계 정비(20%)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자격요건 상향	정성	산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확대(15%)	'24년 점검수	2만 건	정량	산출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15%)	시스템 구축사업 공정률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압축과 연결을 통해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1. 도심 공간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역성장을 도모한다.		
	① 지방 4대 초광역권 육성 및 지역 인구유입 기반 조성	국정38-1, 38-2, 116-1, 117-2, 119-5 업무3-1-2, 3-1-3, 3-2-2
	② 철도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국정28-2, 38-1 업무3-2-1, 3-3, 4-3-3
	③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노후도심 재생	국정38-1, 38-2, 38-3, 119-6 업무3-1-4, 3-2-2
	④ 살기좋은 미래도시 구현	국정28-3, 38-2, 38-3, 38-4, 116-2, 116-3, 86-6, 113-4 업무4-1
2.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①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 육성 및 첨단산업 기반 확충	민생 국정38-1, 38-2 업무3-1-1, 3-1-3
	②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혁신도시 활성화	국정38-2 업무3-1-3
	③ 남부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국정39-3, 업무3-3
	④ 중남부 여객·물류 중심공항으로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국정39-3, 업무3-3
3.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하여 국토를 연결한다.		
	① 국가·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공항 인프라 공급 및 공항개발 추진	국정28-4, 39-3, 업무3-3
	② 수도권 교통난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NEW 철도망 구축	민생 국정39-1, 39-2, 39-3 업무2-1-1, 2-1-2, 2-1-3
	③ 미래도로 준비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지원	국정39-1, 39-2, 39-3 업무3-2-1, 3-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국토교통 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한다.		
1. 국토교통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국정28-2 업무4-1, 4-3-1
	②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경제 성장동력이 될 모빌리티시대 본격 개막	국정28-1 업무4-2-1, 4-2-2, 4-2-3
	③ 사회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성능 강화 및 문화 진흥	국정69-6 업무4-3-1
	④ 대한민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서비스 구현	국정28-2, 28-4 업무4-3-1, 4-3-3
	⑤ 항공제작·정비 기술력 강화 및 국제 영향력 확대	국정28-4 업무4-2-1
	⑥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정38-4 업무4-3-1
2. 기존 국토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한 경기활력 회복 지원	민생 국정28-2 업무1-1-3, 4-3-2, 5-3
	② 스마트건설·Eng. 고도화 및 입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국정28-2 업무4-3-3, 5-3
	③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	국정28-4 업무4-3-2
	④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국정28-4, 39-5 업무4-3-1, 4-3-2
	⑤ 내수경제 앵커기능 강화를 위한 신항공 생태계 구축	국정28-4, 39-5 업무4-3-3
	⑥ 지적관리 정확·신뢰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 기능개편	국정38-4 업무4-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Ⅲ.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1.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 강화	민생 국정7-1, 7-2 업무1-1-1, 1-1-2
	②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로 미래도시로의 전환	국정7-2 업무1-1-1
	③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안정화	국정7-2, 10-1, 10-2 업무1-1-1, 1-1-4, 1-3, 1-4-1
2.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품질을 제고한다.		
	① 임대차 제도 합리화와 주거 부담경감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국정7-3, 90-1 업무1-2-1, 1-3, 1-4-1
	②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	국정 10-1, 10-2 업무1-1-2, 1-2-1, 1-2-2
	③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국정 10-3, 10-4, 10-5 업무1-2-2
	④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국정7-3 업무1-2-3
3.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		
	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국정7-4 업무1-2-3, 1-4-1, 1-4-1
	② 부동산산업의 활력 회복 및 투명한 운영	국정7-4 업무1-4-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V. 교통 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		
1. 빠르고 편리한 이동체계를 갖춘다.		
	① 광역교통망 적기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로 출퇴근 불편 해소	민생 국정39-1, 39-2, 39-4 업무2-1-3, 2-2-1, 2-2-2
	②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국정38-2, 39-1, 39-2, 39-4 업무2-2-1, 2-2-2, 2-3
2. 생활교통 서비스를 혁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① 누구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국정69-1, 47-6 업무5-1, 2-3
	② 교통 서비스 다변화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국정39-6, 86-6 업무2-3, 4-3-2, 4-3-3
	③ 자동차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국정69-1 업무5-1
V.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		
	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분야 인명사고 최소화	국정38-2, 69-6 업무5-2
	② 안심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 구축	국정69-6 업무2-1-1, 5-2
	③ 예방중심의 첨단 항공교통 안전체계 구축	국정38-4, 69-6 업무2-3-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건설현장 및 시설물, 인프라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①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추진	국정69-5, 69-6 업무5-2, 5-3
	②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국정69-5, 69-6 업무5-2
	③ 도로 환경·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 강화	국정38-2, 38-4, 69-1 업무2-3, 4-3-1, 5-1, 5-2
	④ 친환경·자동화 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보안운영 효율화 추진	국정28-4, 39-3 업무4-3-1, 5-2